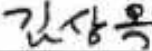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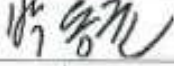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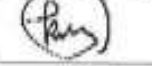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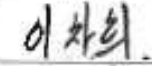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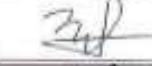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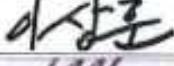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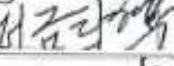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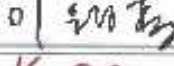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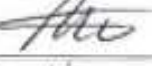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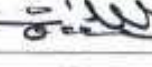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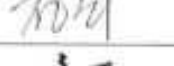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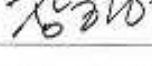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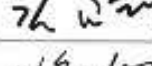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20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기 간	'20. 4. 17.(금) ~ 27.(월) ※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심의·의결					
의 안	'20년도 경찰청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안건	위 의안에 대한 심의					
심의결과	안전에 대해 심의위원 (30)명 중 (30)명이 (찬성, 반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수정의결, 부결)함					
이견사항						
대상인원	30명	의결인원 서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의결인원	30명		정용기 (위원장)		김상옥	
불참인원	0명		박동균		김경희	
			김근세		이찬희	
			김익제		장다혜	
			이상훈		신승근	
			차용진		김수진	
			허금탁		서관동	
			이은정		이은영	
			이승은		금현섭	
			최여경		송진섭	
			강영석		박미람	
			최경희		김지윤	
			조진형		차 장	
			윤지섭		기획조정관	
			강원석		정보화장비 정책관	

※ 외부위원들이 개별 검토 후 서명한 것을 편의상 취합한 것임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 정책 추진방향	2
1. 그간의 정책성과	2
2. 2020년 정책 추진방향	7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0
1. 경찰청 일반현황	1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3
III. 세부 추진계획	21
전략목표 I	21
전략목표 II	147
전략목표 III	278
IV. 환류 등 관련계획	382
1. 이행상황 점검	382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85
3. 변화관리 계획	387
4.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389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391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403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 정책 추진방향

□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평온한 일상 확보

1) 시민의 치안참여를 촉진하여 공동체치안 활성화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전국 확대(4월~) △주민간담회 모형 마련(순회형·모집형·복합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체계화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고도화로 주민 순찰요청 4.2%·이행률 9.2% 제고
-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테마별 범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환경 개선(1,884건)
 - ※ '19년 범죄예방진단 총 37,403건 실시('18년 29,815건 대비 25.7%↑)
- △대학가 1인 가구 범죄예방(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여가부) 등 다양한 기관과 MOU 체결(23건), 빈틈없는 치안협력망 구축

2)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인 해소

- (치안 사각지대 해소)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19.5.)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효과성 제고

- (여성)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집중단속으로 성범죄 4.7%, 불법촬영 4.9% 감소
 - (청소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2.1%p↑, 소년범 재범률 1.4%p↓
 - (아동)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3세 미만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실종)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 신설(10월) △지문 사전등록 플랫폼 확대 등
- (교통)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05→0.03%) △속도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적극 추진
 -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17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11.4%)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율은 14.7% 달성
- (재난) 강원 산불·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하여 피해확산 방지

3)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 확립

-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동원, 마약사범·약물이용 성범죄 등 총 9,340명 단속(전년 대비 31%↑)
-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서민 3不 사기」 특별단속 추진으로
△ 피싱사기 5,419건 △ 생활사기 14,398건 △ 금융사기 1,252건 검거
－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범 15,574명 검거(구속 545명)
-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생활 속 불공정 행위」에 총력 대응, 보조금 부정수급·토착비리 등 8개 분야 11,728건 21,156명 단속
- △ 대화경찰관 △ 현장안전진단팀 운영 등 소통·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관리로 권리와 질서가 조화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이라는 국민 인식 대폭 증가(73.9% → 84.8%)
- 완벽한 테러대응태세와 경호·경비로 국제행사 성공개최 뒷받침
※ △ 美 대통령 방한(6월) △ 광주 세계수영대회(7월)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4) ‘K-COP’의 위상을 높이며 국제 치안협력망 확충

- 제1회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개최(10. 21.~23), 앞선 치안기술을 세계에 알리며 국내 치안산업 진흥 기반 마련
※ 약 1만 7천여명 참관, 7개국 325억원 상당 계약 추진(방탄조끼, 지문검출기 등)
- △ 치안인프라 구축 지원(7국, 3,650만불) △ 외국경찰관 초청 연수(8국, 301명) △ 전문가 파견(16국, 77명) 등 치안한류 확산
－ ’19년 국제경찰청장 회의 개최(10월, 28개국 참석), 국제협력 강화
- 경찰청·인터폴 국외도피사범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 ’19년 국외도피사범 총 401명 검거(’18년 304명 대비 31.9% 증가)
-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시 K-DVI팀(재난신원확인팀)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23명)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우수한 치안역량 과시

□ 부단한 경찰개혁과 조직쇄신으로 국민 신뢰 제고

1) 민주·인권·민생경찰로 도약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 (경찰수사 개혁)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공정·전문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촘촘한 통제장치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제도 운영

·(인권보호) △변호인 참여 확대 △수갑 등 사용지침 개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수사공정성 제고)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 시범 운영 △영장심사관 △자기 첩보 배당 개선 등
·(수사전문성 강화) △수사심사관 도입 △수사지휘역량 종합평가 △전문수사관 선발·확대 등

- (자치경찰) 자치경찰 법안 발의, 경찰청과 시범운영이 확정된 지방청(서울·세종·제주)에 전담조직 신설, 기관 간 협업하며 체계적으로 준비
※ 국가경찰 260명을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하여 이원화 모델의 효과 검증 중('19.1.~)

- (정보·보안경찰 개혁)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인력·기능 재편
※ △정보 11.3%, 보안 9.1% 각각 감축 △채증·소음업무 이관(정보→경비)
△정보·보안 분실 경찰청사 내 이전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조정 협의

- (경찰대학 개혁)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편입학 도입
△남녀 통합 모집 △연령제한 완화 등 경찰대학 문호 개방
※ 개선 모집방식은 '21년 신입생('20년 모집)부터 적용, 편입학은 '23년('22년 모집) 도입

- (민주·인권경찰 실현)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대화경찰관 운영 등을 통해 민주·인권의 가치 현장 정착

2) 경찰역사 재조명을 통해 자긍심·책임감 제고

-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임정·독립운동가 출신 등 역사 속 참된 경찰을 발굴·현양함으로써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 제고
※ △임시정부 111명 △독립운동가 55명 △민주화유공 2명 등 총 168명 발굴
－ ‘경찰역사 순례길’을 구성·답사하여 경찰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웹툰 등을 활용하여 임시정부 경찰의 활약상을 알기 쉽게 홍보
※ 내고장 경찰역사 순례길(26개) 코스 발굴, 신입교육·직무교육 과정 등에 포함

3) 업무 프로세스 정비, 치안의 체계성·균질성 확보

- 치안상황의 총괄 조정을 위해 차장 직속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출동요소를 통합 지휘하여 법집행의 균질성 확보**
 - ※ 치안상황실과 교통CCTV 등 영상정보망을 연계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코칭시스템 △접수·지령 체크리스트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상황 관리
-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물리력 행사 기준 제정·시행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등 경찰력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 △현장법률 365 △손실보상 △법률보험 등 종합 법률지원체계 구축
 - ▶ (현장법률 365) 24시간 법률전문가가 적법한 현장조치를 위한 법률조언 실시
 - ▶ (손실보상)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명·신체까지 보상범위 확대
 - ▶ (법률보험) 직무 관련 피소 시 변호사 선임료, 합의금 등 소송비용 지원
- △기능 간 협의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미흡하게 처리하기 쉬운 업무절차를 일관되게 정립, 업무 완결성 제고
 - ※ △스토킹 현장대응 강화(4월)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 전국 시행(6월) △자살신고대응 표준모델 마련(7월) △사이버범죄 경찰관서별 역할 정립(2월) 등

4) 처우 및 조직문화 개선으로 활력 넘치는 현장 분위기 조성

- 인력·예산 등 현장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 ※ △(인력)'20년 3,911명 △(직급구조) ±492명
△(예산)'20년 11조 6,165억원 확보(5.8%↑), 사업비 역대 최고수준 증액(10.5%↑)
- 순직·공상 경찰관 영예성 제고를 위한 예우·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확충 △마음건강관리 체계 정립 등 경찰 처우 개선
 - ▶ (예우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순직자·공상퇴직자 위로금 지급 정례화 △힐링캠프 실시
 - ▶ (복지시설) △강릉 캠핑장(6월)·제천수련원(9월) 개장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착공
 - ▶ (마음건강) △마음동행센터 개소(전 지방청) △경찰관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신설
- **전 지방청에 성평등 전담인력을 배치('19.4.~)하고 행정규칙*의 성차별적 요소 일제 점검·개선으로 성평등 가치 확산**
 - * 일괄 성별영향평가 실시, 163개 중 61개 규칙·92개 조항 개정 완료(9월)
- △수평적 리더십을 통한 업무중심 문화 △소통 활성화 및 상호존중 △스마트하고 자율적인 근무 여건 조성 등 합리적인 조직문화 정착

△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과 △ 부단한 경찰개혁으로 쌓은
국민과 현장의 신뢰가 토대가 되어,
경찰청 개청('91) 이래 가장 뜻깊은 진전을 이뤄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경찰의 오랜 숙원을 현실화한 '역사적 성과'**

**'경검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2010.1.13.)**

-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 경검 협력관계 명시
 -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 ⇒ 형사소송법 제정 66년만에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재탄생

**'경찰 직장협의회 도입'
법제화(2009.11.19.)**

-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직장
협의회 가입대상에 포함
 - ▶ 가입 금지 대상을 기관장이 직장
협의회와 협의 후 공고
- ⇒ 근무환경과 업무능률 개선에서의
혁신적인 전기(轉機) 마련

**'안전'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대표 브랜드化**

- ▶ 범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 △(살인·강도) 2.6%↓ △(교통사망자) 11.5%↓
- ▶ 체감안전도 최고점(73.5→74.7점)
 - ※ 범죄안전도는 최초 80점 초과(80.3점)
- ▶ 외래관광객 만족도 '치안' 1위(7년 연속)
- ▶ 서울의 경쟁력 설문 '안전' 1위
 - ※ '세계 안전한도시' 서울 8위 선정(英 조사)

**쇄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

- ▶ 청소년 희망직업 高2위, 中3위
- ▶ 치안고객만족도 7년 만에 80점대
회복하며 최고치 달성(81.9점)
 - ※ 경찰을 접한 시민 72%가 긍정적으로
인식 변화(전년대비 3.7%p↑)
- ▶ 청렴도 평가 3등급 회복('18년 4등급)
- ▶ 직무만족도 역대 최고점(83.7점)

(1) 대내외 정책여건

□ 대외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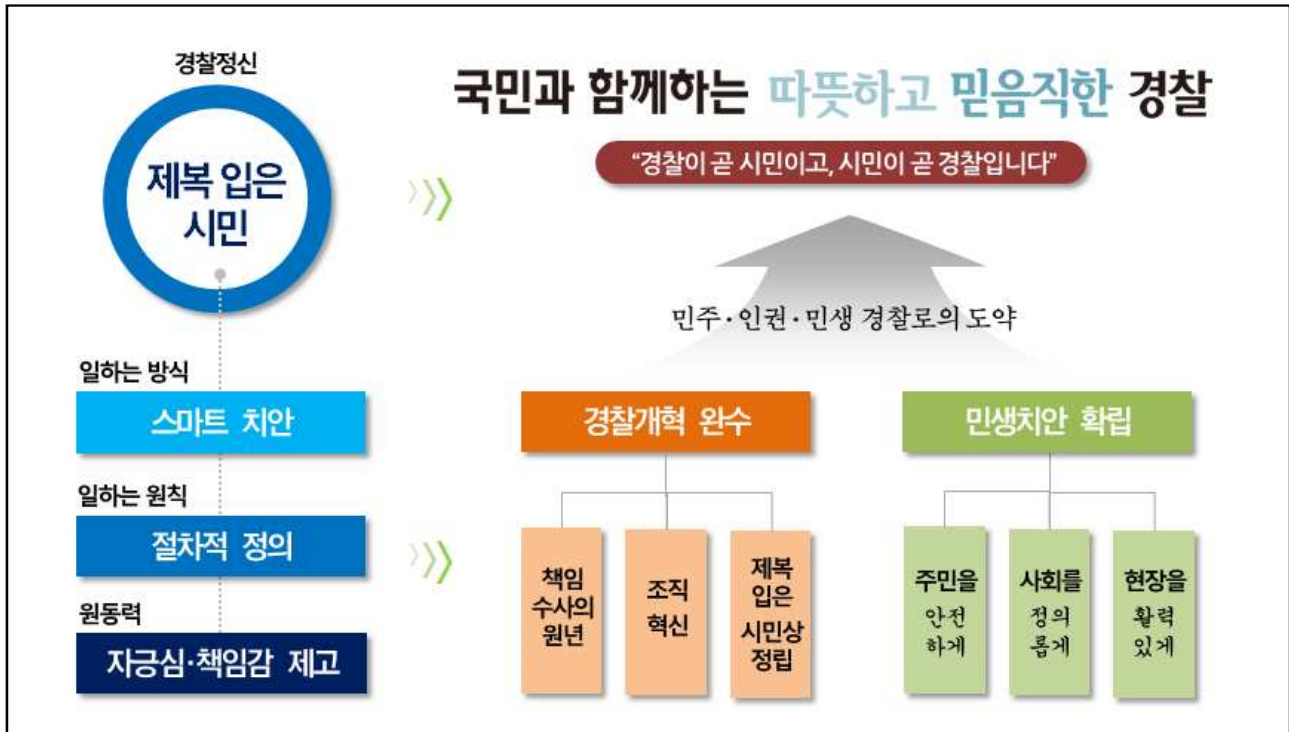
- 국민은 ‘형소법’ 개정으로 온전한 수사주체로 거듭난 경찰에 대해 책임성·공정성·전문성 등 수사 품질의 획기적인 변화 기대
 -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 과제의 완수와 내·외부 통제장치의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폭
-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21대 총선(4.15.)의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대한 관건
- 보이스피싱·아동성착취물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범죄와, 국가적 위기(‘코로나19’ 등) 발생으로 국민안전 위협
- 모바일 기반 뉴미디어의 일상화로 경찰활동의 작은 부분까지 실시간 공개됨에 따라 법집행 과정·절차 전반의 완성도 제고 필요

□ 대내적 여건

- ‘직장협의회’ 도입(6.13.)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와 관리자의 인식 전환 필요
 - ‘2만명 증원’에 따른 젊은 조직원 증가로 신구세대 조화도 과제
 - 급격히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된 기본계획*들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인프라 등 법집행 기반 확장
- * △중기사업계획(’20-’24) △중기인력계획(’19-’23) △수사 RE:DESIGN △정보화기본계획(’18-’22)
 △치안과학진흥종합계획(’19-’23) △성평등기본계획(’20-’24) △복지기본계획(’19-’23) 등

⇒ 치안 관련 이슈 대응 및 조직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 고조, 경찰의 ‘문제해결역량’과 ‘위기관리능력’의 획기적 향상 필요

[2] 정책 비전 및 전략



- 비전(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과 목표(민주·인권·민생 경찰)를 비롯한 주요 골격을 그대로 유지('17~)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
 -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일하는 방식(스마트치안)·원칙(절차적 정의)은 더욱 굳건히 다져 현장의 풍토·행태로 내면화
- ‘형소법 개정’, ‘직장협의회 도입’이라는 전환기적 제도 변화에 따라 경찰이 요구받는 총체적 혁신을 ‘경찰개혁 완수’에 포괄
 - ‘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확장시켜 나가고,
 - ‘직장협의회 출범’에 맞춰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등 경찰 조직혁신의 동인(動因)으로 삼을 수 있는 변곡점 마련
 - 전폭적 변화의 중심을 잡아줄 ‘시민’으로서의 경찰정신도 확립
- ‘안전’과 ‘공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는 기존의 ‘민생치안’ 정책 방향(주민안전·사회정의)에 담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 ‘현장활력’에도 주안점을 두어 안정적인 정책추진 뒷받침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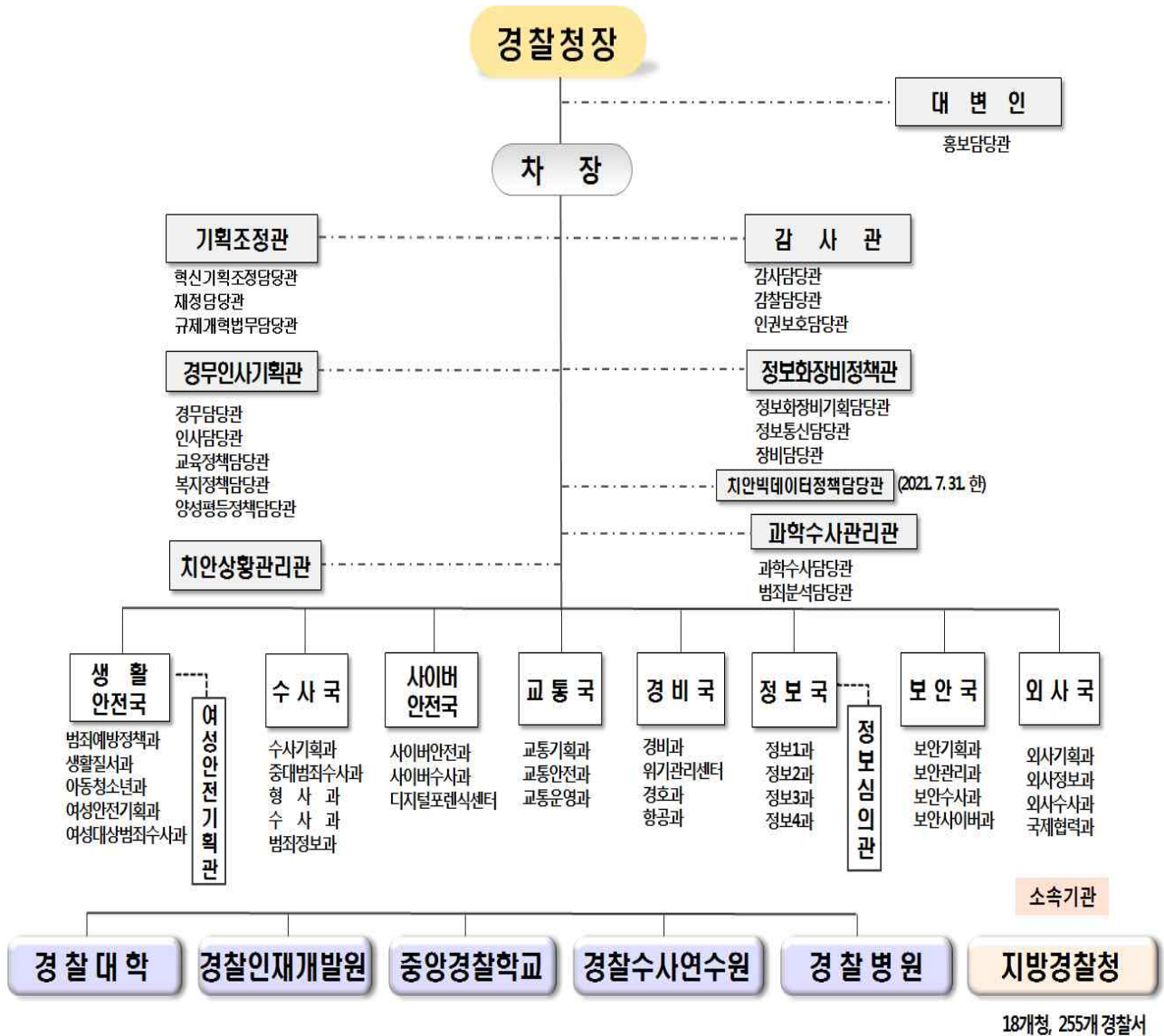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1) 조 직



✓ 본청은 1차장, 8국, 9관, 32과, 18담당관

✓ 부속기관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지방청 18개, 경찰서 255개, 지구대 591개, 파출소 1,436개

[2] 인 원 ('20. 3월 말, 정원 기준)

□ 총 계 : 140,988명

구 분	총 원	경찰관	의 경	일반직	임기제	교육직
정원	143,018 (100%)	124,873 (87.3%)	12,783 (8.9%)	4,430	910	22
				5,463(3.8%)		

※ 주무관(3,364명) 현황 : 무기계약직 2,573명, 기간제 791명

□ 계 급 별(이하 경찰관)

총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24,873	1	6	27	65	549	2,766	9,531	15,580	25,657	31,950	38,741
100%	0.5% (648)					2.2%	7.6%	12.5%	20.5%	25.6%	31.0%

□ 관 서 별

구 분	총 계	경찰청	부속기관	지 방 경 찰 청		
				지방청	경찰서	지역경찰
정원	124,873 (100%)	1,150 (0.9%)	533 (0.4%)	24,528 (19.7%)	48,800 (39.1%)	49,862 (39.9%)
					98,662(79%)	

□ 기 능 별

구분	계	경무	생활 안전	여청	수사	형사	과학 수사	치안 사화 관리 (112)	사이 버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 보	정보 화 장비	지역 경찰	부 속
정원	124,873	3295	3920	6785	9185	9357	1315	4073	2063	10322	14204	2984	2201	1575	1832	168	1199	49862	533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16,165	123,321	127,615	134,085	141,558
(전년대비증가율, %)		6.2	3.5	5.1	5.6
○ 총계	116,672	123,873	128,205	134,715	142,226
(전년대비증가율, %)		6.2	3.5	5.1	5.6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89,077	95,312	101,984	109,123	116,762
(전년대비증가율, %)		7.0	7.0	7.0	7.0
○ 기본경비	4,327	4,456	4,590	4,728	4,870
(전년대비증가율, %)		3.0	3.0	3.0	3.0
○ 주요사업비	22,762	23,552	21,041	20,234	19,927
(전년대비증가율, %)		3.5	△ 10.7	△ 3.8	△ 1.5
□ 예산					
○ (총)지출	116,165	123,321	127,615	134,085	141,558
(전년대비증가율, %)		6.2	3.5	5.1	5.6
○ 총계	116,672	123,873	128,205	134,715	142,226
(전년대비증가율, %)		6.2	3.5	5.1	5.6
【일반회계】					
· (총)지출	115,343	122,466	126,726	133,158	140,589
(전년대비증가율, %)		6.2	3.5	5.1	5.6
· 총계	115,806	122,958	127,251	133,718	141,188
(전년대비증가율, %)		6.2	3.5	5.1	5.6
【책특회계】					
· (총)지출	778	808	840	875	913
(전년대비증가율, %)		3.9	3.9	4.2	4.4
· 총계	822	868	904	944	983
(전년대비증가율, %)		5.6	4.2	4.4	4.0
【균특회계】					
· (총)지출	44	47	50	53	56
(전년대비증가율, %)		6.0	6.0	6.0	6.0
· 총계	44	47	50	53	56
(전년대비증가율, %)		6.0	6.0	6.0	6.0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1) 전략계획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제 선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를 전략계획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정책의 지속성 강구
-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 △국정철학(사회적 가치·포용국가 등) △주요 업무계획 등과 연계 강화로 정책통합적 효과 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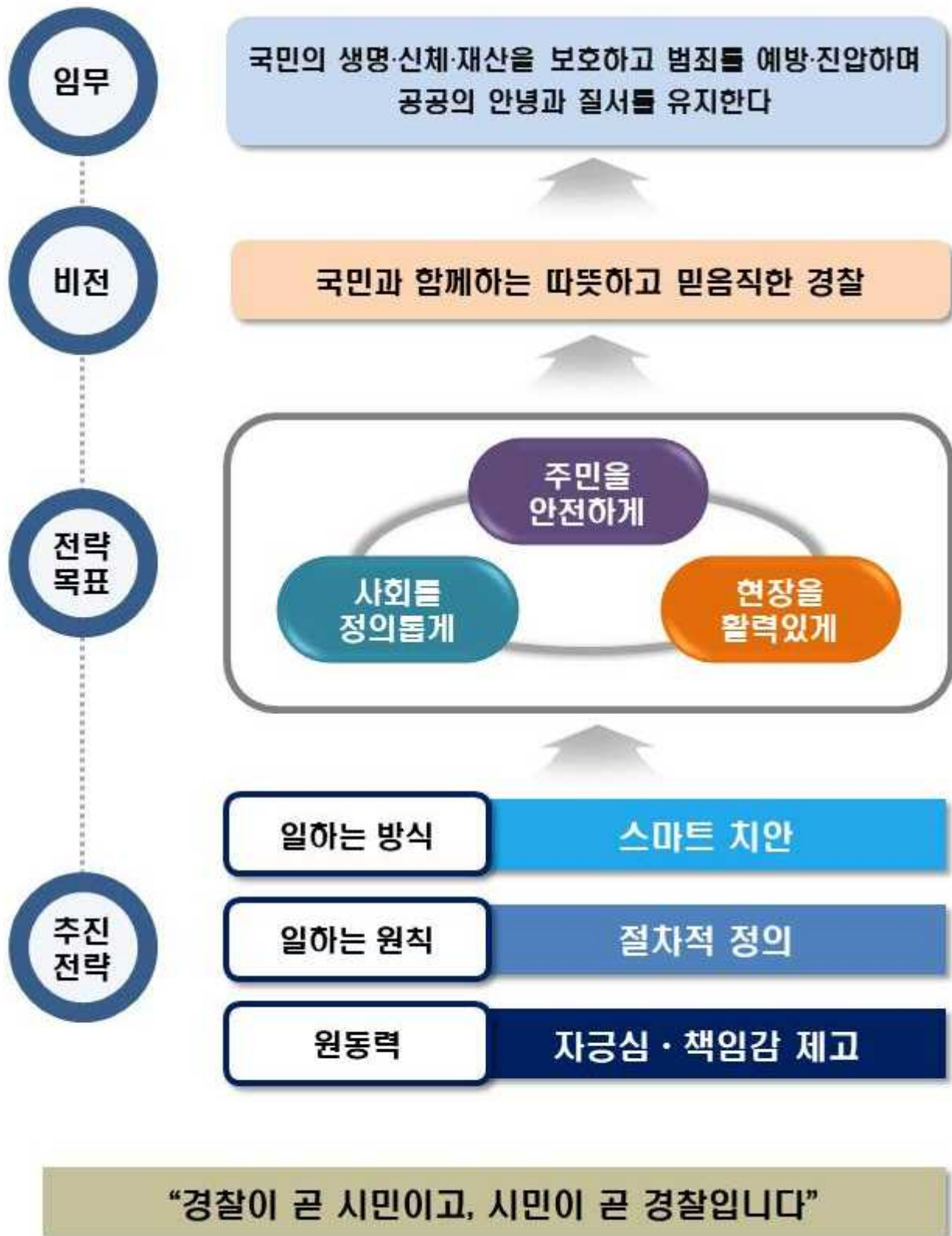
2) 현장의 노력이 경찰 전체의 성과로 귀결되는 평가체계 구성

- 연초 자체평가위원회 대면 컨설팅을 거쳐 자체평가 관리과제와 정부업무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의 성과지표를 상호 연계
- 특히 과제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들을 반영, 업무추진의 공감대·동력 확보

3)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 외부위원 중심 자체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지원팀 주관으로 과제 이행상황 점검, 부진과제 독려 등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 각 정책과제를 항목별(△계획수립 적절성 △정책추진 노력도 △목표달성도 △정책소통 및 환류) 평가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서 성과평가·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결과 활용도 제고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법령상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3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으로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

전략목표

임무·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3대 정책목표 선정

① 주민을 안전하게 ② 사회를 정의롭게 ③ 현장을 활력있게

추진전략

스마트 치안·절차적 정의·자긍심·책임감 제고

스마트 치안 : 선제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스마트 치안 전개
절차적 정의 :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에 절차적 정의 실현
자긍심·책임감 제고 : 현장 경찰관들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슬로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경찰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대표하고 신뢰의 상징인 제복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사회 문제를 오로지 헌법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집행할 때
그 의미와 존재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라는 사명에 헌신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



전략목표	I	II	II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1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2	2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3	3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	4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2	12	50	124

성과 목표	관 리 과 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①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범죄예방	국정 14 업무 I-①-1
	② 살인,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형사	국정 14 업무 II-①-5
	③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위기관리	국정 55 국정 56 업무 I-②-3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피해자보호	업무 II-①-4
	⑤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여성안전	국정 14 업무 II-①-2
	⑥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여성수사	국정 14 업무 II-①-4
	⑦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14 업무 II-①-3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한다					
	⑧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국정 55 업무 II-①-7
	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 구현			교통기획	국정 55 업무 II-①-8
	⑩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운영	국정 55 업무 II-①-7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⑪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안전	국정 14 업무 II-①-6
	⑫ 사이버범죄 적극 검거 및 피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수사	업무 II-①-6
	⑬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보안사이버	
	⑭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외사기획	국정 14 업무 II-①-9
	⑮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II-①-9

성과 목표	관 리 과 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I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6 지능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	업무 II-②-1
	17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외사수사	업무 II-②-1
	18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생활질서	업무 II-②-2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19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인권보호	국정 13 업무 I-②-2
	20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1	
	21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정보3	국정 13 국정 14
	22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현장 법치경비 실현	경비	업무 II-②-2
	2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II-③-8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4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수사기획	국정 13 업무 I-①-3
	25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 개혁	국정 13 업무 I-①-1
	26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범죄분석	
	27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포 렌식센터	국정 14 업무 II-①-6
	28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국정 14 업무 II-③-7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29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대테러	국정 55 업무 II-②-3
	30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보안관리	
	31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보안기획	국정 13
	32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외사정보	국정14 업무 II-②-2
	33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경호	

성과 목표	관 리 과 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II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34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치안정책 완수를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	혁신기획 조정	국정 13 국정 14
	35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II-③-3
	36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업무 I-②-4
	37 범죄첩보·정책 참고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정보2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38 공정한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감찰	업무 II-③-3
	39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감사	업무 I-②-2
	40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 정책	업무 II-③-4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치안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1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정보통신	국정 56
	42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국정 14 업무 II-③-2
	43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연구발전	국정 14 업무 II-③-6
	44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정보화 장비기획	
	45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항공	
성과목표 4.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46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치안현장 활력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	경무	업무 II-③-4
	47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	국정 14 업무 II-③-9
	48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규제개혁 법무	업무 I-②-3
	49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업무 II-③-1
	50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경찰역사 기록TF	업무 I-③-2

Ⅲ. 세부 추진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기 본 방 향

- ◇ 경찰 본연의 책무인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춰 일상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통해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 치안 문제해결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하여 체감안전도 향상 견인
- ◇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 교통문화·사이버안전 등을 선도함으로써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교통문화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 획기적인 교통안전 확보
 - 더욱 치밀해지는 외사·사이버범죄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5	3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5대 범죄 검거율
I-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①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도 /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② 살인,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살안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 조폭 검거성과 / 상습·주취폭력배 구속률 /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③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 위기대응역량지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체감 안전도
	㉔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피해자 보호지원율/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성과
	㉕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㉖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성폭력 미검률
	㉗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I-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㉘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㉙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 구현	교통사고 심각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㉚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 /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
I-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㉛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 사이버첩보 활용지수 /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 회신율
	㉜ 사이버범죄 적극 검거 및 피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 피해보호조치율
	㉝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보안사이버 단속 활동 지수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 /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
	㉞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 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㉟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1) 주요 내용

- **<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 탄력 순찰제도 운영(주민 요청장소 순찰) △ 우범지역 환경 개선 등 추진
 - － 아울러, △ 112 신고관리 고도화 △ 민생침해 범죄 근절 등 경찰 핵심 업무의 역량을 높여 지역의 두터운 신뢰·협조 확보
- **<사회적 약자 보호>** 그동안 치안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회복적 경찰 활동’ 등 관련 정책 확대
 - － △ 여성·청소년 범죄 △ 학대·실종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안 일소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발맞춰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구현, 사망사고 감소추세 가속화
 - － △ 스쿨존 사망사고 △ 고령자 교통사고 등 새로이 이슈화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시설 등 인프라 정비
- **<사이버·국제범죄 대응>** 민·관 협업을 통해 △ 사이버범죄 신종 수법 공유 △ 공동해결 방안 마련 등 선제적 예방 활동 전개
 - － 주요국가와의 국제 치안협의를 구축하고, 외국인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엄정 대응

⇒ 개인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치안위협 요소에 대한 예방·대응을 통해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현’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5대 범죄 검거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5대 범죄 검거율	71.7	77.0	78.8	78.1	78.1	80.0	검거율은 '17년 최고치 달성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 과학수사 발전 △ 인적 인프라 확충 등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역대 최고치보다 1% 이상 상승한 80.0%를 '24년 목표치로 설정	5대범죄* 검거건수 ÷ 발생건수×100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KICS* 통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외부환경·갈등요인>

- 강력범죄 및 무동기·중요 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어 치안이 삶의 질 제고의 전제조건으로 부각되며, '묻지마 범죄' 등 비정형적 범죄도 치안 불안요소로 상존

※ △강남클럽 폭행(1월) △진주 방화살인(4월) △제주 전 남편 살해(5월) △연예인 단독방 성폭력(5월) △베트남 이주여성 상습폭행(7월) △학대피해아동 사망(11월) 등

- 사회 병리적 현상에 기인한 범죄 등 공동체 약화 현상이 치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체 결속력이 낮아* 한 건의 범죄로도 국민 체감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 OECD 회원국 40개 중 우리나라 공동체 지수가 최하위('18년 삶의 만족도 조사)

<갈등관리 계획>

- 주민들은 경찰의 중요활동으로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인식

경찰활동(15개) 중요도 설문조사('19.10월, 산업정책연구원)

- ① 112신고시스템 → ② 지역사회 협력치안 → ③ 여성대상범죄 대응 및 피해자보호
④ 교통 활동 → ⑤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실종 예방 → ⑥ 학교폭력 근절 順

- 지역 치안을 시작으로 범인 검거·시설 개선 등 모든 분야의 안전 강화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 해소 필요

[1] 주요 내용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위험지역 환경개선 추진
 -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역할 확대 △주민요청 장소 순찰(탄력순찰) 실시
△여성안심귀갓길·안심구역 등 여성안심 치안활동 강화로 주민 안전 확보
- **<민생침해 범죄 근절>** 살인, 강·절도 등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강력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검거율을 제고하여 체감 치안 향상 도모
 - － 조폭, 주취·갈취폭력, 마약류 범죄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강절도 피해품 회수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주력
-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치안상황관리관실 중심으로 각종 위기·재난 상황에 전문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한 체제 정립
 - － 골든타임 內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국민 안전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신속성뿐 아니라 만족도까지 고려하여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관리과제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도 /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살인,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 조폭 검거성과 / 상습·주취폭력배 구속률 /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 위기대응역량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사회안전성 인식	5.0	5.2	5.2	5.4	전 3년도 실적 평균값(5.11)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5.33)을 감안하여, '20년 목표치는 예측값보다 높은 5.4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사회 안전성 인식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가 복잡·다기화하면서 기존 강력범죄에 더하여 젠더폭력 및 계층·집단 간 마찰 등 새로운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는 중요 범죄들에 대해 특별단속·집중검거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안전한 치안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 － 범죄 등 각종 위기상황에 112신고 접수·초동대응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치안 불안 해소 필요
- 코로나19 등 범국가적 재난상황에 경찰의 위기관리 역량 투입 필요
- ➡ 위기관리센터 중심으로 전 기능의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112신고처리·소재추적·동선확인 및 기능별·지방청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등 총력 대응

[4] 참고자료

-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 112 긴급신고 앱(APP) / 112 신고·접수 매뉴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I-1-①)

□ 추진배경

- 이웃공동체 간 결속력 약화에 따라, 한 건의 범죄발생으로도 국민들의 체감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 ※ '18년 OECD 회원국 대상 '삶의 만족도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공동체 지수(곤란할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는 40위로 최하위 기록
- 이에, '17년부터 범죄·불안의 해결책으로 공동체 회복에 주목, 국정과제로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를 선정하여 추진 중
-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 위험요소 개선 등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확립 >

- 범죄예방진단팀 역량·인프라 강화, 지역사회의 불안요인 발굴
 - ※ (협업사항) 민간연구기관과 범죄예방 관련 연구 지속 협업*, 예측적 범죄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외부기관과 데이터 확보 노력,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외부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찰 각 기능과 관련된 외부 협의체**와도 연계 강화
 - * 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 조명·비상벨·미러시트 등 방범시설의 효과 측정('19년)
 - ** △ 범죄예방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탈북민지역협의회 △ 이주여성보호협의체 등
- (범죄예방진단팀 역량 제고) △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 △ 범죄예방 진단결과 관리틀 개발 등 범죄예방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 범죄 예방 진단카드 전문화 등 범죄예방진단 관련 인프라·역량 강화
 - ※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취약요인 진단결과 및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범죄위험도 분석 또는 지역 CPTED사업지 선정 등에 활용

- (예측적 범죄분석 시스템* 고도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한 ‘범죄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인천지역 대상으로 검증·시범운영(’19.10~11월), 범죄위험도 분석(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및 전국 확대 운영 추진

*112신고·탄력순찰 요청·범죄예방진단결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18년 최초 구축, ’20년 고도화 예산 8억 2,400만원 확보)

**인천지역 치안데이터와 외부데이터(유동인구·상가업종 등)를 결합하여 시간·장소별 범죄위험도 예측, 위험지역 16곳에 6주간(’19.10.14~11.18) 순찰자원을 집중 배치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대비 21.5% 감소(’18년 790건, ’19년 620건)

***112신고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TCS(교통사고), 즉심·통고시스템(경범죄 등 기초 질서)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축적, 위험도를 분석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역할 확대)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협(불안감)을 주는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등 역할을 확대
 - * 경찰서 각 부서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분석·활용, 외부적으로 지역 단위 기관·단체 등 공동체와도 협업하여 문제해결 노력
- 회복적 경찰활동과 함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등 외부협의체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시키는 치안거버넌스 구축

▶ 범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인적·물적 요인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등 범죄 취약요인 △전염병 등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를 적극 발굴·해결방안 모색

▶ 범죄뿐만 아니라 갈등·분쟁 등 비범죄도 위험요인으로 발전 가능한 경우, 회복적 관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험요인 해소하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

※ △학교 내 갈등·폭력(SPO) △가정폭력·학대 가정 재발위험대상자(APO) △주민들의 반복적인 민원(청문·지역경찰)에 대하여 회복적 개입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이해 및 참여 유도,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하여 범죄취약 요인 개선 논의 등 수행

- 치안활동 참여를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승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협업사항)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단체·기업과도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대상 △치안 관련 사회공헌사업 △각종 치안정책·기술 홍보

- (범죄예방대상 행사 지속 개최) 중앙일보와 제5회 범죄예방대상 공동 주최, 범죄예방에 참여·공헌이 큰 지자체·단체·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 ※ CPTED(셉테드, 범죄예방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예방·범죄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시상분야 설정 및 관련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확산 독려
 - (치안 관련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기업·재단 등 민간과 협업, 범죄예방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
 - ※ ('19년) △편의점 긴급신고시스템 구축(GS25) △KT&G상상유니브, 대전중부서·중구청과 협업, 벽화사업 및 CCTV 등 설치 △현대자동차, 울산지역 초등학교 안전교육 시행
 - (시민 참여 유도) △시민경찰학교 △警·學 학점제 등 운영, 다양한 집단이 범죄예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등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정책 추진
 - (탄력순찰 내실화) 순찰신문고*를 통해 주민의 순찰 희망장소 취합, '주민요청·112신고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순찰 실시
 - * 순찰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주민들이 상시 순찰요청 가능
- ▶ '순찰신문고'와 별도로 지역경찰이 직접 주민들에게 순찰요청을 수렴하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적시성 확보 및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 ▶ 탄력순찰 요청장소를 112순찰차 태블릿(네비게이션 기능)에 탑재, 순찰요원에게 주민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탄력순찰 경로 제공
 - ▶ 매월 말, 순찰을 요청한 주민에게 이메일로 순찰이행 결과를 제공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및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
 - ▶ 순찰차 임의대기 등 기본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주민접촉을 활성화하는 순찰 및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을 통해 주민친화적 근무 실시
- (지역경찰관서 증설) 변화하는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지역에 지역경찰관서 신설, 주민 중심의 현장대응 강화 기반 마련
 - ※ 112신고·5대범죄·인구·면적 등 치안여건을 고려, 심의를 통해 신설대상 확정
 - (중요 시기별 종합치안대책 추진) 연말연시·명절 연휴 등 기간에 범죄 분석 후 소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선제적·가시적 활동 전개, 주민안전 확보

<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 (협업사항) △경찰·지자체 협력 의무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확산하여 경찰·지자체 협력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득 노력

- (여성안심 치안활동 강화) 여성안심귀갓길·안심구역 등 여성 불안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사업·자체예산 활용 하여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 추진

※ 경찰 CPTED 예산(30억원) 활용, 전국 1,000여개 취약지점 등 환경개선

- (부처간 협업 확대) 행안부·국교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의견을 반영

< 중앙부처 환경개선사업 예시 >

구 분	CCTV 설치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내 용	▶ 쏘 지자체 대상 ▶ 범죄취약지점 대상 방범용 CCTV 설치	▶ '17~'22년 年 100개소 (잠정) ▶ 舊도심지 활성화, 노후 생활환경 개선

< 지역공동체의 신뢰 제고를 위한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 >

※ (협업사항) 지역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각 기능과 상시 협업

- (현장대응역량 제고) △ 휴대장비체계 개선 △ 현장실태 점검·개선 △ 현장 교육자료(지침) 제작 등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
- (현장중심 정책효과 환류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찾아가는 지역경찰 현장 워크숍 △ 업무유공자 공무국외여행 △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선발 등 실시
-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 공기청정기·살균소독기 보급 △ 근무 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현장경찰관 운용 및 근무여건 개선

< '20년도 과제추진 전략체계도 >

<비 전>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추진 목표>

지역사회
불안요인
분석·해결

지역사회와의
관계증진을 통한
치안 공동생산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추진
기반 조성

<추진 전략>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내실화

- ① 협의체 추진체계 정비 및 논의
안건의 체계적 관리
- ②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③ 주민간담회 정례화·활성화 등
직접적인 치안참여 확대

지역 치안문제 정밀 진단

- ① 광역단위 범죄예방진단 추진
- ②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 ③ 지역 치안문제 심층적 발굴·분석
- ④ 범죄예방진단팀 역량 강화

탄력순찰 등 주민접촉 순찰 강화

- ① 탄력순찰 목표관리제 추진
- ② 주민접촉형 순찰 강화
- ③ 생활주변 치안 불안요인 제거

CPTED 등 공동체치안 추진 기반 마련

- ① 지역사회 CPTED 사업 내실화
- ② CPTED 협업 확대
- ③ CPTED 제도 기반 조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년 설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2월	
	지역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2월	
	'20년 경학 실습학점제 시행	3월 하달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은 5월 이후)	
	여성 불안환경 개선사업 추진	3월	
2/4분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역할 확대 계획 수립	4월	
	'20년 시민경찰학교 운영계획 하달	코로나19 진정 이후	
	전국 범죄예방진단팀 워크숍	코로나19 진정 이후	
	지역경찰·112 공무국외 여행	코로나19 진정 이후	
	여성불안환경 점검 및 관리강화 계획 수립	5월	
	피서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추진	6월	
3/4분기	순찰차 공기청정기 보급 계획 수립	7월	
	추석 전후 종합치안대책 추진	9월	
4/4분기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10월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10월	
	예측적 범죄분석 시스템 고도화	12월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선발	12월	
	연말연시 종합치안대책 추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각 지자체·정부부처(CPTED 사업 관련 담당), 지역 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분석

지자체 정부부처	▶ 국민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경찰과 일정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각자의 역할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등 사전논의·정보공유 필요
지역주민 (사업대상)	▶ CPTED 사업이 완료된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음 ▶ CPTED 사업 계획부터 유지·관리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확인
지역주민 (사업대상 外)	▶ 제한된 토지면적에 따른 CPTED 사업을 진행 시 토지 소유관계·밀접도 등에 따른 사업 수혜 차등 ▶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험도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객관성 확보
전문가	▶ 경찰·도시행정·건축·사회학·범죄학·컴퓨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해법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접근 ▶ 각각의 진단과 해법을 충분히 청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각의 의견을 검토

□ 기대효과

- 범죄예방진단팀을 주축으로 경찰 모든 기능이 협업하여 지역 문제를 분석 및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활성화,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 마련

- 범죤예방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등 공동체와 함께 치안문제를 개선하고, 탄력순찰 등 수요자 중심의 예방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치안 참여 유도
- 지역적·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 및 민간의 안전프로그램 사업 개발·참여를 유도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범죤 취약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죤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지역경찰관서 신설 △지역경찰 운영체계 개편 등 현장대응력 강화 기반을 다지는 한편,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역량을 갖춰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범죤예방(I-1-일반재정①)				
① 범죤예방(1131)			304.2	475.1
■ 생활안전활동(311)			156.7	195.5
■ 범죤대응역량강화(312)			147.5	27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탄력순찰 이행도 (50%)	56.4%	61.2%	66.5%	‘건강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체치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불안요인을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의 진단·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업이 요구됨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경찰력을 집중할 때 가능함 탄력순찰은 국민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치안 핵심 모델로, 국민의 참여와 경찰의 조치 여부가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지속적인 정책수행여부 관리가 필요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지표로 객관적·정량성이 인정됨 본 지표는 '17년 9월 정부출범 직후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된 것으로 기존의 운영 기반이 없어 수행 난이도가 높으며, 국정과제로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음에도 '19년 기준 61.2%의 실적치를 달성하는 등 긴급 112신고 증가('15년 2,150,234건→'19년 2,963,958건. 37.8%↑) 및 한정된 현장인력 구조 상 임계치가 확인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체감치안 향상 등을 통해 공동체 구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목표치를 3년간 추세치 이상인 66.5%를 산정,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산출식1 참조]	순찰 희망장소-순찰계적 간 일치율	스마트워크 시스템에서 지역주민 순찰 희망장소와 순찰계적 간 좌표 매칭을 추출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50%)	59.2%	61.2%	66.4%	현재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셉테드 사업은 지역사회 치안 전문가인 경찰 협업이 필수적임 특히, 사업 추진 이전에 경찰에 의한 치안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해당 CPTED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지자체 사업 참여 현황을 지표로서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본 지표는 전국 지자체(248개)에서 추진된 CPTED 사업 중에서 경찰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추진한 사업의 비율임 ※ '17년 1031개 중 468개(44.4%) / '18년 1,555개 중 754개(48.5%) / '19년 1,958개 중 1,200개(61.2%) '20년 목표치는 예상 지자체 CPTED 사업보다 10%p 증가를 목표로 66.4% 참여 노력도 목표 산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산출식2 참조] ※ 사업 기준 : ①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 반영 ②투입 예산 최소 100만원 이상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 100%	수기 취합 및 지자체 공문 등 근거자료 첨부

[산출식1]

	탄력순찰 이행(건)		탄력순찰 요청(건)		이행율
	이행(건)	증감율 (월 평균)	요청(건)	증감율 (월 평균)	
‘17년*	1,719,386 (월 평균 573,123)	-	3,268,760 (월 평균 1,493,893)	-	52.6%
‘18년	6,670,025 (월 평균 555,835)	-3%	11,830,077 (월 평균 985,840)	-10%	56.4%
‘19년	10,971,149 (월 평균 914,262)	64%	17,926,714 (월 평균 1,089,587)	52%	61.2%
↓					
‘20년 (목표)	14,372,205 (월 평균 1,193,112)	3년간 평균 30.5% 증가 적용	21,691,324 (월 평균 1,807,610)	3년간 평균 21% 증가 적용	66.0% (추세치) 66.5% (목표)

* ‘17.10월부터 탄력순찰 전국시행

- 탄력순찰 이행은 평균 증감율 30.5%, 탄력순찰 요청은 평균 증감율 21%를 적용 → ‘20년 이행율 66% 예상 → 66.5% 목표 설정

[산출식2]

	전국 CPTED 사업(건)	경찰 요청 CPTED 사업(건)		참여 노력도
		사업(건)	증감율	
‘17년	1,031	458	-	44.4%
‘18년	1,555	754	65%	48.5%
‘19년	1,958	1,200	59%	61.2%
↓				
‘20년 (목표)	2,350 (20% 증가 예상)	1,560 (30% 증가 목표 시 수치)		66.4% (목표)

- ‘18.‘19년 시작된 지자체 CPTED 사업이 ‘20년에 다수 종료될 예정으로 경찰 요청 CPTED 사업도 임계치에 임박,
- 전국 CPTED 사업이 20% 증가 예상되기에, 경찰 요청은 30% 증가를 목표로 목표 수치를 설정, 총 참여노력도의 목표를 66.5%로 산출

② 살인,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I-1-②)

□ 추진배경

- 살인, 강·절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범죄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건해결이 매우 중요
 - －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경미절도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품 회수 등 피해회복에 주력, 실질적 ‘사건 해결’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주취·갈취 폭력 등 일상생활 주변의 서민·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로 체감치안 제고
- '19년 이후 조직적 마약류 유통·투약, 성폭력 등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집중단속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강·절도 강력단속 >

- 최신 수사기법 발굴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로 강력범죄 검거율 제고
 - － 사건 해결 과정에서 추적·증거확보 최신 수사기법을 적극 발굴, 전국 공유하여 모든 수사경찰의 수사역량 상향 평준화
 - － 중요사건은 △ 최신 수사기법 활용, △ 종합대응팀 편성, △ 경력·장비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신속 해결 및 검거율 제고
- 강력팀·생활범죄수사팀 활용, 투-트랙 집중단속 추진
 - － 강력팀은 상습 및 침입 강·절도,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수사, 생활범죄수사팀은 자전거·차량털이, 들치기 등 경미절도 수사에 집중하는 투-트랙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검거율 제고

- 명절, 연말연시 등 치안수요 집중 시기 ‘스마트 형사활동’ 강화
 - Geo-Pros 등 활용하여 취약지역·시간대 분석, 야간에 형사 증원하여 주민안전 중심 ‘스마트 형사활동’ 강화
 - 형사 특성화 부대* 활용, △ 살인·납치·조폭·집단폭력 등 중요 범죄 수사지원, △ 취약지역·시간대 범죄예방순찰 등에 투입
- * 전국 경찰관 기동대 中 23개 중대를 지정, 형사활동에 활용('19. 9월)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중요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 이춘재 연쇄살인 등 미제 살인사건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 미제팀* 인수사건 확대(5년 → 2년), △ 수사기록 저장·검색 시스템 개발 등 중요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추진
- * (중요미제사건 수사팀) '11년 미제사건으로 인한 잠재적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신설(現 17개 지방청 73명), 그간 총 26건 해결, 270건 수사 중

<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폭력 척결 >

- 서민생활 주변에서 각종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 지속 단속,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
 - ※ 조폭은 존재만으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신고유도를 통한 단속 및 재범 차단
- 조직폭력배 개별범죄는 물론 사이버도박 등 자금원 차단 및 몰수까지 광범위한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활동 근거지 와해 추진
 - ※ 수사구조개혁 대비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 중심의 조직폭력배 단속으로 전문성 및 집중도 제고
- 보복 및 재범여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 '19년 검거한 조직폭력배 전원의 사회복귀여부 및 재범 모니터링
 - '20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선정, 첩보 수집 강화 및 상반기 집중단속 추진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폭력조직 자금원 차단 및 범죄수익 몰수

< 서민·사회적 약자 대상 ‘생활폭력’ 범죄 근절 >

- 주취·갈취폭력 등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고질적 폭력행위와 일상생활 주변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생계침해 주취·갈취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직장 등 폭행(직장 동료·상하 간, 대학 선후배 간, 체육계 지도자·선수 간) △주거침입

- 전담수사팀·관련기능 합동 TF를 편성하여 △사건처리 △범죄예방·홍보 △피해자 보호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

 ▸ (전담팀) 생활주변 폭력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상담 및 수사 등 전담
 ▸ (합동TF) △사건처리(형사·생안) △예방·홍보·협력(형사·생안·질서 등)
 △피해자보호(청문) 등 관련 기능에서 협력하여 사건처리

- 전략적 홍보 및 다양한 신고채널·신변보호 제도(국민제보앱·신고명함, 가명조서, 면책제도 등)를 활용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단순 폭행 등 경미사안도 전과확인 및 적극 여죄수사로 피의자의 범행동기·상습성 및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엄정대응

 ▸ 흉기사용 및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구속수사 원칙
 ▸ 전과·112신고내역·주민탐문 등을 통해 상습성·폭력성 구증, 구속여부 검토
 ▸ 불입건 때에도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 적극 적용 및 재범방지 엄중경고

<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 >

- 서울 강남권 등 클럽·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조직적 유통·투약 사범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한 단속활동 및 첩보수집 강화
 - － 클럽 관련 신고는 초기부터 신속·민감대응, 증거수집 등 적극 현장 조치 / 불법행위 확인 시 관련 기능 합동점검 및 단속 추진
- 마약류 범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NS 등 최신 수법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증가 추세
 - ※ (인터넷 마약류사범) '17년 1,100명 → '18년 1,516명 → '19년 2,109명

-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활용, 마약류 유통 강력 단속
- 금년 상반기(3월 ~ 5월)에 「클럽 및 인터넷 등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추진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분위기 사전 차단
- 마약 수사체제 고도화, 국내·외 공조 강화 등 마약수사역량 제고

 - (수사체제) 마약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신설, 지방청·경찰서 수사인력 충원, 마약류 탐지장비 보강 추진
 - (국내·외 공조) 美DEA 공동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개최, 관세청·식약처·국정원 협업 등 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공조수사 강화

< 선제적 범죄예방과 실질적 피해회복 등 회복적 형사활동 추진 >

- 생계형 경미사범은 즉결심판을 적극 청구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재범방지 및 공동체 복귀 유도
- 보복 등 추가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신변보호·정신질환자 관리(응급·행정입원) 등 위험요인 제거
- 피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절차·진행·결과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품 회수, 생활비·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데이트폭력은 전국 경찰서에 형사·여청·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전국 경찰관서 ‘데이트폭력 근절 TF’ 정비, 형사·청문 등 기능간 합동 유기적 대응
 -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작성, 일선 경찰관 상대 지속 교육
 - 상습·악질 피의자 엄정 수사, ‘맞춤형’ 신변보호·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경찰관 대상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감수성 제고

- 심리부검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 적극 협조

 - 자살의심 변사 통계, 자료 공유로 자살원인 규명을 위한 ‘심리부검’ 적극 참여
 - 동기·수단을 포함한 자살위험 촉발요인 노출 최소화 등 「자살보도 가이드 라인 3.0(자살사건 비공개 원칙)」 철저 준수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명절 전·후 특별 형사활동 추진	1월	강력
	서민·사회적 약자 대상 '생활폭력' 특별단속	2~5월	폭력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2~6월	마약
2/4분기	부처님오신날 전후 형사활동 강화	4월	강력
	강·절도 범죄 집중검거 기간 운영	6~8월	강력
	서민·사회적 약자 대상 '생활폭력' 특별단속 성과분석	6월	폭력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성과분석	7월	마약
	클럽 및 인터넷 등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성과분석 ※ '코로나19' 위기상황 진정 후 추진 예정	6월	마약
3/4분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7~8월	폭력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7~9월	마약
	하절기 특별 형사활동 추진	7~8월	강력
	강·절도 범죄 집중검거 기간 운영 성과분석	9월	강력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개최 ※ 美DEA 등 일정협의 중	하반기	마약
4/4분기	추석 전후 특별 형사활동 추진	10월	강력
	경찰청-관세청 간 마약수사 공조 워크숍	11월	마약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사범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포상	11~12월	형사과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추진	12월	강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강·절도 및 조직폭력·생활폭력·마약류 범죄 강력단속을 통해 국민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 강절도 피해품 회수 등 피해회복, 조폭·생활폭력·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신변보호 등으로 안정적 치안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25%)	62.3 %	60.6 %	61.1 %	61.4%	최근 3년 평균치(61.3%) + 0.1%p 인 61.4%로 산정 ⇒ 위 목표치는 평균치를 초과하는 '상'에 해당 ※ 전년 목표치 60.7%와 비교해도 0.7%p 높은 적극적 목표임 ※ 살인·강도 검거율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강력범죄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50% 이상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17년 기준 日 31.2%, 美 13.6%) 최근의 검거율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검거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 / {{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발생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
조폭 검거성과(20%)	3,16 3명	2,69 4명	3,07 7명	3,037 명	최근 3년 평균치(2,978명) + 2%를 초과하는 3,037명으로 산정 ⇒ 감소하던 검거인원이 지난해 반등 한 상황으로 위 목표치는 평균 치를 초과하는 '상'에 해당 ※ 최근 조폭폭력배의 소규모·지 능화 경향 등 단속여건이 악 화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임	조폭폭력배 검거인원	※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상습·주취폭력배 구속률(20%)	15.1 %	14.9 %	15.5 %	15.3%	최근 3년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 고 있어 평균치(15.2%)를 초과하 는 15.3%를 목표치로 산출 ⇒ 3년간 실적 평균 이상에 해당 하는 저극성 '상'에 해당 ※ 구속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속률 향상은 많 은 변수가 있고 여죄수사·피해 정도 확인 등 적극적 수사활동 이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전체범죄 구속률은 1.3%)	상습 주취폭력배* 구속 / 검거(인원) * 최근 3년간 동 종범죄전력 2 건 이상인 자	※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20%)	7,82 6명	6,73 6명	8,77 9명	7,858 명	최근 3년 평균치(7,780명) + 1% 를 초과하는 7,858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 '18년까지 마약류 검거인원 감소 추세였으나, '19년에는 마약수사 관뿐만 아니라 쏜 수사부서와 관 련기관이 투입된 대대적 단속으 로 검거인원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현 목표치는 매우 적 극적인 목표치 설정임	범죄통계시스템 검거인원	범죄통계시스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강·절도 피해품 회수 건수(20%)	55,200건	58,812건	57,172건	57,600건	최근 3년 평균치(57,061건) 보다 539건 높은 57,600건으로 산정 ⇒ '19년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상황으로 위 목표치는 평균치를 초과하는 '상'에 해당 ※ 전년 57,172건 대비해도 428건 높은 수준임	범죄통계시스템 회수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회수건수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 (재산범죄 회수현황)

③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I-1-③)

□ 추진배경

- 차세대 112시스템, 순찰차 영상 캠 등 IT 기술을 반영한 첨단 치안상황 관리시스템 도입, 정교한 상황컨트롤을 통한 경찰 초동조치 역량 제고
- 감염병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경찰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급증, 사회적 요구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재난 대응 역량 확보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 지원체계 고도화로 초동대응 역량 강화 >

- (한국형 ‘RTCC’ 구축)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내용과 경찰보유 정보를 결합하여 위험성 분석, 관련 정보를 현장 경찰관에게 제공
 -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 상황분석관 배치. 가칭 ‘한국형 RTCC’ * 구축
 - *美 NYPD는 ‘실시간 범죄센터(RTCC: Real Time Crime Center)’ 운영, ‘DAS(Domain Awareness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출동경찰관 및 수사관에게 제공
- (현장코칭시스템 활성화) 현장코칭사례를 유형·사례별로 DB化, 현장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찾도록 112모바일폰용 검색시스템 구축
- (현장조치 적정성 체크리스트) 모든 사건종별로 신고접수 후 초동조치 전반의 점검 필요사항을 체크리스트化, 112시스템에 탑재·활용
- (긴급신고 공동대응체계 활성화) 각종 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
 - (소방청 협력 강화) 공동대응 관련 兩 기관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불만사항 수렴, 소방과 합동 TF 구성하여 주요 현안 개선방안 논의
- (권익위 협업) 각종 민원 상담 등 비긴급 상황을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긴급신고 대응에 역량 분산 우려, 비긴급 신고인 110 담당 권익위와 협조, 사례별 가이드라인 하달 및 신고 이관 활성화

< 치안상황 모니터링 역량 제고 >

- (보이는 112시스템) 112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핸드폰으로 URL을 전송, 신고자가 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신고자의 폰으로 찍히는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요원·현장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시스템 구축
- (노후 112상황판 교체) 상황실 장비 중 노후된 112상황판·스토리지 교체, 7년 이상 노후화된 현황판을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링 전용 제품으로 교체, 디지털 방식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여 현장지원
- (순찰차 캠 관제 시스템 도입) 순찰차에 영상전송용 카메라를 설치, 주요 신고현장 상황을 본청·지방청·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보면서 지휘·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 (112신고 상황전파 앱 개발) 112신고 출동 시, 서장·과장 및 관련 기능 직원이 신속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 개발·배포
 - ※ ①112 신고내용 확인 ②녹취내용 청취 ③사진 등 관련자료 확인 ④티맵을 이용, 사건발생장소 길안내 등 지원

<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 >

- (사용자 편의중심 UI 구축)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X)를 표준 기술인 HTML5 기반의 UI 솔루션으로 전환, 시스템 멈춤현상을 제거 하는 등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업무환경 개선
- (112폴맵 업그레이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최단시간 현장 도착 가능 순찰차 선별,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112신고 데이터 기반 범죄 위험성 예측을 통한 거점근무 필요지역 판단 등 기능 개선
- (112 통계 시스템 구축) 신고 접수·지령 내용 등 단순 문자로 구성된 비정형적 신고자료를 통합·분석 가능토록 자료화 및 시스템 구축

< 치안상황대응 전문성 강화 >

- (치안상황분석 고도화) 주요 치안상황 조치 적정성, 월별·분기별 및 계절적 치안수요 예측 등 분석자료 작성, 치안상황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
- (정책연구 역량 확충) 112 관련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정책 세미나) 現 초동대응 체계의 문제점 개선, AI·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 적용 등 112관련 주요 현안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자문단 구성) 치안상황관리 정책 구상 및 발전 방향성 설정 시 국민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내·외부 정책자문단 설치
 - ※ 학계·법조계·언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현장 내부위원 위촉
- (교육종합계획 수립) 교육대상·내용·일정 등 전반적 교육 커리큘럼을 담은 112교육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 교육 기틀 마련
 - (사이버교육) 중요사건 유형별 상황관리요령 등 지령·접수 실무자 및 팀장 직무 수행에 맞춘 전문화된 내용으로 사이버 동영상 제작
 - (토론식 시나리오 교육 훈련) 중요 사건·재난·테러 등 각종 상황별 시나리오 마련, 사례별·단계별·기능별 행동 요령 등을 토론을 통해 숙지

< 효과적 치안상황관리 위한 체계 정비 >

- (소관규칙 정비) 본청 치안상황실의 사무를 규정하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과 112상황실의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정비·통합 검토
 -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위기유형 및 주요범죄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주요 17개 속보사항 조정(추가·삭제),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 등 변경
 - (112상황실 운영규칙) 기능별 사건·상황 처리요령 등 변경 부분 현행화
- (경찰법 개정 대비) 112상황실 운영규칙에 부서명칭·역할분담·사무운영·사무절차 등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성에 부합하는 내용 검토

< 112 홍보강화로 경찰활동 신뢰 확보 >

- (온라인 홍보) 스마트 치안 등 SNS에 익숙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분량(1분 내외)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 인터넷·SNS를 통해 확산
- (오프라인 홍보) 리플릿, 홍보스티커, 민간기업 연계 등 홍보 다각화
 - (홍보용 리플릿) 모바일에 익숙치 않은 세대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 제작, 연령대 맞춤형 신고요령 등 112 교육 내용 포함
 - (112순찰차 홍보스티커) 112순찰차 좌·우면 및 후면에 눈에 잘 띄는 야광스티커를 이용, ‘긴급신고는 112, 민원상담 신고는 110’ 국민협조 메시지를 담은 홍보문구·디자인 개발
 - (민간기업 홍보) 범죄취약지(편의점 등) 및 영화 상영 시 광고 등 광역적·효과적 홍보 위해 관련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홍보 추진
- (112의 날 기념식) 현장경찰 사기 진작 뿐 아니라 소방·해경 등 유관기관 및 연예인 홍보대사 초청, 112업무 중요성 내·외부 각인 및 협업 분위기 제고·올바른 신고 문화 캠페인 병행

<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

- (위기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경찰이 관련된 모든 위기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경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작
 - ▶ 각종 위기상황을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맞춰 관리, 단계별 지휘체계 확립, 위기상황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토록 설계
 - ▶ 지휘·보고 체계 등 경찰의 재난분야 업무를 종합한 ‘경찰 재난관리규칙’ 개정
 -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매뉴얼 변경사항 및 기능별 조치 등 재난대응 상황 변화에 맞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33종) 제·개정
- (재난장비 보급 확대) 112타격대(255개), 현장통제지원부대(22개), 지역 경찰 등 대상 방독면·화생방 보호복·방사능 선량계 등 보급
 - ※ 20년 K5방독면 3,300개, 방사능선량계 200개, 황사마스크 22,650개, 구급배낭 500개
 - ▶ 순찰차에 자동 심장충격기 1,000대 비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 ▶ ‘재난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장비의 종류·수량 내용연한 등 관리 체계화
 - ▶ 재난장비 사용법 동영상 제작 및 초·직원 의무 수강 추진

< 재난 대응 전문성 제고 >

- (교육·훈련 내실화)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다양화, 재난 관련 자체 직무교육 과정·인원 확대 등 재난안전 교육체계 정립
 - ※ △화학사고 대응교육(화학물질안전원) △방사능사고 대응교육(원자력의학원) △구조·구급 교육(중앙소방학교) △재난대응 직무교육(경찰인재개발원) 등
- － 감염병·지진·대형화재 등 재난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경찰관서별 도상훈련·FTX 등 체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적극 참여, 재난대비역량 강화
- (전문가 그룹 운영) 경찰 위기관리정책 자문위해 재난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정책자문단 운영, 내부 의견수렴 위해 현장자문단도 구성
- (관계기관 협업) 주요 재난관리기관과 MOU체결 합동훈련 등을 통해 인력·물적 네트워크 구축, 효과적 협업기반 마련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차세대 112시스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일상감사 및 조달청 의뢰	3월	
	112상황판 교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일상감사 및 조달청 의뢰	3월	
2/4분기	112교육 종합계획 수립	5월	
	112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5월	
	차세대 112시스템 · 112상황판 교체 사업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6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수립	6월	
3/4분기	차세대 112시스템 사업 착수, 사업감리 계획서 및 요청서 수립	8월	
	각종 재난안전장비 구매·보급	9월	
	112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및 검수	10월	
4/4분기	창설 63주년 112의 날 개최	11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수립	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1월	
연중	월별·분기별 치안수요 예측 등 분석자료 작성 재난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지방청·경찰서별 자체 도상훈련·현장체험훈련(FTX)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없음

□ 기대효과

-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112시스템 도입, 112신고접수 단계부터 상황실 중심으로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경찰 초동대응 역량의 전국적 균질화·표준화 도모
-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음으로서 국민 안전 보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 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 ²⁾) ²⁾			
① 범죄예방(1131) ¹⁾	일반회계		
■ 범죄대응역량강화(1131-312)		147.5	279.5
- 112상황운영		-	22.8.
- 차세대 112시스템 고도화		-	89.6
- 112상황판 교체		-	30.1
- 순찰차 캠 시스템 구축		-	18.1
②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일반회계		
■ 재난안전관리(2131-315)		19.1	37.8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	1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30%)	78.3	84.6	84.7	84.9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40%)	5분21초	5분 20초 (-0.31%)	5분 18.5초 (-0.46%)	5분 10초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위기대응 역량지수 (30%)	신설	신설	신설	1161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개요) 경찰 112신고접수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치안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 (구성) 112신고 접수 신속성·신고접수 경찰관 친절성·신고접수 경찰관 전문성·종합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산식) ①신고접수 신속성 + ②신고접수 경찰관 친절성 + ③신고접수 경찰관 전문성 등 3가지 항목의 평균치와 ④종합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0 : 30)에 따라 환산

- (측정방법)

조사 기간 : '20. 1. 1. ~ '20. 10. 31. 종결민원 기준

조사 기관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센터

조사 방법 : 카카오톡·문자 이용, 설문조사시스템 접속 안내하여 112신고접수처리 분야 문항에 점수를 부여

조사 대상 : 2020년도 경찰 112신고자 전원(관서별 code0, code1, 신고)

- (목표치) 치안고객만족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만족도 조사기법이 도입*된 18년 이후 '18~'19년 사이 0.1점이 상승하였는데,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르면 '전년도 상승률 이상'으로 목표값 설정 시 '도전적 설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년도 상승수치인 '0.1'보다 2배 높은 '0.2'점이 상승한 '84.9'점을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 17년도까지는 무작위 추출 전화 조사 → 신뢰도 향상을 위해 18년도부터 카톡 및 문자를 이용한 전수조사 기법으로 전환

- (목표 관리 방안) 112접수 매뉴얼 정비로 최신 치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매뉴얼 교육 활성화 및 경찰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112요원 전문성 강화·공감접수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 목표관리 추진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 (개요) 사건 발생 후 골든타임 內 현장 도착,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긴급신고 신속현장대응 달성도』를 성과지표로서 관리
- (목표) 신속한 현장출동이 국민안전 확보 및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현장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
- (구성) 국민 긴급신고는 code0, code1 신고 사건으로 분류
- (측정산식)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 지령 후 현장 도착시간(현장출동)
- (측정방법) 112신고시스템 내 통계 자료 자동추출(외부요인 투입 등 차단)
- ('17/'18/'19년 실적) 국민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시간은 '16년말 시범 측정하여 '17년부터 실적을 관리, '17년은 5분 21초이고 '18년은 5분 20초, '19년은 5분 13초를 기록
 - ※ 美 샌프란시스코 5.46초 / LAPD 6.1초 / NYPD 6.69초 등으로 미국 대도시의 911 현장 대응 시간 평균 7분 22초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측에 속함
- (목표치) 현장 대응 달성도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는 하향지표로서 '17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을 달성했고, 3년간 실적의 평균치는‘5분 18초’, '20년도에는 3년간 평균치 보다 낮고 추세치(-1.27%)를 고려, 3년 평균치보다 8초 단축한‘310초’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 (목표 관리 방안) 112접수요원 대상 신고 다발지 중심 길학습 교육을 통한 지리감 향상 및 112신고 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차 사전배치 등 예방적 순찰활동 전개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위치를 정확히 지정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 지원, 현장대응시간 집중 점검 등

【위기대응 역량지수】

- (개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적극 참여, 경찰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성과지표로서 관리
- (측정산식)
$$Cp = \sum_{k=1}^{273} (Tk \times n) + \sum_{l=1}^{255} (El \times m)$$
 - ※Cp는 위기관리역량지수
 - k는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 수, T는 경찰관서 주관 훈련 횟수, n은 관서별 의무 횟수(2회)
 - l은 경찰서수, E는 경찰서 주관 교육 횟수, m은 서별 의무 횟수(2회)
- (측정방법) T : 유관기관합동 훈련, 자체훈련(사전기획회의, 토론훈련, 현장훈련 등) 실시 횟수
 - E : 응급처치 교육, 재난 관련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실시 횟수
- (목표치) 위기관리역량지수는 신설된 지표로서 최소 의무 수치는 1,056점임. 금년도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 수치가 없는 바, 코로나19 등 여건상 수치를 끌어올리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나 경찰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 의무 수치에서 10% 상향된 1161점을 목표치로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 (목표 관리 방안) ① 합동훈련 대상을 재난주관기관부터 지자체 등까지 폭넓게 선정하여 합동훈련에 참여 독려 ② 합동훈련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강화를 위해 훈련 종료 후 경찰 요청사항 등 기관 의견 수렴 ③ 소방·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 심폐소생술 등 실질적인 교육 실시 ④ 훈련 및 교육 성과 자체 평가실시와 문제점 개선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전 경찰관서와 공유

(1) 주요 내용

- **<회복적 경찰활동 및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재발방지에 집중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피해자보호 인프라 강화
 - － ’19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경찰활동 표준 운영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안정적인 협업 체계 구축
 - － △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 심리상담 전문인력 채용 △ 피해자 보호관 지정 등 인적 요소 및 △ 스마트워치 개선 △ 임시숙소 지원 확대 등 물적 요소 강화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등 주요 여성대상 범죄에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업·소통을 기반으로 총력 대응
 - － 최종별 맞춤형 대응모델 고도화 및 엄정 대응 지속으로 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체감안전도 제고
 - － ‘2차 피해’ 현장 인식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청·경찰서별 ‘2차피해 점검·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실시

* △ 인재개발원 1주(지역경찰·수사기능) △ 경정~경사 기본교육 △ 여청수사 팀장·실무과정 등 인재원·연수원(6개) 및 지방청 교육센터 실무과정
- **<여청수사 역량 제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담당 수사조직 개편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성폭력 검거율 개선 추진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AI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및 인권친화형 조사실 확대 등 피해자 중심 조사체계의 현장 정착 도모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강화 정책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체감안전도
관리과제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피해자 보호지원을 / 회복적 경찰 활동 운영성과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가정 폭력 사건대응률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성폭력 미검률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체감안전도	73.1	73.3	74.6	75.0	국민 체감안전도는 '17년 이후 지속 상승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3.7)과 과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75.2)을 고려, 상승세 지속을 목표로 19년 실적보다 0.4%p 높은 75.0를 목표치로 제시하여 역대 최고치 경신을 독려	상·하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최근 △ 신종 디지털 성범죄 △ 클럽·약물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국민의 불안 증폭
 - ➡ 성범죄에 엄정한 대응 기조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검거율 제고 필요, 검거여건 악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역량 강화 추진
 - 여성대상범죄 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폭력, 스토킹,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 등 여성안전 이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 <성폭력> 19,778→20,436건(3.3%↑) <스토킹> 2,166→2,712건(25.2%↑) (전년동기 대비)

- ➡ 여성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위해 여성안전 관련부처·기관·NGO 등과 쌍방향 소통을 기조로 「치안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여성단체 대표급 간담회 △기능·분야별 워킹그룹 간담회 △합동세미나 등

- 학교폭력 대응 관련, 가해자 처벌 및 선도에 중점을 둔 기존 방식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범 방지에 미흡
- ➡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정교화하고, 부모·청소년 참여를 확대하여 맞춤형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4] 참고자료

-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매뉴얼
- 학대예방경찰관 업무 매뉴얼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④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I-2-①)

□ 추진배경

- 응보주의적 형사사법이 일반 예방의 목적을 달성 못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에 무관심하다는 성찰로부터 ‘회복적 정의’ 등장
 - － 공식적 형사절차와 더불어, 당사자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피해 회복·상처치유·범죄원인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 경찰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정부기관으로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 수호를 위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
 - － 최근 신변보호 요청 급증, 현장 신변보호 체계 강화 필요
 - ※ 신변보호 : '17년 6,889명 → '18년 9,442명 → '19년 13,686명
-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는 국정과제에 포함, 내실있는 추진 필요

△ <국정과제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보호
△ <국정과제 66>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확대 시행
 - － (확대 운영) '19년 시범운영(서울·인천·경기지역 15개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발전시켜 '20년 전국 확대 시행(120개서) 추진
 - ※ △상반기 85개서 △하반기 35개서로 단계적 확대
 - － (운영 모델)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하여 △제도 운영절차 △유의사항 △우수사례 등 매뉴얼 형태로 제작·배포
 - － (협업 체계)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문기관과 경찰서간 1:1 네트워크 구축하여 안정적 제도 운영 도모
 - － (교육·홍보)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관서 담당자 교육(피전·SPO, 3일간)
△ 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시 등

< 회복적 경찰활동 표준 운영 절차 >

구 분	주요 내용	시범운영 결과 ('19년 기준)
① 사 건 선 정	- 수사부서(형사·여청 등)에서 피해회복·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 전담부서(청문·여청) 의뢰 ※ 가·피해자로부터 신청서·동의서 수령	- 총 95건 접수 (성인 45, 소년 50) - 접수前(31)·입건前(36)·입건後(28) 연계 - 학교폭력(37) > 가정폭력(18) > 폭행·협박(15) > 절도(11) 順
② 예 비 검 토	- 전담부서 담당자(피전·SPO) 및 1:1 매칭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이 사안 검토, 회복적 대화 여부 결정 ※ 대화 부적절 판단시 즉시 수사 재개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대화가 부적절한 성폭력·아동학대 - 상습 여성피해 가정폭력 등 제외
③ 회 복 적 대 화	전문기관 주도, 가피해자 및 관계자(가족·교사 등) 참여하에 회복적 대화 모임 진행(담당 경찰관 참여)	- 사전·본모임(평균3회), 약 6시간 소요 - 재발방지·관계회복 약속(64) > 가해자 사과(52) > 피해변제(21) 등
④ 결 과 반 영	- 대화결과보고서 수사서류 첨부·송치 - 경미사안은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회부 → 즉심·훈방 등	(경찰종결) △ 접수 前 종결(25) △ 내사종결(10) △ 즉심(4) △ 훈방(2) (송치) 33건 중 △ 공소권없음(8) △ 기소유예(4) △ 벌금(1) △ 징역(1) △ 가정·소년보호(6) △ 재판중(13)
⑤ 모 니 터 링	전문기관과 피전·SPO가 피해자 대상 피해회복 및 재발여부 등 확인	-

○ 체계적인 피해자보호 시스템 구축

- (피해자보호담당관) '15년부터 비직제로 운영중인 피해자보호담당관(총경) 직제 반영 추진, 경찰 피해자보호 총괄 역할 수행
- (지방청 계 신설) 지방청 피해자보호계 신설* 추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동력 확보
- * 현재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계 소속 피해자보호팀으로 운영 중
-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 현재 1급서에만 배정된 피해자전담경찰관 정원(145명)을 2급서(40명)까지 확대,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신변보호 요청에 적극 대응
- (전문인력 채용) 심리상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으로 채용(40명), 심리적 응급처치 등 지원 강화

○ 신변보호 체계 강화 및 범죄피해평가 확대 시행

- (스마트워치) △ 스마트워치 확대('19년 2,050대 → '20년 2,300대)
 △ 구형 스마트워치 모두 신형 교체(디자인·워치 정확도 등 개선)
 ※ 범죄피해자 대상 스마트워치 행동매뉴얼 제공 등 신변보호제도 적극 안내·홍보
- (임시숙소) 매년 부족한 임시숙소 예산을 증액하고 피해자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를 대상으로도 임시숙소 지원
 △ '20년 '신고자'용 예산 신규 확보(3,200만원) △ 범피기금 증액 추진
- (피해자보호관)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 신변보호 책임 관리 △ 2차피해 예방 등 역할 수행(관련 교육 실시)
- (범죄피해평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종합평가하여 수사기록에 첨부, 구속·양형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지원
 ※ '19년 7개 지방청 대상 운영 → '20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피해자보호분야 교육 운영계획 수립	2월	
	스마트 워치 신형 교체 및 확대 보급	2월	
	기능별 피해자보호관 지정	3월	
2/4분기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4월	
	서울·인천·경기지역 85개서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실시	4월	
	지방청 피해자보호계 신설	4월	
	범죄피해평가제도 확대시행계획 수립	6월	
3/4분기	전국 35개서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실시	7월	
	피해자전담경찰관 2급지 정원(40명) 배정	9월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채용	9월	
4/4분기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확대 성과평가 및 홍보	12월	
	지방청 성과평가 및 워크숍 실시	12월	
연중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성과 모니터링·분석 및 환류	연중	
	우수사례 언론홍보활동 전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범죄피해자
- 이해관계집단 : △ 유관부처(법무부, 검찰 등) △ 피해자지원기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 학계(한국피해자학회 등)

□ 기대효과

- 회복적 경찰활동 확대시행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추구하는 인본경찰상 구현 및 대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내실화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정착				
	■ 강력범죄 현장정리	범피기금	4.1억	4.1억
	■ 위치확인장치	범피기금	3.1억	4.4억
	■ 피해자 임시숙소	범피기금	4.8억	4.8억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일반예산	-	2.8억
	■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일반예산	-	0.3억
	■ 범죄피해평가	일반예산	1.9억	2.7억
	■ 피해자여비	일반예산	2.0억	2.0억
	■ 권리제도 안내	일반예산	2.3억	2.3억
	■ 영상보안 신변안전조치	일반예산	5.7억	5.7억
	■ 세미나, 교육, 홍보 등	일반예산	1.1억	1.1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피해자 보호지원율	-	43.6	55.6	61.2	'19년 실적치 55.6 보다 10% 상 승한 48.0%를 목표치로 설정 (도전적 성과 지향)	(신변보호건수+피해자지원건수) ÷ 중요범죄발생건수 × 100 ※ 중요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해, 강간	케어포털시스템 통계 KICS 범죄통계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	-	-	180	180	'20년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관서 120개서 × 1.5건 = 180건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건수 (관서별 시행 건수 취합)	결과보고서 등

5 여성대상범죄 대응 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I-2-②)

□ 추진배경 (목적)

- 여성대상범죄 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폭력, 스토킹,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 등 여성안전 이슈도 꾸준히 발생

* <성폭력> 23,882 → 25,008건(3.3% ↑) <스토킹> 2,772 → 3,467건(25.1% ↑) (전년동기 대비)

- 또한, △ 약물이용 성범죄 △ 홍대 불법촬영 △ 등촌동 전차 살인 등 여성 관련 대형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

- <빅데이터 분석(키워드 검색)결과> 주요 여성대상범죄 키워드 언급 지속 상승('16년→'18년)
※ △(성폭력) 453,936건 → 3,006,800건 △(가정폭력) 106,888건 → 414,868건 △(불법촬영) 322,900건 → 1,968,987건
- <주요 이슈별 해시태그> #오늘도 우연히 생존했다 #미투_위드유 등의 해시태그는 범죄피해를 생존에 직결시키는 등 잠재적 피해자로서 겪는 두려움과 공포를 반영
- <범죄 대응 양상> 이수역 폭행·패딩사건에 여혐범죄 의혹 제기, 여전히 불안감 만연

- 실질적인 여성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대책들을 유기적·종합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격 시행, 체계적 현장 대응방안 마련

- ▶ 여성안전기획관 주관, 여성안전 정책 총괄·조정 및 「여성폭력방지 종합계획」 수립
- ▶ 「신속·민감 대응시스템」 추진, 인수인계 철저 및 신속한 조치로 사건처리 공백 최소화

- 수요자 중심 정책을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점검 강화

- ▶ 외부 : 여성안전 정책자문단(분기, 필요시), 여성단체 간담회, 합동세미나
- ▶ 내부 : 여성안전 전략협의체(月 1회) /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 적극 추진

- ▶ 가정폭력처벌법(개정) : △ 임시조치 청구권 부여(검사배제) △ 가정보호사건 직접 송치
△ 긴급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추가 △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벌금형(現 과태료)
- ▶ 스토킹처벌법(제정) : 스토킹 엄정 대응 근거 마련 및 피해자보호(접근금지 등)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총괄 추진기반 구축

－ 여성범죄 처리과정 전반에서의 ‘2차 피해’ 개념, 인식 및 예방

- ▶ **종합대책 수립·시행** : 2차 피해 개념을 명문화한 「여성안전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라, 전 여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 **대내외 인식 제고** : △ 전용 신고창구(앱 등) 개설 △ 피해자 대상 안내 리플릿 배포
△ 온오프라인 교육기반 조성 △ 현장 순회교육·점검 등 대내외 2차 피해 개념 정립

－ ‘2차 피해 책임관’ 지정·운영,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 **책임관 지정·운영** : 경찰관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 △ 신고 접수
△ 합동 모니터링 △ 후속조치·점검 등의 명확한 역할 부여
- ▶ **모니터링 정례화** : 여성청소년과장 주재, 각 기능이 참여한 「2차 피해예방 회의」 개최, 신고사안의 사실확인·후속조치 등 논의 및 교육 실시

< 불법촬영 범죄 대응 강화 >

○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 **탐지장비 다양화** : 초소형·위장형 설치 카메라에 대한 오탐가능성 보완을 위해 무선 IP카메라 탐지기·적외선 탐지기 등 탐지장비 다양화 추진
- ▶ **탐지장비 체계화** : 불법촬영 탐지장비 관리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장비관리 체계화
- ▶ **탐지인력 전문화** : 불법촬영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보 공유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한 탐지인력 전문성 강화

○ 불법촬영 범죄 단속·수사 활성화를 통한 엄정대응 지속

- ▶ **맞춤형 대응강화** : 신학기·하계기간 등 시기별·현안별 특성에 맞춰 선제적·종합적인 예방·집중단속 전개
- ▶ **데이터 분석·활용** : 관서별 범죄통계·지리적프로파일링 등 데이터 분석으로 불법촬영 취약시간·장소를 선정, 점검·단속 실효성 확보

○ 협업체계 기반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 **협업 네트워크** :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 2차 피해 예방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확산 방지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불법촬영물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1.12.)

< 단계별 가정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

○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을 통한 엄정대응

- ① <초동대응> '위험성 조사표' 토대로 적극적 사건처리 및 긴급임시조치 활성화
- ② <수사> 세밀한 수사로 구속·임시조치 등 가해자 격리 철저
- ③ <사후관리> 범정부 협업을 통한 가·피해자 사후 관리체계 내실화

－ (위험성 조사표 보완)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보완*, 경찰대응의 출발점인 위험성 조사표의 실질적인 효과성 제고

- ▶ 現 평가도구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을 예측하는데 있어 타당도가 다소 낮아, 통계 분석·외국모델·간담회 등을 거쳐 신뢰도·타당도가 모두 높은 개선안 마련
- ➔ 現 '위험성 조사표'의 전국 확대 시행 시기('19. 6월)를 고려, 신규 개선안 추진에 있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사전교육·PDA 반영 등 단계적 추진

－ (현장교육 강화) 순회교육팀 구성, 가정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모델」 추진 가속화

○ 촘촘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내실화

- ▶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추진

<* 기관 간 역할> △(경찰) 피해자 발굴·연계 및 가해자 대응 △(상담기관) 경찰이 연계한 피해자 상담 등 사후 관리 (지자체) 모니터링 인력·예산 지원 등 협업체계 총괄

- ▶ **현황** : △상담·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 중심의 협업체계 △가정폭력 신고현장 동행출동 △사후 모니터링 합동방문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 중

－ (피해자 보호체계의 균질화) 체계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적합한 모델인 '지자체 중심의 협업체계' 지속 확대 추진

※ 여가부(↔분청), 지자체 (↔지방청·경찰서)와의 정기 사례회의·간담회 등 협업을 통해 법령상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6조) 이행 뒷받침

－ (시스템 기반 협업체계 마련) 각 기관의 보유 중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용 시스템 구축(여가부 협업)

* △<경찰> 112신고정보 △<전문기관> 상담정보 △<지자체> 복지지원정보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여성단체 대표급 간담회 개최	'20.2월	
2/4분기	2020년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 수립	'20.4월	
	신속·민감대응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20.4월	
	2차 피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20.4월	
	2차 피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20.5월	
	불법촬영 대응강화 종합계획 수립	'20.5월	
	여성대상범죄 체감안전도 조사	'20.5월	
3/4분기	하계기간 성폭력 범죄 대응강화 계획 수립	'20.8월	
	정책연구 개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시범운영 실시	'20.9월	
	신속·민감대응 시스템 시범운영 전국확대	'20.9월	
	2차 피해 예방 현장점검 실시	'20.9월	
	불법촬영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9월	
4/4분기	정책연구 개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전국확대 실시	'20.12월	
	여성대상범죄 체감안전도 조사	'20.12월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성·가정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의 피해자 및 국민전체
- 이해관계집단
 - － 범정부 합동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여 14개 정부부처(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방통위·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대검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 ⇒ 특히, 효과적인 여성대상범죄 대응을 위해 △ 법령 제·개정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 인프라 확충(예산·인력·환경개선 등) 관련 기재부·행안부·지자체 △ 피해자 보호·지원·연계 관련 여가부·복지부·지자체 등과 유기적 협력 필요

- 여성안전 관련 유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0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1366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유형별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유관단체 의견·제언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가능

□ 기대효과

-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공고화하고 죄종별 치안대책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 촘촘한 여성안전 관련 치안정책을 이끌어내어, 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체감안전 제고 가능
 -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세심한 대처를 요구하는 대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으로 치안만족도 제고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여성청소년보호활동(Ⅰ-1-일반재정②)				
①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일반회계	5.29	6.35	
■ 가정폭력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5.29	5.29	
■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0	1.06	
성폭력예방지원및여성청소년범죄수사(Ⅰ-1-일반재정②) ²⁾				
① 여성대상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일반회계	4.64	8.61	
■ 여성대상범죄 대응능력 강화		0	2.25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4.25	5.17	
■ 불법촬영 예방·검거를 위한 탐사장비 구입		0.39	1.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50%)	-	26.8	32.4	34.0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대처를 요구하는 대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 도모하여 일상생활 복귀 및 범죄로부터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 가능 '19년도 실적(32.4%) 대비 5% 상승한 목표인 34.0%로 설정 ※ '19년 신규 지표이나, 도전적 목표치 설정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도모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 건수] × 100	- 성폭력 보호지원 월보 - 성폭력 발생통계(CSS)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50%)	41.0	46.0	50.6	55.7	가정폭력 사건대응률을 통해 가정 내에서 심화·반복되는 특성을 지닌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가·피해자 격리 등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여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 '19년도 실적(50.6%) 대비 10% 상승한 적극 목표인 55.7%로 설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 피해자 보호조치건수) / 가정폭력 실 신고건수] × 100	- 가정폭력 검거통계(CSS) - 가정폭력 보호지원 월보 - 가정폭력 112신고통계

6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I-2-③)

□ 추진배경 (목적)

- 성폭력 범죄 등 과급력 높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상승

▶(범죄발생) 성폭력 '18년 31,396건 → '19년 31,417건(0.1%↑) / 가정폭력 '18년 41,905건 → '19년 49,873건(19%↑) / 아동학대 '18년 12,853건 → '19년 14,484건(12.7%↑)

▶(안전체감도) '19년 상반기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 조사(행안부)에서 성폭력 분야는 하위권 기록(전체 평균 2.65/5점 대비 성폭력 분야는 2.26/5점, 총 13개 분야 중 11위)

- 특히 최근 '텔레그램(Telegram) N번방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 이외에도 국민은 △클럽·약물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상황
- 한편, 성폭력범죄는 △신고사건 증가 △사건 발생 후 신고까지 상당 기간 경과된 사건 증가 △범행 수법 지능화 등 각종 외생 변수로 인해 검거여건은 날로 악화
- '18년 '미투운동' 이후 성범죄 신고가 양성화됨에 따라, 신고 사건(고소·고발)의 비율이 높아지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과거 발생사건이 늘어나 성범죄 관련 각종 검거지표가 악화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16년 比 증감
수사단서 중 '신고'(건)		17,589	21,288	23,882	24,993	7,404건(42%) ↑
발생~접수 시간경과 (비율, %)	24시간內	40.3%	39%	34.4%	31.9%	8.4 %p ↓
	1~3개월	10.5%	10.8%	11.4%	12.1%	1.6 %p ↑
	3개월 초과	12.1%	12.1%	14.8%	13.8%	1.7 %p ↑
처리 소요시간 (비율, %)	1개월 내	69.7%	69.7%	63.1%	60.9%	8.8 %p ↓
	1~3개월	15.9%	16.6%	19.4%	21.8%	5.9 %p ↑
	3개월 초과	14.4%	13.9%	17.6%	17.4%	3.0 %p ↑

－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성범죄 검거지표 역시 지속 악화추세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16년 比 증감
성폭력 미검률(%)	3.9	3.7	4.4	4.6	0.7%p ↑
성폭력 재범률(%)	4.4	5.3	6.4	6.3	1.9%p ↑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분석(통계)

○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대 분석

구 분	총계	~6세	~12세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1세~	미상
'16	28,993	162	921	1,750	5,507	10,042	3,487	2,574	1,707	599	2,244
'17	32,234	155	1,106	1,664	6,373	11,810	3,768	2,673	1,762	698	2,225
'18	31,396	124	1,153	1,423	5,832	11,545	3,776	2,716	1,815	765	2,247
'19	31,417	153	1,106	1,451	5,661	11,447	4,058	2,787	1,939	811	2,004
비율(%)	100	0.48	3.45	5.09	18.84	36.12	12.17	8.67	5.83	2.31	7

－ 피해자 연령은 '21세~30세 이하'가 평균 36.1%, '16세 이상~40세 이하'로 확대할 경우 총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분	여성	남성	불상
'16	90 %	5 %	5 %
'17	90.5 %	5.5 %	4 %
'18	89.2 %	6.1 %	4.7 %
'19	89.2 %	6.5 %	4.2 %
평균 비율(%)	89.8 %	5.8 %	4.5 %

－ 피해자 성별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평균 89.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16세 이상 40세 이하의 여성'이 성폭력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으로 파악

- 피해자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 및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는 ‘16년 대비 15.4% 증가

구 분	합계	장애인	노인(60세 ↑)	아동
‘16	2,489	807	599	1,083
‘17	2,744	785	698	1,261
‘18	2,722	835	759	1,128
‘19	2,873	803	811	1,259
‘16년 比 증감	15.4 ↑	0.5 ↓	35.9 ↑	16.3 ↑

- ⇒ 성범죄 관련 철저한 수사·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검거여건 악화 등 극복을 위해 △시기별·테마별 집중수사 △수사관 역량제고 △수사인프라 고도화 등 종합적인 역량강화 추진 필요

〈 정책과제 추진 체계도 〉

추진 목표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 방침	▶ 성폭력 범죄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엄벌 ▶ 여청수사관 역량 제고를 통한 책임 수사 구현 ▶ 수사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여청수사 품질 균질화

추진 전략	세 부 과 제
① 성폭력 범죄 엄정수사	▶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여청수사 대응 강화 ▶ 조두순 출소 대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내실화 ▶ 클럽 관련 성폭력 사건 엄정 수사
② 여청수사관 역량제고	▶ 여청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인력충원 ▶ 여청수사관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활성화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역량강화 ▶ 수사과오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공유시스템 구축
③ 수사인프라 고도화	▶ 피의자 불상 범죄 등 추적수사 강화를 위한 「여청강력팀」 신설 ▶ 지방청 여청수사기능 영장심사관 배치 ▶ AI음성인식 기술 활용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여성불안 해소를 위한 시기별·테마별 집중 수사 >

○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여청수사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체계(여성대상범죄수사과-사이버수사과 합동)’ 구축하여 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 추진사항 점검
- ‘N번방 모니터링’ 결과 피해자 인지시 지방청(여성대상범죄특별 수사팀) 또는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접촉,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조사 진행하고, 오프라인 성폭력 등 확인 시 직접수사
- 사이버 수사에서 추적중인 가해자 검거 공조, 피해자 심리치료 등 보호강화와 함께 사이버성폭력 범죄 관련 인지수사 활성화
 - ※ 특히, 귀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극 상담으로 사이버 그루밍 성폭력·일탈모임 등 피해 확인 주력
- 112·117을 통해 텔레그램 등 이용,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 피해 신고·상담 접수시 지방청 여특팀에서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 상담·조사

○ 조두순 출소(’20.12月) 대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내실화

- 분기별 관련부처 실무협의회 운영(법무부·여성가족부), 표준화된 절차 공유 및 부처 간 업무이해 제고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 △경찰청: 정보 진위여부 점검 △법무부: 등록 및 보존·관리 △여가부: 공개·고지
- 현장의견을 반영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시스템(Kics) 개선 및 대상자 관리실태 점검,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 ‘클럽 관련 성폭력 사건’ 엄정 수사

- ’19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이용 의심 성범죄’ 집중 수사(’19.2~5월), △지방청 중심 상시 수사체계 구축(’19.6월) 등 추진 결과, ’19.10月 이후 클럽 내 강간·약물이용 성범죄 발생 無

- ‘클럽 관련 성범죄’ 억제 효과 지속을 위해 △ 초기 신속대응·엄정수사 △ 피해자 보호 △ 수시 수사지도 강화 등 지속 추진

※ ‘성범죄 악물 탐지 마커’ 개발 완료시(R&D계, 금년중) 악물이용 성범죄 사범 검거에 활용 예정

< 여청 수사관 역량 강화 >

○ 여청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인력증원

- ’15년 ‘여청수사’ 신설 이래 관련 치안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현장수사관 업무부담으로 작용

* ’15년 대비 ’19년 사법처리 13.7%↑, 신상대상자 216%↑, 112신고 39.1%↑

-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량 분석을 기반으로 증원이 절실한 분야*를 적극 발굴·증원요청하여 현장 업무부담 완화 도모

* (업무절대량 증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신규업무) △ 여청강력팀 신설 등

- 인력증원 관련 주요 관계자(행안부·기재부·국회) 대상으로 여청 수사 치안수요 현황·증원 필요성 등 적극적으로 설명 추진

○ 여청수사관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여청수사 입문(6월 미만)자 대상 지방청(17개)별 교육센터 등 주관 기초교육 실시로 업무이해도 및 현장 적응력 향상

- 대내·외 교육 기관을 통한 수준별·직책별 전문교육 확대

※ △ 내부(10개 과정, 894명) : 인재개발원(성·가정범죄·실종수사 등)·수사연수원(여청 수사지휘·실무 등) △ 외부(3개 과정, 380명) : 국과수(성범죄증거물조사 등)·특수교육원(장애공감)·동국대(아동·장애인조사기법)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베테랑 여청수사관 육성 / 기초·현장 교육時 동료강사로 활동하며 교육·수사지도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역량강화

- (해바라기센터) 아동·장애인조사기법(NICHD) 수준별·단계별 교육 확대* 및 고급이상 이수자 증가에 따라 정기 보수교육과정 개설

* △ 초급(2)→중급(2)→고급(1→2)→동료전문가 과정(1) △ 고급이상 보수교육 개설(2회)

- (진술분석전문가) 역량 상향 평준화를 위해 필수 이론(이수제 도입) 및 사례 실습(소그룹) 교육 집중실시/의견서 평가* 및 첨삭지도/ 동료 슈퍼바이저**지속 양성·활용

* 역량평가 후 단계별 관리(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9년 4명 양성

○ 수사과오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정기(반기) 및 수시(사안별 수시 발굴) 여청수사 현장 점검 실시
→ 개선사항 발굴 등으로 수사과오 사전 차단
- 확인된 수사과오 분석 → 자료하달·공유 → 재발時 현장진출 점검·피드백 / 반복교양(내부망 학습모임에 자료·노하우 게재)

< 수사 인프라 고도화 >

○ 피의자 불상 범죄 등 추적수사 강화를 위한 「여청강력팀」 신설

- 교대근무 체계 안에서 수사연속성을 담보하면서 추적수사 강화를 위해 기존 여청수사팀 외 ‘여청강력팀’ 신설 추진·시범 운영

* ▶ **일시·대상** : '20.2.10.~5.9.(3개월간) 10개 관서 (서울 관악, 부산 남부·해운대, 경기남 용인동부·수원남부·부천원미, 충북 청주흥덕, 전남 목포, 경북 구미, 경남 김해중부)
▶ **업무분장** : 불상 성폭력, 공연음란, 신상정보 대상자 추적 등 신속 수사

- 여청강력팀 시범운영 실시 전·후 △검거시간 단축 및 검거율 개선 △인력운용 효율성 등 분석 후 하반기 확대 시행 검토

○ 지방청 여청수사기능 영장심사관 배치

- 경찰 독자적인 영장심사·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수사기능에서 운영되어온 ‘영장심사관’을 지방청 여청수사기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지방청별 영장심사 수요·필요성 등 고려하여 ‘수사전문가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 △수사경력 7년 이상)’를 배치·활용
※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사 / 영장청구 오류 분석·교육자료로 활용

○ AI음성인식 기술 활용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 수사관이 조서작성 부담 없이 피해자와 자유롭게 문답할 수 있도록 'AI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을 도입, 풍부한 피해진술 유도를 통한 결정적 증거확보에 기여 및 2차 피해 방지 도모

※ 시범 사업('19.9.1.~'20.1.30., 5개월간)을 통해 AI음성인식 조서 작성을 위한 △ 폐쇄망 내 구현 가능성 △ 학습을 통한 인식율 지속 상향 확인

- AI 관련 업체들의 음성인식율·인프라 등 고려, 적합업체 선정
 ⇨ 시스템 구축·1단계 운영('20년, 51개서, 4.1억) ⇨ 2단계 운영('21~'22, 204개서, 16.6억 확보예정)으로 쏘 경찰서로 확대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가·피해자 동선 분리' 및 '피해자 맞춤형 별도 조사실'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확대

※ '19년까지 40개소 완료 △'20년 35개소 △'21년~'22년 100개소(30년 이상 노후관서 제외)

- 조사환경 개선 관련 여성단체(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및 일선 경찰(既개선 관서) 현장 의견 수렴,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

- ▶ **(여성단체)**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가족·보호자 동행 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사무실 출입문에 여경 호출 인터폰 설치
- ▶ **(현장경찰)** △ 피의자 영상녹화에 따른 진술녹화실 추가 설치 △ 진술 녹화실 외부(대기실)에도 CCTV 등 모니터링 장비 구축 필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아동·장애인조사기법 교육 계획 수립	1월	
	◆ 여성청소년수사 교육계획 수립	2월	
	◆ 여청강력팀 시범운영	2월	
	◆ 신상등록제도 실무협의회 개최(경찰청 주관)	3월	
2/4분기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수요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4월	
	◆ 진술분석전문가 역량강화 계획 수립	4월	
	◆ 소재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집중검거기간 운영	6월	
	◆ AI음성인식 활용 피해조서 작성 지원 추가 시범운영 계약	6월	

3/4분기	◆ 여청강력팀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추가운영 검토	7월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실태 현장점검	9월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완료 및 현장실사	9월	
	◆ AI음성인식 활용 피해조서 작성 실시	9월	
4/4분기	◆ 여청수사 전문수사관 선발	10월	
	◆ 여청수사 현장학습 우수관서 선발·포상	12월	
연중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진술분석전문가 전문성 강화 교육		
	◆ 여성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 여성 단체, 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역량제고 방안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신속·민감한 대응체계 및 수사인프라 구축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엄정한 처벌을 구현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국민요구에 부응 및 체감안전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I -1-일반재정②)				
① 여성청소년보호활동(1132)				
■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312)	일반회계	117	1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성폭력 미검률	3.7	4.4	4.6	4.2	.미검률은 '12년 15.5% → '13년 11.1% → '15년 3.6% 대폭 감소하여 임계치에 도달 . '20년은 前 3년 미검률 평균(4.23%) 대비 0.1%p감축을 목표치로 설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1 - (\text{성폭력범죄 검거건수} / \text{발생건수})\} \times 100$	.범죄통계 시스템(성폭력 발생·검거) .국정과제(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약자 보호) 핵심성과지표

7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I-2-④)

□ 추진배경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이슈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언어·사이버폭력 등 정서적폭력 비중 증가(70% 이상)

** △익산 여중생 폭행('19.10월) △양평 여중생 폭행('19.12월) △김해중부 폭행('20.1월) 사건 등

-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여전히 높아 공동체 협력을 통한 회복적 관점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답변된 ‘청와대 국민청원’ 13개 중 청소년 범죄 관련이 8개로 단일 이슈 중 最多('20.2월)

□ 정책환경 변화·전망

- (학교폭력 양상) 학교폭력 저연령화·정서적폭력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 될 전망**
* 치안전망 2020/ ** 학교폭력의 주발생원인은 가정 內 內성교육 부족梨大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위기청소년) 청소년 인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학생 수는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은 증가 예상

- ▶ (청소년 인구) '15년 965.4만명 → '18년 899.0만명('18년 청소년통계)
- ▶ (학업중단 학생 수) '15년 47,070명 → '18년 52,539명('19년 교육부)
- ▶ (학교 밖 청소년) 약 41만명으로 추정('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높은 비중('15년 43.8% → '18년 44.7%)

- (법령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8.20. 공포)에 따라 학교폭력 엄정대처와 더불어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 ▶ (학폭위 이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엄정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 단위에서 개최되던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3.1.~)
- ▶ (학교자체 해결제) 경미사안(2주미만 진단 등)은 학폭위 개최없이 종결 가능('19.9.1.~)

- (수사권 조정) 경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최초 수사단계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력이 더욱 중요시

➡ 최근 사회현상·정책환경을 반영, 회복적 관점과 공동체 협업 중심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강화 정책 추진 필요

□ '20년 추진방향

<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 >

성과목표	참여·협업을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		
지표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35.7%↑,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율 19.7%↓		
			
추진 전략	학생·학부모의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	청소년 문제 전반에 '회복적 관점' 도입 강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	▶ 청소년경찰학교 활용(52개소), 또래지킴이 교육 강화 ▶ 청소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운영 ▶ 청소년경찰학교 확대(1개소 이상), 전문교육 시설로 도약	▶ 회복적 경찰활동과 연계, 소년 사건 피해회복·재범방지 강화 ▶ 회복적 요소를 도입한 초기 위기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표준 모델 마련 ▶ 경미 소년범 대상 선도심사위원회 연계 활성화로 재범방지 도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학교 출석 인정으로 선도 연계 활성화 ▶ 체계적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의 협업 상시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 방문 학생 대상으로 별도의 '또래지킴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학생 대상 △ 학교폭력 역할극 △ 경찰체험(과학수사 등) △ 심리상담 등 실시(전국 52개소)
- 지역별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추진, 청소년 의견청취·참여를 통해 기존정책 환류 및 신규정책 발굴
- 지역별 △ 청소년 인구 △ 청소년 시설 △ 비행소년 검거 등 수요 분석으로 청소년경찰학교 추가 신설(現 52개소/1개소 이상), 청소년 보호안전망 확대

○ 선제적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응능력 제고

- 동·하계방학 이후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신학기를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연 2회)
※ 최근('15~'19) 개학 전·후 평균 117신고 : 2월 → 3월 84.4%↑, 8월 → 9월 76.4%↑

<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

- ▶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관련 학생에 대한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 실시
- ▶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폭력 전담교사 간 상시 연락 체계(Hot-Line)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발생 여부 수시점검 및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치

-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 운영('19.4~10월) 후 전국 확대 시행을 대비, SPO 대상 직무교육·워크숍 실시(피해자보호담당관실 협조)
- △ 청소년 상담기법 △ 피해학생 지원(전문기관 안내방법 등) △ 위기 상황 시 대응방안 등 117 상담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진행(8월)
- 선도·보호 효과가 높은 우범송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 지방청별 우범소년 송치 경험이 많은 학교전담경찰관 선정 및 인력풀 마련, 직원 코칭 및 필요 시 경찰서에 진출하여 절차·유의점 등 노하우 전수

○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 강화를 위한 제도 내실화

- 교육부 협의, 선도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교출석 인정을 전국으로 확산, 정책 수요자 편의 도모 및 선도프로그램 활성화 도모(3월)

- ▶ **(추진배경)** 선도 참여자에 대한 출석 인정 근거가 없어 대부분 하교 이후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 곤란 등 진행에 차질 발생
※ 선도 전문기관이 통상 주중·주간에만 운영함에 따라 비행소년 연계가 곤란
- ▶ **(추진경과)** 교육부와 협의,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선도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교출석 인정을 전국으로 확산
* 경찰 선도프로그램 참여로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 출석 예외사유로 인정

-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지방청-가정법원 간 협업 강화

- ▶ **(간담회 개최)** 지방청-가정(지방)법원 간 정례 간담회 개최, 원활한 소년사건 처리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 ▶ **(위탁보호위원)** SPO를 소년법 상 위탁보호으로 지정 확대(現 182명)
※ 「소년법」 상 제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감호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위탁보호위원이 생활 조언 지도·감독 가능

- 경찰서별 운영 중인 경찰 선도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를 상향 균질화하기 위해 부모 참여 내용을 포함한 선도 표준안 개발(4월)
- 기존 교육·상담 위주의 선도에서 탈피 △ 회복적 관점의 전략 모색
△ 공동체 협업을 통한 유대 △ 부모 참여를 통한 사회 재통합 등 도입

- 경미 소년범을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고 낙인효과·재범 방지를 위해 선도심사위원회 연계 강화를 통한 감경처분 활성화 추진

- ▶ 소년범 수사 시 경미사건은 선도심사위원회 연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결정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조치
- ▶ △SPO 대상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정기적으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모니터링 후 미흡관서는 현장 컨설팅 실시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체 치안 체계 구축

- 학폭위 이관*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보습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학교 간 간담회 등 적극 개최로警·學 정보공유 활성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 개최 주체가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선도 이수자를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에 연계,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비행소년 재범·지비행 방지(연중)
* 경찰·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 교육부 협조,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경찰학교 확대(現 5개소), 학폭위에서 중한처분(전학 등)을 받은 가해학생 대상 재범방지 교육 실시
* 학폭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졸업기간 강압적 뒤돌이 예방활동	2월	
	'20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3월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학교출석 인정 시행	3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3~4월	
2/4분기	부모 참여 선도프로그램 마련	4월	
	청소년 정책자문단 시범 운영	6~10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	6월	
3/4분기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7~8월	
	117 상담사 워크숍	8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9~10월	
4/4분기	청소년경찰학교 추가 신설(1개소)	10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	11월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11월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12월	
	선도 제도 운영 우수자 포상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 : 교육부(교육청·학교), 여가부, 가정(지방)법원 등
 - ⇒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교육부)
 - △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발굴·연계(여가부) △ 소년법 선도·보호(가정법원) 등 분야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기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연계), 청소년쉼터 등
 - 유관단체 : 청소년육성회 등 청소년단체,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 등
 - ⇒ △「청소년복지법」 상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유관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확대 시행으로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과 협력관계 강화

□ 기대효과

-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되,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정책과 맞추어 회복적 경찰활동 시행 확대로 당사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도모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강화 및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체 치안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9	'20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일반회계)			
① 사회적 약자보호(1132)		80	81
■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311)		80	8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기존목표치)	27.6 (27.6)	38.8 (29.0)	39.2 (34.0)	35.7 (-)	'20년 목표치는 '18·'19년 실적치에 상회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나,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2.23.)됨에 따라 정상적인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선도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운영되고 대인접촉이 많아 호흡기 질환에 취약). 또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지침(2.23.)을 반영하여 쉼 경찰서에 선도프로그램운영 중지 지침을 하달(2.26.)한 상태임. 따라서, 現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최소 위기경보 '주의' 단계)부터 정상적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 운영이 되더라도 감염 우려에 따라 대상자들의 소극적 참여가 예상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선도프로그램 중지 기간 동안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및 소년범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소년범(202 통계)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신규 결과지표>	18.6 (-)	20.5 (-)	20.0 (-)	19.7 (-)	⇒ 現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19년 목표치인 34.0%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19년 목표치인 34.0%보다 5% 상향한 35.7%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최근 3년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중 재범인원을 산출한 결과, '17년 대비 '18년 이수자 재범률이 높아졌으나 '18년 대비 '19년 이수자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으므로,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의 평균치 19.7%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 주요 내용

-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 보행자·교통약자 등 취약요인을 집중 보호하는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만전
 - 교통사고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국제적 기준에서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취약
 - △ 보행자 우선 △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 교통사고 고위험군 관리 △ 교육·홍보 및 협업 강화 정책을 중점 전개
- **<적극적인 교통행정 구현>**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고령·음주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응한 법령·제도 개선으로 교통안전 확보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사전 확보하여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 지속
 -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기반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를 확산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적인 확대로 보행사망자 감소 효과 거양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관리과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 구현	교통사고 심각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 /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교통문화 지수	81.6	75.3 (83.2*)	77.5	80.0	'18년도에 하위지표가 변경되었으며, 전2년도 실적 평균값(76.4)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9.7)을 고려, '20년 목표치는 예측값보다 높은 80.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교통문화지수 (국민 운전행태· 보행행태·교통안전 토대로 산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교통안전공단)

* '18년에는 교통문화지수 평가 하위지표가 변경되면서 기존 평가방식에 의한 수치가 실태조사 결과에 별도 표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인지자가진단) 및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등 운전면허 체계와 관련하여 안전대책 활성화 방안 추진
 - 자율주행차(Lv.3·Lv.4) 상용화 등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
 - ➡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및 AI 신호제어·IoT 교통안전 시설 등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R&D사업 추진
-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용역('19년) 결과 반영하여 '20년 개정 추진

[4] 참고자료

- 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비교('19년 발표, '17년 기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8]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I-3-①)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 '17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8.1명으로 OECD 35개국 중 32위
-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VIP 신년사('20.1.7.) :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함. 올해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음.

※ 국정과제 55-2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 관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0년 교통안전정책 추진 목표】

- ▶ **목표**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19년 교통사고 사망자(3,349명) 대비 8.0%(268명) 이상 감축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1.1명 달성('17년 OECD 평균 0.9명)

▶ 중점 추진 과제

- ① 보행자 우선 정책 집중 추진 ②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마련
- ③ 교통사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 ④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 ⑤ 협업 강화 및 현장 추진동력 확보

① 보행자 우선 정책 집중 추진

- (위험지역 중점 관리) △ 다발구간 합동 점검·개선(교통안전 컨설팅)
△ 다발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 (시설개선) △ 제한속도 하향(5030) △ 횡단보도 확대 △ 보행로 및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 사고다발시간(18~20시) 가로등 조기점등

- (보행권 보장) △ 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계도·단속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등 보행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윤후덕 의원안('17.3.14. 발의), 주승용 의원안('17.8.10. 발의)

※ 보행자 횡단보도 대기 시와 보호구역 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도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 협의

②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마련

- (어린이) △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확대* 및 제한속도 30km/h 하향 △ 통학버스 관리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일제점검 등
- (고령보행자) △ 노인보호구역 확대 △ 횡단보행시간 연장 △ 보행자 감지 시 신호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등
- (고령운전자) △ 면허자진반납 활성화(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 인지자가진단 검사기관 확대 등
- (제도개선) △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후 서행 △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상향 △ 스쿨존지정을 위한 시설인원요건(100명 이상) 폐지 등

③ 교통사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사업용) △ 국토부와 연계해 화물차 과적 단속 확대 △ 과속단속 자료를 활용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단속 △ 테마* 선정 합동단속
- (이륜차) △ 사고다발지역 암행 캠퍼더 단속 △ 업주와의 주기적 간담회를 개최해 자발적인 법규준수 강조
- (난폭·음주) △ 사회이목 사건 기획수사 △ 암행순찰차 적극 활용 단속* △ 월 1회 불시 이동식 합동 음주단속

* 올해 암행순찰차를 확대('19년 21대 → '20년 42대)하여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5년('20~'24년) 간 매년 순찰차 10대 확대 추진

④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 (사람 우선) △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합동 캠페인 실시
△ 유관기관 홍보협업 강화 △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유관기관 교통안전 교육·홍보 협업을 강화한 합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
* △(연중)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전좌석 안전띠 착용 △(4~6월)
이륜차 법규준수 △(7~8월) 화물차 안전강화
- (어린이 보호) △ 통학로 안전캠페인(개학철) △ 안전보행 3원칙
(서다·보다·걸다) 집중 홍보 △ 어린이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확대
- (고령자 배려) △ 고령자 안전용품 지급 △ 자치단체 등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요원 확보 협의 △ 깜빡이 켜기 운동 지속 전개

⑤ 협업 강화 및 현장 추진 동력 확보

- (협업 강화) △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주기적 회의를 통한 공동
과제 추진 △ 우수 시책 공유 및 확산
* 국무총리실(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관계부처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국정과제(55-2) 추진 협의를 강화하고, 국정현안점검회의
등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공동전략을 마련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개요】

- (구 성) 지자체, 경찰, 교육청, 협력단체(녹색, 모범, 안심런 등), 유관기관(공단,
도로공사), 운수업체(화물, 버스, 택시), 민간(시장연합회, 노인대학 등)
※ 공동 위원장 : 지역 경찰관서장 및 자치단체장
- (운 영) 분기별 실무 협의회, 반기별 전체 협의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해 지역별
교통사고 분석 및 맞춤형 대책 추진
 - ‘코로나 19’ 감염 위기단계가 완화되면 전체회의를 개최, 금년 중점 대책 논의
 - ※ 공동대책(5030, 시설개선 등) 수립 및 지속 점검·보완 추진
 -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합동 캠페인 일정 및 홍보용품 등 공유
 - 대형사고 및 보행 사고다발지역은 합동점검을 거쳐 즉시 시설개선 추진

- (추진동력 확보) △ 분기별 사고감소 성과미흡 관서 컨설팅
△ 유공자 공약특진 및 포상 △ 과학적 교통안전 빅데이터 제공*

* 각종 교통사고·단속·시설 등 빅데이터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청·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전달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명절 특별교통안전 관리 대책 수립·시행	1월	
	봄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2월	
	'20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2월	
	'20년 보행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2월	
	1분기 교통사고 감소 미흡 지방청 교통안전 컨설팅	2월	
	최근 3년간 지역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하달	3월	
	'20년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계획 수립	3월	
2/4분기	교통안전 홍보용품 구매 계획 수립·시행	4월	
	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4월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	5월	
	사업용 자동차 등 주요 교통범죄 테마단속 계획 수립·시행	5월	
	2분기 교통사고 감소 미흡 지방청 교통안전 컨설팅	6월	
3/4분기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수립·시행	7월	
	가을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9월	
	추석 명절 특별교통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9월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체험장 점검	9월	
	3분기 교통사고 감소 미흡 지방청 교통안전 컨설팅	9월	
4/4분기	가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10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시행	11월	
	'20년 보행사고 등 다발구간 등 무단속카메라 설치	12월	
	교통안전 성과분석 및 특진 등 포상 실시	12월	
	4분기 교통사고 감소 미흡 지방청 교통안전 컨설팅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전체

□ 기대효과

-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I -3- 일반재정①)				
① 교통사고 예방(1331)		일반회계	1,820.8	10,487.6
	■ 교통안전교육홍보(311)	일반회계	40.1	51.7
	■ 교통안전활동(312)	일반회계	900.7	946.9
	■ 교통과학장비관리(313)	일반회계	880	948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19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2.5	-9.7	-11.4	-8.0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은 평균(추세치) -7.9%로, '20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추세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frac{[(\text{금년사망자수}) - (\text{전년사망자수})]}{(\text{전년사망자수})} \times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19년 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신규)	-2.7	0.1	6.0	-0.0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율은 평균(추세치) +1.1%로, '20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추세치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frac{[(\text{금년부상자수}) - (\text{전년부상자수})]}{(\text{전년부상자수})} \times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9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 구현 (I-3-②)

□ 추진배경 (목적)

-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자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등 변화된 교통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 ※ '18년 대비 '19년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 5.6% 증가 (38,647건→40,801건)
- 아울러, 기술 발전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면허체계 개선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변화된 교통 환경에 적극 대응 >

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

*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 진행 중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6.~)

- 새로운 법이념과 철학적 기반을 토대로 인간 중심 교통철학을 정립하고, 新 교통수단을 반영하는 선진형 교통규범을 지향

-
- ▶ (선도적 교통규범 지향) 법의 목적에 인간중심·안전운전의 이념과 교통의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공공복리의 실현 추구를 명정
 - ▶ (사람중심 교통법제 확립) 쉼 횡단보도에서 사람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할 의무 부여
 - ▶ (국제규범 등 적극수용) 도로의 오른쪽 통행 원칙과 앞지르기 원칙을 확립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확립하는 등 국제 표준을 반영
 - ▶ (미래지향형 규범 확립)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환경에 대비한 정의 규정과 이의 도입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등 세부규정을 도입
-

- '0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실시

② 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

< 고령 운전자 집중 관리 >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내실화

* 경찰청, 대한노인회와 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고령자 면허 체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 이동편의 증진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

－ ‘초고령사회 대비 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종합대책 수립

※ '20. 4월, 종합계획 수립(부처별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반영) → 5월, 공청회 → 6월, 21대 국회 교통안전포럼에서 공표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추진

※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기 쉬운 환경 등을 조성

-
- ▶ **(자진반납 원스톱 처리)** 주민센터에서 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계 추진
 - ▶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자진반납에 필요한 서식을 통합(3→2종)하고, 신청 당일 절차가 완료되도록 도교법령 개정 추진
 - ▶ **(지자체 보조금 지원)** 국가 재정 지원으로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전국 확산과 지원제도의 통일을 유도
-

<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

－ 적성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운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
- ▶ **(제3자 신고제 도입)** 자진신고·기관통보 이외에 의사·경찰관 등 제3자의 신고로도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치매질환자 대상 확대)**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노인장기요양 1~4등급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시적성검사 실시
 - ▶ **(병역면제자 기관통보)** 현재 개별 통보중인 병역면제자 정보를 병무청·도로교통공단 간 정보연계를 통해 일괄 송부토록 개선
-

<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내실화
 - ▶ **(찾아가는 교육 확대)** 원거리 거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교육용 버스 등 출장용 장비 등 확충 실시
 - ▶ **(특별안전교육 교안 개정)** 음주·난폭·보복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 어린이·보행자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
- 교육부와 협업, 수능이후 수험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실시

< 기술 발전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면허체계 개선 >

① 운전면허 체계 개선

- 국민적 요구와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능동적인 개선을 추진
 - ▶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동변속기 차량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어 1종보통 자동변속 조건면허 신설 요구가 지속 제기
 - ▶ **(시험 일부면제 규정)** 안전성을 고려, 2종 보통면허(자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수동) 취득 시, 일부면제 없이 쏘 시험을 응시하도록 개선
 - ▶ **(소인승 중대형 승합차)** 레저활동의 활성화로 증가하고 있는 소인승 중·대형 승합차는 운전난이도 등이 높아 1종보통·대형면허가 필요하도록 개선
 -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한사항에 자동차 등 이용 범죄와 기존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등을 포함

② 운전면허학원·시험제도 개선 추진

-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
 - ▶ **(강사 배치기준)** 강사의 자질·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 강화를 위해 차량대수별 강사배치 기준을 검토, 현장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의뢰 진행
 - ▶ **(채점기 사용연한)** 장내기능시험의 전자채점기의 방식·규격 등을 현실화 하고, 각 부품 별 사용연한을 재정립하여 채점 시스템 개선 추진
 - ▶ **(불법교육 단속)**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운전학원 내 부정행위 등 점검하여 부정취득을 막고, 운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③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정비

－ 현실 교통상황에 맞춘 법적지위 부여와 통행방법 등 정비

- ▶ **(정의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정의규정 신설, ‘원동기장치자전거 中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규격을 갖춘 것’ 등
- ▶ **(운전면허 면제)** 현행법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가 필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속 25km/h 이하는 면허 면제 추진
- ▶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와 같은 저속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적용 추진

※ '17. 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19. 8월 부처협의로도 완료되어 현재 국회통과 추진 중임

< 국민 편의 증진을 서비스 제공 >

① 운전면허의 모바일化 적극 추진

－ 이동통신 3사 등과 협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

※ '19. 9. 26.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 '19. 10. 2. 경찰청-통신 3사 간 업무협약 체결 → '20년 시범운영 추진 예정

－ 본격적인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서비스 추진을 검토

②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대상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

－ 영문면허증 제도 정착과 국제면허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 추진

－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국 등에 대한 운전면허 상호주의 체결

※ 수요가 높은 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체결 기간 단축 노력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시범운영 실시	2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 불법운전교육 특별단속 (상반기)	3월	
	병역면제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 통보 방식 개선	3월	
	노인장기요양자 중 전체 치매환자 대상 수시적성검사 실시	3월	
	운전학원 강사배치기준 변경 관련 협의 및 연구용역 의뢰	3월	
2/4분기	특별교통안전교육 표준 교안 제작 관련 자체 계획 수립	4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4월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출장용 장비구매 등 실시	5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시범운영 실시	6월	
	수시적성검사 개선 계획 수립	6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 계획 수립	6월	
3/4분기	전자채점기 사용연한 규정 신설 등 개정 계획 수립	8월	
	수시적성검사 제3자 신고제 도입 관련 의학회 자문 진행	9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처리 시범운영 실시	9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 불법운전교육 특별단속 (하반기)	9월	
	특별교통안전교육 표준 교안 제작	9월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 법제처 심사 제출	10월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10월	
4/4분기	특별교통안전교육 표준 교안으로 교육 실시	11월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추진	11월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확대 추진	12월	
	고3 수능수험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는 도로교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의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은 전 국민임

- 다만, 일부 정책과제들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 집단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음

-
- ▶ **(고령운전자 집중 관리)** 집중 관리 정책의 대상인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 등이 주요 이해관계집단으로 볼 수 있음
 - ▶ **(고위험 운전자 관리)** 적성검사 제도와 교육 강화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치매질환자, 적성검사 대상자, 고위험 운전자들이 주요 이해관계자임
 - ▶ **(학원·시험제도 개선)** 제도 개선에 따라 교육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운전면허학원, 운전학원연합회, 면허시험장 등이 주요 이해관계집단임
 - ▶ **(영문·국제운전면허증)** 영문 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직접 사용하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들을 주요 이해관계집단으로 볼 수 있음
-

- 위와 같이, 주요 정책과제별로 상이한 이해관계집단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반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집단들과 협의나 상호협력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음

□ 기대효과

- 고령운전·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교통사고 심각도 (60%)	0.183	0.167	0.158	0.146	▶ 지난 3년간 심각도 감소율은 16년 대비 17년 7.12%, 17년 대비 18년 8.30%, 18년 대비 19년 5.92% 감소로 평균 7.11%의 감소율을 보이며, 평균 감소율을 상회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치임 ▶ 지난 3년간 매년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평균 7.11%보다 상향된 7.59%를 감소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12)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 = $[(273 \times \text{사망}) + (32 \times \text{중상}) + (2 \times \text{경상}) + (1 \times \text{부상})] / \text{차량등록대수}$ *사망·중상·경상·부상자수 前3년의 경우 매년 1.1~12.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당해년도는 1.1~10.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 '19년 심각도는 교통사고 사상자수 잠정통계 기반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만 명당) (40%)	3.03	2.69	2.31	2.10	▶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년 대비 17년 0.44%, 17년 대비 18년 11.26%, 18년 대비 19년 14.11% 감소하여 평균 8.6%의 감소율을 보임 ▶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 추세치 8.6% 감소보다 상향된 9.1%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0,000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10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I-3-③)

□ 추진배경 (목적)

-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선정, 범국가적으로 추진
 - * ’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 ’19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38.9%로 매우 높은 실정
 - * ’18년 3,781명 → ’19년 3,347명(잠정), 434명 감소
 - ** 보행사망자 점유율은 OECD 평균 18.6%(’17년)의 2배 이상임
- 자율차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로에서의 실험이 증가하면서 자율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제적 제도·기술 정비의 필요성 부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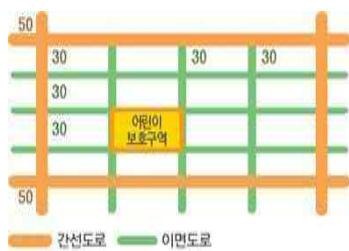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 이면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및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추진
 -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안전속도 5030’ 정책 본격 확산
 - － 보행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를 대상으로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
 - ※ 차량속도 60→50 km/h 하향 시 보행자 중상가능성 20%p 감소
 - － 안전속도 5030 정착기* 2년차에 접어들어 전국 확산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종합 보행안전 체계로의 연계·발전을 추진
 - * 도입기(∼’18)→ 정착기(∼’21)→ 성숙기(’22∼)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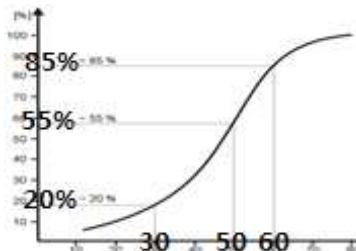
< ‘안전속도 5030’ 이란? >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 기본 50km/h, △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정책

※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운영 可



<5030 개념도>



<속도와 사망가능성 관계>

국 가	'도시부 60 → 50km/h'
덴마크	교통 사망자 24% 감소
독 일	사고 건수 20% 감소
호 주	교통 사망자 12% 감소
헝가리	교통 사망자 18% 감소

<도시부 속도하향 효과>

< 교통약자 보호 및 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속도 하향

-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 사고 위험이 높은 보호구역
부터 신호기 등 확대 설치 및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하향

※ '19년 연말 도교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500m ←	300m ←	보호구역	→ 300m	→ 500m
현행	60km/h	60km/h	40km/h	60km/h	60km/h
개선(안)	60km/h	40km/h (완충지대)	30km/h	40km/h (완충지대)	60km/h

-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정비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 사전 확보, 유사 교통안전시설 억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운영체계 개선

- 노인 인구비율 증가에 따라 세분화된 연령대별 보행속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규격 개발 추진

※ CCTV를 통해 교통약자를 인식, 보행신호 종료 시 횡단보도에 교통
약자가 있는 경우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

- 사고 감소를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기준 개선 추진
 -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대향 직진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여 기준 개선 추진
- 행안부·지자체·도교통단 관계기관 합동 노면표시 점검
 - 시인성을 강화하도록 한 도교법 개정('18년 연말)에 따라 노면 표시의 반사성능 점검 및 시설개선 실시
- 신호기 외함 소재를 다양화하여 교통안전시설 기능개선 촉진
 - 폴리카보네이트로만 한정된 소재기준을 삭제하여 신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육성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 및 첨단인프라 구축 >

- 자율주행차 운행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자율주행 Lv.3단계 대응 면허체계, 사고조사 등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마련
 - ※ Lv.3 ~ Lv.4 자율주행 운행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계획 중 Lv.3 대응 면허체계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 첨단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AI기반 신호제어) AI 기반의 스마트 신호제어를 위한 현장 장치 및 관제센터 기술 개발
 - (교통안전시설 정보제공) IoT 기반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 기술 개발
 - ※ 자율주행 관련 교통신호 등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R&D사업 2년차로서 주요 현장장치 및 관제센터 SW시스템 개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

□ 기대효과

- △ 국민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심각도*’를 현격히 감소

* 사상자별로 상해 피해와 손실 정도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 인명피해 심각도를 차량등록 대수로 나눈 수치

-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인프라 구축·제도 개선으로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자율주행차 R&D사업 2년차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	1월	
	▶ 자율주행차 R&D사업 2년차 착수보고회 실시	3월	
	▶ 개학철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 추진	3월	
2/4분기	▶ 안전속도 5030 5년차 종합계획 수립	5월	
	▶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계획 하달	5월	
	▶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기준 관련 매뉴얼 개정	6월	
	▶ 행안부, 국토부 합동 ‘안전속도5030 협의회 워크숍’ 개최	6월	
3/4분기	▶ 보행자 통행우선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7월	
	▶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표준규격 교통안전시설 심의위 상정	9월	
	▶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 실시	9월	
	▶ 하반기 UN 국제회의기구(WP.1) 정기회의 참석	9월	
4/4분기	▶ 보행자 통행우선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11월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 개선 연구 최종 보고서 도출	12월	
	▶ 자율주행차 R&D사업 2년차 성과평가	12월	
	▶ 도교법, 교특법 중 자율주행 Lv.3 대응 관련 개정안 마련	12월	
	▶ 안전속도 5030 서울시 전면시행	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 법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60%)	0.183	0.167	0.158	0.146	지난 3년간 매년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평균 7.11%보다 상향된 7.59%를 감소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지난 3년간 심각도 감소율은 16년 대비 17년 7.12%, 17년 대비 18년 8.30%, 18년 대비 19년 5.92% 감소로 평균 7.11%의 감소율을 보이며, 평균 감소율을 상회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치임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 [(273 \times \text{사망자수}) + (32 \times \text{중상자수}) + (2 \times \text{경상}) + (1 \times \text{부상})] / \text{차량등록대수}$ * 사망·중상·경상·부상자 수는 前3년의 경우 매년 1.1~12.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하고, 당해년도는 1.1~10.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 '19년 심각도는 교통사고 사상자수 잠정통계 기반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40%)	45	49	50	5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추진계획서, 언론보도등 근거자료

【시설·규제 개선 강화 노력】

○ 목표치 산출근거

- 교통운영과의 업무는 연단위로 성과가 도출되기 힘든 과제가 많고, 효과가 장기간 경과 후 도출되는 과제가 많은 만큼, 성과과제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노력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
- 매년 향상된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등급별 새로운 과제 발굴이 필요하므로 업무노력도를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

○ 측정방법

- 성과관리 계획상의 과제별 중요도와 난이도별 점수를 평가, 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측정
 - 과제별 이행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노력도를 평가
- ※ 임의적 등급적용 방지 위해 성과관리 계획에 과제별 등급을 명시,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측정 산식>

<측정산식>

30 + [과제별 등급 × 등급별 점수]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등 급	A	B	C
수 준	도로교통법령 개정, 지침이나 규격 신설·개정	시스템 변경, 연구용역 반영, 즉시성이 요구되는 사실개선	주기적·반복적 시설개선
점 수	2	1.5	1

※ 정책과제 달성도와 과제 난이도별 점수가 결정되도록 설정

ex) 단계별 계획 모두 이행시 과제건수 10건 중 A등급 6건, B등급 4건, C등급 2건으로, 시설·규제 개선 강화 노력 점수는 50점
 $= 30 + [2 \times 6 + 1.5 \times 4 + 1 \times 2] = 50$

<과제별 점수>

등급	관리과제	세부과제별 점수		
A (2점)	보행자 통행우선권 관련 도교법 개정안 마련	법안 입안 1점	법제처 심사 통과 1.5점	국회 제출 2점
	'안전속도 5030' 정책 확산	부처합동 계획 수립 1점	전국 계획 완료 1.5점	서울시 전면시행 2점
	도교법, 교특법 중 자율주행 Lv3 대응 관련 개정안 마련	해외 입법사례 조사 1점	공청회 개최 1.5점	개정안 마련 2점
	신호등 외함 기준 개선 관련 도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입안 1점	법제처 심사 통과 1.5점	법령공포 2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기준 개선	매뉴얼 개정 1	개선 계획 하달 1.5점	개선 시행 2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규격 개발	표준규격(안) 의견수렴 1점	교통안전시설심 의위 상정 1.5점	규격 배포 2점
B (1.5점)	안전속도5030 시행 효과분석	계획 수립 0.5점	대상지 선정 및 자료수집 1점	분석 결과 도출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보강 및 속도하향	계획수립 0.5점	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 1점	조치완료 1.5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0.5점	착수보고회 개최 1점	최종보고서 도출 1.5점
	자율주행차 운영체계 및 교통인프라 R&D사업 추진	2년차 사업성과 달성율 30% 0.5점	2년차 사업성과 달성율 50% 1점	2년차 사업성과 달성율 70% 1.5점
C (1점)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계획수립 0.2점	합동점검 실시 완료 0.5점	점검결과 도로관리청 통보 1점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12개월 내 조치완료 0.2점	9개월 내 조치완료 0.5점	6개월 내 조치완료 1점

(1) 주요 내용

-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다크웹·가상통화·ICT기술 발달 등 진화하는 사이버환경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예방정책과 분석시스템 수립
 - － 민·관·학 협력으로 사이버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정착 △가상통화 분석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대응 강화
- **<민생 사이버범죄 근절>** 사이버성폭력·도박·사기 등 급증하는 주요범죄 대상 특별·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검거율 지속 제고
 -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운영자 검거 및 참여자 수사 중
 - －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불법 유해정보 차단 △범죄수익 추적·환수 △해외서버 압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추가피해 확산 방지활동 강화
- **<사이버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북한·발 사이버공격 및 사이버 선전 등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에 신속 대응하여 확산을 조기 차단
 - － 디지털 증거확보 관련 포렌식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규 포렌식 영역 대비 실무역량 강화
- **<외국인범죄 예방 및 외사 역량 제고>** 체류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증가로 외사 치안수요가 증대, 맞춤형 범죄예방·피해자보호활동 전개
 - －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외국인 자살방범대 지원 확대 △경찰 업무 통역 전문성 강화로 체류외국인을 위한 눈높이 치안활동 구현
 - － 국제 치안활동의 지평 확대를 고려, 경찰주재관 등 다양한 파견 분야의 인력 증원 및 전문교육 확대로 재외국민 권익보호역량 강화
- **<해외 치안협력 강화>**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외국민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해외 치안안전망 확보
 - － 치안한류 사업(경찰전문가 파견·초청연구·치안ODA), 다자·양자 치안협의체 구축, 치안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관리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 지수 / 사이버정보 활용지수 /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 회신율
	사이버범죄 적극 검거 및 피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 피해보호조치율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보안사이버 단속 활동 지수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 /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 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 지수 / 홍보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사이버범죄 검거율	81.6	75.0	73.4	77.0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17년 이후 지속 감소세이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6.7)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8.5)를 고려, '20년 목표치는 검거율 반등을 목표로 평균값보다 높은 77.0으로 설정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체 범죄는 '15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사이버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 전체 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비중도 계속 확대(7.8%→11.2%)
- ※ '15년 대비 '19년 총범죄는 1,861,657→1,612,434건으로 감소하였으나(13.4%↓), 사이버범죄 발생은 144,679건→180,499건으로 증가(24.8%↑)
- － 사이버범죄의 급증과 더불어 그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 대내·외 협력치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공동대응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범죄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외사 치안수요* 지속 증가
 - ※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언어·문화적 차이 및 경제적 취약성으로 각종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적극적 보호대책 필요
-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중앙·지역단위 범정부 지원체계*에 참여하고,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현
 - * (중앙협의체) 경찰청·여가부·법무부·다누리콜센터 등이 실무협의체 운영 / (지역협의체) 경찰서·지자체·지원기관 연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협업

[4] 참고자료

- 경찰청, 「2019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1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I-4-①)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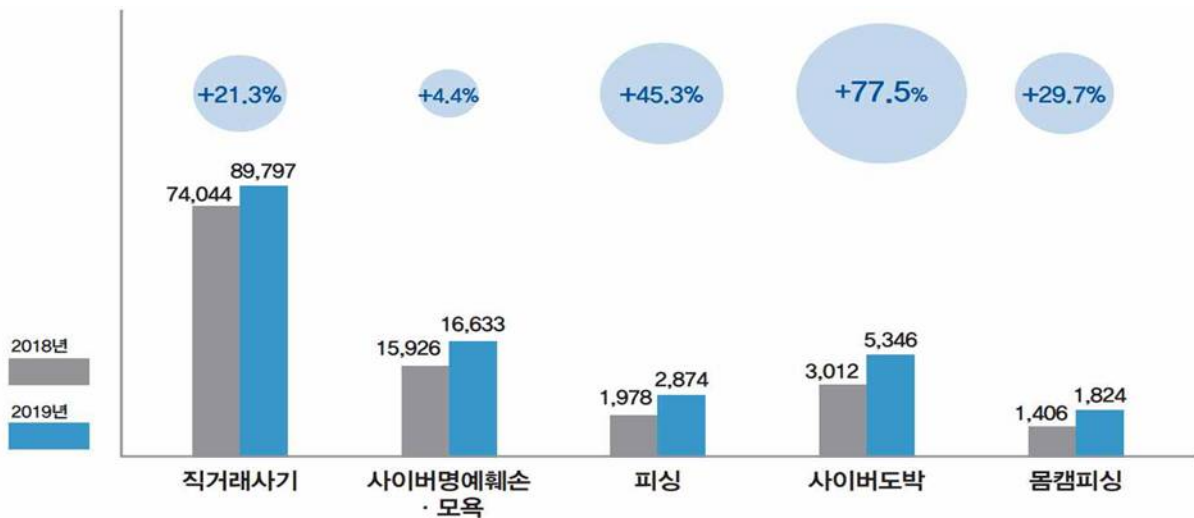
① 사이버공간 상 범죄 위협 동향 및 분석

- (사이버범죄 폭증) 사이버범죄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특히 작년 대비 20.7% 증가함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통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발생건수(건)	144,679	153,075	131,734	149,604	180,499
검거율(%)	72.5	83.5	81.6	75.0	73.4

- 특히 사이버도박(77.5% ↑), 피싱(45.3% ↑), 몸캠피싱(29.7% ↑) 등 민생치안 범죄의 급증세가 두드러짐

※ 주요 사이버범죄 증가 현황(출처: 2019 경찰청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



- (검거여건 악화) 사이버범죄의 수법도 다크웹이나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 범인 추적과 검거에 더 많은 자원(인력, 장비 등)이 투입됨

-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넷*을 이용한 아동음란물·개인정보 등 불법 자료 유통이 활성화

* 추적과 검색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IP를 경유, 접속기록을 암호화하고 거래수단으로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는 어둠의 인터넷

- 다크넷 이용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 다크넷 접속 프로그램 '토르'의 전세계 이용자 규모는 '17년 150만명에서 '20년 2월 250만명 규모로 확대(토르 자체집계)
- (사이버환경 급변) ICT기술의 발달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과 융합*, 신종 사이버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융합산업 분야: △홈네트워크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지능형 CCTV 등
- 신종 사이버범죄는 단순 사후적 대응(발생 후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인 예방 정책 수립·집행이 필수임
- (사이버범죄 국제화) 행정·안보·산업·금융 분야의 사이버화에 따라 국가·기업의 기밀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발 공격 증가
 - 해킹범과 같은 사이버범죄자 외에 강력·지능범도 수사망 회피를 위해 해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해외에 거점을 두는 사례 급증
 - 해외 디지털증거의 신속한 확보는 피의자 특정·혐의입증의 핵심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사이버국제공조가 절실

사이버범죄의 국제화 사례

- ▶ (해킹툴 유통) 백도어·랜섬웨어·개인정보 탈취툴 등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정 전산망에 대한 해킹·디도스 의뢰가 국제적으로 활성화
 - ▶ (사이버성범죄·마약 유통) 다크넷 내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아동음란물 및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세탁, 추적을 회피함
 - ▶ (개인정보탈취 및 판매) 해킹, 랜섬웨어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해외 다크넷 및 온라인 게시판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만연
-
- (국민 요구 증대) 사이버성폭력, 선거 관련 가짜뉴스 및 악성 댓글(매크로)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 최근 사이버성폭력(n번방 사건) 관련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등을 촉구하는 국회 인터넷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 대내·외 협력치안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

② '19년 사이버안전 활동 분석

< 사이버안전(예방) 활동 >

○ 국민참여 중심, 민·관·학 협력 사이버 예방활동 강화

- △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 △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
△ 선플달기 운동 등 행사 개최를 통한 '사이버안전' 붐 조성
※ (4.1~4.30. 집중홍보기간 운영) 전국 14,818개 홍보채널 활용 예방 콘텐츠 게시(송출), 캠페인(264회), 예방교육(86,546명) 실시
- 인터넷 상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해 누리캅스 회원을 1,032명으로 증원(23%↑), 테마별 집중 신고기간 운영(총 135,449건 신고)
- 대외 유관기관(기업) 협력을 통한 인터넷사기·메신저피싱 대응
※ (인터넷사기) KISA, 전자상거래센터, 금보원, 중고거래업체 간 간담회 개최 및 휴가철 인터넷사기 예방 공동캠페인(중고나라) 전개
※ (메신저피싱) 주요 메신저업체(카카오社), 편의점·문화상품권 등 업계와 협력체제 구축 및 예방대책 마련 논의 및 공동홍보 전개
- 경찰청 매체 외에도 대내·외 협력을 통한 다변화된 SNS 매체들을 적극 발굴,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수신인원 획기적 확대
※ '19년 KISA 등 기존 협업기관 외에도 보건복지부, 여가부, 금감원, 양성평등교육원 등에 예방콘텐츠 전파(18년 대비 45배 ↑)
- 사이버경찰, 대학·연구소 등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사이버안전 관련 이슈가 되는 주요 주제*에 대한 '19년 사이버 안전 학술세미나 개최
* △사이버셉테드를 통한 경찰의 효율적인 사이버범죄 예방 전략 △사이버상 사기범죄의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방안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교육기관 비롯한 기관·단체 등 예방교육 지속 확대하고 노인(정보취약 계층) 및 기업체(이메일 무역사기 피해) 등 사이버범죄 피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확대('19년 성과지표)

※ '19년 교육실적 : 총 2,262회(전년대비 14.9%↑), 474,160명(전년대비 16.6%↑)

- 사이버범죄 표준강의안을 활용하여 대내용·대외용 교육자료* 제작, 경찰청 홈페이지 배포 및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

* 해킹 등 범죄 유형별(13종) 최신 피해사례·예방수칙·신고절차 등으로 구성

○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 다크웹 상 마약·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자료 유통 및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완료

* 다크웹 내 불법정보를 게시한 ID·URL 등 22개 수사단서에 대한 연관분석 기법 지속적으로 개발, 다크웹 불법 이용자 추적에 활용

-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고도화 완료, 9종의 범죄단서(IP, 해시값 등)간 연관분석을 통해 결정적 단서 발견 등 수사의 효율성 제고

< 사이버 국제공조 활동 >

- (공조 증가) 현장 수사관의 사이버국제공조 요청은 '18년 대비 10% ↑

구 분(1. 1.~10. 31. 기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요청 건수(국내 → 해외)	226건	295건	358건	670건	740건

주요 사이버 국제공조 사건

- ▶ 태국에서 430억원대의 사기성 해외복권 구매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검거 ('19. 2월)
 - '19. 1월 태국 현지 공동작전을 통해 피의자 거주지 합동 수색 후 2월초 현지검거
- ▶ 말레이시아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운영한 피의자 37명 검거 ('19. 6월)
 - '19. 6월 중 말레이시아 현지 공동작전을 통해 2개소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실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총 37명 검거
- ▶ 베트남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운영한 피의자 2명 검거 ('19. 7월)
 - 베트남 공안과 지속적으로 공조, '18년 5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2명 검거하여 국내 송환 및 디지털증거 확보

- (미래 설계) 증가하는 사이버 국제공조 수요에 부합하는 동시에, 실질적 공조성과를 신속히 거양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예산확보가 필수
 - － 행안부·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인력증원* 및 예산증액**에 성공, ‘해외발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대응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
- * 인력증원: '19년 6명→'20년 15명 ** 예산증액: '19년 3.89억원→'20년 5.76억원
- (ISCR* 2019) 67개국·8개 국제기구에서 1,265명의 사이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사이버범죄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
- *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ybercrime Response)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회의임(올해 21년째)

ISCR 2019 주요 성과

- ▶ (양자회담) 인터폴, 유로폴, UNODC, 유럽평의회 등 5개 국제기구 및 美, 英, 獨, 네덜란드, 태국, 터키 등과 총 17건의 공조협력회담 진행, 현지 공동수사 유도
- ▶ (법제·MOU) 유럽평의회(사이버범죄협약), 유로폴(J-CAT 가입), 영국 NCA(MOU) 논의
- ▶ (사건공조) 네덜란드,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1개국
- ▶ (디지털포렌식) 美 OCRCFL(공정성), 독일NRW, 터키(기술교류)
- ▶ (다자회담) 가상화폐 및 다크넷 6자회담, 이메일무역사기 7자회담

- (해외교육유치) 해외 공조전문가 초청 및 해외 수사기법교육 국내유치를 통해 사이버 공조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증진
- ※ '19년에는 '가상통화 추적 전문교육' 및 '형사사법공조 요청서 작성교육' 실시
- (사이버범죄협약) 국제사회의 사이버범죄 대응수단인 '사이버범죄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의견조율

사이버범죄협약

- ▶ (협약개요) '01년 유럽평의회 주도로 제정된 사이버범죄 분야 국제협약
- ▶ (가입국) 전세계 총 64개국 가입('19. 11월 기준: 유럽 44개국, 비유럽 20개국)
- ▶ (가입실익) '데이터 보존절차'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데이터의 자동삭제를 방지하고 전자우편 등 간이수단을 통한 신속한 국제공조 요청이 가능함
- ▶ (국내관계기관) BH(사이버정보비서관), 경찰청, 검찰, 외교부, 법무부, 과기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 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가하는 신종 사이버범죄 및 이 과정에 이용되는 가상통화 흐름 및 추적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 － 旣 구축된('19. 12.)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및 관련 기능과의 협의체 구성, 시스템 활용성 제고
 - ※ 수사·생안(생활질서)·경비(대테러) 등 관련기능과 불법정보 공유·상시협력
 - － △ 랜섬웨어, 해킹 등 범죄에 사용된 가상통화별(비트코인 등) 거래내역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용자 추적 △ 가상통화의 거래 분석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통합 플랫폼인 '가상통화 분석시스템' 구축 예정
 - ※ 과기정통부 주관 '가상화폐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정보 추적기술'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20~'23년간 연구 진행('20년 예산 8천만원 확보)
 - ※ 유관기관(금융위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블록체인협회 등 10개소)와 협의체 구성, 이상거래 정보·사이버위협 동향 수집 등 협력 강화
- 국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치안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내외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공유·예방교육 및 범죄대응을 위한 협력 활성화를 통해 종합적인 예방역량 제고
 - － △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누리캡스 등 운영,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월간 사이버(대내용)' 발간 △ 관련 학계·업체·기관 등과 연구발표회, 협의 등 추진
 - － 몸캠피싱·성착취 범죄 등 사이버 음란물·성폭력 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및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 ※ 경찰청에서는 '12년부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시행 중이며 '19년에 총 2,262회에 걸쳐 474,16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

< 해외發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대응체계 구축 >

- 포괄적 사이버 국제협력·공조 체계를 구축, '국제공조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국제공조 범위확대와 회신을 향상 도모
- (국제협력) 신규협력망 개척, 해외 사이버법률·정책 보고서 작성, 우수 해외교육* 국내유치 등 신속한 협력 및 공조를 위한 토양 마련
 - * 온라인 언더커버 교육(美 FBI) 및 가상통화 추적전문 교육(체인알리시스社)

- (경찰공조) 중요 사건에 대해 최종별 전담인원 배정하여 책임공조, 현지파견을 통한 증거물 확보·피의자 검거 등 실질적 성과 도출
 - ※ 현장수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공조 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여 현지파견 공동수사 확대('19년 3건 → '20년 9건 추진)
- (기업공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에 대한 자료확보 채널 구축. 현장의 요청에 대한 사전검토 ⇨ 자료요청 ⇨ 자료회신을 적극 지원
 - ※ 현장에서 위챗, 텔레그램 등 새로운 기업에 대한 협조 필요성이 부상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락망 구축 후 자료확보 추진
- (ISCR 2020) △ 시민·학계 대상 참석 범위 확대 △ 다수의 공조회의 연계를 통한 해외작전 설계 △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병행개최 추진
 - * 인터폴 아시아 사이버부서장 회의 : 인터폴, 한, 중, 일, 홍콩, 싱가포르 참여
- (국제공조 법적기반 마련) 전자적 증거에 관한 신속한 공조를 가능하게 할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및 경찰청의 '협약 24/7 컨택포인트'(창구기관) 지정 추진

< 사이버경찰 전문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 (현장 교육) 분야별 본청의 우수 인력을 강사로 선발, 현장 (지방청·경찰서)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 － 사이버수사 업무에 필수적인 실무 기초지식 습득, 본청의 수사 know-how 전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
 - ※ 사전 조사한 교육 수요를 토대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지휘자 교육) 「사이버안전 미래비전 워크숍」 및 수사연수원 「사이버수사팀장과정」 활용, 수사지휘역량 강화
- (전문화 교육) 각 지방청 소속 동료강사 또는 우수강사 활용, 본청에서 작성·배포한 표준강의안에 기초한 균질화된 교육 제공
 - ※ 집체교육 또는 현장순회교육 등 각 지방청 실정에 맞추어 시행
-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사이버경력·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공인된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
 - － 국내 우수 정보(보호)대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경찰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으로 업무 연계성 극대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페이스북·구글 등과 교육 실시, 글로벌 IT기업 공조 전담팀 정식운영	2월	
	인터폴 ICSE DB 교육 참석	2월	프랑스
	'19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	2~3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시범운영	2~3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2~3월	
	본청 우수 인력을 강사로 한 사이버수사관 대상 순회교육 실시	3~4월	
2/4분기	해외 서비스를 활용한 선거교란·방해행위 집중 공조	4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온라인 행사 개최	4월	
	美 FBI·HSI·OSI 등 미국 내 주요 협력기관과 공조 회의	6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4~6월	
3/4분기	디지털포렌식 리서치 워크숍(DFRWS) 참석	7월	미국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9기 선발 및 운영	8월	
	인터폴 유라시아 사이버부서장 회의	9월	
	신규 IT기업 방문, 기업정책 확인 및 협력 채널 구축(9월)	9월	
4/4분기	누리캡스 테마별 집중신고 기간 추진	5~10월	
	제21회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개최	10월	
	美 FBI와 협력, 온라인 언더커버 교육 추진	9~12월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3차 권역별 회의 실시	10월	
	온라인 언더커버 관련 해외 법제 및 사례 수집	10월	
	인터폴 유라시아 사이버범죄부서장 회의 참석	10월	싱가포르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11월	
	사이버범죄협약위원회 총회 참석	11월	프랑스
	민간 우수인재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7~11월	
	하반기 누리캡스 격려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12월	
	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현황 점검, 개선방안 검토	12월	
	'20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	12월	
연중	사이버첩보 평가, 유가치 첩보 관련부서 전파	1~12월	
	사이버사기·사이버성폭력·사이버명예훼손 등 유형별 예방홍보 동영상 제작(총6종)	1~12월	
	과기정통부 가상통화 R&D 관련 ·치안정책연구소 등과 협업 연구	1~12월	
	현지파견 공동수사 수행	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과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자)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관계에 있는 국내 유관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학계,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

□ 기대효과

-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 및 적극적인 사이버 첩보 수집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구현
- 종합적 공조수사 지원체계를 구축, 해외발 사이버범죄 단속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현장 사이버경찰의 애로사항 해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19	'20
1-2-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23	149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41)	(45)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82)	(1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출처
	'17	'18	'19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20%)	343,201 점	414,340 점	524,847 점	577,332 점	- 전년도 활동 지수대비 10% 상승한 577,332점을 목표치로 설정	기업체·노인층 교육인원에 가중치 2배를 적용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경찰청 관리 통계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30%)	15.2 %	16.7 %	21.2 %	23.3%	- 전년도 활동 지수대비 10% 상승한 23.3%를 목표치로 설정	B등급 이상 첩보 건수/ 전체 첩보건수	사이버첩보 관리시스템 통계 자료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25%)	26.2 4%	42.8 1%	46.3 0%	100%	- '19년 기준 산술적으로 전체 사이버수사관 중 46.30%가 사이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 실시 - '20년에는 산술적으로 모든 사이버수사관 (100%)이 사이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 '20년 3월부터 해외경찰기관 뿐 아니라 해외IT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공조를 통한 자료확보를 추진할 예정	(국제공조요청건수) / (사이버수사관 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 회신율 (25%)	-	-	58%	70%	- 일선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직접 자료제공요청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경찰청에서 '사전검토→자료요청→자료회신'까지 책임지는 프로세스로 운영예정임 - '19년 상반기 4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내역을 토대로 평균회신율 산출 → 약 58%의 회신율 - 전담팀 신설에 따른 평균회신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자 함	(해외기업대상 회신건수) / (해외기업대상 요청건수)	경찰청 관리 통계

<붙임> 성과지표 설명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지표설정 사유>

- － (지표 목표) 경찰청 전문강사와 대상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방효과 제고
- － (지표 정의)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 예방 교육을 받은 인원 중 기업체·노인층 대상 교육인원에 가중치(2배)를 부여한 지수
- － (설정 근거) 대국민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기업·노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활동의 적극성으로 대변되는 교육인원을 활용한 활동지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중소 기업체와 노인 대상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이버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적(노력도) 함께 반영
 - ※ △이메일무역사기, 스피어피싱 등의 주된 피해자인 기업체 △디지털 역량수준이 가장 저조한 장노년층 등에 대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집중 실시 필요

<수치설정 근거>

- － (그간 추세치)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전문강사 양성 계획에 따라 '16년 전문강사 100명을 양성,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인원이 꾸준히 증가 {334,506명('17년) ⇨ 406,606명('18년) ⇨ 474,160명('19년)}해온 반면, 기업체·노인층 대상 교육인원은 각각 전체 교육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최소 수준 (10.7%↑)에 머물러 왔음

구분(교육인원)	'17년	'18년	'19년
전체	334,506	406,606	474,160
기업체·노인(A)	8,695	7,734	50,687
학생 등 그 외(B)	325,811	398,872	423,473

- － (수치 산정) 교육대상군을 ▲‘기업체·노인층’ ▲‘초·중·고 학생 및 그 이외 기타’ 2개 군으로 분류, 이 중 기업체·노인층에 가중치 2배를 부여한 기준점수를 설정하고, 목표치의 도전성·적극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19년 점수) 대비 10% 상승치인 577,332점을 목표치로 설정**

※ 측정 산식 = 기업체·노인(A)×2+학생 등 그 외(B) = 524,847점('19년 점수)

목표 점수(10%↑) = 524,847점×1.1=577,332점

【사이버정보 활용도 지수】

<지표설정 사유>

- － (지표 정의) 사이버공간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첩보로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첩보 관리 및 인텔리전스 시스템*** 운영, 사이버첩보의 중요한 단서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유가치한 첩보의 수집이 중요하므로 사이버첩보 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전체 첩보 중 실제 수사나 정책 반영 등에 활용 가능한 유가치 첩보(B등급 이상)의 비율 산정

* 사이버 범죄단서(IP,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가 존재하는 경찰청 내·외부 시스템 12종(누리캡스 등)을 연계한 연관분석·프로파일링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 현재 17개 지방청(경찰서 제외) 사이버부서 경찰관 대상으로 매월 사이버첩보 수집 중

- － (설정 근거) 최근 사이버범죄는 탐지가 어렵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첩보 수집의 중요성 대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설정

<수치설정 근거>

- － (그간 추세치) '19년 사이버첩보시스템에 접수된 첩보 6,588건 분석 결과, 전체 접수 건수 대비 B등급 이상 첩보의 활용도 지수는 21.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17년 15.2%, '18년 16.7%, '19년 21.2%)
- － (수치 산정) 사이버첩보 수집은 사이버 위협 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등을 요하여 양질의 첩보 수집이 일반범죄에 비해 어려우나, 現 사이버첩보 활용도 지수인 21.2%보다 10%이상 상회하는 23.3%를 도전적 수치로 설정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지표설정사유>

- － (지표 정의)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수적인 국제공조업무의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 － (설정 배경) 최근 사이버범죄는 사법당국의 수사 및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모의·실행되는 관계로 국제공조의 중요성 대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선정
- － (지표 목표) 현장순회교육, ISCR 등을 통해 지방청·일선서 사이버 수사관들이 국제공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책임 있는 국제공조 지원으로 일선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일선 사이버 수사관들의 **국제공조 요청을 활성화**

<'20년 목표치 산출 근거>

- **(현황)** 해외경찰기관 대상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건수'는 '17년 358건에서 '19년 740건으로 최근 2년간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선 수사관들의 국제공조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 공조 다각화, 중점사건 공조 추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사이버국제공조 범위의 확장)** 사이버안전국은 '20년 3월부터 해외경찰기관 뿐 아니라 해외IT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공조를 통한 자료확보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사이버 국제공조 범위의 확장을 가져오는 만큼 **신규 사이버 국제공조활성화 지수가 필요함**
- **(목표치 산출)** 해외경찰기관대상 공조만 존재했던 '19년에는 산술적으로 전체 사이버수사관 중 46.30%가 사이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 해외경찰기관과 해외IT 기업에 대한 국제공조 교육, 번역지원 및 중요사건 집중관리를 통해 '20년에는 **산술적으로 모든 사이버수사관(100%)이 사이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측정산식>

- ('19년 기준치): (해외경찰기관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 (사이버수사관 인원) = 46.30%
- ('20년 목표치): (국제공조요청건수) / (사이버수사관 인원) = **100% 추진**

* 국제공조요청건수 = 해외경찰기관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 해외기업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 사이버수사관 인원은 전년도 12. 31. 정원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 해외경찰기관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226	295	358	670	740	A
(B) 해외기업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	-	-	-	-	B
(C) 사이버수사관 정원 (전년도 12.31.기준)	978	1,147	1,364	1,565	1,598	1,685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지수 <익년도 성과지표 = $\{(A+B)/C\} \times 100$ >	23.10%	25.71%	26.24%	42.81%	46.30%	A+B/ 1,685

2020 목표치

100% 추진

※ 위 통계는 매년 1.1.부터 성과평가 기간 전인 10. 31.까지의 국제공조 요청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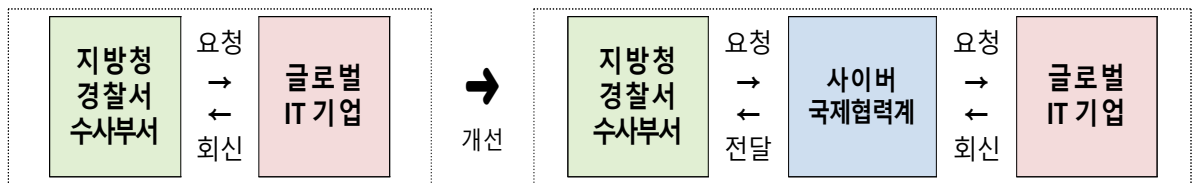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 회신율】

<지표설정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IT기업 대상 국제공조업무의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 (설정 배경) 해외 IT 서비스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사부서에서 이들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IT 기업과의 협력 중요성 대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선정
- (지표 목표) 경찰청 쏘 수사부서 현장 수사관의 해외 IT 기업 자료요청에 대해 압수 영장 등 자료요청 서류 사전검토 - 번역 지원 - 요청 처리 - 회신 등 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

<'20년 목표치 산출 근거>

- ('20년 신설업무) 일선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직접 자료제공 요청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경찰청에서 '사전검토→자료요청→자료회신' 까지 책임지는 프로세스로 운영



- (현황) '19년 상반기 4개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내역을 토대로 평균회신율을 산출한 바, 약 58%의 회신율을 보이고 있음

기준년도 : '19년 상반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기업별 요청건수	774	351	132	111
기업별 회신건수	541	150	42	65
기업별 회신율(%)	70%	43%	32%	59%
평균회신률	798건 / 1,368건 = 58%			

- (목표치 산출) 이러한 낮은 회신율은 현장 수사관이 직접 영장을 번역하고 해외기업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오류와 기업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미회신사례 증가로부터 기인한 만큼, 전담팀 신설에 따른 평균회신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자 함

<측정산식>

- ('19년 기준치): (해외기업대상 회신건수) / (해외기업대상 요청건수) = 58%
- ('20년 목표치): (해외기업대상 회신건수) / (해외기업대상 요청건수) = 70% 추진

구 분	2019*	2020
(A) 해외기업대상 요청건수	2,736	A
(B) 해외기업대상 회신건수	1,599	B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 회신율 <익년도성과지표 = (B/A)*100>	58%	B/A

2020 목표치 70% 추진

※ 글로벌 IT 기업 공조업무의 실질적인 시작 시점은 '20. 3. 1.임

※ 위 통계는 한국에서 기업에 요청한 내역으로 기업측으로부터 비공개로 제공받은 자료임

12 사이버범죄 적극 검거 및 피해보호 역량 강화 (I-4-②)

□ 추진배경 (목적)

- 모바일 시대 도래 및 온-오프라인 생활공간의 결합으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실생활과 사이버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되며 사이버범죄 발생도 급증하는 추세임
- －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중심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임
 - ※ '19년 사이버범죄는 180,499건 발생, '18년 149,604건 대비 20.7% 증가, 사이버 안전국이 개국한 '14년의 110,063건 대비 64.0% 증가
- － 전체 사이버수사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적극적인 기획수사(특별·집중 단속)를 통한 검거활동 추진 필요
- 최근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조됨에 따라,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추가 피해 방지활동 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이버치안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 추진으로 사이버수사 역량 극대화, 주요 사이버범죄 근절 도모
 - ※ '19년 사이버수사 특별·집중 단속 현황

단속명	기간	실적
[사이버 성폭력]		
38개국 공조,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단속	'18. 3. 6.~'19. 10. 18.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구속 및 이용자 235명 검거
'밤의전쟁' 등 성매매알선사이트 단속	'18. 9.~'19. 12.	'밤의전쟁' 운영자 등 54명 검거(구속4)
美 법집행기관(HSI)과 공조, 해외음란사이트 집중단속	'18. 11.~'19. 12.	음란사이트 21개 단속, 운영자 17명 검거(구속8)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	'19. 1. 1.~ 12. 31.	웹하드업체 27개 단속, 672명 검거(구속13)
약물피해의심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범 집중단속	'19. 2. 25.~ 5. 24.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등 109명 검거(구속10)
불법음란물 유통사범 집중단속	'19. 4. 26.~ 10. 25.	음란물 삭제 1,429건 343명 검거(구속11)
[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19. 1. 1.~ 6. 30.	3,625건 · 4,876명 검거(구속184), 범죄수익 33억 2,800만원 환수
[사이버 사기]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19. 8. 19.~ 11. 30.	32,354건 · 9,063명 (구속274), 범죄수익 3억 8,900만원 환수
사이버 사기 설 명절 단속강화	'19. 1. 21.~ 2. 6.	
사이버 사기 휴가철 단속 강화	'19. 7. 8. ~ 8. 31.	
[기타 중요 사이버범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18. 9. 21.~ '19. 8. 31.	20건 · 35명 검거 (11건 · 11명 기소)
매크로 이용한 온라인 암표 단속	'19. 4월	매크로 제작자 등 22명 검거(구속 2)
문체부와 저작권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	'19. 8. 5.~ 12. 31.	운영자 5명 검거(구속2), 사이트 폐쇄 5개

- 사이버 테러 및 연계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발생 後 수사’에서 ‘발생 前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 사이버 테러 대응역량 강화

- 국가적 사이버테러 발생 등에 대비, 「사이버범죄 대응체계 확립방안」 수립
- 주요기관·기업체 등 사이버테러 예방·수사 전담대상 목록 재정비 및 신규 지정
- 전국 사이버테러 초등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범인 검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콘텐츠 차단, 범죄수익금 추적·환수, 해외서버 압수 등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및 재범차단 활동도 병행

-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에 이용된 음란물 사이트, 서버 접속 차단 및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 ’20년 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의 공조 범위(피싱·파밍,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수집 사이트 등) 확대 및 기능 개선
-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 활성화
- 국제공조 활성화로 서버 등 압수, 운영자 및 실소유주 검거로 범죄조직 와해

- 민·관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통해 사이버테러, 불법콘텐츠범죄 등 각 사이버범죄 분야별 전문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교육기관	추진 내용
민간위탁	증액(6천→1억 5천)된 예산을 활용 침해사고 대응, 악성코드 분석 등 기존 교육에 더해 다크웹 추적 등 교육 콘텐츠 다양화
KISA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중인 사이버보안인재센터 교육 중 사이버 수사 및 보안과 밀접한 과정에 위탁 교육 추진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수사관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구성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 실시 ※ 회차당 20명 내외로 3~5일 가량 교육 진행토록 콘텐츠 구성 예정

-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 운영, 최신동향과 수사·추적기법을 발표·공유하여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

- 세계 최초, 무선통신 감도(신호세기)를 활용한 「무선 IP카메라 탐지기」 개발(8. 30. 발표) ⇨ ’19년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심사 금상(1위) 수상
- ‘수신확인 기능을 활용한 이메일 추적기법’ 개발(9. 27. 발표) ⇨ ’19년 경찰청 수사기법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4위)

- 사이버범죄전문가·시민단체·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감받는 사이버수사활동 전개

-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등 전문가그룹 운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온라인 암표 매매, 음원 사재기, 불법저작물 유통 등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대응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과 사이버금융범죄 예방·수사 상 협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식약처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 단속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1월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등 단속 강화 지시	1~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1~3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1~6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2~6월	
	4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2~6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배포	3월	
	사이버테러 예방·수사 전담대상 목록 재정비 및 신규 지정	3월	
	전국 사이버테러 초등대응 모의 훈련 실시	3월	
	상반기 내사·미제사건 등 사이버수사 실태 종합점검 실시	3월	
2/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4월	
	상반기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취합·전파	5월	
	문체부 불법저작물 콘텐츠 교육 실시	5월	
3/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7월	
	하계 휴가철 대비 인터넷사기 단속 강화	7~8월	
	사이버테러 예방·수사 전담대상 목록 재정비 및 신규 지정	9월	

	전국 사이버테러 초등대응 모의 훈련 실시	9월	
	사이버테러 민간위탁 전문교육 실시	9월	
	하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9월	
	하반기 내사·미제사건 등 사이버수사 실태 종합점검 실시	9월	
	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단속 강화	9~10월	
4/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10월	
	하반기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취합·전파	11월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매뉴얼 발간	11월	
연중	▲ 코로나19 관련 엄정 수사 및 지속 모니터링 삭제·차단 ▲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 최신 사이버수사 동향·기법 격주 발표 ▲ 사이버테러 민간위탁 전문교육 실시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정보,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여가부, 방통위, 방심위 등) 및 민간기업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 학계,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 기대효과

- 전체 사이버범죄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사이버범죄 검거 증대
- 불법 유해정보 차단 및 범죄수익 추적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21	149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38)	(45)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83)	(1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신규)	-15.8%	4.3%	18.2%	3%	하단 참조 (코로나19 관련 감소율 반영)	{{('20년 검거건수 ÷ 최근 5년 간 검거건수 실적값 중 최고·최저 실적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값으로 산출한 '20년 예상 검거건수) × 100} - 1	사이버범죄 검거통계 (KICS 시스템 자료)
피해보호조치율 (신규)	-	-	35.7%	15%	하단 참조 (코로나19 관련 감소율 반영)	{{('20년 삭제·차단 요청건수 ÷ 최근 2년 간 피해보호조치 요청건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20년 예상 삭제·차단 요청건수) × 100} - 1	피해보호조치 통계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자료)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서 사이버수사관의 기본 핵심업무인 사이버범죄 검거 활동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로 성과 평가하고자 함
- 사이버안전국 내에서 예방과 홍보는 사이버안전과 소임이고, 사이버수사과는 검거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특별·집중 단속 및 사이버수사에 필요한 인력·시스템·교육·장비 등 지원·예산을 맡고 있으므로 사이버수사과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검거 성과를 산출하였는지, 얼마나 더 많은 검거 성과를 산출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임
- 사이버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급증하는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을 의미하는 '검거율'은 더 이상 사이버수사관의 성과 측정 도구라기보다 수사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건 접수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KICS 통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8년 149,604건 대비 '19년 180,499건으로 20.7% 증가 (3년간 평균 증가율은 2.22%임에 유의)하였고, 지방청 담당 최종인 쇼핑몰사기(48.4%↑), 몸캠피싱(45.3%↑), 정통망침해(26%↑)도 급증하고, 경찰서 담당 주요 최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사이버안전국이 개국한 '14년 대비 각 140.1%↑, 187.3%↑로 급증

※ (KICS 통계)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18년 75.0% 대비 '19년 73.4%로 1.6% 하락에 불과하므로, 지방청의 고난도 기술적·조직적 범죄 전담, 일선서의 민생침해형 범죄 적극 대응방침 및 관련 지원을 통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발생건수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기사) '20.3월 「여고생 텔레그램 성범죄 표적 됐는데... 경찰, 신고접수 반려<세계일보>」 등

－ 사이버수사관 인원 대비 검거 비율을 의미하는 '수사관 1인당 검거율'도 사이버 수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 상태로 인해 위 '검거율'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수사관의 사기 저하 및 무리한 사건 반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이버수사관의 성과 측정 도구로 기능하기는 곤란함

※ (KICS 통계, 정원 고려) 경찰서 사이버수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18년 257건에서 '19년 328.4건으로 급증하였고, 사이버팀 적정업무량 분석 연구결과(104.2건)에 대비하여 산출된 수치도 '18년 2.5배에서 '19년 3.2배로 급증하여 해마다 업무 가중이 대폭 심화 되는 추세

－ 위와 관련, '20년부터 지방청에 대한 평가도 각종 검거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검거활동을 주로 평가하도록 평가지표 수정하였음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성과관리 운영지침 상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항목을 충족하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함과 아울러 현재 업무 과부하 및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을 고려하고, '20년 지방청 성과평가와 연동함으로써 명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 및 합리적 목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마스크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수사에 총력 대응 중인 관계로 '20. 1·2월 사이버범죄 발생건수(28,249건)가 전년(25,216건) 대비 11.6% 증가했음에도 검거건수('19. 1·2월 18,082건 → '20. 1·2월 17,486건으로 - 3.3% 하락)가 하락하였고,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감안 '20년 예상 검거건수를 조정하여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기사) '20.3.15. 「의학계 “코로나 바이러스, 짧아도 올 상반기까지 유행”<조선비즈>」 등

〈사이버수사과 코로나19 등 관련 대응 현황(3.15)〉

□ 마스크 판매사기 수사 <총 324건 79명 검거, 2,964건 내수사 중>

- (책임수사체계 구축) 확인된 다중 피해사건(487건)은 책임수사관서* (지방청 11, 경찰서26) 지정, 신속·엄정 수사 체계 구축
 - * 신속한 수사위해 최초 지정관서에서 책임 수사 / 동일 계좌번호 · 연락처 등 병합 가능한 사건은 최초 지정관서로 병합
- (현황관리) 사이버상황대책실 중심 실시간 수사상황 관리
- (단속체계강화) 지방청 사건지도 전담요원 및 경찰서 수사 전담요원 지정하는 등 단속체계 강화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

□ 허위조작정보 단속·모니터링 <총 90건 141명 검거, 114건 내·수사 중>

- (상황실 운영)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 대책상황실」 유지, 질병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 · 유포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수사관 파견(2. 3. 파견),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위법여부·수사의뢰 절차 등 조언·지원
 - － 악의적 생산 · 유포행위 및 질병이슈 활용 스미싱 등 철저 수사
- (대국민 홍보) △ 악의적 유포자 구속 검토 △ 중간 유포자 엄정대응 등 가짜뉴스 단속 강화 방침 보도자료 배포(4회: 1. 30./2. 6./2. 20./3. 16.)
- (모니터링) 본청·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총 49명) 및 사이버 범죄 신고 · 상담 시스템 등 활용, 온라인상 허위사실 생산 · 유포 확인
- (삭제 차단) 방심위 · 사이트 운영자 등과 협조, 피해 확산 방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단 파견

- (중수본) 사이버안전국 1명 · 2개월 파견, 가짜 뉴스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위법여부, 법률적용, 수사의뢰 절차 등 조언·지원
- (역학조사 정부지원단) 사이버안전국 3명 · 2개월 파견, 대규모 감염 등 특정 사안의 대상자 · 이동경로 및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 자료 분석

□ 사이버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총 49건 65명 검거, 38건 내·수사 중>

- (상황실 운영)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수사국 선거상황실과 통합 운영, 사이버선거사범 관련 주요 상황 실시간 전파
 - － 24시간 단속상황 유지하며 매시간 경찰 · 선거 · 허위사실 · 비방 · 가짜뉴스 · 사이버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언론 · 타기관 동향 파악

－ '20년 목표치 설정 : 지방청 성과 평가지표와 같이, 최근 5년 간 검거건수 실적값 중 최고·최저 실적연도를 제외한 3년 간 평균값을 '20년 검거 예상건수로 설정하고, 상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마스크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수사에 총력 대응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 1·2월 전년대비 검거건수 감소율 3.3%를 공제한 코로나19 감안 '20년 예상 검거건수를 산출하고, 해당 코로나19 감안 '20년 예상 검거건수 대비 증가율 3%를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의 실현가능한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함

【피해보호조치 증가율】

○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범죄는 그 특성 상,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불법컨텐츠 등에 대한 피해보호조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만족도 역시 하향될 수 밖에 없음
- 특히, 사이버성폭력, 메신저 피싱 및 스미싱 사건의 경우 피의자 검거활동도 중요하나 검거와 병행하여 불법컨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차단조치 병행이 필수적이므로 본 지표가 필요함
- 피해보호조치는 사이버수사와 운영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해당 시스템으로 아동성착취물, 일반음란물, 불법촬영물, 피싱·파밍,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불법컨텐츠 삭제·차단 요청을 수사관들로부터 접수받아 처리 중이며, ’20년 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 범위를 확대하여 피싱·파밍, 악성코드도 추가로 처리되고 있고, 이들 모두는 국민 체감 만족도 향상과 직결됨
- 일선 수사관들이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조치에 대한 적극 독려 및 성과 평가 필요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해당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은 과거 경찰청-방심위 수사공조시스템을 2차례 고도화한 것으로, ’18년 상반기부터 적극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전 실적이 없고, ’20년 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 범위를 확대(피싱·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추가)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지표로 설정하고 ’20년 목표치를 산출하였음
- ’20년 지방청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명확한 성과 달성도 및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코자,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경찰청-방심위·KISA)을 통해서 명확히 산출되는 ‘삭제·차단 요청건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 ’18년 피해보호조치 건수는 1,190건, ’19년 피해보호조치 건수는 1,616건이므로,
- ’20년 목표치 설정: 이전 2년 간 평균값으로 당해연도 예상 삭제·차단 요청건수(’17. 10월부터 공조시스템 구축·운영 시작하였으므로, ’18·19년 2년 간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를 산출하고, 상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마스크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수사에 총력 대응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 1·2월 전년대비 검거건수 감소율 3.3%를 공제한 코로나19 감안 ’20년 예상 요청건수를 산출하고, 해당 코로나19 감안 ’20년 예상 요청건수 대비 증가율 15%를 ‘피해보호조치 증가율’의 도전적 최종 목표치로 설정함

13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I-4-③)

□ 추진배경 (목적)

-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발 사이버공격은 지속 발생, 특히 탈북민 개인정보 탈취 등 침해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 증가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노동신문 등 자체 운영 사이트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이버 상 활발한 체제 선전·선동 활동 수행
-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도 엄격화, 안보위해 사범 수사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중요성 지속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이버 상 불법게시물 확산방지 업무 수행
 -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북한 선전 사이트 등 발견 시 정통망법 상 방심위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 차단 조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 ①항(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8호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이트·게시물 게재 현황 등을 공유, 공동 대응
 - ※ 정기적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 권역별 간담회·직무교육 등 실시, 현장 근무자들과 공감대 형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북한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활동 전개

- 침해사고 공격 근원지, 국내 연계자 등 실체 추적을 위한 수사 지도·조정과 악성코드 분석 등 기술지원 업무 수행
- 중요 침해사고 발생시 ‘사이버안보경보’ 발령을 통해 신속 대응체계 확립 및 추가피해 확산 방지

○ 보안수사 분야 디지털 포렌식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현장지원팀」·「증거분석보고서 심의회」 운용 등 디지털 증거 확보 관련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현장 포렌식 지원활동 강화
- 보안사이버·수사 기능에서 활용하는 각종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개선 등 보안수사 인프라 확충
- 최신 북한發 사이버공격 분석 및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규 포렌식 영역에 대한 선제적 기술연구 수행

○ 체계적 교육 실시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 전문성 강화

- 전국 분석관의 포렌식 역량 균질화를 위해 분석도구 활용교육·순회교육·수시 사례교육(화상회의) 등 입체적 직무교육 진행
-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의 디지털 증거 은닉·사이버테러 등 고도의 전문지식·기술 습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민간 위탁교육 추진
-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관련 대외 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독려하고 갱신까지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북한 發 사이버 공격에 대비, 침해사고 등 대응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종합적 대응훈련 실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년 상반기 보안사이버 워크숍 개최	코로나19 종식 후	화상회의 대체 검토
	'20년 보안사이버 업무추진계획 수립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업무 협의	2월	
	포렌식 모의훈련 종합계획 수립	3월	
	포렌식 자격증 관리·강화계획 수립	3월	
	상반기 포렌식 기법개발 및 기술연구 발표회 개최	3월	
	침해사고 대응훈련 기본계획 수립	3월	
2/4분기	사이버안보사건 관련 첩보 집중수집기간 운영	4월	
	지방청 보안2계 현장 점검 실시	5월	
	상반기 포렌식 모의훈련 실시	6월	
	상반기 보안사이버분야 성과 분석회의 개최	6월	
3/4분기	경찰청 주관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7월	
	사이버안보자문위원단 간담회 개최	9월	
	하반기 포렌식 기법개발 및 기술연구 발표회 개최	9월	
	포렌식 민간위탁 전문교육 실시	9월	
4/4분기	하반기 침해사고 취약요소 일제점검 실시	10월	
	'19년 하반기 보안사이버 워크숍 개최	10월	
	하반기 포렌식 모의훈련 실시	12월	
	보안사이버분야 신규 사이버교육 콘텐츠 배포	12월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및 '20년 훈련결과 분석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사이버 상 안보위해세력·집단 등

☐ 기대효과

- 북한의 선전·선동에 신속 대응, 국내 확산 조기 차단
- 보안수사 분야 디지털 포렌식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무결성 입증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단계별·수준별 교육 활성화 및 선제적 사이버 수사환경 연구를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보안사이버 단속 활동 지수(30%)	801	920	1064.2	1117.4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지방청 보고 및 보안정보 공유망 등 근거 자료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40%)	46.9	57.6	74.8	95.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지방청 보고 및 보안정보 공유망 등 근거 자료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30%)	신규	신규	121.7	133.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지방청 보고 및 보안정보 공유망 등 근거 자료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

- ▶ 보안사이버 단속활동 지수(30%) = (방심위 차단 건수 × 0.7) + (방심위 삭제 건수 × 0.3)
-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40%) = (현장지원횟수 / 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 × 100) × 0.5 + (선별압수 건수 / 현장지원횟수 × 100) × 0.3 + (포렌식 전문 교육 인원) × 0.2
- ▶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30%) = (침해사고 내사 착수 건수 / 수사인원 × 100) × 0.8 + (침해사고 첩보 제출 건수('중보' 이상 평가) / 수사인원 × 100) × 0.2

【전년 대비 개선 내용】

- ▶ 최근 부각된 탈북민 대상 해킹 이슈에 발맞춰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를 신규 지표로 개발하였고, 교육 횟수·인원 지표인 '보안사이버 전문화 지수'는 삭제하되, 전문교육 성과만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에 편입
- ▶ 보안사이버 단속활동 지수(일부 수정)
 - 산출근거 : 최근 3년 실적치가 큰 폭으로 상승 중(3년 추세치 +15.2%)인 데다, '19년 실적(1064.2)이 역대 최고 실적('16년 1055)을 상회하는 등 임계치 도달한 실정이나, 전년 대비 5% 상승한 1117.4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측정산식(일부 수정) : (방심위 차단 건수 × 0.7) + (방심위 삭제 건수 × 0.3)
 - ※ 해외 서비스의 특성상 방심위 삭제가 불가한 Youtube 및 SNS를 통한 불법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18년 848건, '19년 1,467건)를 반영하여 차단 업무 배점 상향 조정
 - ※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공식 북한선전 사이트와 같이 규모 및 위해성·전파성이 큰 경우는 배점 차등 적용('20년 지방청 치안종합성과평가 內 기준 준용)
-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일부 수정)
 - 산출근거 : 최근 3년 실적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세치(26.33%) 이상인 전년 대비 27% 상승한 95.0을 목표로 설정
 - 측정산식: (현장지원횟수 / 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 × 100) × 0.5 + (선별압수 건수 / 현장지원횟수 × 100) × 0.3 + (포렌식 전문 교육 인원) × 0.2
 - ※ 관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장 선별압수 비율을 반영해 절차적 정의 구현 및 피의자 인권 보호를 실현하는 한편, 단순 양적인 평가였던 1인당 매체분석 건수 대신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한 포렌식 전문교육 인원을 20% 비율로 측정산식에 포함

▶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신규)

- 산출근거 : 신설지표로 지난해 활동사항(내사 29건, 중요첩보 164건) 반영시 121.7 산출, 보안사이버수사 인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여 10% 상승한 적극 목표인 133.8을 설정
- 측정산식: $(\text{침해사고 내사 착수 건수} / \text{수사인원} \times 100) \times 0.8 + (\text{침해사고 첩보 중 '중보' 평가 건수} / \text{수사인원} \times 100) \times 0.2$

▶ 보안사이버 전문화 지수(삭제)

- 삭제근거 : 그간 지속된 교육으로 보안사이버요원의 역량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판단,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교육 훈련 관련 투입 정량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은 현장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만큼, '포렌식 전문 교육 인원'만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로 편입

14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I-4-④)

□ 추진배경

- 체류외국인 증가*와 연이어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15년) 190만 ⇒ ('16년) 205만 ⇒ ('17년) 218만 ⇒ ('18년) 236만 ⇒ ('19년) 252만명

** 영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19.7월), 양주 베트남 이주여성 살해사건('19.11월)

- 체류외국인이 총 인구의 4.9%를 차지, 최근 10년간 증가속도(평균 7.1%)를 볼 때, 금년중 다문화사회(외국인 비중 5%) 진입이 확실시
-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언어·문화차이 및 경제적 취약성으로 각종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적극적 보호대책 필요
- ※ (가폭) 이주여성 42% > 전체여성 33% / (학폭) 다문화학생 8% > 전체학생 1.3%
-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빠르게 증가,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재외국민 보호 관련 통계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3년 대비
해외 출국자	1,485만명	1,608만명	1,931만명	2,238만명	2,650만명	2,870만명	93% ↑
재외동포(격년조사)	701만명	-	718만명	-	743만명	-	6% ↑
재외국민 사건·사고	9,100명	10,664명	14,076명	14,493명	18,410명	20,100명	121% ↑

※ '19년 통계는 주무부처(해외출국자 법무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외교부) 확정 전

- 늘어나는 해외 치안 수요에 대응 및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파견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제고 필요

< 해외 파견 경찰관 현황 >

계	주재관	치안전문가	UN	공관경호단	인터폴협력관	코리안데스크
99	58	17	2	8	8	6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여가부·법무부 등 유관부처 외국인 교육과정에 경찰청 범죄예방 교육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등 범죄 대응역량 강화

< 타 부처 외국인 교육과정 및 범죄예방 교육 마련방안(案) >

연번	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	협업방안	부처
1	현지사전교육	예비 결혼이주여성	교육자료 제공	여가부
2	성평등·인권교육	결혼이주여성	경찰관 출강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한국인 예비배우자	경찰관 출강	법무부

- 다문화가정 등 범죄피해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 신고상담 창구를 확대하여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
 - 여가부와 협업, 다문화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 등을 활용, 범죄피해 조기발굴 및 신고체계 구축 추진
 - ※ 가정방문 중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징후 발견시 관할서(외사계)로 연계, 상담·수사
 - 체류외국인들의 범죄·민원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도움센터’ 확대 운영, Hot-line(경찰⇔센터)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공

< 외국인 도움센터 현황 >

총계	다문화센터	공공기관	NGO	상점(식당)	종교단체	기타
346	192	54	57	17	11	15

※ '19년 운영실적 : 전체 상담 건수 : 33,299건(범죄 1,191건 / 일반 32,108건)

- 외국인 자활방법대 활동을 적극 지원·홍보하여 체류외국인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
 -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 자활방법대 활동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활동장비 및 방한점퍼 등 제작·배포 확대 예정

* 296백만원 확보 / 전년(172백만원) 대비 124백만원(72% ↑) 증액

지원 내용

- ▶ 활동장비 : 1,454명(총원의 50%)×37천원(조끼,모자 등 5종) = 54백만원
- ▶ 방한점퍼 : 1,454명(총원의 50%)×73천원('19년 기준단가) = 106백만원
- ▶ 교 육 비 : 1,454명(총원의 50%)×20천원×4회(분기별 1회) = 116백만원
- ▶ 홍보.캠페인 : 100개서(운영경찰서)×200천원 = 20백만원

-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들의 치안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합 긴급신고 앱’에 외국어 지원 기능 반영 추진, 의사소통 장벽 해소
 - － 행안부 협의로, 앱 內 모든 콘텐츠를 12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표출하고, 그림·문장 조합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추진
 - * ① 중국어 ② 베트남어 ③ 태국어 ④ 영어 ⑤ 우즈베크어 ⑥ 일본어 ⑦ 필리핀어 ⑧ 러시아어 ⑨ 인도네시아어 ⑩ 캄보디아어 ⑪ 몽골어 ⑫ 네팔어(체류외국인 인원 順)
- 현장 외사치안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업무 통역 전문성 강화
 - － 통역수요가 높은 36개 언어에 대한 경찰·민간 통역요원 운용, 현장경찰이 외사치안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중국어·일본어 등 36개 언어 통역요원 인력풀 4,326명(경찰관 925명) 구성
 - － 외부 전문기관 협업, 통역기법, 법률·수사절차 및 용어, 통역윤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 수사통역 교육 실시, 통역서비스 품질 제고
 - － 특히, 금년에는 교육지역·인원을 확대하고, 기존 전문화 교육과정 이수자 대상 심화과정을 신설(수도권 400명⇒전국 600명 교육)하고,
 - － 전문통역인 제도를 도입, 심화과정 이수 등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여 통역비 인상 등 유인책* 제공
 - * 유인책(案) : △통역비 인상 : 시간당 3~3.5만원 → 시간당 3.5~4만원
 △통역기회 우선 부여 : 키스 통역인 검색 시 전문통역인 우선 표출
- 외국인 관광객 관련 불법행위 단속, 안전한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
 - －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 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상습적·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점단속
 - ※ 중국 춘절(2月), 일본 골든위크(5月) 등 내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관광경찰대별 테마 집중단속, 기타 기간에는 상시단속 실시

- 공관별 재외국민 보호 수요와 파견의 효과성(치안협력)과 긴급성(국제 범죄 차단, 도피사범 송환) 등을 종합 고려한 경찰주재관 증원 추진
 - － 現 직무파견 주재관(아르헨티나·블라디보스톡) 직위의 직제화를 추진하고, 해당 직위의 효율적인 재외공관 재배치 추진
- 사회발전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미래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파견 분야를 새로 발굴하여 국제 치안활동의 지평 확대
 - － 기존 직무파견·고용휴직(UN PKO, 치안전문가 등) 外 다양한 파견 직위를 발굴하여, 글로벌 치안협력의 다양성 추구
 - ※ 우리 경찰관들이 다양한 국제기구 직위(치안자문, 교육지원, 행정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외교부·인사처 등) 협업 등 적극 추진
- 파견 분야·인력의 확대와 함께 해외파견자 전문교육 강화로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 (주재관 양성과정) 연간 교육 인원을 확대*(40→60명)하고, 교육 대상자의 계급을 상향 조정(경위 이상→경감 이상)
 - * 경찰인재개발원 주관, 내·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연 2회 교육(각 30명) 실시
 - － (소집교육) 경찰주재관 소집교육*을 확대(연1회→2회)하고, 모든 해외파견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추진
 - * 경찰청 주관, 관련 과·계장을 강사로 섭외하여 현안 업무 등 교육(20명 내외)
-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공유하기 위해 ‘굿모닝 뉴스’를 제작·발송하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1월	
	중국 춘절기간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월	
	UN PKO 남수단 미션 신규 파견	2월	
2/4분기	베스트 외사경찰 선발계획 수립	4월	
	민간인 통역요원 선발계획 수립, 시행	6월	

3/4분기	외국인 자유행방범대 방한점퍼 제작·구매계획 수립 및 실시	7월	
	하반기 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8월	
	외국인 도움센터 재정비	9월	
	공관경호단(아프간) 증원 파견	9월	
	민간 통역요원 전문화교육 실시	9월	
4/4분기	중소기업중앙회 협업,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교육 실시	10월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10월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 제작	11월	
	오만 치안전문가 제4차 파견	11월	
	주재관 성과평가 실시	12월	
	민간 통역요원 지방청별 소집 교육 실시	12월	
	주재관 인력풀 구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내국인 및 해외 우리국민, 국내 체류외국인(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자녀) 등
- 이해관계집단 :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각국 주한공관,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체감안전도 제고
- 다문화가정 등 체류외국인을 위한 눈높이 치안활동으로 한국 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내·외국인 상생 공동체 구현
-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UN 등 파견지에서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	184	208	
	-	(184)	(208)	
■ 외사경찰활동(311)	일반	184	208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	40	48	
	-	(40)	(48)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일반	34	40	
■ 국제치안활동강화(312)	일반	6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60%)	0.30	0.32	0.33	0.32	- 외사경찰의 대표적 다문화치안 활동에 해당하는 범의예방교실, 운전면허교실, 도움센터 상담 등을 유행화하고, 각 활동의 난이도별 가중치를 산정, 연간 상승률을 성과지표로 반영 - 다문화치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3년 평균증가율(4.75%)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5% 증가) 설정 ※ 소집교육과 대외활동 등으로 평가 받는 지표 특수성을 감안,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해당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 월별실적 합계 * / 실적산출 월수 ×100 * ∑ 활동별(가중치×수혜자 수)/체류 외국인수 ※ 활동별 가중치는 하단 참조	외사포털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청·경찰서 다문화치안활동 월별 실적을 취합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40%)	46.2	49.1	57.5	64.4	- 해외파견 경찰관 인력 증원·확대 성과 및 교육정보공유 등 노력도 지표를 정량화하여, 해당 수치의 연간 상승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3년 평균증가율(11.7%)을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12% 증가) 설정	하단 참조	온나라 공문 등

【측정산식】

(1)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sum \text{활동별}(\text{가중치} \times \text{수혜자수}) / \text{체류외국인 수} \times 100$$

※ 활동별 가중치

활동	운전면허교육	범죄예방활동	도움센터 상담	자율방범대·치안봉사단
가중치	0.3	0.2	0.2	0.3

(2)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 ① \text{ 해외파견 인력 증원 지수}(50\%) + ② \text{ 교육·정보공유 등 활동 지수}(50\%)$$

① 해외파견 인력 증원 지수

- ▶ 지표 설정: 경찰주재관, UN, 치안전문가 등 해외파견 경찰관의 인력 증원·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표로서 증원·확대 난이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 측정 산식: (경찰주재관 인원 $\times$ 1) + (직무파견 인원 $\times$ 0.5) + (기타 인원 $\times$ 0.3)

② 교육·정보공유 등 활동 지수

- ▶ 지표 설정: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지표로서 활동의 종류에 따른 난이도·중요도를 차등화하여 가중치 부여
- ▶ 측정 산식
 - 교육: (주재관 교육횟수 $\times$ 5) + (직무파견 교육횟수 $\times$ 3) + (기타 교육횟수 $\times$ 1)
 - 정보 공유: (굿모닝 뉴스, 화상회의 등 각종 정보공유 활동 횟수) $\times$ 0.5

15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I-4-⑤)

□ 추진배경 (목적)

-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외 한국인 보호를 위한 외국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확대 필요성 증대

< 연도별 외국방문 한국인 현황 >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인원 (만명)	980	1,280	1,301	1,406	1,515	1,637	1,958	2,265	2,676	2,894	2,890
전년 대비	-	30.6%	1.6%	8.1%	7.8%	8.1%	19.6%	15.7%	18.1%	8.1%	-0.1%

※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09년 이후 지난 10년간 1,910만 명 증가 (202% ↑)

- 이에 치안총수회담·치안협의회 운영·MOU 체결·초청행사 등 외국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경찰청은 '15년부터 외국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치안한류 사업(치안협력사업·전문가파견·초청연수)을 추진
 - 치안한류 사업은 한국경찰의 국제위상 제고, 국내 치안장비 수출 지원,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등에 기여

< 주요 치안한류 사업 추진 현황 >

-
- ① 경찰전문가 파견: '19년 16개국(31회)에 총 84명 파견
 - ② 초청연수 사업: '19년 14개국(21회)의 경찰관 351명 교육
 - ③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15년 이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6개국에 총액 약 300억 원 규모의 치안 ODA 사업 추진
 - ④ 기타(국제행사): 2019 서울 국제 경찰청장 회의(28개국 103명 참석, 격년 개최)
-

※ 112 신고출동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랩, DNA 분석 장비, 범죄예방 차량번호 인식 CCTV, 한국형 순찰차·오토바이 등 다양한 경찰장비들이 '치안한류 사업'과 연계해 해외 진출

- 경제와 더불어 정부 외교활동의 핵심 분야인 치안·안보 분야에 치안한류 사업, 치안협력 MOU 체결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추진 중

※ 현재 VIP 정상외교 의제 총 6건 관리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청·차장 등 우리청 지휘부가 재외국민보호 등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협력국가 지휘부와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을 마련
 - － 「2019 서울 국제 경찰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경찰이 주도하는 국제 치안총수협의체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홍보(28개국 103명 참석, 격년 개최)
 - － ’20년에도 UN 경찰청장 회의, 아세아나폴 컨퍼런스, 한중일·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참석 및 피지 경찰청장 방한 등 지휘부 교류 추진
- ※ (한-피지 치안협력 MOU 체결) 2019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 시 한-피지 양자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협의, ’20.4월 피지 경찰청장이 방한하여 체결 예정

< 최근 6년간 경찰청·차장급 회담 현황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방문	1개국	3개국	7개국	5개국	9개국	4개국
방한	3개국	20개국	13개국	16개국	30개국	28개국

- 이미 MOU 체결된 29개국·30개 기관 경찰청 및 법집행기관 외 남미·동유럽 등 그간 한국 경찰과 교류가 적었던 주요 국가 경찰 기관과의 MOU 확대 체결 추진(’20년 3~4개 MOU 체결 추진)
- － 특히, 아르헨티나·칠레 등 남미 국가 MOU 확대 적극 검토

< 대륙별 MOU 체결 추진 현황 >

구 분	계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태평양	아프리카
체결 추진국	20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이란 바레인 오만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개정) 피지	우간다 앙골라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5	3	3	2	2	5

- 유엔·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 치안협력사업 발굴 및 인도네시아 경찰청(사이버 분야) 신규 사업 발굴 등 치안한류 확대·고도화 추진
- － (치안전문가) 중동·아프리카 등으로 ‘한국경찰 치안전문가’ 파견 확대, 한국경찰 위상 이미지 제고 및 한국경찰 역량발전 기회 제공

- (치안협력사업)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 및 베트남·중미 국가 대상 신규 치안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인도네시아 치안역량 강화사업 개요 >

-
- ① 기간·금액: '18년~'21년, 총 57억원(510만불)
 - ② 내용: △ 수사 정책 자문(마스터플랜 수립) △ 석사학위 과정 기획·운영 △ 현지 경찰 초청연수 및 한국경찰 전문가 파견교육 △ 시설·장비 제공 △ 사이버 수사 국제 컨퍼런스·워크숍 개최
-

- (국제기구 공동사업) 유럽경찰이 강점을 가진 사이버범죄·마약·조직범죄·난민문제 등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및 UNDP 공동 프로젝트 사업 발굴(서울 정책센터*)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 ‘알렉산드르 주예브’ 유엔 차관은 2019 국제 경찰청장 회의에서 한국경찰의 선진 치안시스템 견학이 인상적이었고, 경찰 지휘부간 다양한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지속 추진되길 희망

※ ①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센터(아세안 협력) ② UN PKO 파견확대(UN 협력) ③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의 내실있는 운영(INTERPOL 협력) 등 추진

* 서울정책센터: 세계 170개국에 사무소 운용, 한국센터는 2011년 개소(고려대)

-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에 치안한류사업, 치안협력 MOU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외교정책 및 국내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

※ '19년에는 ① 한-인도('19.2.22, 정상회담 시) ② 한-홍콩('19.3.22, 개정) ③ 한-크로아티아('19.4.11.)와 MOU 체결하였고, '20년에는 한-피지 체결 예정(4월)이며, 호주·러시아 등과도 추진 중

- VIP·국무총리 정상외교(국무조정실)를 적극 지원하고 인도 등 신남·북방정책(외교부)의 핵심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

- KOTRA와 MOU 체결 및 「2019 서울 국제 경찰청장 회의」 기간 한국형 치안장비가 각국 경찰 대표단에 소개*되는 등 치안한류 등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 '18.10.4. 경찰청은 산업통상자원부-KOTRA와 치안장비 수출 민간업체 추천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합의 / *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개최(경찰청)

※ UAE(방검방패·영상분석시스템), 남아공(경찰통신·화상회의), 몽골(대테러 특수장비), 필리핀(빅데이터 활용 치안시스템)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희망하므로 치안장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치안한류사업 관련 치안장비 수출 사례 >

구 분	내 용	비 고
필리핀	· 순찰차 130대(현대차), 과수키트 120조(국내업체들), 오토바이 142대(KR모터스) 제공	ODA (경찰청-KOICA 협력)
베트남	· 과학수사 및 DNA 분석 장비(국내외 업체들) · 지문감식 시스템 및 증거분석실 건축(국내업체 들)	ODA (경찰청 부처)
중미3국	· 차량번호 인식 CCTV 66대(경봉 등) · 범죄예방 CCTV 250대(경봉 등)	ODA (경찰청-KOICA 협력)
앙골라	· 112지령 및 신고출동 시스템(KT)	민간기업 주도
인도네시아	· 사이버 수사 교육 기자재 등(국내업체<미정>)	ODA (경찰청-KOICA 협력)

-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전략 초청사업 (해외한인·외국경찰 초청 사업) 및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4개국 치안협의체 활성화 추진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현지에서 한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한인, 외국경찰, 중국·베트남 공안을 초청하는 전략초청사업 추진

베트남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 '20.5~7월 제5회 베트남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추진 · '15년 국제경찰청장 협력회의(10.19~22) 및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11.9) 시 자국경찰관 대상 한국어 교육을 공식 요청
중국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 '20.8~10월 제4회 중국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추진 · '16.2월 경찰청장 중국 방문 시 중국公安부와 '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개설에 합의
외국경찰 초청연수	· '20.8월 제13회 외국경찰 초청연수 추진 · '09년부터 15명 내외의 외국경찰(한국인 업무 담당) 초청해 한국문화 및 한국경찰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한인경찰 초청행사	· '20.10월 제15회 해외한인경찰 초청행사 추진 · '06년부터 해외 한인 경찰관 15명 내외를 초청해 명예경찰 위촉식·국제경찰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다발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경찰과 다자·양자 치안협의체를 구축해 치안 협력방안 논의

한중일 경찰협력회의	· '20.12월 제5차 한중일 경찰협력회의(일본 개최) 참석 추진 · '15.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3국 치안협의회' 구성안이 공동 선언문에 채택, 매년 각 국이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 · '15.12월 '제1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중국(청도) 개최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 '20년 제12차 한-베 경찰협력회의(베트남 개최) 참석 추진 · '15년 양국은 '09.9월 이래 개최해 온 인터폴 회의(과장급)를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국장급 이상)로 격상기로 합의 · '16.11월 베트남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개최
한-필리핀 경찰협력회의	· '20년 제4차 한-필 경찰협력회의(필리핀 개최) 참석 추진 · '17.2월 경찰청 차장 필리핀 방문 시 양국 정례회의 개최 합의

※ '17.2월 경찰청 차장 태국 경찰청 방문 시 한-태국 치안협의회 구축 합의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경찰 대표단을 위해 통역·기관방문 주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강화('19년 41개국 방한)

구분	국제기구	중·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총계
국가	2	3	2	16	5	1	7	5	41
비율	4.9%	7.3%	4.9%	39.0%	12.2%	2.5%	17.0%	12.2%	100%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부)
- ④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안내(한국국제협력단, KOICA)
- ⑤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인도네시아 치안협력사업 현지 조사	2월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가입	2월	
	'20년 치안한류 추진 종합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제5회 베트남 공안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5~7월	
	한-피지 치안협력 MOU 체결	6월	
	치안 ODA 사업 연계, 외국 경찰 초청연수(1차)	6월	
	한국 경찰 치안전문가 파견(1차)	6월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	6월	
3/4분기	한국 경찰 치안전문가 파견(2차)	7월	
	중국 공안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8~10월	
	제13회 외국경찰 초청행사 개최	8월	
	제40회 아세아나폴 컨퍼런스 참석	9월	
4/4분기	제15회 해외 한인경찰 초청행사 개최	10월	
	제12회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참석	11월	
	치안 ODA 사업 연계 외국 경찰 초청연수(2차)	11월	
	제5회 한중일 경찰협력회의 참석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재외국민, 해외 방문 한국 관광객
- 이해관계집단 : 재외공관, 외국경찰기관, 법무부, 외교부 등

□ 기대효과

- 각국의 치안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경찰과의 적극적 치안 외교 활동을 통해 폭넓고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 마련
-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및 한국 관광객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재외국민 치안불안 해소, 해외 치안안전망 확보
-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급 치안협의체를 운영, 재외국민보호·정보교류 등 다각적 치안협력 시스템 구축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성 범죄 공동 대응 기반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
- 유엔·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치안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치안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주요 치안 협력국가 및 개도국에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전수, 치안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외국 경찰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치안 협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I -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	44.43	47.88
			(44.43)	(47.88)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일반	38.02	39.57
	■ 국제치안활동강화(312)	일반	6.41	8.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국제교류지수(40%)	15.65	18.85	21.35	23.49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40%)	27	34	42	46.2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홍보지수(20%)	신규	신규	5.3	5.9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①국제교류협력 지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은 외국경찰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교류·MOU 체결 등 다양한 치안협력을 통해 외국 방문 한국 관광객 또는 재외국민 등 **한국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초석 역할 수행**
- 정부는 신남·북방정책, 재외국민보호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20년은 상반기 코로나19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국제 교류협력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국내는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집중 추진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치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치안한류 확산, 방한 외국경찰 대표단 증가 등으로 '19년 국제교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20년에도 국제교류는 지속 증가 예상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치안협력 MOU 체결	6	0	1	3
청·차장급 교류	33	32	39	49
국·과장급 교류	25	38	30	54
실무자급 교류	37	34	65	51
전체	101	104(2.9% ↑)	135(29.8% ↑)	157(16.3% ↑)

- 여러 국내외 상황과 최근 국제교류 추세를 감안해 **'20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 21.35보다 10% 상승한 23.49로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부)
- ④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 자료수집 방법 >

(① MOU 신규·개정 체결건수 × 0.3) + (② 청·차장급 교류건수 × 0.2) +
(③ 국·과장급 교류건수 × 0.15) + (④ 실무급 교류건수 × 0.05)

-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치안협력 MOU 체결(신규·개정),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교류, △실무급 교류에는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 하위 지표별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① 치안협력 MOU 체결(0.3)	투입시간 : 6개월~1년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② 청·차장급 교류(0.2)	투입시간 : 3~4개월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③ 국·과장급 교류(0.15)	투입시간 : 1~2개월 소요 / 투입인원 : 2~3명
④ 실무자급 교류(0.05)	투입시간 : 1개월 미만 / 투입인원 : 1~2명

< 측정산식 >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②치안인프라 전수 지수】

< '20 목표치 산출근거 >

- 치안한류는 외국경찰에게 한국경찰의 치안기법 및 시스템을 전수하여,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외국민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 등 현지 외국경찰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외적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치안기법 및 치안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인 치안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거나 방한을 희망하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치안전문가 파견 국가	5	18	21	14	16
국내 초청연수 인원	159	197	272	423	351

— '20년은 UAE·오만 등 중동 국가의 치안전문가 파견·국내 방한 수요가 증가하고, 유로폴·인터폴·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치안협력사업, 치안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치안한류사업이 전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경찰대학·경찰교육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치안전문가 인력풀 재정비·파견 前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치안한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19년 실적치인 42보다 10% 증가한 46.2로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본)
- ④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안내(한국국제협력단, KOICA)
- ⑤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 측정산식 >

$$\Sigma (①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 \cdot 교육기간^* \times ② 교육인원^{**})$$

- 치안한류사업의 하위 지표인 치안전문가 파견은 치안한류사업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로서 △파견 교육기간, △파견 교육인원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각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파견기간	15일 미만	투입시간 : 15일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일부
	3개월 미만	투입시간 : 15~1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3개월 이상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교육인원	25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일부
	50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50명 이상	투입시간 : 2개월 이상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파견 기간별 가중치 배점>

파견기간	15일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점수	1	2	5

<**교육 인원별 가중치 배점>

교육인원	25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점수	1	2	5

※ 교육인원 모집은 경찰주재관·공관을 통한 파견 대상국 치안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고 상대국의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아 다수 인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인원 규모에 따라 가중치 차등 배정

< 자료수집 방법 > : 치안인프라 전수 파견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③홍보 지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MOU 체결, 치안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치안외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런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사업성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최근 3년간 홍보 현황 >

구분	17년	18년	19년
국외 언론 홍보	1	-	5
국내 언론 홍보	12	12	6
내부 홍보	3	3	5

< 측정 산식 >

① 국외 언론 홍보건수 * 0.5 + ② 국내 언론 홍보건수 * 0.3 + ③ 내부 홍보 * 0.2

< 최근 3년간 홍보지수 추세치 >

구분	17년	18년	19년
홍보지수	4.7	4.2	5.3

- 20년 홍보지수 목표치는 전년도 홍보지수(측정산식에 반영해 결과 산출) 5.3 대비 11% 증가한 5.9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매 2년마다 주요 협력 대상국 5개국의 재외국민(500명)을 대상으로 치안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성과 및 홍보에 대한 효과성 분석 추진('18년 최초 실시)

전략목표 II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 고질적 부패 비리를 엄단하고, 인권·준법의식을 강화한 경찰 활동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끄는 선구자적 역할 수행
 - 고위직 부패부터 일상의 무질서까지 사회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
 -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확대
- ◇ 수사 전문성 및 안보역량을 높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제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의사회를 위한 빈틈없는 치안 확보
 - 수사제도 개편·첨단수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수사경찰상 구현
 - 세밀한 안보·대테러 활동을 통해 사회 안정 수호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4	4	18	5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국가인권위 권고수용률
II-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지능범죄 검거율
	17 지능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지능 수사요원 1인당 민 생침해 기획수사 검거인 원 /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 전 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대 비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건수 비율 / 범죄수 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
	17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외사사범 검거실적 / 산 업기술유출사범 검거실 적 /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
	18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 지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19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인권영향평가 실시율 / 인권분야 경찰청 교안 활용 교육 실시율
	20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 경찰상 구현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 대화경찰 업무적용도 / 대화경찰 운영실적 / 신원조사 오류율 / 신원조사 교육건수
	21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률 /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율
	22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현장 법치경비 실현	인권보장·안전 확보 노력도 / 경비경찰 법치경비 체화 수준 /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활동
Ⅱ-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24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경찰수사개혁 과제 이행 / 영장심사관 심사 구속 영장 발부율 / 수사경과 선발, 해제인원 / 전문 수사인력 양성
	25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정비 노력 /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소통 / 책임수사 인식 제고 및 개선 수사절차 정착을 위한 현장 교육·지도
	26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범죄분석 지원지수 / 법과학 분석률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 감식 증거물 채취율
	27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디지털포렌식 도구 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실적
	28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교류 지수 / 과학수사 활동 지수 / 현장지원 지수

Ⅱ-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㉔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현장중심 활동평가 및 대테러 역량강화+가점
	㉕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중요 보안사범 검거 지수 / 보안수사정보 활용도 /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㉖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㉗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외사정보 활용도 / 테러·방첩사범 검거활동 / 대 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교육
	㉘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1) 주요 내용

- **<고질적 부패 엄단>** △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 △ 민생경제 침해 △ 산업기술유출 등 파급력이 큰 지능범죄 근절에 수사력 집중
 - － 기초질서 위반 사범(성매매·불법 게임장 등) 단속을 확대하는 등 각종 일탈로 사회가 교란되지 않도록 법 집행력 강화
 - **<민주·인권경찰 확립>** 경찰 활동 전반에 △ 민주적 통제 △ 인권 의식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의로운 경찰’ 구현
 - － 특히, 국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집회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유도
 - **<수사 전문성 확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지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 필요
 - － 수사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책임 수사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과학수사 역량을 고도화하는 등 전문성·공정성 제고
 -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테러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가능성 차단
 - － △ 보안첩보 분석팀 신설 △ 경찰특공대 증설 등 정보수집·현장 대응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 민주·인권의식을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고, △ 획기적인 수사제도 개선 △ 안보 활동 강화 등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국민 지지기반 마련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기관신뢰도	2.3	2.2	2.3	2.3	2.2	2.5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2.2 ~ 2.3점을 반복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는 4점 만점으로서 0.1점 차이도 의미가 있음 ※ '19년 최고치 : 2.6점(의료기관) 경찰 최고치 : 2.4점('13년) '24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치로 설정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100	95	95	94	100	95	매년 20 ~ 30건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며, 이는 '14년 이전 수용률(76%)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임. 다만, 징계·형사고발 권고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권고를 수용하되 최대 1건 정도의 여지를 둘 수 있는 95%를 '24년 목표치로 산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 건수 ÷ 전체 권고 건수 × 10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권고건수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형사소송법 개정('20. 1.) 후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우려가 매우 커지는 등 조직채신에 대한 중요성 증대
 - － 단순히 ‘업무를 잘한다’는 평가를 뛰어넘어, 「인권」이라는 기치 아래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에 부응 필요

“경찰에도 묵은 숙제가 많다. 경찰개혁은 늘 절실한 과제”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1. 30, 경향신문)

- <갈등요인>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경·검 간 갈등이 심화되어, 후속 조치 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농후
 - － 또한, △정치이념 △젠더이슈와 같은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회 관리·수사 등에 있어 경찰에게 ‘해결사’ 역할 기대

- <갈등관리 계획> 경·검 양측의 논리를 넘어 국민과 사회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만전
 - ※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참여, 적극 협조
 - － △대화경찰 활성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공감받는 책임 수사 등 ‘인권’을 업무에 투영, 공정한 경찰 활동으로 국민 신뢰 형성

[4] 참고자료

- 경찰청(www.police.go.kr) - 경찰통계연보
- 한국행정연구원(www.kipa.re.kr)
- 수사구조개혁(www.susa.go.kr) / 과학수사(www.kcsi.go.kr)

[1] 주요 내용

- **<지능범죄 검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 생활폭력 △ 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기획수사 추진으로 서민 생활 보호
 - － 경제범죄, 부정부패로 인한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기소 전 몰수 보전 활성화로 재범 방지에 기여
- **<국제범죄 대응>** 산업기술유출 관련 전문적인 예방·첩보수집·수사 추진 및 관계부처 협의체 구축*을 통해 수사 공조채널 강화
 - * 국정원,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무역위 등과 경찰청 간 협업체계 강화
 - －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확대를 통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및 외사사범 집중단속활동, 외사안전구역 범죄예방 활동 등 지속 전개
- **<생활 속 질서 확립>** 성매매·불법게임장 등 테마별 집중단속과 풍속수사팀 확대운영을 통해 성매매 단속·수사의 실효성 강화
 - － 풍속수사팀(현 14개청 161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 업주 추적 수사·범죄수익금 환수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지능범죄 검거율
관리과제	지능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지능 수사요원 1인당 민생침해 기획수사 검거인원 /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대비 범죄 이용 전화번호 정지건수 비율 / 범죄수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외사사범 검거실적 / 산업기술유출 사범 검거실적 /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지능범죄 검거율	74.5	71.2	70.0	72.0	지능범죄 검거율은 '17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1.9)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7.4)를 고려, '20년 목표치는 평균값 및 예측값보다 높은 72.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지능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형사사법시스템 (KICS)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내외 경기침체와 취업난의 장기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기획수사·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총 결집하여 범인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활동 병행
-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의 해외 유출과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
 -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 수는 246개, 피해액은 5,410억 (중기부)
- ➡ 경찰 전담 대응조직인 '산업기술유출 수사팀' 인프라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69개) 및 산업기술(3,600여개) 보유기업 대상 보안진단, 기술보호 설명회 등 예방활동 적극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6 지능 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Ⅱ-1-①)

□ 추진배경 (목적)

- ‘경찰 책임수사 원년(20년)’을 맞아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치안대책을 추진
 - － 최근 국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 －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선제적 단속·홍보 필요
- 민관유착·인사채용비리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사회불신 조장
 - －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불공정 적폐가 여전히 잔존하여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경쟁 침해
 - － 채용비리, 토착비리, 부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불이익을 주는 국민생활 주변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 시급
-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라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 수사의 패러다임도 피의자 처벌·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피해 구제 및 범죄수익 동결·환수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
-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범죄 엄정 단속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생침해사범 근절) 생활주변에서 서민들을 위협·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
- * △전기통신금융사기, △생활폭력(생계침해 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폭행, 직장 등 폭행, 주거침입)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대책 추진

- (불공정 행위 단속)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행위(8대 생활적폐) 연중 상시 단속 전개, 우선 척결 필요과제는 시기별 특별단속 추진
- (범죄수익 환수) 경제범죄·부정부패 범죄수익 추적 체계 구축 및 현장 수사지원 강화, 적극적인 기소 전 몰수보전 실시
-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선거범죄 엄정단속 전개 및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사 공정성 확보
 - * (1단계, D-121)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 → (2단계, D-62) 24시간 대응체제 → (3단계, D-20) 쏠 기능 총력 대응
- (유관기관 협업) 기획수사와 병행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전략적 홍보 실시
- (수사역량 강화) 수사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매뉴얼 제작·배포 및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수사관 워크숍 추진
 - ※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워크숍(4월), 보험범죄 아카데미(6월) 등 실시 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

□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대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획수사 추진, 민생침해 범죄근절로 서민생활 보호
-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채용비리 등 불공정 행위 사범 단속으로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병행으로 범죄이익 조기 박탈 및 실질적인 처벌효과 제고하여 회복적 정의 실현
-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깨끗한 선거분위기 확립,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단속계획 수립·하달	'19. 12월~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강조지시	'20. 1월	
	설 명절기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계획 수립·하달	1월	
	공직선거법 해설서 발간·배포	2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1·2단계 단속체제 가동	2월	
	「서민의 안심·안전·행복」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악성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2월	
	범죄수익추적 연구회(CTR) 운영 계획 수립 및 개최	1~2월	
	'20년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계획 수립·하달	2월	
2/4분기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3~4월	
	자금세탁방지 등 정책협의회 참석 및 정책 의견수렴	3월	
	금융·회계자료 분석시스템 도입 및 배포	3~4월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집('19년) 발간	4~5월	
	범죄수익 추적수사 기법 관련 쏠 지방청 교육자료 배포	4~5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4~6월	
	공인회계사 등 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하달	5~6월	
3/4분기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보험 아카데미 개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예정)	6~7월	
	생활 속 불공정행위 특별단속 실시	7~9월	
	공적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7~10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평가 및 포상	9~10월	
4/4분기	수사 분야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실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예정)	11~12월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책 의견수렴	11~12월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11~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지능 수사요원 1인당 민생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35%)	6.6	5.9	7.3	6.7	하단 참조	'20. 1월~10월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지능수사요원 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지방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35%)	363	588	438	464		'20. 1월~10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대비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 건수 비율 (15%)	11.6	11	11.7	11.5		('20. 1월~10월 전화번호 정지건수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 100	
범죄수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 (15%)	-	-	813	895		'20. 1월~10월 현장지원 건수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 '20년 성과지표 설정 배경

- '20년 수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침해 범죄, 부정부패 범죄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로 피해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일선 수사관들의 범죄수익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총 4개 지표를 설정·관리
- 가중치 부여 : '20년 추진 업무에 따른 각 지표의 중요성, 대표성 등을 감안, 가중치 부여
⇒ '지능 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과제 총 성과 달성도(%)

$$= ('지능 수사요원 1인당 민생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달성도(%) \times 0.35) +$$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달성도(%) \times 0.35)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대비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건수' 달성도(%) \times 0.15) +$$

$$('범죄수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 달성도(%) \times 0.15)$$

○ '지능 수사요원 1인당 민생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지표 산출 근거(경찰청 업무계획 Ⅱ-목표①-5-①, 업무Ⅱ-목표②-2-③ 지표화)

- '2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침해 범죄(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 기획수사 추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기획수사에 대한 실적을 측정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지표 산정방법을 따를 때 '17년~'18년간 실적 감소추세('17년 6.6명 ⇨ '18년 5.9명)에서 보조금·보험사기 특별단속, 전화금융사기 근절대책 실시 등으로 대폭

증가('18년 5.9명 ⇨ '19년 7.3명) 추세에 있으나, 최근 사기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생침해 범죄는 국민들이 진심으로 근절되기를 갈망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20년 성과지표로 선정, 최근 3년 중 평균치 실적을 상회하는 '6.7명'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지표 산출 근거 (경찰청 업무계획 Ⅱ-목표②-1-① 지표화)**

- 그간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력 집중으로 공공분야 부패사범 전체 검거인원은 증가추세('18년 1,012명 ⇨ '19년 1,493명)에 있으나, 공공분야 고위 부패사범(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단체장 등) 검거 인원은 감소 추세('18년 588명 ⇨ '19년 438명)
- '20년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분위기 조성하고 공공분야 고위급의 부정부패 비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및 국가적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감소추세에 있는 '공공분야 고위 부패사범 검거인원'을 부정부패 대표 지표로 설정하고 3년간 평균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464명' 검거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대비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건수’ 지표 산출 근거 (국무총리 지시사항-5009662 지표화)**

-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중지 요청하여 동일 번호에 의한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튜브 광고, 카드뉴스 제작 등 전화금융사기 홍보활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음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다각적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약 55% 증가('17년 24,259건 ⇨ '19년 37,667건)하였고, 전화번호 정지는 효과적인 금융사기 예방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정지건수가 감소('18년 5048건 ⇨ '19년 4397건)하였음
- 전화금융사기는 서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민생침해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반드시 근절해야할 사회적 적폐인 점, 전화번호 정지 건수의 증가는 전화금융사기 근절과 정비례하는 성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성과지표로 선정, 최근 3년 중 평균치 실적 이상인 '11.5%'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범죄수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 지표 산출 근거 (경찰청 업무계획 Ⅱ-목표②-1-④ 지표화)**

- 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통해 범죄이익 박탈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음
- 경찰청은 '19년 1월부터 각 지방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현장수사부서에 회계장부분석·계좌추적 등 사건분석 지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 및 범죄수익 동결에 힘쓰고 있음
- 경제·금융·부패 속성상 범인검거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현장지원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문 수사기법을 개발·전파하고 범죄수익 환수 신청에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활동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를 지표로 선정, 전년도 실적의 약 10%를 상회하는 '895건' 이상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17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Ⅱ-1-②)

□ 추진배경 (목적)

- 외사사범 집중단속활동 및 외국인밀집지역 관리 강화로 범질서 확립
 - － 체류외국인이 늘어나고 불법입출국·강폭력·마약 집중단속에 따라, '19년 외국인 피의자는 전년 대비 3.4% 상승하며 증가 추세로 전환
 - － 지속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통해 매년 외국인밀집지역의 체감안전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나, 전국 체감안전도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 특히, 최근 야쿠자·삼합회 국제범죄조직 유입과 국내외 단체 연계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범죄가 심각한 치안 위험요소로 대두
 -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범죄는 국민 일상생활화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 중국·필리핀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검거하여 조직 와해를 추진
- 산업기술보호 인프라 강화, 일자리 보호 및 국부유출 방지
 - －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노력 중으로,
 - － 기술유출 범죄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강도 높은 다각적 대책 추진 필요
 - ※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17~'19년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포함
 - － 중기부·특허청·방사청 등 기술보호 관련 부처는 경찰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의 전국적 수사체계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수준으로
 - － 기술보호 관련 범부처 정책 수립·범부처 위원회 등에 경찰청 참석 및 산기팀의 적극적 활동을 요청, 전문 수사팀으로 인정받고 있음
-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 － 매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발생 건수와 국외도피사범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범죄자 추적 및 송환에 노력 중으로,

- 인터폴 총재 당선('18.11.)은 대한민국 경찰의 외연이 확대되어 국제 다자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
- 인터폴과 편당사업 조인식 체결('20.2.), 한국을 중심으로 3년 간 사이버경제·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검거활동을 전개할 계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외사사범 집중단속활동 및 외국인밀집지역 관리 강화로 법질서 확립 >

- 국제보이스피싱·불법외환거래·불법입출국 사범에 대해 상반기 집중 단속(2~6월), 강폭력·국제범죄 사범에 대해 하반기 특별단속활동 실시
 - ※ 경찰주재관 인터폴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약 등 국제범죄 첩보 적극 수집
- 지역사회 내 신고를 수렴할 수 있는 열린 창구, 예방활동도 추진
 - ※ 외교부·중기부·산업부와는 제도 개선, 국정원·기무사와는 범죄첩보 수집, 법무부와는 외국인밀집지역 합동단속 전개. 시민사회와도 적극 소통 중으로 외사치안협력회·산업보안협력회를 통해 주민·지자체·학계 의견 수렴,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국인 의견·건의사항 수렴
- 서울·경기남부를 우선으로 국제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신설(2월), 부산·인천 지방청까지 점차 확대하여 해외조직 총책·관리책 검거에 수사력 집중
- 법무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원·기무사와 범죄첩보 공유 등 공조하여 범죄 대응력 강화
 - * (장기)‘경찰의 불법체류자 대응 및 처리결과 활용’ 연구결과 토대로, 불법체류자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법적 활동에서 행정경찰적 작용방안 검토 / (중기)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협력 / (단기)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제도 적극 시행
- 외국인범죄 효과적 대응을 위해 외국인피의자·등록외국인·상권 등 치안요소를 종합 고려해, 외사안전구역을 추가 지정·운영(현재 23개)
- 외사치안협력위원회(15개)를 통해 △민·관 협력 방안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학계·전문가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추진으로 체감안전도 제고
 - ※ '19년 외사안전구역 대상 도입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시설물 보강, 전년 대비 체감안전도 상승('18년 71.1점 → '19년 71.9점). 지자체 조례에 외사경찰의 CPTED 활동 반영도 추진 중

- 법무부와 합동으로 외사안전구역 순찰·검문검색 활동 실시하고, 전국 외사안전협력관은 국제범죄조직 동향 파악 및 심층적 범죄정보 수집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에 외국인 분포도·범죄다발지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외국인범죄 TAB’을 신설하여 범죄예방정책에 반영
 - ※ 외사안전협력관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동향보고서 작성 시 또는 분기별 외사범죄데이터 분석 시 활용 중이며, '20년에는 ‘외국인 유동인구 TAB’ 개설 추진

< 산업기술보호 인프라 강화, 일자리 보호 및 국부유출 방지 >

- 체계적인 산업기술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본청 계 신설과 사건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남부·인천·경남청 수사인력 증원 추진(소요정원안 심사)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및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해 기획수사활동(3월~9월)을 실시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엄단
 - 기업현황·성과·역량을 고려해 경기남부청을 산업기술보호 중점 수사청, 경남청을 방산기술보호 중점 수사청*으로 지정하여 수사 전문성 제고
 - ※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부가 지정한 방산업체의 21%가 경남 지역에 소재
- 산업기술보호 석사과정 개설 추진(중기사업인력계획 심사) 및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법률 지식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 ※ △디지털포렌식 분석기관(연 2회, 각 30명) △수사연수원(2주일 교육 과정, 각 30명)
- 금년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산업기술유출 피해액 산정모델 개발
- 국가핵심기술(69개)·산업기술(3,600여개)을 보유한 기업을 방문하여 보안 진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기술보호 설명회 실시
 - ※ 전년도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금년도의 경우 전국 1,000여개 업체 참여 예상
- 전문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첩보수집 역량 강화를 위해 4개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을 기존 각 1명에서 증원 추진
- 11개청의 산업보안협의회를 확대하여 기술보호 정책을 시민과 공유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법률·제도를 개정하고 협의체를 통해 수사공조

연 번	구 분	주요 내용
1	기술보호 제도개선	경찰청·중기부·공정위·특허청 및 민간 전문가 공동참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분쟁 조정 및 협업 강화
2	피해기업 보호	무역위원회의 수출입 제재 등 행정처분 연계를 통한 기술 유출 피해기업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업무 협조
3	해외유출 정보수집	‘경찰청(외사국)-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 간 정례 회의 추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첩보공유 및 수사 공조채널 강화
4	방위산업 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수사·정보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 ‘신고·정보확인·수사’ 과정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

-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펀딩 사업’ 추진, 국제범죄 척결
 - 한국경찰 주도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아동성착물’ 척결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과 합동검거 실시, '20년 예산 15.32억원 신규 확보
 - ※ 경찰청·인터폴 사업조인식 체결('20. 2.11.)
- 국제공조수사 기반 강화를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역량 향상
 - KICS 내 국외도피사범 공조절차 개선(5月 완료 예정)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적극 추진
 - ※ 인터폴 회원국과 적극적인 국제공조활동(적색수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미제사건(Cold Case) 해결에 노력
 - 인터폴 국제공조팀 운용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지속 추적·관리 및 검거·송환 기반 마련
 - 경찰주재관·코리안데스크 등 해외공조수사 네트워크 활용, 현지 법집행기관과 상시 협업체제 구축 및 유사 시 즉각 대응
- 국내 유관부처(법무부·외교부 등)와 상시 공조채널 유지,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제고
 -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외교부 여권관리시스템에 인터폴 D/B 연결, 인터폴 수배자·도난분실여권 소지자 검거에 활용

- 해외 법집행기관과 직접적 협력관계 구축, 국제공조수사 뒷받침
- － 각국 인터폴 회원국 및 아세안 국가와의 업무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도피사범 및 국제범죄 정보 공유
- － 인터폴 주관 국제회의·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각국의 도피사범 추적·검거 노하우 등 공유
- － 중국·필리핀 등 주요 도피국과 도피사범 정보 교환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 활성화 도모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설 명절 외국인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1월	
	인터폴 사무총국과 편당사업 조인식 체결	2월	
	국제보이스피싱·불법입출국 등 기획수사	2월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	3월	
	산업기술보호 및 수사강화 종합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전국 국제공조수사 담당자 워크숍 개최	6월	
	KICS 내 국외도피사범 공조절차 개선	6월	
3/4분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기획수사	7월	
	인터폴 편당사업 참여국 총회 국내 유치	8월	
	인터폴 회원국 간 합동검거 실시	8월	
	경찰청-법무부 업무협의회	8월	
	추석 명절 외국인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9월	
	산업기술유출 수사 디지털포렌식 교육	9월	
4/4분기	제89차 인터폴 총회 참석	10월	
	인터폴 회원국 합동검거 관련 실적 분석	11월	
	유관기관 공동 해외 진출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12월	
	연말연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 거주 내·외국인, 재외국민, 산업기술 보유 기업
- (이해관계집단) 법무부, 외교부, 검찰,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인터폴 사무총국 및 194개 인터폴 회원국

□ 기대효과

- 특별단속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준법의식 확산 노력, 전문수사체계 구축, 관계부처 협력, 홍보활동을 통해 외국인범죄 안정화 전망
- 해외 거점 보이스포싱 조직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증거 공유, 합동 단속, 피의자 송환으로, 금융사기 추가피해 차단 및 범죄수익금 유출 방지
 - ※ '20. 2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있는 보이스포싱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서울·경기남부청에 '국제보이스포싱 전담수사대' 신설, 이를 비롯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 추진
- 유관기능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주민 체감안전도 상승세를 유지
- 국가·기업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유출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보호 수사 활동으로 국부유출 차단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적극적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통해 범죄자 신병을 확보, 형사처벌 및 관련 수사 재개·피해지원 등 사법정의 구현 노력
 - － ‘범죄자는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결국 처벌받는다’는 인식 확산 및 처벌 실효성 증대로 범죄예방효과 제고 및 법질서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외사경찰활동(Ⅲ-1-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184	208
	■ 외사경찰활동(311)		184	2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외사사범 검거실적(40%)	87, 963	91, 844	108, 274	100, 828	최근 3년 추세치(6.14%) 이상 목표 치 설정	외사사범 검거점수	외사사범 검거실적DB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실적(30%)	248	259	269	280	최근 3년 추세치(4.14%) 이상 목표 치 설정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점수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실적DB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30%)	300	304	401	466	최근 3년 추세치(16.61%) 이상 목표 치 설정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국외도피사범 송환DB

18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단속 활동만으로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성매매 수요차단’ 등 성매매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 － 성매매 광고행위(성매매전단지 배포, 알선사이트 광고) 차단 등 성매매 예방 활동 중점 추진
- 양적 단속에서 벗어나 추적수사를 통한 성매매 알선자·실업주·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보전, 과세자료 통보) 등 근원적 차단 활동으로 불법 영업 의지를 차단하여 생활 속 질서 유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성매매 단속에서 예방으로 근원적 차단 추진 >

-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운영 및 모니터링)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間 통화를 차단하고 신속히 이용정지시켜 성매매 예방

* ACS(Auto Call System) : 성매매전단지나 알선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 발송 시스템에 등록, 동 번호로 3초마다 계속 전화하여 성구매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 성매매 광고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게시물 삭제 및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

- (성매매 예방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성매매 유입·수요차단(사이트, 채팅앱)을 위한 전문협의체(과기부·여가부·방통위·방심위 등) 구성
 - － 성매매사이트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부가통신사업자 제재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업무 간소화 추진**(과기부·통신사)

*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규정 신설
** 전화번호 명의자의 승인 없이 성매매알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

- － SNS(카카오톡, 라인 등),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광고행위 차단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제지방안 협의(과기부, 채팅앱 운영자 등)

- 성매매사이트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부가통신사업자 제재

- ▶ 전화번호를 이용한 성매매알선·광고와 동일하게 이용약관에 따라 강력한 제지 필요
- ▶ 어플 상 닉네임 수시 변경으로 인적사항 특징이 곤란, 이용약관 개선 필요

< 풍속업소 재영업 의지 차단 등 근원적 불법영업 근절 추진 >

- (풍속수사팀 확대운영) 실업주 추적수사, 건물주 입건, 기소 전 물수보전, 통신·계좌수사, 범죄수익금 과세자료 통보 등 재영업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풍속수사팀 운영 확대

- ▶ 풍속수사팀 전국 18개 지방청 중 14개청 161명 운영 중, 단계적 확대추진
- ▶ 단속·수사체계를 일원화한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단속, 수사 부서에서의 반복 조사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추진

- (근원적 불법영업 근절 추진) 양적단속에서 벗어나 성매매 알선, 불법게임장 실업주 단속, 유관기관(지자체·소방·출입국관리소·세무) 합동 단속 등을 통한 제재 강화로 불법영업 근원적 차단활동 전개

※ 풍속단속·수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신설(경찰인재개발원, 연 2회 30명 교육)

- 유관기관 합동, 연중 다양한 테마별 집중단속 추진

- 출입국관리소 합동,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 온라인 성매매알선 사이트(오피스텔 업소)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기간 운영, 사이트 단속 후 방심위에 폐쇄요청
- 여가부 합동, 가입 시 인증절차 없고 익명성으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앱 집중단속기간 운영

- ▶ (경찰청) 채팅앱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단속, 성매매 대상 청소년 여가부 통보
- ▶ (여가부) 성매매 악용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채팅앱 규제방안 등 제도개선

- 유관부처(교육지원청·지자체)합동, 매학기 개학 전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지도·단속기간 운영
- 성인게임 PC방 불법영업(환전, 개·변조 등) 집중단속
-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실시

< 풍속업무 지도단속 유착 근절 강화 >

- 지방청 풍속수사팀 중심 단속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유착 비리 차단
- 서울 강남권에 ‘반부패 전담팀*’(’19.6월~) 운영
 - * 수사감찰 풍속 전담팀 구성하여 강남권에 전진 배치, 유착비리 적발 시스템 구축
- 풍속담당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자격 여부 엄격 심사(연중)
 - * 위원장: 경찰서장, 위원: 청문·생안·여청·수사·정보과장 등
- ‘풍속사건심의위원회*’ 운영(’19.6월~), 단속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 * 위원장: 담당 과장, 사전 단속대상 선정, 사후 수사결과 점검
- 지방청 주관 ‘특별관리업소*’ 관리 및 유흥업소 신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단속 봐주기 등 유착 비리 사전 차단(연중)
 - * 특별관리업소 지정 후 지방청에서 단속 또는 他 경찰서와 교차단속 실시
-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전국 풍속담당자 청렴교육 강화*
 - * 청렴 워크숍 개최 및 지방청별 청렴교육 별도 시행(年 1회 이상)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단속	1.15~'2.29	
	성인게임(고스톱, 포커류) PC방 집중단속	"	문체부 계관위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19.12월 기준 1,163개소 추정)	3.2.~3.29	행정안전부 교육부
2/4분기	채팅앱 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4.1~5.31	여가부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6.1~8.30	문체부 계관위
3/4분기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6.1~8.30	문체부 계관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9월	행정안전부 교육부
4/4분기	오피스텔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	10~11월	여가부
	출입국 합동 외국인고용 성매매업소 단속	12월	법무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풍속영업자, 과기부·여가부·교육부·문체부·법무부 (출입국사무소)·식약처·지자체·세무서·소방 등 관련부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사,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성매매광고 신속한 차단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 및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 척결로 깨끗한 환경 조성
- 실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통신·금융계좌 수사 등을 통해 재영업 의지 차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불법풍속사범 단속영량 강화(311)				
①불법풍속사범 단속영량 강화(311)			6.0	6.0
▪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매			3.3	2.2
▪ 민관합동단속경비			1.8	1.8
▪ 풍속담당요원 특근매식비			0.8	0.8
▪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 통신료 등			1.1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26.0	27.0	29.5	31.5	'17~'18년 상승치(3.85%) 및 '18~'19년 상승치(9.26%)의 평균 추세치(6.56%)보다 높은 6.6%을 적용, 31.5점으로 설정(31.447이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점수 ÷ 생활질서기능인원수	KICS 통계(단속건수) 및 월간보고(인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작성 방법 >

구분	관련법률	기본배점	가점																																					
성매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3, §14, §15)	검거 건당 3점	① 구속(인원 당 20점) ② 성매매·게임장 건물주 입건(인원 당 5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만 인정) ③ 압수(성매매·게임장, 게임기·현금 각각 적용) <table border="1"><tr><td>게임기</td><td>5~20↓</td><td>20대↑</td><td>50대↑</td><td>100대↑</td></tr><tr><td>현금</td><td>×</td><td>2~5백↓</td><td>5백만↑</td><td>천만원↑</td></tr><tr><td>점수</td><td>2</td><td>5</td><td>7</td><td>10</td></tr></table> ④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금액 기준) <table border="1"><tr><td>신청후 기각</td><td>1천만원 미만</td><td>1~5천만원 미만</td><td>5천만원 이상</td></tr><tr><td>3점</td><td>7점</td><td>10점</td><td>15점</td></tr></table> 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table border="1"><tr><td>1점</td><td>-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td></tr><tr><td>5점</td><td>- 100억원 이상 통보</td></tr></table> ⑥ 검거인원(동일 사건, 질서기능 송치 인원내 한함) <table border="1"><tr><td>인원</td><td>10명↑</td><td>20명↑</td><td>50명↑</td><td>100명↑</td></tr><tr><td>점수</td><td>3</td><td>10</td><td>15</td><td>20</td></tr></table>	게임기	5~20↓	20대↑	50대↑	100대↑	현금	×	2~5백↓	5백만↑	천만원↑	점수	2	5	7	10	신청후 기각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점	7점	10점	15점	1점	-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	5점	- 100억원 이상 통보	인원	10명↑	20명↑	50명↑	100명↑	점수	3	10	15	20
	게임기	5~20↓		20대↑	50대↑	100대↑																																		
현금	×	2~5백↓		5백만↑	천만원↑																																			
점수	2	5		7	10																																			
신청후 기각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점	7점	10점		15점																																				
1점	-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																																							
5점	- 100억원 이상 통보																																							
인원	10명↑	20명↑		50명↑	100명↑																																			
점수	3	10		15	20																																			
- 성매매처벌법 ※ 외국인 성매매 추가 - 교육환경보호법	검거 건당 1점 외국인 성매매 검거 1인당 0.2점 추가																																							
불법 게임장	- 사행행위규제법 - 게임산업법	검거 건당 0.5점																																						
기타	성매매, 유해업소 건물주통지문 발송	정상배달 시 0.2점																																						
	- 풍속영업규제법 - 음악산업법	검거 건당 0.5점																																						
	- 성매매광고 입력(경찰서만)	건당 0.05점 (상한 5점)																																						
	- 번호 이용정지(지방청만)	건당 0.1점 (상한 50점)																																						
	- 성매매처벌법·아청법 동일 건 <u>알선치만 5명 이상 기소</u> - 성매매처벌법 §20 (사이트운영자 <u>3명 이상 검거</u>) - 성매매처벌법 §22 (범죄단체)	검거 건당 20점																																						
	- 대형업소 단속 (성매매 100평↑, 게임장 200대↑)																																							

[1] 주요 내용

-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 경찰 구현>**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경찰 인권교육 고도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등 인권
행정 기반 구축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의 인권경찰 선도
-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
범위를 명확화하고,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 －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가 집회 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지원
 - ※ 전국적으로 역할 수준 및 관심도가 균질화될 수 있도록 평가제를 개선하고,
상황유형별 대화기법 매뉴얼·경찰인재개발원 직무중심 커리큘럼 강화
-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자율·책임 기반 준법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되, 사전 정보활동 역량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 － △합동 정보분석회의 △법률검토·현장지원 △상황분야 정보관
전문교육 등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안전을 사전 확보
- **<인권·안전 중심 집회시위 법치경비 내실화>** 집회참가자·시민·경찰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 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 ‘경찰부대 집중교육’* 정착으로 경비경찰의 법치경비 체질화를
도모하고, 현장 안전진단팀·법률전문가 등 제도 안착 추진
 - * [1단계] 법률·인권·안전교육 → [2단계] 팀빌딩 훈련 → [3단계] 시뮬레이션식
- **<국민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 경찰개혁 추진사항과 치안정책
방향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과의 쌍방향(interactive) 소통 강화
 - － 정책 입안·검토 단계부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치안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고 지지와 공감대 향상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관리과제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인권영향평가 실시율 / 인권분야 경찰청 교안 활용 교육 실시율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 대화경찰 역량 강화 / 대화경찰 운영실적 / 신원조사 오류율 / 신원조사 교육 건수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률 /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율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현장 법치경비 실현	인권보장·안전확보 노력도 / 경비경찰 법치경비 체화수준 / 경찰관 기동대 창설 달성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인권침해 권고율	9.9	9.7	9.9	9.7	인권침해 권고율은 하향을 유도해야 하는 지표로, 전 3년도 실적 평균값(9.8)과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9.8)을 감안하여, 평균값 및 예측치보다 하향한 9.7을 목표치로 설정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경찰 권고건수÷전체 권고건수)×10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최근 집회시위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4년차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갈등이 고조화되어 치안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집회·시위 현황 >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횟수	43,161건	68,315건	95,258건
동원경력	1,801,280명	1,622,160명	2,134,960명

- 집회시위 기본권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 평온권 보호 등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실현에 대한 국민의 요구 또한 증가
 - ※ 집회에 따른 소음과 교통불편 문제가 언론 등에 다수 제기
- ➡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중대·명백한 불법 폭력 발생시 엄정 대응하여 기본권과 공공질서가 조화되는 법치경비 실현
-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과 타 부처 대비 물리력 행사가 많은 업무특성이 목표 달성에 변수
- ➡ 인권영향평가 내실화를 통해 법령 제·개정, 치안정책 수립 시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보완하여 변수를 최소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9]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Ⅱ-2-①)

□ 추진배경 (목적)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와 불안이 상존, 인권가치 실현 및 인권친화적 조직으로의 개혁 요구 증대
- 경찰의 법 집행 과정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 차원의 견제 필요
-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재설계하고 이를 제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 － 법령 등의 제·개정, 정책 수립·시행前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
 - －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 분야까지 인권영향평가제를 적용하는 등 인권영향평가제 고도화 및 인권 정신 확산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경찰 인권교육 강화
 -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의 인권 가치와 내재화를 위해 △인권 감수성 증진, △위치와 책무를 재확인하는 인권교육 강화
 - － 인권교육 기본계획(2018-2020)에 의거 △교육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강사역량 강화 △인권교육평가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표준화 및 내재화 추진

<경찰청 인권교육 운영 방식>

- － (개요) 경찰청 구성원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 조직 내 다양한 인권교육을 구성원 개인당 6시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 (직장훈련) 국민의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직무수행능력 제고
 - 1)(집체교육(OJT) 기관 단위 소집 교육 형태로 각 기관별 연간 1회 이상 시행
 - 2)(전문교육(OFFJT) 조직 내 교육기관인 경찰 인재개발원, 지방청 교육센터 등 입교, 국가인권위원회 협업 등 통해 인권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시행
 - a) 경찰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2주), 인권역량 강화 과정(1주)
 - b) 지방청 교육센터 : 인권감수성 향상과정(2일)
- ※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강사의 일방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생 참여형(토론 및 체험)으로 구성
- (온라인교육)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부서 단위 특징에 맞는 교육구성
- (시민참여 소통 교육) 시민과 경찰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체험 등을 통해 소통하는 프로그램 구성된 '인권 아카데미'를 분기별 실시
- (현장업무 지원 교육) 현장 경찰관이 상시 참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용 '인권 포켓북'(예정) 배포 등 다양한 인권교육용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시행

○ 경찰청 인권정책관 신설 추진

-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고조된 상황 속 인권 침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통제하는 내부 통제기구 필요
- 외부전문가인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정책 기획, 인권교육, 피해자 보호 등 행정전반을 재설계·제도화하여 국민인권보장 강화에 기여

○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경찰 인권 위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
-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가치 반영,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인적 재편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내부 통제 역할 확대 강화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인권 관련 민원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자발적 외부 통제로 경찰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 2020년 수도권 중심 재편 시 특단의 활성화 대책으로 경찰권에 대한 외부 통제의 실질화 정책 반영하여 활성화 추진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 추상적 인권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장경찰관이 지켜야 할 행동의 준거를 마련, 인권중심의 현장활동 뒷받침

'18년도 용역연구결과물, UN 법집행관 행동강령을 비롯한 국제기준과 영국경찰 인권지침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규범의 미비점 보완 및 체계화
 ⇒ 강령제정 및 강령의 이행을 위한 교육시행

○ 시민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 (인권영화제) 인권을 주제로 영화 소재를 공모하여 당선작을 영화로 제작, 인권을 매개로 시민·경찰이 소통의 場 마련
- (인권아카데미) 인권 관련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연결, 시민과 경찰이 함께 인권을 배우고 토론하는 '인권아카데미' 운영(분기 1회)

※ '19년 경찰 시민 250명 참석, 문화예술인 초청하여 4회에 걸쳐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관서 담당자 간담회	2월	
	2020년 경찰 인권교육 계획 하달	3월	
2/4분기	현장인권상담센터 재편운영	4월	
	경찰청 인권위원회 전국 연석회의	5월	코로나 19 관련 일정 조정
	인권아카데미(1차)	5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 및 공표	6월	
	인권아카데미(2차)	6월	
3/4분기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관서 현장점검	7월	
	경찰관 특별 인권교육 결과 점검	8월	
	인권아카데미(3차)	9월	
4/4분기	인권아카데미(4차)	11월	
	제9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인권관련 시민단체, 경찰

□ 기대효과

- 경찰 內 조직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 표준화된 교재·콘텐츠 개발로 인권교육 품질 제고 및 균등화를 위한 인권교육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프로그램목표 IV-4)				
① 감사·인권보호활동(7133)		일반회계	33.13	40.52
■ 인권·피해자보호활동(312)		일반회계	18.35	23.6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인권영향평가 실시율 (50%)	-	-	89.4%	92%	▶ '19년 실적 : 152건/170건 ▶ ('20년) 작년 실적이 89.4%로 무척 높아 그보다는 다소 높은 상향이 필요하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작년 실적 기준 3% 소폭 향상을 목표로 하여 $(89.4 \times 0.03 = 2.682)$ 92%로 상향 조정 예정. $(89.4 + 2.682 = 92.082)$ 에서 소수점 이하 버림	$\frac{\text{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text{법안 상정 건수}} \times 100$	-경찰위원회 법안상정건수,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건수 통계자료 활용
인권분야 경찰청 교안 활용 교육 실시율(50%)	신규			90%	▶ 전국경찰관서 경찰청 교육안을 활용한 인권교육 실시 ▶ 수사권 조정 후 경찰권 강화에 따라 인권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 경찰청에서 교육(안)을 제작, 내부 강사활용, 전국경찰관서 교육	$\frac{\text{교안활용 교육 실시 관서수}}{\text{전국 관서수}} \times 100$	균질화된 교육 진행을 목표로 각 경찰관서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활용

20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Ⅱ-2-②)

□ 추진배경 (목적)

- 정부 4년차 국정운영 방향·국정과제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업무 체계 개선

- ▶ **【국정과제 13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 **【실천과제】** 경찰개혁(민주·민생·인권 강화)

- 정보업무 전반에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화경찰 제도」의 분석·보완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
 - －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갈등 해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도출
- ※ 집회시위 개최 건수·참가인원이 모두 급증하고 있어, 집회시위 현장의 소통창구이자 완충지대로서 대화경찰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 '대화경찰관제' 등 민주·인권의 가치가 치안행정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중략)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쇄신', 경찰대학 개혁 등 민주·인권·민생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법안도 마련하여 하나하나 입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0. 1. 1. 경찰청장 신년사)

· '19년 대화경찰 활동 관련 기사 ⇨ △ 네이버 69건 △ 다음 29건

-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로, '정보경찰 개혁'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 핵심 개혁과제로 부각
 - － 이에,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18. 4월) 후 부단히 노력 중인 '정보경찰 개혁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정보활동에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법 정보활동 모니터링 등 「준법역량 강화」 추진
- ※ 정보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정보활동규칙 제정完, 법안개정 추진)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부당한 개혁 추진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 (개혁법안) 정보활동 ‘법적 근거·활동 범위 명확화’(경찰관직무집행법),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 '19. 3. 15. 소병훈 의원 발의(행안위 계류중)
그간 정보활동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에서 권고한 '공공안녕의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 '19. 3. 15. 소병훈 의원 발의(행안위 계류중)
'정치적 중립' 의무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보다 포괄적인 '정치관여 금지' 조항 신설,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로 상향(기존 3년)

- 20대 국회 임기 내('20. 5. 29.) 통과를 위해 노력하되, 불발시 21대 국회 院 구성 후 '개정안 재발의 및 연내 입법화' 추진
- 다만, 입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보경찰활동규칙」(경찰청 훈령)을 선제적으로 제정('19. 1월), 정보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거부권 등을 제도화

< 정보경찰활동규칙 주요내용 >

- ▶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 △국민안전 △범죄정보 △집회·시위 질서, 안전 유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 불법사찰·인권침해 등 일체 권한남용 소지 차단
- ▶ **(부당한 지시 금지·거부 제도화)**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권을 규정, '민간사찰 등 부당지시는 할 수도 없고,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 ▶ **(불법사찰 원천 배제)** '민간단체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사찰성 정보 수집' 시 징계·수사의뢰 및 관련자는 정보기능에서 배제
- ▶ **(민사개입 금지 / 특권의식 배제)** 민사분쟁 부당개입, 사적 목적 정보활동 등 일체의 '경찰권 남용'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 / 정보관의 신분·목적에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비공식 직함 사용금지

- (준법역량 강화) 정보국 정보1과 「준법지원계」('18. 7월 신설)를 중심으로, 정보활동의 적법성 상시 확인·감독 등 통제장치 강화

- ▶ (취지)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정보활동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실시 등 체계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 ▶ (구성) 정보경찰 활동규칙(제16조)을 근거로, 정보국 정보1과 內 변호사를 포함한 '준법지원계' 신설('18. 7월), 운영 중 / 보다 실효적 활동을 위하여 지방청 단위 '준법지원 담당 신설'도 추진
- ▶ (업무) 정보관의 법령·규칙 위반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행정지도)'과 '상담·교육' 등을 병행
 - ※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위법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계·수사의뢰 및 정보기능 배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특히, '정보·감사 기능 합동 점검단'을 편성하여, 전 지방청 정보 기능의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20. 3월)하고,

* 행정지도·컨설팅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보활동의 행태·의식·문화 개선에 주력 / 중대한 위법사례 발견 시 사실조사 후 징계·수사의뢰 등 조치

- 지방청 정보부장·과장 소집교육, 경찰서 중간관리자·현장 정보관 특별 집체교육 등 단계적·체계적 교육 추진

⇒ 준법지원계를 중심으로, '정보경찰활동규칙의 현장 안착' 및 '부적절한 관행에 의한 정보활동을 근절'시키겠음

- (내·외부 통제시스템) 주요 현안의 주기적·사전보고 및 경찰위원회 자문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경찰위원회 보고 실질화」

※ △정보경찰 개혁법안 입법시 후속조치 △공공안녕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사안 △정보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발생시 사실관계 보고 등

-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보기능 「정기 사무감사」 수감('19년 최초 실시) 등 정보 경찰에 대한 '내·외부 중첩 통제시스템'을 구축

②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 (대화경찰) '18. 10월 도입 이후, 집회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로 역할을 하며,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 － 現 정부 중점 국정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에 부합하는 정보경찰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자리매김
 - * 국정운영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살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 － 언론 등에서도 ‘감시자에서 조력자로의 발상 전환’이라고 호평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서 평가받을 만함
- 형광 조끼 대화경찰 “형님~”하니, 성난 시위대가 고분고분(한국, '19. 11월)
 - 집회가 싸움으로 번지기 전, “지뢰제거반” 대화경찰이 뜬다(조선, '19. 11월)
- － 다만, 도입 3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장·단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동체계 재정비 필요
 - ※ 대화경찰 TF팀 신설('20. 1월), 추진방안 마련 등 체계적·종합적 관리
 - － △ 기능간 역할 재정립 △ 조직·장비·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확충 △ 평가·인센티브 등 ‘현장활동 지원’ 강화
 - ※ △ ‘공개성’의 핵심인 대화경찰 표식(조끼) 디자인·재질 개선 △ 점퍼류 등 신규 장비 개발·보급 등 추진
 - － △ 현장 사례 데이터베이스화·매뉴얼 편찬 △ 인력풀 관리 강화 △ 전문화 교육과정 개발 등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
-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신원조사」는 업무오류 발생시 국가·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귀결되므로, 오류율에 대한 공격적 관리 긴요

- ▶ (의의) 국가 안전에 관련된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예정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정보 수집 활동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 ▶ (근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모범으로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정원장의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 수행
- ▶ (대상) 4급 이하 국가공무원, 비밀취급인가자, 국가보안시설 관리자 등

— 다만, 복잡한 신원조사 법령, 높은 업무 난이도,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조사관 교체비율**이 높아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

* 치안정책연구소의 ‘정보경찰 조직진단·직무분석’(19. 10월) 결과, 지방청 정보 업무에서 신원조사가 35%의 업무량을 차지, 가장 과중한 것으로 분석

** 인력 교체 비율은 '18년 25% → '19년 30% → '20년 20%로 年 평균 25%가 교체, 전입 조사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

— ‘범죄경력 관련 사실 통보 오류’ 등 중요 오류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정확성 제고

- 신임자 교육(5월), 쏠 지방청 순회 컨설팅(年內), 신원조사관 워크숍(11월)
- 질의·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취합, 현장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각 사안별 업무 방법을 기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 예정(상반기)

○ (집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집시법 개정안* 주요내용 >

* 강창일 의원 발의('19. 7. 1.),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

- ▶ (금지장소) 국회·총리공관·법원 앞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는 등 각 기관의 헌법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 '허용'
- ▶ (금지시간) 오전 00시~07시 시위는 금지, 집회는 질서유지인을 두면 가능
- ▶ (제한통고) 주거지역·심야시간 소음 제한통고 위반시 주최자 대상 과태료

— 특히, 금지장소(국회·법원·총리공관) 부분은 헌법기관과 직접 관련되고, 개정시한('19. 12. 31.)이 도과된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

⇒ 단독으로 분리해 20대 국회 임기 내('20. 5. 29.) 통과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준법역량 강화) 정보·감사 기능 합동 특별 화상회의 개최 및 현장점검 실시	2월 4~6월	코로나 관련 일정 순연
	(대화경찰) 대화경찰 제도 보완·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3~4월	
2/4분기	(신원조사) 신원조사 기초 교육, 현장 매뉴얼 보급	5월	
	(대화경찰) 종합계획 시행(인력풀 정비 등)	6월	
3/4분기	(준법역량 강화) 상반기 분석 및 하반기 역량 강화 방향 설정	7월	
	(준법역량 강화) 전국 정보과장 워크숍, 경찰서 중간관리자·현장 정보관 특별집체교육 등 교육 강화	7월	코로나 관련 일정 순연
	(대화경찰) 종합계획 시행(현장사례 DB화 등)	9월	
4/4분기	(대화경찰) 종합계획 시행(복제보급 등)	11월	코로나 관련 일정 순연
	(신원조사) 전국 신원조사 담당자 워크숍	11월	
	(대화경찰) '20년 운영 성과 분석, '21년 운영방향 설정	12월	
	(준법역량 강화) '21년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분석	12월	
연중	(대화경찰) 역할 재정립 등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에 주력 (준법역량 강화) 정보관 대상 준법 정보활동 교육, 업무상담 등 법률지원, 간담회·현장점검 등 (신원조사) 순 지방청 순회 간담회·컨설팅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국민 인권 신장

□ 기대효과

- (개혁법안) 정보활동의 근거·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여,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 (준법역량 강화 및 통제시스템) 정보경찰에 대한 내·외부의 촘촘한 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 (대화경찰) 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의 완충지대로서, 집회시위 자유와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집시법 개정) 변화된 집회시위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간 조화 도모
-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신원조사의 오류율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 배가로 경찰행정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40%>					0.9	하단 참조	$(\text{교육이수율} \times 40\%) + (\text{법률지원증가율} \times 25\%) + (\text{현장점검증가율} \times 35\%) - (\text{사실조사 후 '징계요구' 수사의뢰 건수} \times 0.009)$	- 경찰청 주관 순회교육 등 결과 - 업무상담, 법률지원·검토 등 결과 - 현장점검 근거자료 등 - 사실조사 결과 등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40%>	대화경찰 역량 강화 <20%>			308.1	339.1	하단 참조 ① 대화경찰 역량 강화의 경우, 작년 업무적용도 대비 10% 상향한 339.1를 목표치로 설정 ② 대화경찰 운영실적의 경우, 작년 운영실적 대비 11% 상향한 12.0%를 목표치로 설정	$(\text{대화경찰 교육 인원수} \times 70\%) + (\text{대화경찰 교육 수료대상 업무 적용도} <\text{설문조사}> \text{결과평균} \times 30\%)$	- 경찰 인재개발원 등 대화경찰 교육 결과 - 교육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 - 경찰 견문관 리시스템 (대화경찰 운영, 전체 집회시위 건수) 등
	대화경찰 운영실적 <20%>			10.8%	12.0%		대화경찰 운영 건수 / 전체 집회시위 건수 * 100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20%>	신원조사 오류율 <10%>	0.31%	0.1%	0.12%	0.12%	하단 참조 ① 신원조사 오류율의 경우, 3년 추세치(0.176) 및 전년도 목표치(0.24)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 수준인 0.12로 설정 ② 신원조사 교육건수의 경우, 작년 건수 대비 25% 상향한 10회를 목표치로 설정	오류 건수 / 전체 신원조사 건수 * 100	신원업무 통합관리시스템 등
	신원조사 교육건수 <10%>			8회	10회		신원조사 교육 건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40%> ⇨ 신설 지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경찰활동규칙을 제정('19. 1월),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고, 경찰청 정보국 內 '준법지원계'를 신설('18. 7월) 하여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함

이에, 정보관 대상 '준법 정보활동 교육 이수율', 준법지원계 '법률지원 증가율', '현장점검 증가율', '사실조사 후 징계요구·수사의뢰 건수' 등 '정보경찰활동규칙 현장 안착' 및 '준법 정보활동 촉진'을 위한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를 수치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측정 산식

$(\text{교육이수율} \times 40\%) + (\text{법률지원증가율} \times 25\%) + (\text{현장점검증가율} \times 35\%)$
 $- (\text{사실조사 후 '징계요구·수사의뢰' 건수} \times 0.009) / \text{'0.9' 달성 목표}$

※ ① 교육이수율 : '준법 정보활동 교육' 이수 정보관 수 / 정보관 현원

② 법률지원 증가율 : 법률지원(법령해석, 판례분석 등) 건수 '당해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③ 현장점검 증가율 : 현장점검(간담회, 점검 등) 건수 '당해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교육이수율은 40%, 법률지원증가율은 25%, 현장점검증가율은 35% 배점

○ 목표값 산출 근거

- <교육 이수율> : 정보경찰활동규칙 제정 이후 준법 정보활동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인해 '19년 교육 이수율(현원 대비)은 0.5회로 미흡 ⇨ 올해 교육 이수율은 20% 상향한 0.6을 목표치로 설정
- <법률지원 증가율> : 준법지원계는 법령·규칙 해석 등에 대한 실시간 상담 지원 및 최신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의 적법한 법 집행을 보조 '19년 법률지원(법령해석, 판례분석 등) 655건을 제공, 올해는 10% 증가한 721건 제공이 목표 ⇨ 올해 법률지원 증가율은 1.1을 목표치로 설정
- <현장점검 증가율> : 준법지원계는 정보경찰활동규칙의 현장 안착과 부적절한 관행에 의한 정보활동 근절을 위해 정기적 현장점검을 시행중 '19년 현장점검(간담회, 지방청·경찰서 점검 등) 45회 실시, 올해는 10% 증가한 50회 실시가 목표 ⇨ 올해 현장점검 증가율은 1.1을 목표치로 설정
- <측정산식 대입 결과> : 올해 목표치를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0.9
 ※ $(\text{교육이수율} <0.6> \times 40\%) + (\text{법률지원증가율} <1.1> \times 25\%) + (\text{현장점검증가율} <1.1> \times 35\%) = 0.9$
- <징계요구·수사의뢰 건수> : 불법사찰 등 위법한 정보활동에 대해 '사실조사 후 징계요구·수사의뢰'한 경우 한 건당 목표값의 1%인 0.009점 감점

②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40%> ⇨ 일부 신설 지표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의 완충지대로서, 집회시위 자유와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함

따라서, 전문교육(인권, 대화·갈등과정, 조정기법)을 내실화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률 등 활동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 측정산식

－ 대화경찰 업무적용도(20%)

(대화경찰 교육 인원수 × 70%) + (대화경찰 교육 수료대상 업무적용도<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 30%) = '339.1' 달성 목표

* 교육 인원수는 70%, 업무적용도 설문조사 평균값은 30% 배점

－ 대화경찰 운영실적(20%) : 대화경찰 운영 건수 / 전체 집회시위 건수 × 100

○ 목표값 산출 근거

－ <대화경찰 역량 강화(일부 신설)> ① '19년 최초로 실시한, 대화경찰 대상 인재개발원 기본교육 과정 및 외부 전문화 과정 수료 인원은 401명, '20년 목표치는 작년 인원보다 10% 증가한 '445명'으로 설정

② 대화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에 대한 업무적용도(만족도)를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9년 대화경찰 교육의 업무적용도는 91.2점을 달성, '20년 목표치는 전년도 점수 대비 1점 가량 상승한 '92.1점'으로 설정

⇨ 위 올해 목표치를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339.1

※ (대화경찰 교육 인원수<445> × 70%) + (교육 수료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균<92.1> × 30%) = 339.1

－ <대화경찰 운영실적(신설 지표)> '19년 대화경찰 인력풀을 구성, 5~10월간 전국 집회시위 53,625건 중 5,801건에 배치되는 등 10.8%의 운영률 기록

⇨ '20년 목표치는 전년도 운영률 대비 11% 상향한 12.0%로 설정

③ 신원조사 업무 정확도 제고 <20%> ⇨ 일부 신설 지표

신원조사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보수집 활동으로

신원조사 오류는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직결되는 만큼 '신원조사 오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원조사요원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측정산식

－ 신원조사 오류율(10%) : $\text{신원조사 오류건수} / \text{신원조사 처리건수} \times 100$

－ 신원조사 교육(10%) : 신원조사요원 교육 횟수

○ 목표값 산출 근거

－ <신원조사 오류율> '17년 0.31%, '18년 0.1%, '19년 0.12%의 오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신원조사 오류는 국민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오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20년 목표치는 3년 추세치(0.176%) 및 '19년 목표치(0.24%)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달성 수준인 0.12%로 설정

※ 이는 3년 추세치 대비 32%, '19년 목표치 대비 50% 상향한 공격적인 수치임

－ <신원조사 교육(신설지표)> 신원조사 업무는 복잡한 법령, 높은 업무 난이도, 과중한 업무량으로, 조사관 교체비율이 높고 신규직원 전입도 다수

※ 인력 교체 비율은 '18년 25% → '19년 30% → '20년 20%로 年 평균 25% 교체

⇨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신원조사요원 대상 체계적 교육이 필수 조건인 만큼, '20년 교육 목표치를 10회(작년 8회 대비 25%↑)로 설정

< 신원조사 주요내용 >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母法으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조에 근거한 국가정보원의 고유사무

· 法 3조 1항 2호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 대법원은 "국정원법에 '신원조사'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정원법 제3조가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라고 판시(98다12401)

○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에 근거하여 국정원의 사무를 수탁받아 연간 27만여건의 신원조사를 실시중

○ 주민·범죄경력 등 전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규정된 '신원조사 사항'을 확인 ⇨ 결과는 회보서 양식으로 요청기관에 통보

※ 시행규칙 제58조(신원조사 사항)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 12. 해외거주사실 등

21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Ⅱ-2-③)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난 '19년에는 '탄핵반발단체·노조' 등 대규모 집회가 지속되며, '18년에 이어 집회·시위 개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19.1~10월 총 79,231건 개최('18년 55,600건 대비 42.5% 증가 / 일평균 약 260건)
- － '20년은 정부 4년 차 및 21대 총선(4.15.)을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이 표출되며, 치안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조성이 더욱 긴요
-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평화 집회·시위보장 △단체 간 마찰 예방 △국민불편 최소화 등 문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 △유관기능 대책회의 △정보관 교육 △대국민 평가를 통한 피드백 등 정책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올해도 집회·시위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준법 집회·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한 대화경찰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평화적 준법·시위 문화 정착 적극 노력

-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추진
- － (정보분석회의 개최) 정보3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분석회의를 개최,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공안녕 위험요인 분석·대응방침' 수립
- － (대화경찰 활동 활성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소통창구이자 중재자로서, 전문성 제고 및 역할 강화

- (집회시위 법률지원)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검토 (위험물품 회수 근거 등) 발생 시, 경비·수사·법무 등 관련 기능과 협업(3C), 법적 근거마련 등 현장 활동의 정당성 확보
- (대내·외 정보공유 강화) 집회·시위 관련, 적시에 유관기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
- (정보관 상황정보 분석 역량 강화) 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정보관들의 정보수집·분석 역량 강화 도모
- (정보관 정예요원화) ‘외부강사 초빙 교육·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상황분야 정보관의 정예요원화 추진
- (교육 강화) 상황분야 정보관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전문성 향상(현장 정보활동 요령)’ 등 교육 진행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상황정보 관계기관 및 기능 간 정보 전파·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수시
	법집행 과정상 논란 발생 시 법률검토 후 현장 법집행 지원	수시
	대규모 집회·시위 前 본청·지방청 등 합동 분석회의 및 대책회의 개최	수시
1/4분기	전문 정보관 육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2월
	사회·경제·공공 분야별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3월
2/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집체교육·간담회	5~6월
	집단민원현장 대응 FTX 및 신속대응팀 교육	5월
	대화경찰 매뉴얼 제작	6월
	경비 기능과 협조, 집회·시위문화 대국민 여론조사	5~10월
3/4분기	현안별 순회 교육·간담회	7~9월
	대화경찰 교육 진행	8월
	외부 전문가 등 초빙, 전문화 교육 실시	8월
4/4분기	분야별 현장 간담회, 신속대응팀 교육	10월
	집회·시위 문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정보의 수요자인 경찰 각 기능 및 유관 기관

□ 기대효과

-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 정보관 역량 향상을 통해 사회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 조기에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 안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률 (65%)	40.15	45.16	48.42	53.50	'목표치 적극성'을 위해 전년도 실적치보다 10% 이상 상승한 53.50을 목표치로 설정	전체 집회·시위 중 집회·시위 사범 비율(10%) + 국민 평가(40%) + 경찰 활동 실적(50%) [세부산식 하단 참조]	집회·시위 통계자료 및 현황 합동분석회의·법률지원 검토 보고서, 대국민 여론조사 등 결과 활용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율 (35%)	신규		80	88	전년도 실적치보다 10% 상승한 88을 목표치로 설정	(지방청 보고서 총 획득점수/각 지방청 정보관 현원)을 통한 등급별 달성 점수 × 50% + (年 교육인원/목표인원) × 50%	상황분야 정보관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 등 활용

【산출 근거】

1.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률(65%)

(1) 공공안녕의 유지 및 위협 예방을 위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수치화하여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불법으로 변질 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보관의 위협 예방 활동이 필요한 대규모 집회(1천 명 이상)을 주 기준으로 삼아,

- ①전체 집회·시위 중 집회·시위 사범 비율(10%) + ②여론조사를 통한 '집회·시위 문화 국민 평가'(40%) + ③경찰 활동(법률지원·대화경찰 활동실적·합동분석회의) 실적(50%)을 통해 지표설계

<산출 산식>

구분	산식
대규모 집회시위 중 합법 집회·시위를 (10%)	대규모 집회·시위 중 합법 집회·시위 비율(10%) *산식 : [(대규모시위-불법시위) / 대규모 시위]×100×0.1 ※ 집회·시범 사범 집회·시위時 불법행위 등으로 관련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도로교통법 등) 상 별첨규정을 위반한 자
국민 평가 (40%)	집회·시위 경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정착 대면 여론조사’ 결과, ‘집회·시위 문화가 전반적으로 평화적(준법적)이다’는 응답률(%)×0.4
경찰 활동실적 (50%)	①대규모 시위 집회·시위 법률지원 실적(15%) *산식 : (법률지원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0.3 ②준법 집회·시위 촉진 대화경찰 활동실적(20%) *산식 : (준법 집회·시위 촉진 대화경찰 활동실적 / 대규모 집회·시위)×100×0.1 ③대규모 집회·시위 정보합동분석회의 개최 실적(15%) *산식 : (합동분석회의 개최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0.1

(2) 목표치는 지난 3년간 지속 상승 중으로, ①3년간 추세치인 9.84%보다 높고, ②최근 2년간 실적치의 상승세인 7.21%보다 높고, ③전년도 실적치인 48.42보다 10% 상승한 53.26을 상회하는 53.50(전년도 대비 약 10.5% 향상)을 목표치로 설정(목표치의 적극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上’ 등급)

- 탄핵반발·노조 등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며 집회·시위 건수가 사상 최대 수준인 가운데, 총선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 개최 건수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집회·시위 환경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 ※ '19년 총 95,258건 집회 개최로 역대 최대('18년 68,315건 대비 39.4% 증가)

< 최근 3년간 통계 수치 >

년도	전체 집회시위 중 집회·시위 사범 비율 (10%, 신규)	대국민 대면 여론조사 (40%)	경찰 활동 실적(50%)			합계
			법률지원 실적(15%)	대화경찰 (20%, 신규)	합동분석회의 실적(15%)	
'19년	5	16.56	12.98	5	8.88	48.42
'18년	5	20	6.66	5	8.50	45.16
'17년	5	20	5.20	5	4.95	40.15

2.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율(35%)

(1) 정보관 상황정보 분석 역량 강화

- ① 올해 총선 등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집회·시위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관 상황정보 분석 역량 강화가 필수적
※ 등급 체계 : 각 지방청에 소속된 정보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일정기준(종합·분석 보고서 활용정도 등)에 맞춰 평가 ⇨ 각 지방청에서 획득한 전체 점수를 각 지방청 소속 정보관 인원수로 나누어, 각 지방청별 평균점수를 산출

⇒ 전체 지방청(18개) 중 평균점수 9.5점 이상 획득한 지방청이 40%(8개) 이상이면 S등급(100점), 35%(7개)인 경우 A등급(90점), 25%(5개)인 경우 B등급(80점), 25% 미만(4개 이하)인 경우 C등급(70점)으로 평가

② <'20년 목표> S등급 달성(전체 지방청 중 8개 이상<40% ↑>, 평균 9.5점 이상 획득)

점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산식	[평균점수(지방청 보고서 총 획득점수/각 지방청 정보관 현원)] > 9.5점 ↑			
기준	8개 이상 지방청	7개 이상 지방청	5개 이상 지방청	4개 이하 지방청

(2) 상황정보관 전문교육 이행률

- ① 연중 계획된 교육 일정에 맞춰, 각 사회·경제·공공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 진행
- ② 상황분야 관련 법률 교육·경찰교육원+ 상황정보 실무과정, 통일교육원·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등 내·외부 기관과 연계 교육 추진, '집시법 강의·외근 정보활동 스킬·안보현장 견학'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진행
- ③ <'20년 목표> 전체 상황정보관 2790명의 10%를 상회하는 280명을 목표치로 설정

22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현장 법치경비 실현 (Ⅱ-2-④)

□ 추진배경

- '19년은 △법령·규칙 정비 △제도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경비 토대를 마련

▶(지난해 법령·규칙 정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배치·사용을 금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존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 지방청 지휘무선망을 녹음·보존 시행중

- '20년은 현장 실행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현장의 모든 경비 경찰이 '법치경비'를 체득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 전문화된 안전진단 인력과 첨단과학 안전장비를 확보, 현장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 법치경비 지원) 중 현장 상황별 법집행의 근거와 한계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적용할 수 있는 현장 지원시스템 마련

▶(「손바닥 법치경비」 <포켓 가이드북> 제작) 경찰조치의 근거·한계·절차를 세부유형별로 설명한 가이드북을 포켓용 사이즈로 제작·배포

▶(「한눈에 보는 경비경찰 법령·판례집」 발간) 경비경찰 근거법령과 최신 판례를 담은 법령·판례집을 가제식으로 제작, 수시로 최신 판례를 추가

- (직무지침 정비)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 △집회현장 채증활동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경비경찰의 현장 활동기준 보강
- (경찰부대 집중교육) ① 경비경찰 개개인의 법치경비(인권·안전·비례·균형) 내재화 교육, ② 상황별 '저위험~고위험'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훈련을 고도화, 상황 적합적 현장대응역량 강화

○ (안전진단 역량 강화) 전문교육 강화 및 첨단장비 보급 확충

- ▶(교육강화) 외부 안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훈련 실시
- ▶(안전진단 가이드북 발간) 안전 분야 전문가(교수 등)·전문기관과 협업, 안전 위협 요소별 안전진단 직무지식, 체크리스트 등 직무지침서를 발간
- ▶(장비보급)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청에 최신장비 도입, △1급지 경찰서까지 안전진단장비 3종(복합가스측정기, 거리측정기, 망원경)을 확대 보급

○ (집회 안전장비 보강) 집회 참가자와 경찰 상호간 물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펜스 보다 이동편의성·견고성을 향상 시킨 트레일러형 안전펜스 도입, 시범운영 추진

- ▶(도입배경) 소규모의 정예 경찰관 기동대원 배치만으로도 주요시설 보호 라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新개념의 안전장비 도입 필요
- ▶(주요내용) 기존 안전펜스(높이 1.7~2m) 보다 높이를 상향 조정(2~2.5m) 하고, 승합차량의 트레일러에 탑재하여 보관과 이동 편의성을 제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관기동대(18개) 창설 완료	2월	
	안전진단팀 소요정원안 마련	2월	
	'20년 현장 안전진단팀 운용계획 수립	3월	
2/4분기	현장 안전진단팀 위탁교육	6월	
	상반기 위해성 경찰장비 등 점검 실시	6월	
3/4분기	손바닥 법치경비(포켓 가이드북) 제작	7월	
	경찰관기동대(10개) 창설 예산 지원	7월	
	경찰관기동대(10개) 창설 완료	8월	
4/4분기	경찰부대 집중교육	10월	
	채증 업무담당자 전문화 교육	10월	
	경찰관부대(9개) 창설 예산 지원	10월	
	집회시위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11월	
	법령·판례집 발간	11월	
	'20년 집회시위 분석 평가(종합)	12월	
	하반기 위해성 경찰장비 등 점검 실시	12월	
연중	도심권 등 대규모 집회 시 안전 대책 마련	연중	
	안전진단팀 장비 구매·보급	연중	

□ 기대효과

-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과 함께 ‘인권·안전 확보’, ‘비례·균형 준수’를 통해 법치경비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³⁾			
▪ 경비경찰활동(311)	일반회계	382.6	418.2
▪ 의경운영및관리(312)	일반회계	1,219.2	1,018.3
▪ 의경대체지원(314)	일반회계	467.4	637.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인권보장·안전확보 노력도(50%)	(신규)			65	하단 참조	여론조사 긍정 답변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경비경찰 법치경비 체화수준(30%)	(신규)			30	하단 참조	훈령·지침 개정 건당 15점 매뉴얼 제작 및 전국단위 배포 건당 10점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20%)	(신규)			8개 부대 창설	하단 참조	창설 목표 달성 시 20점 부여 (미창설 1개부대 마다 -4점 감점)	각 지방청별 경찰관기 동대 창설 세부시행계 획

① 인권보장·안전확보 노력도 (50%)

- (개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장 및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의 노력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의 미비점 도출 및 개선사항 모색
- (측정산식)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 조사 방식 : 전국 성인남녀 2,500명 대상(집회참가자 제외)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대면조사
- ▶ 조사 내용 : △ 경찰의 집회시위 안전확보 노력도 △ 집회시위 인권보장 노력도

- (목표치 및 산출근거) 긍정 답변이 65%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② 경비경찰 법치경비 체화수준(30%)

- (개요) 훈령·지침 제·개정, 각종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법집행 현장 부대원들이 법치경비를 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측정산식)

▶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 ▶ 매뉴얼 제작 및 전국단위 배포 : 건당 10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30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③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20%)

- (개요) 경찰관기동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의경감축<국방부와 매년 협의> / 대체경찰관 충원<행안부·기재부와 정원 협의 후 국회 통과>) △시설개선(폐지 의경부대 리모델링*), △장비·피복보급(신체보호복 등 피복류 및 경찰관기동대 비품 등)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됨

* (추진절차) ①리모델링 예산 확보(전년도 12월에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②각 지방청 주관 현장 점검 및 리모델링 소요예산 산출 → ③경찰관기동대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 ④설계 및 조달청 공사업체 계약 → ⑤공사 진행 → ⑥공사완료 및 경찰관기동대 창설

- (측정산식) 창설 목표 달성 시 20점 부여(미창설 1개부대마다 -4점 감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20년 목표인 8개 부대(해안경계 시설부대 2개 제외) 창설 달성 시 목표 달성

2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 기반 마련 (Ⅱ-2-⑤)

□ 추진배경

- VIP 신년기자회견(1.14.)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과 맞물려 자치경찰 등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도 증가
- 최근 ‘1인 미디어’의 발달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치안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 확보
-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필요

※ 경찰청, 2019년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정책소통 ‘우수’ 등급 달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개혁 추진사항 적극 홍보

- － △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 마련 △ 자치경찰제 추진 △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추진사항을 기고 및 기획보도를 통해 지속 홍보
- － 또한 일반국민·미디어 관계자·오피니언 리더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

※ △ 일반국민(경찰개혁 추진 내용을 콘텐츠 제작) △ 미디어 관계자(강연·간담회·투어) △ 오피니언 리더(정책홍보 메시지)

- － 사이버범죄·과학수사 등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대외에 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부각

○ 치안정책 공감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 － 언론보도·SNS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 브랜드가치 제고 방안’(’19년) 및 ‘치안정책 인지도 조사’(반기1회) 결과를 홍보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에 반영

- 시기·계기·테마별 정책홍보 과제를 선정하고, 적시성 있는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치안정책 체감도를 향상

< 월별 중점 정책홍보 테마(案) >

구분	1월	2~3월	4월	5~6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 테마	교통문화 안전문화 조성	학교폭력 근절	사이버 범죄 근절	아동· 청소년 안전	젠더폭력 근절	학교폭력 근절	경찰의 날	가정폭력 근절	연말연시 특별치안 대책

- ‘유튜브’ 인기 채널의 포맷을 벤치마킹, 경찰 웹드라마·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독자 확대 등 국민 관심 유도
- ‘SNS 라이브 방송’ 2년차를 맞아 출연자 다양화와 방송빈도·시간 조정 등 개편을 통해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 강화

- ▶ (빈도) 격주 1회, 대담 방식(스튜디오)과 현장 체험 방식을 번갈아 활용
- ▶ (시간) 접속자수가 가장 많은 오후 4시에, 30분 내외 분량으로 방송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관련 보도는 즉시 해당 기능에 전파·공유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
- 이슈 발생시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 대응방법·수위 등을 결정하여 정확한 사실 및 경찰청 입장을 전달하고 이슈 소멸시까지 사후 관리 강화

* 협의체 구성: △(주요 현안) 차장 주재, 관련 기능 국·관 참석 △(일반 현안) 대변인 주재, 관련 기능 과장 참석

① 실시간 모니터링

⇒

② 팩트체크 및 대응

⇒

③ 사후 모니터링

- 언론 접촉 빈도가 높은 수사·형사·여청수사 등 범수사부서 계·팀장 이상 언론응대 교육 강화, 불필요한 이슈 및 논란 발생 방지

※ △각 기능 워크숍 △지방청 순회교육 △미디어트레이닝 등을 활용, 최근 언론 응대 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 응대 교육 등 실시

○ 경찰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 ‘경찰관서 투어·강연프로그램’ 활성화, 미디어 제작 지원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경찰관련 콘텐츠 제작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 외신을 상대로 과학·사이버 수사, 공동체 치안 등 한국 경찰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및 기획보도 추진

[‘경찰청·방송·영화 관계자협회’ 間 상호 교류·협력 강화]

▶ (경찰) △강연 주제 다양화 △강사 인력풀 구성 등 현장 강연 프로그램을 내실화, 경찰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 유도

※ ’19년 전문분야 경찰관 현장 강연(방송작가협회·콘텐츠 진흥원 등 총 182명 대상)

▶ (협회) 지휘관·중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치안정책과정 등)에 미디어 관계자 초청 특강 실시, 방송·영화 제작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경감기본교육과정 △치안정책과정 특강 등

－ 영화·드라마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요 현안 및 활동상을 자연스럽게 노출·부각, 경찰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제고

※ 영화 ‘양자물리학’ 제작진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 관련(검찰 직접수사권 비판) 내용을 시나리오에 반영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 워크숍	3월	
	연간 정책홍보 추진 계획 수립	3월	
	정책 기자단 선발	3월	
2/4분기	정책 기자단 워크숍 개최	5월	
	방송·영화 제작진 경찰교육기관 교류 강연	5월	
	정책인지도 조사	5월	
	경찰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5월	
	미디어트레이닝	5월	
3/4분기	경찰의 날 영상 제작 계획 수립	6월	
	정책 기자단 현장 경찰 체험	6월	
4/4분기	경찰의 날 영상 제작·배포	10월	
	정책인지도 조사	10월	
	경찰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10월	
	방송·영화 제작진 간담회	12월	
연 중	경찰청 SNS 라이브 방송(Polive) 실시	격주1회	
연 중	생각나눔 영상(제복입은 시민) 제작 및 공유	월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언론사, 정부부처 홍보부서, 경찰청 정책부서

□ 기대효과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쌍방향(interactive) 홍보를 통해 치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정책 추진 기반 확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맞춤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 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대국민 치안정책 제공(IV-4-일반재정④)			
① 대국민치안정책제공(7134)		13	15
■ 대국민소통강화(311)		11	13
■ 경찰청홈페이지운영(511)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경찰청 SNS 활동지수 (35%)		1,607,621	1,655,847	4채널 친구 수	하단참조	각 계정 통계 활용
		185,034,667	194,286,400	4채널 도달 수		
		1,274	1,274	4채널 콘텐츠 수		
		3,175,637	3,334,418	블로그 기사 조회 수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30%)		1,029건	1,100건	문체부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관' 기준(월 80건 이상 만점)이상으로 목표치 설정(전년 실적 수준)	하단참조	언론보도 실적 취합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35%)		224건	200건	'19년 언론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목표치(175건)에 약 15% 상향	하단참조	오보대응 및 이슈대응 실적 취합

【성과지표】

① 경찰청 SNS 활동지수(35%)

- 측정산식 : 1) 경찰청 SNS 4채널 친구 수(10%)
2) 경찰청 SNS 4채널 도달 수(10%)
3) 경찰청 SNS 4채널 콘텐츠 수(10%)
4) 블로그 기사 조회 수(5%)
- 측정방법
 -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 측정수행기관 : 각 계정 통계 활용(4채널 :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계정 친구수, 도달수, 콘텐츠수, 기사조회수 확인
- 목표치 설정근거
 - 1) 전년도 실적, 목표치 (1,655,847명) = 1,607,621('19년 실적) x 1.03
 - 2) 전년도 실적, 목표치 (194,286,400명) = 185,034,667('19년 실적) x 1.05
 - 3) 전년도 실적, 목표치 (1,274명) = 1,274('19년 실적) x 1
 - 4) 전년도 실적, 목표치 (3,334,418명) = 3,175,637('19년 실적) x 1.05
- 지표설정 필요성
 - － 경찰청 SNS 홍보 활성화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친구 수, 도달 수, 콘텐츠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대표 계정인 페이스북, 인기 채널인 유튜브, 다수의 친구를 보유한 카카오톡스토리와 밴드를 목표채널로 선정

- 다만 각 지표 증가폭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하고,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문체부 기조에 따라 질적 지표(도달수, 기사조회수)는 5% 증가, 양적 지표인 친구수는 전년 기준 3% 증가, 콘텐츠수는 전년 수준 유지를 목표
- ※ 콘텐츠 수는 매달 100개 이상을 게시해야 하므로 이미 양적 포화 상태임을 고려

②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실적(30%)

☞ 문체부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관’ 기준(‘방송·신문, 인터넷 보도실적’ 월 80건 이상 만점)이상으로, 월별 보도실적 91건을 목표치로 선정(전년수준)

○ 점수 산출

- 연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보도건수 평가(본청 출입 35개 언론사)
 - ※ <국정과제>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주요정책> 사이버 사기 범죄 근절 등 기타 주요정책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 1. 1. ~ '20. 12. 31.
- 매월 대변인실 홍보협력계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언론은 국민들이 정책·뉴스를 접하는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경찰청 주요 정책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
- 특히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임에도 장관급 기관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홍보 추진(※ 차관급 기관 월 50건 이상 만점)

③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35%)

○ 점수 산출 : 연간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건수를 평가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0. 1. 1. ~ '20. 12. 31.
- 매월 대변인실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온라인 이슈 및 오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 허위·왜곡된 정보의 확산 차단

○ 목표치 설정근거

- '19년 언론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목표치 (175건)에 약 15% 상향

(1) 주요 내용

- **<경찰수사 개혁으로 책임수사 이룩>**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등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시민·전문가에 의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 － △ 수사단계별 내외부 통제장치 강화 △ 수사전문성·지휘역량 함양 △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수사개혁 추진
- △ 사건관리과 △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 수사·영장심사관 및 책임수사 지도관 △ 지방청 중심수사체제 △ 지휘역량 종합평가 △ 사건배당시스템 △ 자기사건 공판참여 등
-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적 형사사법 구현을 위해 연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 지침·매뉴얼 및 현장교육 등 제도·실무 전반을 정비하여 개선 수사절차 현장 정착을 지원,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 **<과학수사 고도화>** 변화된 사법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증거와 법과학을 융복합한 과학치안서비스를 쏠 치안 분야에 활용
 - － △ 뇌파분석 시스템 △ VMD(진공금속 증착장비) 지문현출 △ 법보행 분석 △ 3D 얼굴인식 등 신기법 도입을 통해 법과학역량을 첨단화
 - － 스마트치안 시대에 부응, 범죄분석(profiling)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수사를 비롯해 사회안전망·범죄예방 분야까지 업무영역 확장
-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전문분석관 인증 등 분석관 전문성 심화와 신규 ICT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로 첨단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 － 증거분석관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전문자격증(EnCE) 취득 지원과 현장 기본교육·도구 보급을 통해 쏠 직원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 신규 기기·기술과 관련하여 기법 연구와 대외 정보교류 활동 확대
- ※ 미래형 자동차(Hypervisor system) 디지털포렌식 기술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식별·분류 기법 연구, 최신 스마트폰 안티포렌식 대응방안 등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관리과제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경찰수사개혁 과제 이행 / 영장심사관 심사 구속영장 발부율 / 수사경과 선발, 해제인원 / 전문 수사인력 양성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정비 노력 /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소통 / 책임수사 인식 제고 및 개선 수사절차 정착을 위한 현장 교육·지도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범죄분석 지원지수 / 법과학 분석률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실적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교류 지수 / 과학수사 활동 지수 / 현장지원 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59.9	62.4	65.1	68.0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 만족도는 '17년 이후 지속 상승세이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2.5)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7.7)을 고려, '20년 목표치는 평균값 및 예측값보다 높은 68.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치안고객만족도 수사·형사 분야 조사결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대국민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수사구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권 비대화와 과거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시선 상당

- ➡ 외부적 통제장치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절차의 자의적인 축소·남용을 차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수
- 수사상 디지털증거의 활용이 늘어나고 ICT 기술이 일상생활에 접목됨에 따라 경찰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요 증대
- ➡ 주요 분석기법에 대한 국제공인인정(KOLAS) 획득 추진으로 업무·인력·시설을 국제표준으로 상향하고 경찰수사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4]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www.susa.go.kr)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www.kcsi.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24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Ⅱ-3-①)

□ 추진배경

- ‘경찰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이하여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적·물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 － 그간 지속 추진해온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수사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국민 중심의 발전적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 － 책임수사 구현 추진체계를 재정비, 수사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 ▶ (추진체계) 「3대 추진목표」, 10대 추진전략, 5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추진과제를 쏠 수사부서가 참여하여 체계적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 ▶ (3대 추진목표) △책임성·전문성 제고 및 수사품질의 상향 균질화, △경찰수사에 대한 정교한 내·외부 통제체계 구축, △인력구조 재설계 및 교육·환류 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사품질의 균질화 >

-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신속한 수사서류 열람·복사, △책상형 의자 배치 등 환경개선, △메모목적 전자기기 사용 시범운영('19. 11월~'20.2월) 등
 - ▶ (진술녹음제 도입) 영상녹화 대상사건을 제외하고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녹음을 진행, 3년간 녹음파일 보관 후 폐기
- 수사의 주재자인 과·팀장의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역량 확보
 - ▶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 팀·과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상시 평가·환류
 - ▶ (팀장 중심 수사체제 강화) 수사관 개인이 아닌 팀장 중심 ‘팀단위’ 수사활동 정착 및 중요사건 팀장배당·직접수사 확대 등 과·팀장의 구체적 역할·책임 정립
 -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범죄인지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송치 의견 등은 서면으로 수사지휘 원칙

- 「지방청 중심의 광역·전문 수사체제」를 대폭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

- ▶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선발 종합평가제)** 객관요소(경력·교육·자격증·전문수사관 등)와 주관요소(성과기술서·추천서 등)를 종합한 ‘선발 종합평가제’ 시행
- ▶ **(조직 개편)** 전문분야별 직접수사부서 운영, 통솔범위 조정 등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

-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비한 시스템 기반을 사전에 빈틈없이 마련하고 증거물·지침 통합관리를 통한 스마트한 수사환경 구축

- ▶ **(형소법 시행 등 대비 KICS 재구축)** 불송치·이의제기·사건기록 송부 프로세스 신설 등 수사구조개혁 법령 개정 사항이 KICS에 반영되도록 재구축 검토
- ▶ **(통합증거물 관리)** △관리체제 일원화, △보관장소 통합,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등 압수물·증거물의 체계적 관리 정착 유도, △불기소 사건 기록 보관 관리방안 설계
- ▶ **(수사지침 통합관리 및 단권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수사 지침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고, 내부망 게시 등을 통해 접근성 확보

- 국민의 편익과 수사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환경을 설계

- ▶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①수사부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 ②체포 피의자 관리를 위한 ‘통합수사당직실’ 설치 ③ 피의자 동선 분리를 위한 ‘호송차고’ 설치
* 추진현황: ’15년~’19년까지 66개관서 개선 완료(’20년 25개서 개선추진)
- ▶ **(수사민원 상담센터*)** 경찰서에서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변호사도 참여하여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무료)
* ’15. 7월 일산동부서에서 최초 시범운영 → 121개 경찰서 운영중

-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는 수사기법 연구·지원 강화

- ▶ **(수사자료 표준화)** 금융·회계자료 및 통신자료 등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 할 수 있는 분석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교육자료 제작
※ △통신자료 회신이 장기화되는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체계 개선, △수사자료의 오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와의 별도 연락망 구축도 병행
- ▶ **(전문 수사기법 교육)** ‘통신수사 교육자료’ 제작·일선배포 및 각종 워크숍·교육 등을 통해 전문 수사기법에 대한 현장직원 이해도 및 수사전문성 제고
※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워크숍(5월), △현장수사관을 위한 통신수사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11월), △우수 수사기법 경진대회 개최(12월) 등

< 정교한 내·외부 통제 체계 구축 >

< 주요 심사·점검 체계 >

- 강제수사 절차(영장심사관)와 수사 전반에 대한 심의·점검 기능 강화(경찰서 수사심사관,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 과오·부실수사 방지

- ▶ **(영장심사관)** 쏘 지방청 및 1급지서 174명 배치(2·3급지서는 수사심사관이 병행)
- ▶ **(수사심사관)** 전체 경찰서에 1~3명씩, 총 319명 배치(상반기 인사)
- ▶ **(책임수사 지도관)** 본청 6명(총경) 및 지방청 수사심의계 70명(상반기 인사)

- 시민·전문가로부터 수사과정·결과를 심사받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 위원회(수사배심제)’를 도입,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확대

- ▶ **(위원구성)** 법률·수사 전문가에 한정된 외부위원 구성을 해당 분야에서 5~10년 이상의 식견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다원화
- ▶ **(심의대상)** △이의사건, △내사미제, 주요 풍속사건, △사회이목 집중사건 등
- ▶ **(심의효력)** 지방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 **(추진일정)** 대전·강원청에서 시범운영 중,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확대시행 검토

- 경찰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사건관리과」 신설, 수사 부서간 연결·조정·협업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28개서 시범운영)

- 첩보입수 ~ 종결까지 일련의 경찰수사 절차가 개인의 역량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내부통제 장치 마련

- ▶ **(사건배당 표준화)** 사건배당 통합지침 마련 및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 도입
- ▶ **(영장신청 기준 표준화)** 관서별 영장신청 내용·결과를 분석, 최종별 영장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활용

< 인력구조 재설계 및 교육·환류 체계 구축 >

- 자질 있는 수사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수사경찰에 특화된 인사제도 마련

- ▶ **(수사관 역량 발전 방안)** △수사경과제, △과·팀장 자격제, △교육 등 현재의 수사관 양성제도를 종합·발전시켜 수사경과 선발~수사지휘자까지의 단계별 양성과정을 재설계
※ 수사경과 선발시험인 現 형사법 능력평가시험도 수사실무·형사법적 지식 위주로 평가
- ▶ **(수사 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일정 수사경력자 중 선발하여 일정기간 수사교육 실시,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거쳐 경위까지 속진, 역량 있는 사법경찰관 양성방안 연구

- 수사경찰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수사부서에 지속 선발, 전문 수사체제 구축

- ▶ **(수사경찰 교육과정 개편)** △신임수사관 선행교육 의무화, △교육과정 체계화, △교육성적 관리제 도입 △전문·심화 교육과정 확대 등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 **(전문인력 채용 확대)** 변호사·회계사·사이버분야·의료인 등 각 분야별 경력있는 전문가 채용 지속 추진('20년 9개 분야 208명)
- ▶ **(전문수사관 선발·확대)** 인증분야 신설(2개) 및 전문수사관 596명 선발('19. 11월)
※ 90개 분야(마스터 117건 포함), 총 3,865건(3,493명) 인증

- △수사과정상의 우수·과오사례 축적, △현장·심사 매뉴얼 제작, △교육자료 공유 및 교육과정 반영 등 교육·환류 강화방안 추진

- ▶ **(주요 사례 축적)** △범수사부서 업무조정회의 결과 △관서별 '사건 심사·분석 회의' 운영결과 △수사·영장 심사관 심사·분석 보고서 작성사례 축적
- ▶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법령·지침을 수사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유형별 실제 사례 등을 담아 일관된 내용의 매뉴얼 또는 교육자료를 제작
- ▶ **(교육자료 공유·환류)** 교육자료를 정기적으로 현장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선발·평가 등 개선 계획 수립	1월	
	경찰수사 관리체계 강화 시범운영 계획 수립	1월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 계획 수립	2월	
	「조사환경 및 유치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	3월	

2/4분기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확대 시행 계획 수립	4월	
	사건 배당 지침 마련 및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5월	
	'20년 제1차 수사경과 해제계획 실시	5월	
3/4분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8월	
	사건관리과 확대 운영 계획 수립	8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워크숍 개최		
	수사자료 표준화 및 분석프로그램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9월	
4/4분기	「2019 범죄통계」 책자 발간	9월	
	2020 전문수사관 선발	11월	
	현장수사관을 위한 통신수사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11월	
	책임수사과제 KICS 기능개선 반영	11월	
	우수 수사기법 경진대회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인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본청·지방청·경찰서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중심 수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경찰수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정확하게 밝혀내는 책임있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범죄수사(I -2-재정②)				
	① 범죄수사(1231)	일반회계	1,463	1,568
			1,463	1,568
	■ 범죄수사역량강화(311)	일반회계	512	603
	■ 현장수사활동(312)	일반회계	925	939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1)	일반회계	27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국민인권 중심 서비스	경찰수사개혁 과제 이행 (25%)	-	-	-	23	수사기획과 소관 38개 개혁과제 중 연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 20건 기준으로 총 23건의 연내 시행을 위한 향상시킨 적극적 목표치 설정 ※ 하단 추진과제 참조	과제 시행 1건당 1점 부여	시행 공문, 보고서
	영장심사관 심사 구속영장 발부율 (25%)	-	79.0%	78.6%	80.0%	2년간 실적치가 하향하는 지표로, 가장 높은 실적치인 79.0%를 1.0% 상회하는 80.0%의 적극적 목표치 설정	영장 발부건수 / 영장 신청건수 ×100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서 통계추출
수사전문성	수사경과 선발, 해제 인원 (25%)	2,028	2,240	3,600	4,386	3년간 실적이 상승하는 지표로, 추세치(786명) 이상인 4,386명의 적극적 목표치 설정 ※ 하단 선발·해제인원 목표치 참조	수사경과 선발, 해제인원	수사경과 선발, 해제 관련 공문
	전문 수사 인력 양성(명) (25%)	1,524	1,449	2,240	1,910	3월 교육실시 기준, 3년간 평균(1,737) 고려, 평균치 보다 10% 향상시킨 1,910명을 적극적 목표치로 설정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운영이 일시 중단된 점과 교육기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교육재개 시점에 연계 하여 적극적 목표치를 최종적용 ※ 하단 교육일정별 목표치 참조	수사연수원 전문·심화교육과 정 수료 인원	'20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훈련 결과 통보(공문), 교육재개 관련 공문

<수사기획과 소관 경찰수사 개혁과제>

단기과제(20개)	중·장기과제(18)
자체 영장신청 기준 표준화 자체 규칙 서면수사지휘 정착 자체 수사결과과오 점검환류 교육 등 책임수사체제 구축 자체 수사경찰 교육과정 개편 자체 전문수사관 운영 개선 자체 의무적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 정착 자체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자체 수사지침 통합관리 및 단권화 자체 수사경찰 청렴성 확보 규칙 엄격한 수사부서 인사운영 기준 마련 규칙 고소고발 선별적 입건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 인력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채용 인력 영장심사관 확대 인력 수사완결성 제고를 위한 수사심사관 신설 인력 본청·지방청 '책임수사 지도관' 신설 인력 조직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역량 제고 인력 조직 사건관리과 등 경찰수사 관리체계 구축 예산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예산 사건 배당 지침 마련 및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예산 인력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자체 수사관, 팀·과장 및 경찰서장·지방청의 역할 연구 법령 「경찰수사공보규칙」 개정안 마련 법령 변호인 조력권 보장 법제화 법령 수사 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개설 법령 내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법령 자질있는 신임 수사관 선발·양성 방안 마련 법령 수사경찰 승진제도 개선 추진 예산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예산 형소법 시행 등 대비 KICS 재구축 예산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제도 개선 예산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KICS' 개발 추진 예산 인력 체계적인 통합 증거물 및 사건기록 관리 예산 규칙 수사관 역량 관리 제도 마련 조직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경찰수사연수원 확대 조직 유치장 관리와 사건 수사업무 분리 조직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인력구조 개편 조직 총경급 부서장(副署長) 배치 추진 조직 본청 수사심의관·연구관실 설치 추진

<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인원 추이 및 목표치>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목표	
계	2,028명	2,240명	3,600명	적극적 목표 (목표의 110%)	4,386명
				목표	3,600명
수사경과 선발	1,690명	1,629명	2,055명	'20년 수사경과 선발인원	
수사경과 해제	338명	611명	1,545명	'20년 수사경과 해제인원	

<전문수사인력 양성 교육시점에 따른 목표치>

구 분	3~12월	4~12월	5~12월	6~12월	7~12월	8~12월	9~12월
적극적 목표 (목표의 110%)	1,910명	1,719명	1,529명	1,338명	1,146명	956명	765명
목표	1,737명	1,563명	1,390명	1,216명	1,042명	869명	695명

25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Ⅱ-3-②)

□ 추진배경

- 수사구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 함께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6개월~1년 內)
 - ※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 － △'19.4.30.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19.12.3. 본회의 부의 △'19.12.24. 수정안 합의 △'20.1.9. 본회의 상정, 표결·통과(1.13) △'20.2.4. 공포
 - －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위·연계 법령 정비 및 제도·관행 개선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이와 병행,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경찰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형소법 하위법령(대령) 제정 지원 등 후속법제 정비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지원 등 하위·연계법령 정비 철저
 - － 수사준칙(대통령령)은 △‘경검 협력관계’에 대한 구체화 사항은 물론, △모든 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일반적·통합적 규정 및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거나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절차를 법규화
 - ※ 그간 법무부령(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이나 대검 훈령 등으로 일반적 수사준칙을 정해 놓은 후 검사의 지휘를 통해 이행을 담보하여 왔으나, 법이 개정된 만큼 통합적인 수사준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형소법 개정으로 경·검이 대등·협력관계로 전환되었음에도 검사의 ‘지휘·명령’ 등 개정법과 충돌되는 조문이 산재함에 따라 하위법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도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 추진

※ ('19.12.5.연합 등) 「수사권 조정안과 충돌하는 법률 곳곳에…법조계, 사법혼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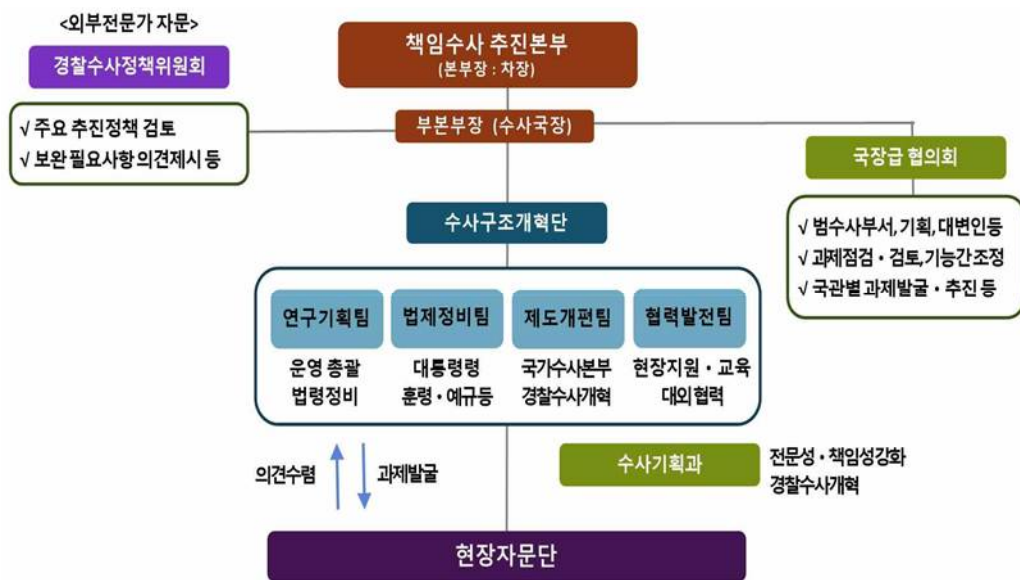
: 일부 법령 개정으로 누락되는 법령이 있을 경우, 수사현장에서 발생할 혼선과 착오로 인해 자칫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

－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수사권조정 입법 및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제·개정 추진 병행

*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총 188개 중 수사 관련 훈령·예규는 43개이며, 제·개정 필요성이 예상되는 행정규칙은 21개로 예상됨

② 경찰 책임수사체계 및 수사주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전개

○ 경찰책임수사 체계를 정착을 위해 ‘책임수사추진본부’(경찰청) 및 ‘책임수사 실무추진단’(각 지방청) 발족 ('20.1.21.)



－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법률·제도·실무 전반을 정비하고 △지침·매뉴얼 제작·배포 △현장교육 등 새로운 수사체계 현장 정착 지원

- ✓ (전략회의 개최) 주기적으로 국장급 협의회 및 수석단 참여하는 전략회의 개최, 과제 발굴·검토 및 추진상황 점검, 방향 설정
- ✓ (현장자문단 편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분야별 현장직원 참여
- ✓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자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자문의견 수렴

- 경·검 간 불합리한 수사 관행에 대해 적극 대응,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사례와 개선사항 공유 등 현장 소통 강화

※ 개선 필요과제는 현장경찰 의견수렴,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및 학계 자문을 거쳐 기준 마련 및 대검 협의 추진

③ 수사구조개혁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통 활동 전개

- (외부) 법개정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등 제·개정을 위해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접촉면 확대
- (내부) △ 현장 자문단 등 운영 △ 수사구조개혁 플랫폼 활성화 △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로 일선 공감 확보

④ 국민의 인권 보호·신뢰 증진을 위한 수사제도 개선

- 국민, 치안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제도들을 적극 발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편익 중심으로 개선

※ '19년에는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제도 도입·운영

-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위해 전자기기 사용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기기(노트북·태블릿 PC등) 사용을 통한 변호인 메모권' 보장 도입

※ '19. 12월~'20. 2월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제도' 시범운영 중

⑤ 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 조직·인사 등 제도적 개편 추진

- 국수본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행안위) 계류 중으로, 법 개정 후 후속조치 추진

경찰법 개정안(정부안, 홍익표 의원 발의) 주요 내용

- ▶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개방직 국수본부장'이 국가경찰 수사사무 총괄
- ▶ 개별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민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서장의 구체적 지휘 예외적 허용

- (직제 개편) 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 경찰청 조직개편안 마련, 「경찰법」 개정과 맞추어 추진
- (하위법령 입안)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의 제한 및 예외적 수사지휘 사건 기준안 마련
- (제도 개선) 국가수사본부장·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 및 ‘수사 관련’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방안 검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장 자문단 구성·운영 (신설)	2~3월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쟁점별 논의 추진 (신설)	3월	
	수사구조개혁 관련 대·내외 교육 추진	3월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변호인 메모권 보장’ 시범운영 결과 분석	3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이버컨텐츠 제작, 교육 추진	3월	
2/4분기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변호인 메모권’ 보장 전국 확대 추진	5월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 초안 관계부처 협의 추진	6월	
	경·검간 불합리한 관행 관련 현장 의견 취합 및 개선안 마련(1차) ※ 개정필요 훈령·예규가 21개 이상으로 단계별 정비 추진 예정	6월	
3/4분기	경찰청 소관 훈령·예규 정비 (1차) ※ 개정필요 훈령·예규가 21개 이상으로 단계별 정비 추진 예정	9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 조직·인사 등 제도적 개편안 마련	10월	
4/4분기	경찰청 소관 훈령·예규 정비 (2차)	12월	
	수사구조개혁 관련 학계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11~12월	
	경·검간 불합리한 관행 관련 현장 의견 취합 및 개선안 마련(2차)	12월	
	관계 법령 개정 등 추진사항 평가 및 후속조치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체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경찰 위상을 제고하고 조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
- (국민)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 확립을 통한 국민 인권침해 방지
- (검찰) 독점적인 권한을 분산하여 공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
 -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를 정착, 형사사법시스템 선진에 기여
 -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적정절차모형’에 해당하는 구조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향상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향상 기대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 증대
 - －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 형성
 - －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 향상
-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와 견제로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정비 노력 (40%)	-	12.4	14	16	2년간 실적이 상승하는 지표로, 상승치(1.6%p) 이상인 2.0%p를 증 가시킨 16%의 적극적 목표치 설정 ※ 형사소송법 법개정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각종 연계법령에 대한 개정 필요	{{(법령 개정 검토 보고서 작성×5)+(국회·학회·언론 등 배포·대응×3)} ×0.1	공문, 검토보고서 등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소통 노력 (30%)			-	7.25	하단참조	(현장 간담회 등 참여, 언론 등 홍보 활동, 전문가 면담 · 학술세미나 등 횟수×0.1 ※ 학술세미나 개최 및 유관기관 예방, 대외강연은 0.2점	공문, 검토보고서 및 언론홍보자료 스크랩 등
책임수사 인식 제고 및 개선 수사절차 정착을 위한 현장 교육·지도 (30%)			-	55	"	{{(①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이버강좌 이수율)+(②개선 수사절차 교육 이수율) × 1/2	① 사이버교육포털에서 통계 추출 ② 공문 및 결과보고서 등

<지표 1> 수사구조개혁 지속추진 (관련 법령 개정 노력)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기존지표 목표치상향조정)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공포('20.2.4)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개정 취지에 따른 관련 대통령령(수사준칙 등) 및 연계법령·관련 행정 규칙에 대한 제·개정 등 정비가 과제로 남아있음
-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경·검의 불균형 관계가 반영된 수사절차 규정'을 발굴·개정 하는 작업은 경·검 협력관계 정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최우선 과제임
- 일부 법령개정이 누락될 경우, 수사현장에서 발생할 혼선과 착오로 인해 자칫 국민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전개가 필요하여 '19년도 실적 대비 목표치를 16으로 상향 조정함

○ 측정산식 : [① + ②] × 0.1

- 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제 정비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목표치 100점 : 1회 5점)
- ② 국회·언론·학회 등에 관련 검토보고서 배포 및 대응(목표치 60점 : 1회 3점)

<지표 2>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소통 노력(신설)

○ 지표 설정의 적절성

- 개정 형사소송법의 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적용이 이루어지는 법조계 및 관련 학회의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함
- 또한, 성공적인 수사구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위·연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국회 등의 관심 촉구 필요
- 이에 국민과 언론·학계·법조계 등 외부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의미,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노력을 전개하고자 함
- 대외 홍보활동에 병행하여 내부 동력 확보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 정책 추진방향 공유 등 '19년 입법을 위한 수준의 결집 노력이 필요, 대내외 소통을 통합하여 신규지표 설정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①+②+③] × 0.1

- ① 현장 경찰 설명회·간담회·워크숍 개최 및 지원
(목표치 22.5점 : 개최 1회 2점, 지원·참여 1회 1점)
- ② 언론(라디오, TV, LIVE 등) 출연 및 SNS 등 활용 콘텐츠 게시(목표치 20점 : 1회 1점)
- ③ 전문가(언론·법조인·학자) 면담, 유관기관 예방, 외부강연, 학술세미나 등 발제·참석
(목표치 30점 : 면담 1회 1점, 지휘부 유관기관 예방·대외 강연 1회 2점)

⇒ **(적극성)** 연평균 주1.5회 이상 대내외 소통활동을 전개 예정
관련 자료 제작 및 행사준비를 고려할 때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적극적 목표 설정

<지표 3> 책임수사 인식 제고 및 개선 수사절차 정착을 위한 현장 교육·지도 (신설)

○ 지표 설정의 적절성

- 65년 이상 유지되어온 기존 수사절차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단계별 처리절차에 있어 일선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세부절차 확립 및 △대통령령(수사준칙) △범죄수사규칙 등 내부 훈령·예규 제개정 사항 등 지속적이고도 전방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①+②] × 1/2

- ①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이버강좌 이수율 (목표치 60: 이수인원 / 전 직원) × 100
- ② 개선 수사절차 교육 이수율 (목표치 50 : 이수인원 / 전 직원) × 100

⇒ **(적극성)** 실질적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외에는 관심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총원 대비 수사경찰 비율인 24.0%보다 현저히 높은 이수율을 설정

26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Ⅱ-3-③)

□ 추진배경

- 현장감식·증거감정·범죄분석·과학수사 시스템 고도화 등 광역 과학수사팀*을 운영·지원하는 증거확보 책임수사부서로 운영 중('16. 7.~)

* 전국 83개팀 1,086명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 업무를 수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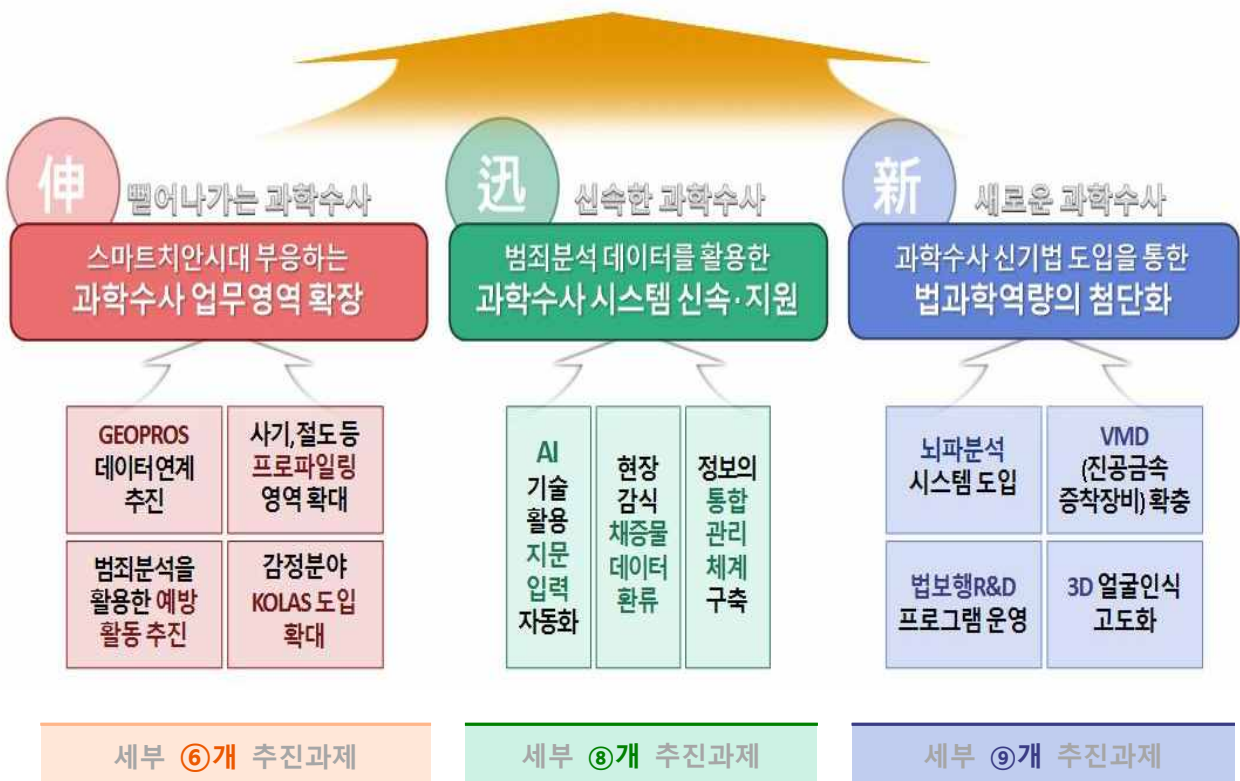
-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증거의 엄격성·절차적 복잡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학수사가 증거 중심·인권 수사의 핵심축으로 역할 확장 필요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형소법 312조② 폐지 ('20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 현장의 다양한 증거와 법 과학을 융·복합한 고도화된 과학수사 서비스를 쏠 치안 분야에 환류, 변화된 사법환경 적극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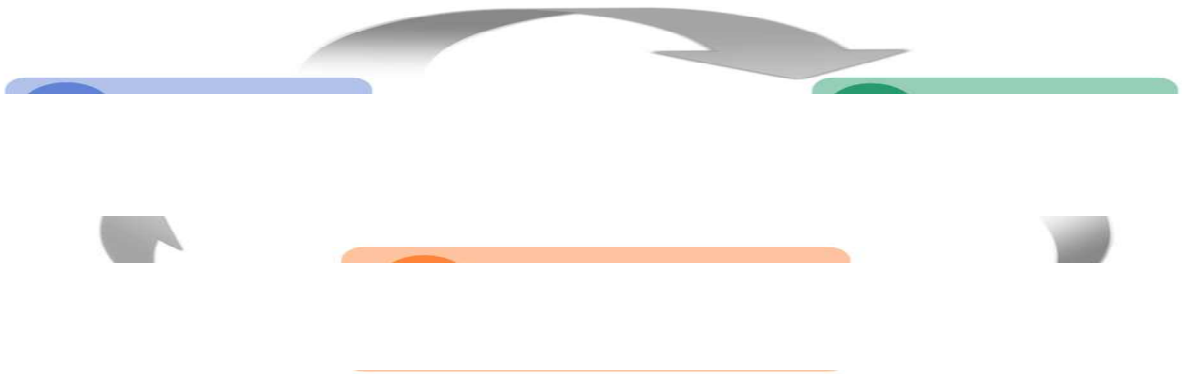


- AI(머신러닝)기술을 이용 지문입력공정 자동화로 신속·정확한 신원확인
 - AI 기술을 지문입력·품질점검에 적용하여 입력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담당자들은 전문영역에 집중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실제 이미지	증강 이미지	실제 번호	머신러닝 후 검출 결과									
			0	1	2	3	4	5	6	7	8	9
		3				12위				25위		
		7							25위	12위		
		6						25위	12위			
		4					25위	12위				

- AI기술을 적용, 기존 지문을 학습시켜 ▲지문 영역 분리 ▲지문번호분류 등이 자동처리 되도록 알고리즘 개발, 적용
- 보관중인 주민원지를 고화질로 스캔 입력하고 오류 자료 정비(20~22년)

- 지문검색 알고리즘을 추가 도입하여 다양한 검색기법을 적용하고 검색속도를 향상하여 지문감정을 통한 신원확인을 제고
- 현장감식 채증물 정보 환류 데이터 구축 활용
 - 채취 ➡ 등록 ➡ 통계 ➡ 분석 데이터를 활용 유가치 증거 채취율 향상



- 사건정보와 과학수사 증거자료의 통합관리체계 구현
 - 사건 기본정보(KICS)-현장감식정보(SCAS)-범죄분석자료(GeoPros)를 연계하여 범죄데이터를 종합 제공하고 증거물 감정의뢰 창구 일원화(SCAS)

- ▶ KICS 정보 연계, 본인 담당 사건 감정의뢰·회신 내역 통합관리
- ▶ 국과수 감정 진행현황[처리실, 상태(접수/진행중/완료) 등] 확인 가능
- ※ 외부망 국과수(NFIS) 시스템으로만 제공하던 정보를 협의를 통해 SCAS로 연계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대외연계망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범죄다발지(Hotspot) 정보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 － 범죄다발지(Hotspot) 데이터를 활용,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능동적인 관리체제 구축
 - － 성범죄자 관련 데이터(이동동선 및 생활반경 등)제공 받아 GeoPros에 표출, 형사·수사(여청수사)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 기존 중요·강력 범죄에 국한된 범죄분석(profiling) 영역 확대*, 다양한 정보·분석을 종합 지원하는 치안 데이터 과학으로 확장
 - * 약물이용 범죄, 여성·아동범죄 피해, 상습사기·연쇄절도 등
 - － 범죄분석결과와 지문·DNA·족적 등 과학수사 증거자료 통합 관리체제 마련, 과학수사 자료의 수사 활용 빅데이터화
 - ※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연계 추진 중인 증거관리시스템 SCAS 활용
- 범죄 해결에서 예방으로 범죄분석 활용 확대, 스마트 치안 구현
 - － GeoPros, 유사 수법 및 과학수사 증거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연쇄·광역 민생치안범죄 용의자 유형 추정 및 여죄 입증 지원
 - － 지역별·분기별 범죄 발생 추이 분석 정례화, 치안정책지원 제고
-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에 따라 KOLAS 지문 분야 인정을 지방청으로 확대, 他 감정분야(영상·문서·폴리그래프 등)까지 도입 추진
- 지문 검색시스템 고도화 및 감정 숙련도 향상에 따라 미제사건 현장 유류지문 및 변사자 지문을 재검색하여 사건 해결 지원
 - ※ 최근 10년간('10~'19년) 미제사건 지문 총 7,474건을 재검색, 3,103건 신원확인



새로운 과학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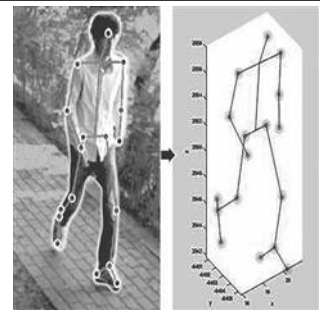
과학수사 신기법 도입을 통한 법과학역량의 첨단화

(뇌파 분석) 주요사건 발생 시 폴리그래프 검사와 더불어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피의자 등 진술의 진위판단에 신뢰성 확보



*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 등을 보았을 때 전두엽 등에서 발생하는 P300파(기억관련 뇌파)의 크기를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 파악

(법보행 분석) 「CCTV 영상검색 고도화 및 신원 확인 기술 R&D('20. 6.)」에 따른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현장 적용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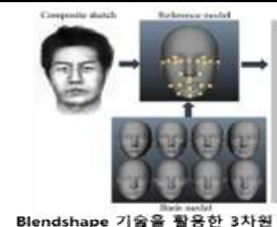
* 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

(지문현출) 진공금속증착장비(VMD)및 영상증폭 지문개선 시스템 도입·확충으로 증거물에서 보다 좋은 품질의 지문 자료 획득



* 진공상태에서 금, 은, 아연 등 금속을 표면에 증착시켜 지문 현출하는 장비, 기존에 현출이 불가능했던 의류, 식물, 가죽 등에서도 지문 채취 가능

(3D얼굴인식 시스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입·턱을 가린 경우 인식 기술 개발, 1:1 동일인 여부 분석 시 인식범위 확대(좌우45도)



* 용의자 등의 얼굴을 구속 수법범죄자 DB와 매칭·검색하는 시스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개편 계획 수립	1월	迅
	수중과학수사 民,官,軍 혹한기 합동 교육	2월	伸
	첨단 지문현출 장비 구매 계획 수립	3월	新
	신원 미확인 지문 재검색 계획 수립	3월	伸
	'20년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6차) 계획 수립	3월	新
	수사자료표 지문채취용 라이브스캐너 구매 계획	3월	新
2/4분기	'20년 SCAS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4월	迅
	'20년 지오프로스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4월	迅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역량 강화 학술세미나 실시	5월	新
	지문자료 고도화 사업(2차) 계획 수립	5월	迅
	수중과학수사 안전장비 규격서 및 구매계획 수립	6월	新
	문서감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필적감정 내부교육 실시	6월	新
3/4분기	GeoPros 전국 순회 교육 계획 수립	7월	迅
	프로파일러 대상 범죄분석 전문화 교육	7월	新
	과학수사 기본서 발간 배포	7월	迅
	법보행분석 시스템 시범운영 계획 수립	8월	新
	KOLAS 인정요건 충족 현장평가 실시	8월	伸
	진술진위 판단 신뢰성 제고를 위한 뇌파 검사장비 구매 보급	9월	新
4/4분기	BEST과학수사팀 선발 계획 수립	10월	伸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역량 강화 학술세미나 실시	10월	伸
	족·윤적 DB 확충을 위한 신규신발·타이어문양자료 집중 수집 계획 수립	10월	迅
	지문감정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10월	迅
	국제표준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KOLAS 내부 심사 실시	11월	伸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과학수사 스마트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는 쏘 국민
- (이해관계 집단) 관련 자료들을 보유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과수 등

□ 기대효과

- 변화된 사법환경에 맞추어 고도화된 과학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증거 채취, 분석수사지원, 공소유지를 통해 수사 신뢰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첨단과학수사(I-3-일반재정②)				
① 첨단과학수사(1232)		일반회계	346 (346)	352 (352)
■ 과학수사역량강화(311)			330	336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6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범죄분석 지원지수 (25%)	32	57.2	94.6	125	과거 실적 추세치를 감안하면 30% 상승한 123이 목표이나 '20년은 전년보다 32% 상승한 125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Sigma(\text{출동건수}) \times (\text{건별활동점수}) + (\text{가점})$	범죄분석 공식 공문, 의사결정 판단 자료
법과학 분석율(25%)	60.6	61.6	63	64.3	최근 3년간 평균 상승치는 연간 1.2%p임을 감안, '20년 목표치는 평균 상승치보다 10% 높은 1.3%p 상승한 64.3% 로 도전적으로 설정	$(\text{지문 영상 3D얼굴 인식 분석건수} / (\text{지문 영상 3D 얼 굴인식 접수건수}) \times 100$	AFIS 시스템(지문), SCAS 시스템(영상분석), 3D얼굴인식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25%)	935, 268	1,011, 673	1,587, 741 3	1,857, 273	3년 추세치를 반영하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880,263이나 '20년은 전년보다 17% 상승한 1,857,273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SCAS 시스템, GeoPros 시스템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25%)	153.0	142.5	148.6	150.7	3년 추세치 143.4 이나 '19년 실적이 148.6 인 점과 증거채취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목표는 추세치 보다 7% 상승한 150.7% 로 도전적으로 설정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현장임장건수	SCAS 통계관리 시스템

< 지표 1 범죄분석 지원지수 >

○ 설정배경 : 심리행동 증거, 지문·DNA 등 법과학 증거물과 지리정보 등 통합적 범죄 분석에 대한 수사지원 효과 및 전문성 강화노력 평가

○ 측정산식 : 기본활동 점수 + 활동 가점

1) 기본활동 점수

지방청 3개청 이상 지원·출동	지방청 2개청 이상 지원·출동	지방청 단독 지원·출동
1점	0.5점	0.3점

※ 범죄분석요원이 단독 혹은 타 지방청 범죄분석요원과 합동으로 분석활동·지원한 경우, 범죄분석보고, 피의자면담 등 활동 관련 보고서, 분석 보고서, 관련 공문 등으로 산출

2) 활동 가점

① 범죄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사건해결 기여' 등(1점)

※ 수사보고서 또는 관련 본청 보고, 공문 등으로 산출

② 학회·연구회 발표 및 교육 등 연구활동(0.5점)

※ 참석 인증 공문, 발표 자료, 자료집 등으로 산출

○ '20년 목표산출 : 과거 실적 추세와 '19년 실적인 94.6을 감안하여 '20년은 전년 보다 30% 상승한 123이나 도전적으로 목표를 125로 설정

< 지표 2 법과학 분석율 >

○ 설정배경 : 지문·영상분석·3D얼굴인식 등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과학 분석업무를 정량화하여 평가

○ 측정산식 : 지문·영상·3D얼굴인식 분석건수 ÷ 지문·영상·3D 얼굴인식 접수건수 × 100

○ '20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평균 상승치는 연간 1.2%임을 감안, '20년 목표치는 평균 상승치보다 10% 높은 1.3%를 상승한 64.3%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지표 3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 설정배경 :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구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고도화 된 과학수사 시스템(SCAS, GeoPros)의 유용성·실제 활용성 평가를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이용건수를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SCAS 접속건수 + GeoPros 접속건수

○ '20년 목표산출 : 과거 실적 추세와 '19년 실적인 1,587,431을 감안하면 13% 상승한 1,830,263이나 '20년은 전년보다 15% 상승한 1,857,273으로 설정

< 지표 4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

- 설정배경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등 증거 위주 수사가 더욱 중요
시 됨에 따라 범죄현장 유효증거물 채취율을 향상 시켜 변화된 사법환경
에 선제적 대응
- 측정산식 : 현장에서 채취한 채증물 SCAS등록 건수 / 현장감식건수
- '20년 목표 산출 : 150.7%
 - 과거 3년 실적 ('17년 153.0%, '18년 142.5%, 19년 148.6%) 추세치를 감안하면
143.4%이나 '19년 실적을 감안하여 추세치 보다 7% 상승시킨 150.7%으로 설정

27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Ⅱ-3-④)

□ 추진배경(목적)

- 최근 디지털증거가 모든 범죄수사의 핵심증거로 부각되면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 및 관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디지털증거 분석현황: 24,295건('15년) → 31,983건('16년) → 36,060건('17년) → 45,103건('18년) → 56,440건('19년)
- － 인력의 전문성 강화, 첨단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최신 분석 기술 확보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로 디지털포렌식 품질 제고
 - － 체계적인 전문교육, 전문 자격증·인증 등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분야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 확대
- 분석도구·시스템 개발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제고
 - － 증거분석관·현장수사관을 위한 신규 분석도구 개발
 - － 도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로 분석 및 수사의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디지털포렌식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 디지털포렌식 기초·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증거분석 역량 강화
 - △ 전문분석관 인증 제도 운영, 분석 분야별 전문가 확보
 - △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분석관 전문성 공인
 - △ 민간·위탁 전문교육으로 분석관 특화영역 개발 및 직무전문성 강화
 - △ 직무현장교육(OJT) 운영, 신입분석관에 대한 수시 교육·지원체제 구축
 - △ 수사경찰관 전자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종합 교육 실시

○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강화를 위한 분석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디지털포렌식 활용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

- △ 「폴-해시 PC 2.0」 신규 개발 : 기존 배포한 폴해시 PC 버전에 대해 안정성과 속도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신규 개발
- △ 「EnCase용 패스워드 문서 추출 도구」 개발 : 수사관이 압수한 디지털증거 복제 이미지에서 암호문서 추출을 통한 중요 문서 파일에 대한 분석역량 강화
- △ 「EnCase용 클라우드 정보 분석 도구」 개발 : 증거분석관의 역량강화 및 증거분석 시간 단축을 위한 PC용 클라우드 증거분석 기능 자동화 개발
- △ 「다크웹 브라우저 탐지 도구」 개발 : 불법 콘텐츠의 바다라 불리는 다크웹에 접속하는 범죄자 PC에서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 도구개발

- 분석도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 △ 「폴해시 모바일」 「콜-인포(CALL-INFO)」 「안티포렌식 흔적탐지 프로그램」 등 既 개발·보급된 현장수사관용 프로그램의 고도화

- 현장 분석관의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 △ IoT장치 분석기법 교육 :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분석관 대상 IoT장치 분석기법 교육

-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 △ 디지털포렌식 도구 설명회, 현장간담회 등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 디지털포렌식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기법 연구 활성화

- 신규 기기 및 기술 관련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 △ Xiaomi 스마트폰의 Second Space의 데이터 증거분석 방안
- △ 최신 스마트폰의 잠금해제 등 안티포렌식 극복 방안
-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듀얼 앱(Parallel Space) 분석 방안
- △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시각화 방안

- 디지털포렌식 기법 공유·대외 기술교류 활동

- △ 정기 연구발표회(月 2회) 개최를 통한 경찰 내 자체 기법 연구결과 전파
- △ 하계·동계 디지털포렌식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대내·외 기술적 연구성과 공유
- △ 디지털포렌식포털 등 경찰내부망에 내부 기법보고서·외부 주요 연구 자료 등 게시, 신규 분석기법 및 국내·외 최신 디지털포렌식 정보 등 공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포렌식센터 코라스 숙련도시험 참가계획 수립	1월	
	치안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계획 수립	2월	
	수사경찰관 전자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2월	
	「폴-안티스파이」고도화 및 홍보	3월	
	「모바일기기 암호해독 장비」도입완료	3월	
2/4분기	신임분석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청 순회 OJT 계획 수립	4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계약	5월	
	「안티포렌식 사용흔적 탐지도구」고도화 및 홍보	5월	
	디지털포렌식 품질향상을 위한 ISO 17025 실무자 교육 실시	6월	
	IoT 장치 분석 기법 연구 및 장치 개발 지방청 교육	6월	
	「폴-해시 APP」고도화 및 홍보	6월	
	「하계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개최	6월	
	「모바일기기 획득도구」라이선스 사업 완료	6월	
3/4분기	악성코드 분석 연구모임 개최	7월	
	「셀-파인드」고도화 및 홍보	8월	
	「폴-해시 PC 2.0」신규 개발 및 홍보	9월	
	「다크웹 브라우저 탐지 도구」개발 및 홍보	9월	
	「디지털 포렌식 센터 도구 배포 통계집계 시스템」고도화 및 홍보	9월	
	디지털 증거분석관 분석 숙련도 시험 실시	9월	
4/4분기	「EnCase용 패스워드 문서 추출 도구」개발 및 홍보	10월	
	「폴-인포」고도화 및 홍보	10월	
	「메신저 분석프로그램」고도화 및 홍보	10월	
	치안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시상식	10월	
	악성코드, 메신저 분석 워크숍 개최	10월	
	「EnCase용 클라우드 정보 분석 도구」개발 및 홍보	11월	
	「현장용 디지털증거 수집도구」고도화 및 홍보	11월	
	운영체제 아티팩트 분석기법 연구집 작성·배포	11월	
	「동계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개최	12월	
	「영상 포렌식 워크숍」개최	12월	
	「디지털 증거 통합관리시스템」개발 및 홍보	12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완료	12월	
	「KDF모바일 증거분석 프로그램」고도화 및 홍보	12월	
연중	「폴안티스파이」고도화 및 홍보	상시	
	디지털포렌식 연구발표회 개최	상시	
	증거분석 기법연구를 위한 신규 디지털기기 확보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제공받는 범수사부서 및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대검 과학수사부(디지털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기대효과

- 분석관 전문성 제고로 디지털 포렌식 품질 향상
- 포렌식 도구 개발·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사 효율성 향상
- 지속적인 신규 분석기법 연구·확보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발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23 (전체단위 사업비) ⁴⁾	147 (전체단위 사업비) ⁴⁾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41	44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82	1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58.8	67.6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신규	22.5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시스템 DB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18.4	21.1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 지표 선정사유 >

- 고도의 전문분야인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성 측정요소이자 핵심 역량요소가 되는 '증거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지표로 선정

○ < 목표치 산출근거 >

- (과거 실적 및 추세) 전년도 실적파악 결과, 전체 분석관 148명 중 전문분석관 인증 획득자 42명,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보유자 45명으로 총 58.8%(87명)임
- (목표치 설정) 전년 대비 15%이상 상승한 67.6%(100명)를 도전적 목표로 설정

○ < 측정 산식 >

- (전문분석관 인증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소지자/디지털 증거 분석관 총원) x 100(%)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 < 지표 선정 이유 >

- ICT 환경변화로 사이버범죄가 다양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지표로 선정

○ < 목표치 산출근거 >

- (과거 실적 및 추세) 신규 지표로, 전년도 실적파악 결과 '19년 20.5점
※ 신규 도구·시스템 개발 8건(8점), 도구 고도화 8건(6.4점), 주요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활용도*(3.1점),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홍보 실적**(3점)

* 주요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활용도 = 주요 포렌식 도구 및 장비 실행횟수['19년 기준, 폴해시(39,933건), 콜인포(24,530건), 셀파인드(24,127건),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1,882건) / '20. 1월 기준, 범수사부서 인원(29,494명)]

**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홍보 실적 :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건수

- (목표치 설정)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22.5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 측정 산식 >

- (신규 도구개발·장비도입 건수 × 1) + (시스템 고도화 건수 × 1) + (도구 고도화 건수 × 0.8) + (주요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활용도 × 1) +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홍보 실적 × 1)

항 목	신규 도구개발· 장비도입	고도화		주요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활용도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홍보 실적
		시스템	도구		
점 수	1	1	0.8	1	1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 < 지표 선정사유 >

- IoT 등 최신기기 등장 및 안티포렌식 기술 진화로 디지털포렌식 업무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 분석기법 개발 등 연구 활동 노력을 지표로 선정

* 본청 데이터 분석 실패(모바일기기 분석불기) 현황 : △ 75건('17년) → △ 129건('18년) → △ 145건('19년)

○ < 목표치 산출근거 >

- **(과거실적 및 추세)** 전년도 실적파악 결과 '19년 18.4점(분석기법 연구 12건, 세미나 등(학술대회,연구발표회 등) 연구 활동 2건, 분석기법 관리·공유 54건)임
- **(목표치 설정)** 증거분석계 전문화(저장매체분석계, 네트워크분석계) 안착 및 증거 분석관 증원 등을 반영,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21.1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 측정 산식 >

- (연구보고서·논문 게재 등 분석기법 연구건수 × 1) + (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건수 × 0.5) + (디지털포렌식 지식 관리·공유 건수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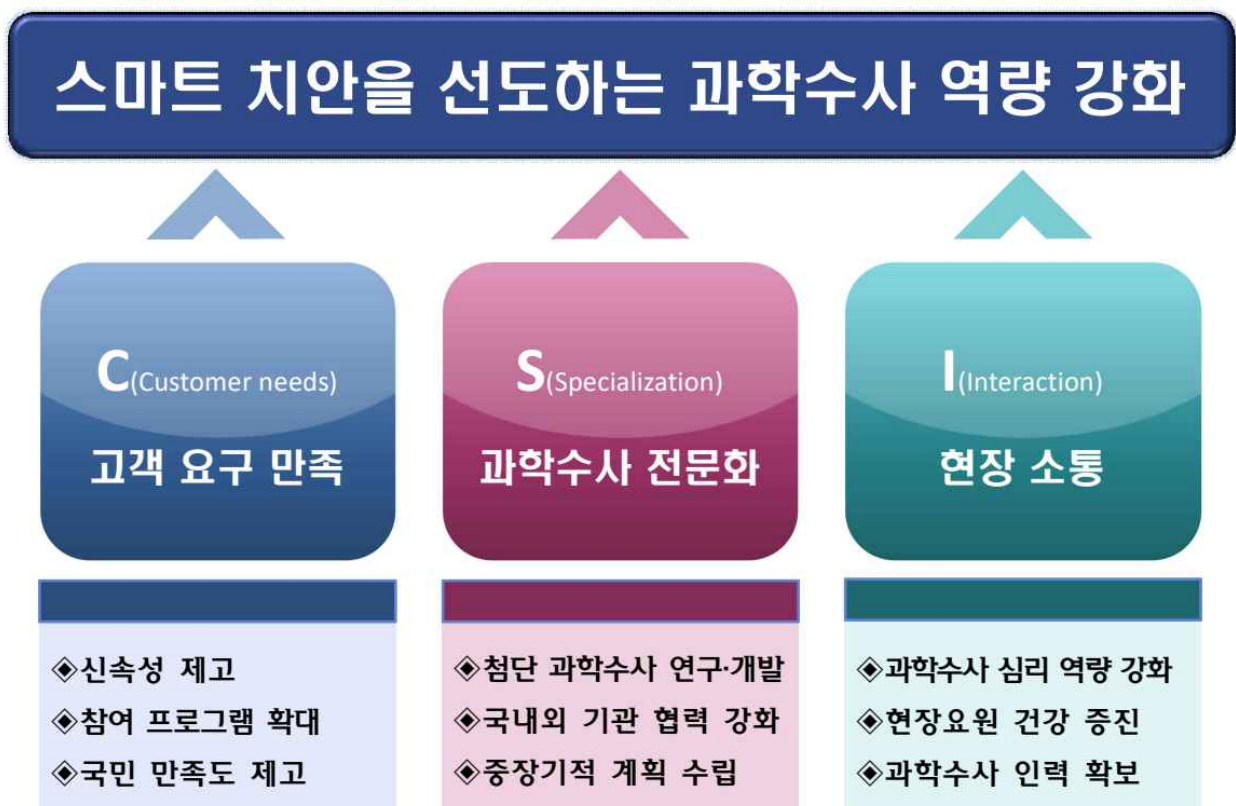
항 목	연구보고서·논문 게재 등 분석기법 연구	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	디지털포렌식 지식 관리·공유
점 수	1	0.5	0.1

28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Ⅱ-3-⑤)

□ 추진배경

-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형사사법체제로 나아가는 가운데, 과학수사의 발전은 ‘증거중심 인권 수사’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대국민 신뢰도·만족도 향상에 기여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을 위한 전문적, 전략적인 과학수사활동 지향
 - *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분석·연구(Analysis & Research) △과학 기술(Technology)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찰활동
- 심신 건강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근무환경에 놓인 일선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현장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추진과제-㉔ , 고객 요구에 맞는 과학수사 운영 >

○ 현장 과학수사요원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한 신속성 제고

- 광역과학수사팀을 확대*(83개팀→97개팀)하여 관할 경찰서 수 축소(3.1개서→2.6개서) 및 출동 신속성 제고

* 과학수사요원 증원 및 도농형 지방청 14개 권역 확대

- 검시조사관 충원으로('20년 소요정원 138명 확보) 전 광역팀에 검시조사관 배치(3교대), 24시간 즉응 태세 확립
- 1시간 이상 지연 출동(3%)의 주요 원인인 동시다발적 사건 발생 대비, 인접 광역팀 지원 체제 구축

○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증진

-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수사 체험학교 운영(월1회)
- 현직 과학수사요원, 민간 전문가, 프로파일러 등 패널 구성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과학수사 토크 콘서트 개최

※ '20. 5.부터 4개 지방청에서 순차적 개최 추진

○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과학수사 기법·장비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우수작 포상 및 시범운용 추진, 신규 R&D 과제 발전 가능성 검토
 - 과학수사 주요 정책·제도 및 법령, 새로운 장비 도입 시 기술적·과학적 자문, 평가를 위한 민간 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 ※ 경찰행정, 법의학, 법과학, 안전사고, 범죄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연2회)

< 추진과제-⑤ , 과학수사 전문성 향상 >

○ 첨단 과학수사 기법 연구개발(R&D) 추진

- 스마트 치안을 뒷받침할 과학수사 기법 R&D 지속 추진 및 개발된 R&D 결과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한 기법·장비 상용화

※ '20년 6월까지 종료예정인 「CCTV영상검색 기술 고도화 및 신원확인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법보행분석 프로그램 도입, 현장에 활용 등

- 나노기술을 활용한 생체시료 시각화, 레이저를 활용한 겹친지문 식별, 법곤충을 활용한 사망시간 추정 등 다양한 기법 개발을 통해 과학수사 전문성 강화

○ 국내외 기관 간 기술 교류 및 대외 협력 강화

- 경찰·국과수 간 업무협의회, 합동 법과학감정실 확대 구축 등 협력 강화

- 대형사고·재난에 대비한 재난현장 신원확인팀(DVI)* 정예화

* 재난현장 신원확인팀(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국과수 및 대내외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 모의훈련·워킹그룹 활동·인터폴 DVI연차회의 참석 등 활동

- 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AFSN), 국제감식협회(IAI) 등 해외 과학수사 기관 학회 참석 및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 중장기적 과학수사 발전 계획 수립

- ‘법과학서비스’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중장기적 발전 청사진을 그린 「과학수사 미래비전 2025」 수립

- 凡수사기능 및 非수사 기능에서 활용 가능한 법과학 서비스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과학수사 외연 확장으로 연결

< 추진과제-① , 현장과의 소통·지원 강화 >

○ 과학수사요원 심리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활력 제고

- 과학수사요원의 약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필요

* 노선미 외 1명,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영향요인(2017)”

- 과학수사요원 대상 예방적 심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과정명	주요 내용
공감힐링과정	인재개발원 공감힐링과정을 과학수사요원 대상으로 개최(6, 10월)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마음동행센터 전문 강사 초빙하여 자체 워크숍 개최(5, 9월)
마음돌봄과정	지방청 과수계장 및 광역과수팀장 대상으로 팀원들의 심리상담, 코칭을 위한 동료지킴이 등 마음돌봄교육과정(1일) 실시(연중)

○ 현장 과학수사 요원 건강 증진을 통한 직무만족도 제고

- 과학수사요원이 임장하는 사건 현장, 증거물 등을 분석하는 실험실은 건강 안전에 유해한 위협요인*들이 상존

* 김성환, “경찰과학수사요원의 감염성질환연구(2009)” 등

- 위와 같은 과학수사 환경의 특수성 고려,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매년)·예방접종(2년 주기) 실시

※ 美 연방직업안전보건부(OSHA)는 B형 간염 등 예방접종 무료로 실시

-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현장 과학수사요원의 건강 증진 대책 마련에 활용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과수 위탁교육과정 수요조사	1월	㉔
	첨단과학수사기술개발 사업(7개 과제) 간담회 개최	2월	㉔
	과학수사요원 심리역량강화 방안 수립	3월	㉑
	다부처 위해기체 R&D 추진위원회 개최	3월	㉔
	지방청(인천, 전남, 경북) 과학수사과 신설	3월	㉓
2/4분기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월	㉓
	경찰청-국과수 업무협의회	5월	㉔
	인터폴 DVI 컨퍼런스 참석	5월	㉔
	과학수사요원 대상 공감힐링과정 개설	6월	㉑
	법보행 분석기법 연구개발 완료	6월	㉔
	인터폴 DVI 전문가 초청 합동교육	7월	㉔
3/4분기	DNA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7월	㉔
	현장 과학수사요원 증원	8월	㉓
	K-DVI 국내 모의훈련 진행	9월	㉔
	과학수사요원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9월	㉑
	현장 과학수사요원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시행	9월	㉑
4/4분기	경찰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	10월	㉓
	합동 법과학감정실 확대 구축	11월	㉔
	2020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11월	㉔
	인터폴 DVI 워킹그룹 연차회의 개최	11월	㉔
	과학수사 R&D 연차·단계평가 실시	12월	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과학수사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쏙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수사상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DB 사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는 대검찰청 등

□ 기대효과

- 신속성 제고, 대국민 소통·교류 확대 등을 통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신뢰도 및 체감안전도 상승
- 지속적인 과학수사 연구·개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
- 현장 과학수사요원의 인력 확충 및 심리역량강화와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한 직무만족도 고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첨단과학수사(I-3-일반재정②)				
① 첨단과학수사(1232)		일반회계	346 (346)	352 (352)
■ 과학수사역량강화(311)			330	336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6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대국민 교류 지수 (30%, 정성)	77.2	80.6	83.1	85.1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85.1점을 목표치로 설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0.5 + 진술청취이행률 × 0.5	고객만족 모니터 센터, 과학적범죄분석 시스템(SCAS)
과학수사 활동 지수 (40%, 정량)	1.31	1.30	1.41	1.41	3년간 등락하고 있는 지표로 평균치가 1.34점임을 감안할 때, 평균치 이상인 1.41점을 목표치로 설정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범죄통계 시스템(CSS) 국과수·지문검색·측윤 적감정시스템(NFIS, AFIS, FTIS)
현장지원 지수 (30%, 정량)	-	3	18.1	28	'19년에 설정된 신규 지표로, '20 신규사업을 반영, 배점 방식을 변경하여 28점을 목표치로 설정	현장지원활동을 정량화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보고서, 계획서 등 결재된 공문서 자료

○ 목표치 산출 및 측정산식 관련 참고자료

구분	과제	평가 항목																												
① 대국민 교류 지수 (정성)	㉓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 평가산식 : 과학수사업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0.5 + 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 × 0.5 * 직접 과학수사를 경험한 국민(살인, 성범죄 등 일부 죄명 제외) 대상 실시 * 전문성·신속성·친절도 등 세부 분야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합산하여 산출 ▶ 산정배경 : 경찰 과학수사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를 통한 대국민 교류 노력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table><tr><th>구분</th><th>고객만족도 점수</th><th>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th><th>대국민 교류 지수</th></tr><tr><td>‘17년</td><td>71.20</td><td>83.1%</td><td>77.2</td></tr><tr><td>‘18년</td><td>75.49</td><td>85.6%</td><td>80.6</td></tr><tr><td>‘19년</td><td>77.12</td><td>89%</td><td>83.1</td></tr><tr><td>목표</td><td colspan="2">3년간 상승추세 반영 (‘17→‘18 : +34점, ‘18→‘19 : +25점)</td><td>⇒85.1점</td></tr></table> - 실적치는 3년간 상승세이나 상승폭은 감소 추세(3.4점→2.5점)인 점을 감안하여 ‘19년도 실적치에서 2점 상승한 85.1점을 목표치로 설정	구분	고객만족도 점수	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	대국민 교류 지수	‘17년	71.20	83.1%	77.2	‘18년	75.49	85.6%	80.6	‘19년	77.12	89%	83.1	목표	3년간 상승추세 반영 (‘17→‘18 : +34점, ‘18→‘19 : +25점)		⇒85.1점								
구분	고객만족도 점수	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	대국민 교류 지수																											
‘17년	71.20	83.1%	77.2																											
‘18년	75.49	85.6%	80.6																											
‘19년	77.12	89%	83.1																											
목표	3년간 상승추세 반영 (‘17→‘18 : +34점, ‘18→‘19 : +25점)		⇒85.1점																											
② 과학수사 활동 지수 (정량)	㉓ 과학수사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 평가산식 :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 현장임장률 = 현장감식건수 / 중요범죄 발생건수* * 현장감식이 필요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침입절도, 변사, 화재 - 증거채취율 = (DNA감정 +자문감정 +족적감정 의뢰건수) / 현장감식건수 ▶ 산정배경 : 중요범죄 발생건수 대비 현장임장률과 현장임장 1건당 증거물 감정의뢰건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학수사 활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 ▶ 목표치 산출 근거(등락) <table><tr><th>구분</th><th>현장임장률</th><th>증거채취율</th><th>과학수사 활동지수</th></tr><tr><td>‘17년</td><td>0.99</td><td>1.63</td><td>1.31</td></tr><tr><td>‘18년</td><td>0.95</td><td>1.66</td><td>1.30</td></tr><tr><td>‘19년</td><td>0.98</td><td>1.84</td><td>1.41</td></tr><tr><td>목표</td><td colspan="2">3년간 평균 반영 시 1.34점</td><td>⇒1.41점</td></tr></table> - 3년간 평균치 1.34점 및 ‘19년도 실적치 반영, 1.41점으로 목표 산정	구분	현장임장률	증거채취율	과학수사 활동지수	‘17년	0.99	1.63	1.31	‘18년	0.95	1.66	1.30	‘19년	0.98	1.84	1.41	목표	3년간 평균 반영 시 1.34점		⇒1.41점								
구분	현장임장률	증거채취율	과학수사 활동지수																											
‘17년	0.99	1.63	1.31																											
‘18년	0.95	1.66	1.30																											
‘19년	0.98	1.84	1.41																											
목표	3년간 평균 반영 시 1.34점		⇒1.41점																											
③ 현장지원 지수 (정량)	① 현장과 의 교류 및 지원을 통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 평가산식 : 현장지원 활동을 정량화하여 합산점수 계산을 통해 산출 <table><tr><th>구분</th><th>점수</th></tr><tr><td>추진과제-①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td><td>2</td></tr><tr><td>추진과제-①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td><td>2</td></tr><tr><td>추진과제-①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td><td>0.1</td></tr><tr><td>과학수사계장, 광역과학수사팀장 중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td><td>0.1</td></tr></table> ▶ 산정배경 : 정책과제 중 일선현장 지원 활동과 관련된 노력을 위 구분에 따라 건별 점수 합산하여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 <table><tr><th>구분</th><th>연간계획 (2점)</th><th>워크숍 등 (2점)</th><th>건강검진 등 (0.1점)</th><th>교육이수 (0.1점)</th><th>총점</th></tr><tr><td>‘19년</td><td>2회</td><td>3회</td><td>-</td><td>81명</td><td>18.1</td></tr><tr><td>목표</td><td colspan="4">‘19년 목표치 및 실적 반영</td><td>⇒28점</td></tr></table> - ‘19년에 설정된 신규 지표로, 신규 사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기준으로 추가 및 배점을 반영하였으며, ‘19년도 실적치 및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목표 점수 10점 기준으로 최종 목표치를 28점 설정	구분	점수	추진과제-①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	2	추진과제-①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	2	추진과제-①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	0.1	과학수사계장, 광역과학수사팀장 중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	0.1	구분	연간계획 (2점)	워크숍 등 (2점)	건강검진 등 (0.1점)	교육이수 (0.1점)	총점	‘19년	2회	3회	-	81명	18.1	목표	‘19년 목표치 및 실적 반영				⇒28점
구분	점수																													
추진과제-①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	2																													
추진과제-①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	2																													
추진과제-①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	0.1																													
과학수사계장, 광역과학수사팀장 중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	0.1																													
구분	연간계획 (2점)	워크숍 등 (2점)	건강검진 등 (0.1점)	교육이수 (0.1점)	총점																									
‘19년	2회	3회	-	81명	18.1																									
목표	‘19년 목표치 및 실적 반영				⇒28점																									

성과목표Ⅱ-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1) 주요 내용

-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 인적·물적 대테러 인프라 및 민·관 대테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테러취약시설 안전대책 시행
 - － 드론테러에 대비하여 △안티드론 장비 확충 △드론테러 대응매뉴얼 마련 △전문가 인력풀 구축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종합 대책 추진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보안첩보의 체계적 분석 등 보안 수사를 전문화하고, 중요 안보위해사범 검거로 국민 안전 보호
- **<보안경찰 전문성 및 탈북민 보호 강화>** 전문성·효율성 위주 조직 개편과 제도·관행 개선으로 보안경찰 혁신 기여 및 신뢰 확보
 - － 탈북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신변보호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내실화하여 사회 조기정착 지원
-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테러예방>** 국내외 방첩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주한공관·외교관 대상 위해첩보 수집으로 안전 확보
- **<경호역량 강화>** ‘경호인력풀’을 정예화하고 체계적 교육과 선진 경호기법 도입으로 초청 외빈과 국가적 중요행사에 성공적 경호 제공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관리과제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현장중심 활동평가 및 대테러 역량강화+가점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중요 보안사범 검거 지수 / 보안 수사정보 활용도 /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외사정보 활용도 / 테러·방첩사범 검거활동 / 대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교육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안전체감도	2.71	2.80	2.65	2.72	국민 안전체감도는 '18년 상승 후 하락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2.72) 및 과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2.66)을 고려, '20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평균값인 2.72로 설정	행정안전부 대국민 설문조사 (일반국민 안전체감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 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결과는 8월경, 하반기 조사결과는 다음 연도 4월경 발표 / '19년 실적은 상반기 조사결과 반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ISIS'는 세력이 위축되었으나, 시리아·이라크 등 거점지역에서 활동을 재건하는 상황
 - － ISIS 지도자 '알 바그다디' 사망('19.10.27.)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지역거점·서방국 대상 보복테러를 감행하는 등 적극 활동 전망
 - 전 세계적인 반이민 및 반이슬람 정서 확산에 따라 민족·인종적 배타주의에 기반한 극우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
 - 한편, 사우디 정유시설 드론공격('19. 9月), 국내 원전주변 드론출몰('19. 8月)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첨단화·다양화된 테러 위협이 현실화
 - 미대사관저 월담('19. 10月), 미·일대사관 차량돌진('19. 6~7月) 등 국제관계·사회 갈등 고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위협 가능성도 지속
- ➡ 주요 취약시설 대상 관계기관과 방호장비·시설·인력·대책 등 합동점검, 외국공관 위해도 등급 분류를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29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Ⅱ-4-①)

□ 추진배경

- △ 美-이란 갈등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 ISIS·알카에다 등의 건재 과시를 위한 對서방 보복테러 △ 유럽 등 서구권의 反이슬람 극우테러 확산 및 외국인테러전투원(FTF) 석방 등에 기인한 테러위험 지속 전망
 - IS근거지 상실에 따른 역외테러 확대, 로우테크(Low-Tech, LT)형 자생 테러의 출현, 다중운집시설·스포츠 행사 등 소프트타겟 대상 위험도 증가
- 국내에서는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사례가 최초 발생하였으며, 주한 공관 차량돌진사건('19.6.7) 발생 등 유사테러 성격의 범죄 재발 가능성 내재
 - ※ 강제퇴거 증가('17년 17명 → '18년 21명 → '19년 29명) 및 시리아 테러 단체에 자금(118만원)을 지원한 카자흐인 최초 실형선고(징역 1년6월, 1.8 1심)
 - 국제테러분자로 입국 금지된 외국인이 증가추세이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공격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 국제테러분자 입국금지현황 '16년(19,603명), '17년(31,026명), '18년(42,034명)
 - 다수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6.29~6.30.)가 국내 개최 예정,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테러 인프라 구축 >

- 테러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공대 창설 지속 추진, '20.7월 세종·전북·경북廳에 특공대 창설로 총 13개대 운영
 - ※ 경기북부('17)·경기남부('19)·경남('19) 등 최근 4년간('17~'20) 6개대 신설

< 경찰특공대 현황 : 총 10→13개대 >

권역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
특공대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대전	세종	광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관할	서울	인천	경기남	경기북 강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창설	1983	2001	2019	2017	1998	2020	1998	2020	1998	2019	1998	2020	2005

※ 특공대 없는 5개 지방청(강원, 충남, 충북, 전남, 울산)도 22년까지 단계적 창설 추진

- (첨단장비 도입) 드론테러 대비 전파차단기·탐지장비 등 확대, 특공대 작전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영상전송 장비 도입

- ▶ (전파차단기·탐지장비) 현재 전국 6대 전파차단기를 2022년까지 56대로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드론 탐지·식별이 가능한 장비(이동형)를 시범도입
- ▶ (작전상황 전송장비) 5G 기술 등 활용, 특공대 작전상황을 기존 무선 송수신에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후 작전·지휘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

< 민간·관계기관과 협업 통합 대테러거버넌스 구축 >

- (국내·외 대테러회의) 학회·관계기관·해외전문가와 세미나 개최, 해외기관(UN·FBI·인터폴) 주재 회의 참여 등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는 사이버·외사 등 공동 개최, 드론·화생방 등 전문분야 정책 논의
 - 해외기관과 최근 테러정세·기법 공유 및 특공대 전지훈련 등 협업 논의
- (화생방 워킹그룹)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지역협의체*」 중심으로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신설, 합동연구세미나 추진
 - * 지방경찰청·지방환경청·시도 감염병부서·원전 지역사무소 등 구성('19.1월)
 - ** △화학 △생물 △방사능 분과별 구성, 위험물질 관리·현장 대응체계 등 연구

< 경찰관 타격대 창설 및 운영준비 >

- (추진 배경) 의무경찰 폐지로 의경 112타격대 구성원 교체 등 대내외 치안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1년 경찰관 부대* 창설
 - * 대침투·테러, 재난 분야에서 準 특공대 수준의 임무수행

<추진 경과>

- ▶ 의무경찰 감축·폐지 및 대체경찰관 충원 기본계획('17.12.11)
- ▶ 의무경찰 감축·폐지 및 대체경찰관 충원 종합계획('18.12.28)에 반영
- ▶ 경찰 타격대 지방청별 부대 배정 및 권역별(54개)거점시설 선정('20.1.3)

- (창설준비 TF) 대테러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련기능 계장급 참여,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장비 보급 △ 시설 리모델링 등 추진

< 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 (외국공관저) 주요국(美·日·中) 공관저 대상 관련기능 합동 점검*
및 위해도 등급 분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 '19. 11. 14.(목) ~ 11. 21.(목), 美·日·中 공관시설 12개소

- 모든 공관을 위해도에 따라 A·B·C등급으로 체계적으로 분류
위해요인 발생시 한시적으로 S등급 분류 특별관리

- 관련기능*간 협의체 및 외국공관 안전전담 T/F 운영 등 '외국
공관저-경찰청' 간 협력·대응체계 강화

* 대테러·경비·경호·정보3·외사정보·수사·위기관리센터·보안2·범죄예방정책과 등

- (국가중요시설) 관련기능(대테러·경비·경호) 합동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의경철수 지속 협의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합동점검) 관계기관*과 테러취약시설 대상 △ 방호장비·시설
△ 방호인력 배치 △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등 점검

* 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등

< 드론테러·위협 대비 종합 대책 추진 >

- (안티드론 장비 확충) 「전파차단기」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선제적으로 드론 탐지·식별까지 가능한 「탐지장비」 시범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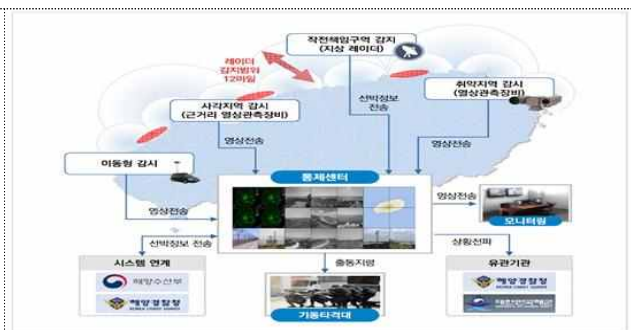
- ▶ (전파차단기) 現 6대(특공대 6) → 56대(특공대 29 및 주요시설 관할서 27)
- ▶ (탐지장비)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탐지·식별 가능

- (드론테러 대응매뉴얼 마련) 현장 경찰관이 명확히 대응하도록
 △ 드론의 개념·종류 △ 관련 법령 △ 단계별 조치사항 등 수록
 ※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시 포함하여 現 매뉴얼과 체계성 유지
- (전문가 인력풀 구축) 관계기관(국토부·과기부), 경찰대학(드론 시큐리티연구원) 등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 구축
 ※ 인력풀 활용하여 지방청별 현장 순회교육 실시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관련 법령의 정비) 과기부·국토부 등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정 추진,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여 개정 필요사항 발굴
 - ▶(전파법) 과기부 소관, 경찰의 원활한 전파차단기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 ▶(항공안전법) 국토부 소관, 비행금지구역 비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관계기관 합동훈련) 경찰 주도로 軍·해경·국정원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소속 대테러부대 참여, 드론테러 대비 합동훈련 실시
 ※ '15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필요한 훈련프로그램 선정하여 실시 중

< 해안경계 과학화 사업 추진 >

- (추진 배경) 의경 폐지계획에 따라 TOD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 장비·시설의 과학화로 효율적 해안경계 임무 수행
- (주요 내용) △ 해안초소 신축 △ 초소 무인화 △ 통합상황실 구축

- ① (해안초소 신축) 기존 해안초소를 감시장비 설치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
- ② (초소 무인화) 해안초소에 TOD, CCTV 및 영상전송장비 등 설치
- ③ (통합상황실 구축) 무인화된 해안초소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관측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통합상황실 구축



- **단계별 추진사항** ※ '20년 257억원 확보, '21년 약 60억원 예산확보 추진
 - (1단계) 제주 5개 해안경계부대 중 해체 1개 부대(12개초소) 과학화
 - (2단계) 제주 해체 3개 부대(24개소) 및 울릉도(13개소)·가거도(3개소)
 - (3단계) 나머지 제주 해체 1개 부대(12개소) 및 독도(2개소) 과학화
- **경찰관·의경 합동 근무, 부대 운영방식 등 해안경계부대 창설 준비**
 - ※ 해안경계부대 경찰관 배치 : 총 351명 ('20.7월 242명, '21.1월 109명)

< '20년도 과제 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 대테러장비 구매 종합계획 수립	1월	
	경찰관 타격대 창설준비 TF 추진	2월	
	대테러 교육·훈련 종합 계획 수립	3월	
2/4분기	특공대 창설 기본계획 수립	4월	
	'20년 전국 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4월	
	드론테러 대응매뉴얼 마련	6월	
	국가중요시설 의무경찰 철수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6월	
3/4분기	경북·전북·세종특공대 창설	7월	
	제15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9월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	9월	
4/4분기	관계기관 합동훈련(국가 대테러부대 연합훈련) 실시	10월	
	대테러정책·세미나 개최	10월	
	드론테러 대비 전파차단기·탐지장비, 작전상황 전송 장비 도입	11월	
	「대테러연구집」 발간	12월	
연중	해안경계 과학화 사업 추진	연중	
	해외기관 주재회의 참여 등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연중	
	외국공관저 포함 테러취약시설 대상 관련기능 및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체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주·관리자

□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적극적인 테러예방활동 및 테러대응역량 강화로 예방 중심의 테러대응체계 구축
-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테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치·경제적 국가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
- 테러위협 불식, 안전감 강화를 통해 기업·외국인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 철저한 국가 안보태세 유지를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① 대테러상황관리(3134) ■ 대테러상황관리(311)	일반회계	187.9	224.9
②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 의경대체지원(2131-314)	일반회계	169	2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신 규	신 규	89.2 달성도 81.2 가점 8	85	하단 참조	①현장중심 활동 평가 및 대테러 역량 강화 평가 점수+ ②가점(하단참조)	① 주요내용 및 추진 계획, 민간 여론조사,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 ② 각종 공문 등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1. 현장중심 활동평가(50%)							
① 테러취약시설 합동점검·훈련 효과 및 경찰의 테러예방 노력을 테러취약시설 관계자가 직접 설문으로 평가(30점) ※ 90점 이상(30점), 89~80점(25점), 79~70점(20점), 69~60점(15점), 59점 이하(0점)							
② 민간·관계기관 협업 및 통합 대테러거버넌스 구축(20점) → 민간·관계기관 합동 세미나 3회 이상 개최, 대테러 국제회의 1회 이상 참석 ※ 각 5점 : 총 4회×5점=20점							

2. 대테러 역량강화 평가(50%)

① 특공대 3개 창설(20점)

※ 7월 3개 창설시(20점), 창설시기 1개월 지연시 5점씩 감점, 창설개소가 줄어들 경우
1개소당 5점씩 감점

② 첨단장비(전파차단기 8대, 작전상황전송장비 57대) 도입(10점)

※ 100% 확보시(10점), 90% 확보시(9점), 80% 확보시(8점), 70% 확보시(7점),

③ 해안경계 과학화 1단계(초소10개, 상황실 구축) 완료(20점)

※ 100% 완료시(20점), 90% 완료시(18점), 80% 완료시(16점), 70% 완료시(14점),

※ 가점 :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 전담조직의 국제대회 입상시 2점

→ 최종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목표

31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Ⅱ-4-②)

□ 추진배경

-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간첩 등 중요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보안수사 역량 강화
 -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은 물론, 각종 선제적 보안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틀 마련
 - ※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20. 1. 31.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리 담화문)
-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이 새롭게 부여받은 권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막중해질 것으로 전망
 - － 보안수사도 그간 검찰에 의존해온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국가안보에 큰 위험요소인 중요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위해 노력
- 남북교류 행사 및 다양한 보안상황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완벽 관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 실현 뒷받침
 - ※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습니다(’18. 10. 25. 제73주년 경찰의 날 대통령 치사)
- 인권보장을 위해 보안 수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안수사 능력 제고를 위해 안보 관련 범죄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요 안보위해사범 검거 활동,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노력 >

- 국회를 통과(1. 13.)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제정될 예정
 - － 보안수사도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안보사건 평가회의 △영장 심사관 △보안수사 사건지원팀 등 선제적인 역량 강화방안 시행
 - － 앞으로도 수사 주체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지속 발굴·도입할 계획으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인권 보호를 통해 보안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고자
 △ 변호인 참여 실질화 △ 압수물 관리 강화 △ 경찰사건심사 시민 위원회 등 모든 수사부서에 적용되는 제도를 엄격 준수
- 단계별 역량 강화방안도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

일반수사	구분	보안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
▶ 수사 단서 발굴이 용이 (신고,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 수사 단서가 대부분 은폐 ▶ 휴민트를 통한 단서 입수가 중요	▶ 지방청 첩보분석관 배치 ▶ 경찰청 첩보분석팀 신설
▶ 혐의 확인 시 수사로 전환(단기간 소요) ▶ 내사 생략 사건도 다수 (고소·고발 사건 등) ▶ 주로 공개정보(CCTV 영상 등) 수집에 집중	내사 단계	▶ 혐의 확인 후 명백한 입증 자료 수집을 위해 장기간 내사 진행 ▶ 과거 및 현재 진행 중 범죄의 증거를 동시 확보하는 어려움 ▶ 특화된 수사기법 활용 - 피내사자 행적 추적 - 국외 출장, 통신수사 등	▶ 내사 코칭시스템 도입 ▶ 수사기법 교육 강화 ▶ 영장심사관 증원
▶ 범인 소재 파악에 중점 ▶ 시민 등의 조력 가능 ▶ 관서 간 공조 원활	수사 단계	▶ 사건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범인 소재 파악은 용이하나 기소 가능한 혐의 입증 곤란 ▶ 묵비권 행사와 신문 경험 부족 등으로 피의자 진술 확보 곤란	▶ 신문기법 컨설팅팀 ▶ 보안수사 사건지원팀 ▶ 종결 사건 분석회의
▶ 송치 후 공판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공판 단계	▶ 공소 유지를 위한 자료 제공, 증인 출석 등 공판 참여 빈번	▶ 공판 대응체계 확립

< 면밀한 보안상황 분석, 안보위해요소 사전 차단 >

-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안정적 보안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보안상황도 변수 없이 대비
 ※ 위해요소는 제거하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친화적 보호활동’ 추진
- 보안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처리가 가능하도록 관서별 대응팀
 구성, 철저한 대북혐의점 분석을 통해 안보위해요소 사전 차단
 - 접경지역 北 움직임 모니터링 및 공항만 취약지역 보안활동 강화
 - ※ 軍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역별 관계기관 비상연락 시스템
 점검 및 대공 정보교류 강화로 접경지역 특이사항 파악

- 유관기관 합동정보조사를 통해 대북혐의점을 규명하고, 필요 시 정보 판단 결과를 작전부대에 통보하여 협력 강화
- 경찰관서가 없는 도서 지역은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안상황 발생에 적극 대비

< 주요 보안상황 >

- ◆ 간첩·간첩선·의아선박·거동수상자 출현 및 탈북·밀입국자 등 발견
- ◆ 적성물품 발견·습득, 폭발물·무기류 발견 등 북한 연계의심 사건

- 해상 표류·귀순·탈북 등 보안상황 처리 지원, 해안·도서주민 신고조직 정비, 北 연계감시대상 선박 항만 보안활동 등 수행
- 北 귀순자 발생과 같은 보안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공항만 등의 안보취약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예방활동 실시

< 보안 첩보의 종합적·체계적 분석, 인권보호와 보안 수사 역량 강화 >

- 「경찰청 첩보 평가·분석팀」을 신설하여 분석기능을 고도화 하고 「보안수사 정보분석서」를 생산·제공하여 보안수사 역량 제고
- 전문적인 분석팀의 체계적인 분석과 자료 축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경찰청 보안2과장 주관으로 「내사첩보 평가회의」를 운용하여 무리한 내사는 방지하되 가치 있는 보안 내·수사가 진행되도록 지원
- 내사첩보의 신뢰성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 최우선의 보안수사 구현
- 지방청별 첩보분석관을 배치하여 첩보 수집과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첩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사 필요 시 수사팀에 인계
- 향후 보안수사 관련 중요 범죄 첩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첩보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 유가치한 첩보를 생산·제공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안수사 업무처리 지침 수립	2월	
	남북교류행사 근접보안팀 재정비	3월	
	지방청 첩보평가 담당자 워크숍(화상회의)	3월	
2/4분기	전국 보안상황·남북교류 업무담당자 워크숍(화상회의)	5월	
	남북 출·입경(CIQ)사무소 등 남북교류 활성화 대비 현장 점검	6월	
	상반기 지방청 보안첩보 관련 순회교육 및 간담회	6월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1차)	6월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경찰책임취약지 점검 분석	6월	
	상반기 보안수사대 현장 지도·점검	6월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분석 평가회의	6월	
3/4분기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2차)	8월	
	남북교류 예정장소 등 하반기 현장 점검	9월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경찰책임취약지 점검 분석	9월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3차)	9월	
4/4분기	하반기 보안수사부서 현장 지도·점검	10월	
	하반기 지방청 보안첩보 관련 순회교육 및 간담회	11월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분석 평가회의	11월	
	전국 취약지역 점검 및 판단서 작성	12월	
	전국 보안수사대장 워크숍	12월	
연중	보안수사·상황 관련 국정원, 안보지원사, 정보사 등 상시 협조 체계 구축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간첩·이적단체 등 안보위해세력

□ 기대효과

- 국가안보수호와 통일 대한민국의 기반 조성
- 법적 절차에 맞는 신중한 수사로 인권친화적 안보수사 풍토를 확립함으로써 보안경찰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 남북교류 행사 및 다양한 보안상황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완벽 관리, ‘국민에게 신뢰 받는 보안경찰像’ 구현
- 보안 내사첩보 검증으로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첩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여 보안수사 능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중요 보안사범 검거 지수 (50%)	6.67	20.0	9.0	13.2	하단 참조	(중요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 / (전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 x 100	검거보고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검거 실적 DB
보안수사정보 활용도 (30%)	신규			150	하단참조	하단 참조	보안수사 정보분석서 목록 활용된 사례 목록 작성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20%)	신규			2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분석·판단보고서, 결과 보고 및 공문 등

【'20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중요 보안사범 검거 지수(업무계획 3-⑦ 인권 친화적 안보수사 전개)

- 대공수사권 이관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찰 보안수사의 질적 향상 필요성 대두되어
△ 반국가단체, △ 목적수행, △ 자진 지원, △ 잠입·탈출 등 중요 범죄에 보안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 후 하강 추세인 상황으로, 3년간 실적 평균인 11.89에서
11% 이상 증가한 13.2를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② 보안수사 정보 활용도(업무계획 3-⑧ 국가안보수사본부 신설에 대비, 업무 조정 및 직제 개편 병행)

- 그간 일선 보안요원들이 제출해 온 보안수사 첩보는 가치평가만을 받았을 뿐, 이를
실제 수사현장에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어 첩보의 유가치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
-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 및 안보수사본부 신설이 논의됨에 따라 경찰의 보안수사
능력을 제고하고자 전국에서 수집·제출되는 보안수사 관련 첩보를 전문적으로
검증·분석하여 현장에 제공하는 기능이 신설되어 관련 성과지표를 신규 선정함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보안수사정보 활용도의 종합평가를 위해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합산
- (양적평가) 전년 기준 보안첩보 2만 4천여 건 중 범죄첩보 5백여 건에 대하여 '첩보
검증'을 실시하고 수사 정보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분석서'를 생산·수사
현장 지원(범죄첩보의 10% 생산 목표) ⇨ 건당 1점씩 50점 목표

- (질적평가) 양적평가에서 목표로 설정한 50건의 '정보분석서'의 실제 현장 활용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 활용도에 따라 건당 1~10점씩 100점 목표

- ▶ 양적평가: 2과3계에서 생산한 보안수사 정보분석(보안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기준) 건당 1점 부여
- ▶ 질적평가: 보안수사 정보분석서가 활용된 경우, 그 효용도에 따라 추가로 1~10점* 부여
 - * 북 공작원 신원 입증자료 활용 10점 / 대상자 혐의사실 추가자료 활용 5점 / 기존 혐의 사실 보강자료 활용 3점 / 일반 보안사범 관련 수사정보 활용 1점

③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 전년도 보안상황 관리 및 대외협력도 지표는 외생변수(상황발생)에 의해 좌우되는 건수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 안보 취약요소(공·항만, 기반시설 등)를 점검·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표 신설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국정원·軍·해경청·행정기관 등과 상시적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개선 시 소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도전적인 지표 설정
 - 공·항만, 전국 취약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 검토보고(분석·판단 보고서 작성 등) 및 유관기관 협의·통보사항(결과보고서 및 공문 등)등을 통해 개선 추진한 실적을 인정
- ⇨ 전년도 194회 점검 중 10% 수준인 20건의 「분석·판단 보고서 및 공문·회의자료」 생산 목표

31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Ⅱ-4-③)

□ 추진배경

- 최근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 안보수사본부 신설 추진을 공론화시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을 근거로 문제 제기
- 그간 보안경찰은 대내외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권친화적 보안수사 환경 조성 등 ‘보안경찰 개혁’에 방점을 둔 정책 지속 추진
 - － 아울러, 보안경찰 조직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는 등 보안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긴요
 - ※ ‘보안경찰 개혁’에서 ‘보안경찰 전문성 제고’로 패러다임의 전환
- 과도한 신변보호 부담 해소 및 실질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現 탈북민 신변보호체계의 효율성·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 ’20. 1월말 기준 신변보호관 1인당 29.7명 탈북민 보호
-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보호 활동도 세심히 전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조기 안착하는 데 적극 기여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보안경찰 조직 개편을 통한 보안수사 역량 강화 >

- 보안국 각 과의 업무성격이 특화되도록 조직·업무를 개편하여 보안경찰 전문성과 보안수사의 효율성 제고
- 향후 안보수사본부로의 확대 개편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설계
 - ※ 보안국 각 과(계)가 안보수사본부의 국(과) 단위 기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보수사본부 신설 모델의 미니어처(축소 모형) 형태로 재편
- 개편되는 업무별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등 관련 법령 개정

< 보안경찰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한 조직 혁신 기여 >

- (과제 발굴) 보안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 파악
 - 現 보안부서 근무자, 최근 전출자, 비보안부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경찰의 제도·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청취, 문제점 진단
 - ※ 인사·예산·교육·신변보호·안보수사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
- (문제 해결) 정책연구용역·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불합리·부당한 제도 및 실무 관행 개선안을 마련, 전문성 제고 뒷받침
 - 현장, 교육기관 등 소속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발굴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 개선방안 마련

< 보안경찰 정책 홍보를 통한 신뢰·지지 기반 마련 >

- (정책 환류) 보안국 주요 정책 추진사항 공유를 통한 관심과 지지 확보
 - ‘보안경찰 소식지’ 정기 배부, 기존 보안경찰의 이미지 쇄신 노력
 - ※ 주요 추진시책을 월별 테마로 선정, 적시성 있는 홍보를 통한 정책 공유
 -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만족도 조사 등 정책 환류를 통해 정책인지도 향상 및 신뢰·지지 기반 마련
 - ※ △각 부서별 워크숍 △지방청 교육 등을 활용, 주요 정책 상시 공유
- (대국민 홍보) 고도의 기밀성을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개가 가능한 보안경찰 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
 - ‘탈북민 범죄피해 예방 사례’ 및 ‘평화사랑 콘테스트’ 등 대외 홍보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활용,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노력
 - 또한, 보안경찰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오보 대응으로 불필요한 이슈 및 논란 발생 방지

< 탈북민 신변보호체계의 효율성·실효성 고도화 >

- 정기적 신변위해도 평가·조정(상·하반기 1회)과 신변보호 연장심의(분기별 1회) 등을 통해 신변보호체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 신변보호기간(5년) 경과자 대상 본인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연장 여부 결정
- 전국 신변보호관 대상, 기본 소양·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교육 진행
 - ※ △경찰특공대 위탁교육(연 2회) △전국 신변보호관 워크숍(상반기)

< 탈북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내실화 >

- (교육 내실화) 범죄예방교육의 내용을 수시 업데이트하고, 교육인원을 조정하여 탈북민의 교육 접근성 제고
 - ▶ '20년 법률 개정사항 및 최신 사례 반영하여 기존 내용 재정비
 - ▶ 탈북민 자살률 증가와 마약범죄(제조·매매·소지·투약 등) 위험성 내용 추가
 - ▶ 교육 인정요건 인원을 '5명' → '3명'으로 축소하여 교육의 양질화 추진
- (적극적 보호) 신변보호 중 인지한 범죄피해 또는 피해우려 탈북민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고
1/4분기	보안국 주요업무 계획 수립	1월	
	보안경찰 제도·실무 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3월	
	보안경찰 발전·연구 모임 구성	3월	
	전국 보안과장 화상회의 실시	3월	
	보안국 업무조정안 계획 수립	3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연장심의	3월	
2/4분기	권역별 현장 면담 조사 계획 수립	4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	4~5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추진	4~6월	
	신변보호관 경찰특공대 위탁교육(상반기)	5월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표준 강의안 개정·배포	5월	
	상반기 보안경찰 제도·실무·관행 면담 조사·분석	5~6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 워크숍	코로나19 진정 후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상반기)	6월	
3/4분기	신변보호관 경찰특공대 위탁교육(하반기)	7~9월	
	하반기 보안경찰 제도·실무·관행 면담 조사·분석	7~9월	
	평화사랑 공모전 개최	7~9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9월	
4/4분기	불합리한 제도·실무·관행 개선사항 현장 안착 점검	10월	
	「평화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10~11월	
	거주불명 탈북민 소재확인(하반기)	11월	
	보안경찰 제도·실무 관행 개선 추진 성과 분석	12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12월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하반기)	12월	
	보안경찰 제도·실무 관행 개선 자료집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한민국 국민 및 보안부서 경찰관
- (이해관계 집단)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보안업무 유관기관

□ 기대효과

- 안보수사본부 신설 대비 보안경찰 전문성 제고로 국가안보에 기여
- 보안경찰 대내외 신뢰 확보 및 선진 조직문화 구현
- 탈북민 대한민국 사회 조기정착 지원, 치안서비스 품질 고도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50%)	신설			49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50%)	신설	40	43	46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①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50%)=조직 재설계 노력도(20%)+제도·관행 개선 노력도(20%)+정책 홍보 노력도(10%)

- － ① 조직 재설계 및 제도·관행 개선 : 신규지표로 목표치를 산출할 과거 비교 자료가 없으며 행정안전부 부령 개정 및 전국 보안경찰 의견 통합 등 업무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안보수사본부 신설 대비 등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여 각 20점을 목표로 도전적 설정
- － ② 정책 홍보 : 신규 지표로서 목표치를 산출할 과거 실적은 없으나, 타 기능의 정책홍보 지표 등의 목표치 등을 토대로 공격적인 90%로 설정

②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50%)=탈북민 범죄예방교육(20%)+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탈북민 보호 우수사례(20%)

- － ①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 전년 실적(1,426건) 10% 상향 달성(1,569건을) 목표로 설정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범죄예방교육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2.1부터 상황 안정시까지 해당 기간은 실적산출 기간에서 제외 / 例: {1,569건 - (4.3건<日 목표치> × 실적산출 제외기간)}
- － ②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 : 신변보호활동 입력 누락·지연율 목표치를 전년 기준 보다 강화(1.5이하 달성 → 1.0%이하 달성), 달성난이도를 상향 조정
- － ③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 : 신규지표에 해당하니, 전년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선발 건수(9건)의 10% 상향 달성(10건)을 목표로 설정

○ 측정산식 :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50%)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50%)]

< 지표 ① >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50%)

－ 성과관리 계획상의 과제별 중요도와 난이도별 점수를 평가, 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측정

－ 과제별 이행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함으로써 객관적 노력도를 평가

1) 조직 재설계 노력도(20%)

< 측정산식 >

[과제별 등급 × 등급별 점수]

<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

등 급	A	B	C
수 준	조직 개편 관련 법령 개정 ※ 대령, 부령 등	조직 개편 관련 훈령, 예규, 규칙 개정	업무조정안 계획 수립·인력재배치
점 수	3	1.5	0.5

2) 제도·관행 개선 노력도(20%)

< 측정산식 >

[개선한 과제 × 개선 유형 별 점수 / 발굴한 과제 건수 × 100]

< 개선 유형 별 점수, 개선·발굴 노력도 >

유형 구분	1) 훈령·예규 이상 법령·규칙 개정	2) 1)외 제도·업무 관행 개선	3) 업무 컨설팅·직무교육
점수(건당)	2.0	1.0	0.8

※ 1)근거 규정이 미약한 업무, 2)규정 및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업무, 3)근거에 기반한 제도이나 시행이 미진한 업무

-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구간 별 점수 부여, 도전적으로 80% 목표치 설정

구분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점수	20	17	14	12	10

3) 정책 홍보 노력도(10%)

< 측정산식 >

[{(정책홍보활동 × 0.7) + (내부만족도 조사 × 0.3)} × 0.1]

< 정책홍보활동 >

구분	워크숍·세미나	소식지 발간 배포	평화사랑 콘테스트 홍보	언론보도
점수(건당)	0.5	1	3	5

※ 보안경찰 비난보도 게재시, 건당 1점 감점 (단, 정정보도시 감점 상쇄)

< 정책 내부만족도 조사 >

- 제도 및 관행 개선 관련, 전국 보안경찰 응답자 대상 설문조사(연1회) 결과 반영

구분	만족 75% 미만	만족 75% 이상	만족 85% 이상	만족 95% 이상
점수(건당)	0	60	80	100

**<지표 ②>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50%)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20%) +
탈북민 신변보호활동 성실히행도(10%) + 탈북민 보호 우수
사례(20%)**

－ 기존 투입요소 위주의 지표(범죄예방교육 및 신변보호활동)에서 산출적
요소인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를 신규지표로 추가

1)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20%)

<측정산식>

[범죄예방교육 횟수별 점수 분포표에 따른 득점(보안업무관리시스템상 통계 활용)]

<점수분포표>

횟수	12월 기준	~1,711건 (~120%)	~1,569건 (~110%)	~1,426건 (~100%)	~1,283건 (~90%)	~1,141건 (~80%)
	10월 기준	1,426건	1,307건	1,188건	1,070건	951건
점수		20	18	16	14	12

※ 각 구간별 기준치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 例: {각 기준치- (4.3건* × 실적산출 제외
기간**)} / *日 목표건수(1,569/365), **2.1 ~ 코로나19 상황 안정일

2) 탈북민 신변보호 활동(10%)

<측정산식>

[‘신변보호 활동 성실 이행도’를 보안업무관리시스템상 ‘기간 내 근무사항 입력비율*’로 객관화]

*** (신변보호활동 입력지연·누락 건수 / 보호 탈북민 수) × 10,000**

<점수분포표>

신변보호활동 성실 이행도	S등급 (1.0% 이하)	A등급 (1.0%초과 1.5%이하)	B등급 (1.5%초과 2.0%이하)	C등급 (2.0%초과)
점수	10	8	6	4

3)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20%)

<측정산식>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선발 횟수별 점수 분포표에 따른 득점]

<점수분포표>

횟수	11건 이상 (120%이상)	10건 (110%)	9건 (100%)	8건 (90%)	7건 이하 (80%)
점수	20	18	16	14	12

32]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Ⅱ-4-④)

□ 추진배경

- (대테러 중요성 증대) ISIS의 중동지역 거점 상실 이후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귀환이 본격화되는 추세
 - 특히, 최근 UN에서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테러전투원 다수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 발표

... 터키에서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테러단체 조직원 다수가 한국으로의 추방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에는 우즈베키스탄인 약 2만~3만 명이 체류 중으로 일부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

- UN 안전보장이사회, 「ISIS·알카에다 관련 보고서」(19.1.15.) -

-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이 자금조달 방식으로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발생, 보다 면밀한 대테러 외사정보 활동이 필요

최근 주요 국제 테러단체들이 거점 소실 등으로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제3국에 체류 중인 무슬림인들로부터 송금(일명 ‘하왈라 계좌’) 받는 등 테러자금 조달 방식을 다각화 ⇨ '19년 테러단체에 송금한 국내 체류외국인을 검거·구속

- (국내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급증) 국내 체류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252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불법체류자와 같이 신분 불안정한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연도	전체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
2018년	2,367,607	355,126	16,173
2019년	2,524,656	390,281	15,452
증가율	6.33%	9.1%	-4.6%

- 이처럼 체류외국인 중 사회적응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은 테러 등 범죄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 지대
- 따라서 외국인들의 갈등관계나 불만 등 범죄 사전현상으로서의 ‘징조’(signal)*를 미리 파악하는 예방적 외사정보 활동이 긴급

* 최근 이슬람중앙성원 주변 말레이시아인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기함에 따라 특정 국가인들의 세력화가 우려되며, 나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추종하는 SNS 단체대화방이 확인되어 국수대 통보하는 등 예방적 정보활동 실시

- (방첩활동 강화) 외국정보기관의 국내 외교·안보·첨단기술 등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첩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필요
 - 최근, △○○○ 대사관 무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주한 ○○○ 대사 성추행 사실 무마시도 등 다수의 범죄 사실 확인
 - 위와 같이 국내에서도 駐韓 공관원 및 외국인들의 정보활동 및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국내 방첩 활동을 강화해야할 시기
- (주한 공관 안전확보 필요) 최근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위해 시도 사례가 연이어 발생, 이는 자칫 외교적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등 관련 기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주한 외국공관 위해시도 사례

- ▶ '19. 10월,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9명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美 대사관저 월담
 - ▶ '19. 8월, 주취자가 제주 日 영사관저 출입문 손괴
 - ▶ '19 11월, 정신이상자가 프랑스 대사관 차량차단기 및 유리 창문 손괴
- 원활한 사건처리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경찰과 주한 외국공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해외사례 조사 수요 증가)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찰활동이 중요
 - 특히,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 해외경찰 치안시책 자료를 필수적으로 참고해야할 시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국제협력을 통해 테러예방 전문성 확보 및 테러위험인물 차단

-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그간 해외에서만 테러가 발생하였기에 테러예방에 대한 정보·경험·인식이 부족
 - * 국무총리는 2.7. 테러대책추진위에서 “테러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언급
- 특히, 테러예방에는 위험인물 인적사항*이나 수사 노하우** 등이 필요하므로,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
 - * 테러단체 가입여부나 전과 등 / ** 조직·마약범죄처럼 점조직 수사 필요

- 이에, 美 FBI 등으로부터 테러예방 기법과 자료를 입수, ① 외사 요원 역량강화 ② 체계적 정보 활용 ③ 예방적 수사활동 추진

- (역량 강화) △ 테러예방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 확대 △ 해외 대테러기관 위탁교육 신설·참여 △ 전문가 인증제 도입

* 첩보 수집 방법 / 분석 기법 / 주요 인물·단체 / 자금 조달·수법 등

- ▶ (정규 교육과정 신설) '외사 대테러 정보·수사 전문교육과정' 개설
- ▶ (해외교육 참여) 美 FBI·CIA 위탁훈련, 우즈베크와 MOU 체결·훈련 신설
- ▶ (인증제 도입) 활동 경력·성과, 교육이수 단계 등에 따른 전문가 인증

- (정보 활용) 러시아·미국 등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획득, 국내 테러위험요소 분석에 활용

- ▶ (러시아) '19년 러시아 연방보안부(FSB)의 국제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접속권한 획득, 테러위험인물 약 5만명 정보 활용 중
- ▶ (미국) '20년 美 테러감시센터(TSC)와 테러위험인물정보 공유 MOU 체결, 3월부터 테러위험인물 약 100만명 정보 활용 예정

- (예방적 수사활동*) 테러방첩팀·테러정보관 등 대테러 전문인력을 운용, 테러관련 법률 위반자 수사 및 강제퇴거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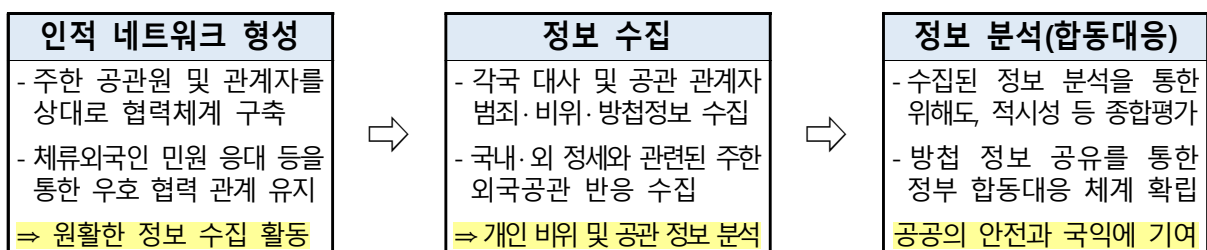
* Preventive Investigation: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테러예방

- ▶ (사건 추세) '19년 전국테러방첩팀(50명)은 9개국 출신 35명을 강제 퇴거 / '16년 9명 → '17년 29명 → '18년 33명 → '19년 35명으로 지속 증가
- ▶ (주요 사례) '19.5월 국내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이 UN지정 테러단체 하부 조직에 송금 → 서울청 테러방첩팀에서 첩보 입수, 검거 및 구속(10. 19.)

② 주한 공관 및 체한 외국인 대상 방첩정보 수집활동 강화

- 경찰청은 6대 방첩기관* 중 하나로 既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공관원 등의 국내 불순 정보활동을 원천 차단

* 방첩기관 : 경찰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해경청, 법무부, 관세청



- 수집된 방첩정보 분석을 통해 △위해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평가 후 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

③ 주한 공관 및 외교관 위해정보 수집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 美 대사관저 월담 사건 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외국공관 안전전담 T/F’*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 외국공관 안전전담 T/F 운영 계획

- T/F 팀장: 외사정보과장 / 팀원: 외사정보·정보3·경비·경호·대테러안전·수사·위기관리센터·범죄예방정책·보안2 계장
- 정기(분기별 1회)·수시로 외국공관에 대한 위해요인을 T/F 관련기능과 공유
- 분기별 1회(年 4회) 위해도 등급 再분류 추진(△외국공관 대상 사건 현황, △T/F 관련기능 의견, △대사관 요청사항 △외교부 의견 등을 고려)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와 경찰청 간 핫라인 역할을 수행하며 주한 공관 및 외교사절 안전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

※ '19. 11. 21.(목) 외교부 의전장(1급) 주관 「주한 공관 안전대책 간담회」에 외사정보과장 참석

④ 외국기관과의 정보교류 실무회의를 통해 치안협력 강화

- ‘5개국 각 1명’ 또는 ‘단일 국가 5명’ 내외로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 소그룹 토론 형식의 「대테러 실무회의」 개최(年 3회 추진)

※ 대규모 컨퍼런스 형태의 회의는 국가별·지역별로 대테러 관심분야가 달라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 소규모 그룹회의로 전환

- 기관 소개나 피상적 내용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맨투맨式 토론과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 분야별 심층논의 진행
- 한국 경찰과 주한 외국공관 간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공관 보안담당관 협의회」 개최(年 1회)
- 외교사절 신변보호 및 체류외국인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주요 치안정책을 홍보, 국격 제고에 기여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청-미국테러리스트감시센터 간 테러정보공유 MOU 체결	1월	
	외사정보 대테러 업무 체계화 방안 계획 수립	1월	
	전국 국제공항·항만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월	
	러시아 FSB 국제테러정보데이터베이스(ICD) 시스템 설치·운영	3월	
	대테러 외사정보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월	
	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3월	
	미국 테러리스트감시센터 데이터베이스 조회 시스템 설치·운영	3월	
2/4분기	국내외 테러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4월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개정	4월	
	경찰청 신속대응팀 인력풀 정비	4월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테러방첩팀' 현장교육 실시	5월	
	P4G 정상회의 외사활동대책 수립 및 시행	5월	
	국제공항·항만 권역별 보안검색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5월	
	국제 대테러 실무회의 개최(1차)	6월	
	CIA 현지 대테러 위탁교육 참석	6월	
	외사 대테러 정보·수사 전문교육(인재개발원) 실시	6월	
	테러방첩팀·테러정보관 권역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6월	
3/4분기	도쿄 올림픽 기간(7.24.~8.9.) 상황관리반 운영	7월	
	국제공항·항만 권역별 보안검색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8월	
	주한공관 협력치안을 위한 보안담당관 협의회(DSOA) 개최	9월	
	국제 대테러 실무회의 개최(2차)	9월	
	테러방첩팀·테러정보관 권역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9월	
4/4분기	국내외 테러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10월	
	대테러 정보회의 결과자료집 발간	11월	
	국제공항·항만 권역별 보안검색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11월	
	「2019 해외 우수 치안시책」 책자 발간 및 전국 경찰에 배포	12월	
	테러방첩팀·테러정보관 권역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12월	
연중	▲ 국가방첩전략회의 ▲ 방첩유관기관협의회 ▲ 테러정보공유협의회	연내 실시	他기관과 일정 조율
	① 국내 체류외국인 소식(火) ② 주한 외국공관 소식(水) ③ 해외 치안 시책(金) 관련 「주요 외사정보」 작성·배포	주 3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재외국민 포함)
- 이해관계집단: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 경찰 등

□ 기대효과

- 대테러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테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 사회안전 확보
- 방첩활동을 병행하며 체류외국인 및 주한 외국공관과 밀접하게 교류, 외국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치안부담을 해소
- 국내 중점 추진 치안정책 및 긴급현안 관련 해외사례를 적시에 수집·분석·공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시책마련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외사정보 활용도 (50%)	신규	1,540점	1,694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테러방첩사범 검거활동 (25%)	신규	631점	694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대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교육 (25%)	신규	265점	291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 ① 외사정보 활용도 】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아래 '측정산식'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계산 시 1,540점이 되며, 올해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작년 대비 110%인 1,694점으로 설정
- (**측정산식**) 외사정보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합산

- ▶ 양적평가: 외사정보과에서 생산한 보고서(외사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기준) 건당 1점 부여
 - ▶ 질적평가: 외사정보 보고서가 활용된 경우, 활용한 주체에 따라 추가로 1~10점* 부여

* BH·경찰청장·타부처 10점 / 국장·지방청장 5점 / 타기능 실무자 1점
-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외사정보과에서 ① 외사정보 보고서 목록 ② 활용된 사례 목록 작성

【 ② 테러·방첩사범 검거활동 】

- (**'20년 목표치**) 올해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작년 실적 631점 대비 110%인 694점으로 설정
- (**측정산식**) 테러·방첩관련 위해우려자 '검거점수'(1명당 1점), 테러·방첩관련 위해우려자 '강제퇴거 점수'(1명당 1점), 외사보안사업 신규개척 활동 '개척점수'(건당 10~40점)를 합산

- ▶ 검거점수: 테러·방첩 관련 위해우려자 입건 시 1명당 1점 부여
- ▶ 강제퇴거 점수: 테러·방첩 관련 위해우려자 강제퇴거 시 1명당 1점 부여
- ▶ 개척점수: 외사보안사업 개척 난이도별 건당 A급 40점, B급 20점, C급 10점 부여

등 급	분류 기준	평균 진행기간
A급	8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사보안사업 8 타 방첩기관 공조 또는 해외연계 활동이 필요한 외사보안사업	1년 6개월
B급	8 국내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1년
C급	8 관할 지역에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6월

-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외사정보과에서 ① 테러·방첩사범 검거실적 ② 외사보안사업 목록 작성

【 ③ 대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교육 】

- (**'20년 목표치**) 올해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작년 실적 265점 대비 110%인 291점으로 설정
- (**측정산식**) 대테러·방첩·공항만 업무 전문화 교육 시 종류에 따라 '교육점수' 부여

- ▶ 교육점수: 교육 시 건당 '해외 연수·국제회의' 3점, '전문 교육' 2점, '현장 교육' 1점 부여

구 분	세부 유형
해외 연수·국제회의	△ 해외 기관(및 국제기구) 방문·초청 연수 △ 국제회의* △ 모의·합동 훈련 등
전문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 경찰교육기관 교육과정 △ 각종 세미나 참여 등
현장교육	△ 현장방문 교육 △ 워크숍 △ 자체 직무교육 등

* 단, 국제회의 중 교육목적 없이 교류활동에 집중한 '행사성' 회의는 제외

-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외사정보과에서 ① 교육 계획서 ② 결과보고서 작성(온나라 공문 등)

33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Ⅱ-4-⑤)

□ 목 적

- 국·내외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 실패는 국가안보 위기와 국격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경호실시는 필수
- 美-이란 갈등·국제 테러증가 추세와 관련 해외 국민 및 외빈에 대한 경호제공으로 대외관계 증진에 기여

2020년 경호 예상

- 국정 4년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지역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과 교류 협력도 광범위하게 추진 예상

(대통령 신년사 中) 경제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를 체감하도록 /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데도 총력 /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

- △ 3~6월, 시진핑 주석 방한 △ 6. 29.~30. P4G 정상회의 △ 9~11월 한중일 정상회담 등 주요 국빈방한 및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정당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도 수행
- 지속적인 인적·물적 경호역량 강화 노력으로 성공적 경호업무를 완수함으로써 국정운영을 뒷받침

□ 추진 방향

- 경호대상자의 안전확보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조화시킴으로써 ‘친근한 경호·열린 경호·낮은 경호’ 문화 정착
- 현장 근무자로 구성된 ‘경호인력풀’을 정예화하고, 경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인적 경호역량 강화
- 아울러,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최신 경호장비를 교체·보급하고, 경호행사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공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호대상자 안전확보) 경호처 등 경호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지속적인 경호 현장점검을 통해 경호행사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공유하여 경호업무 수준 향상

-
- ▶ '19년도 경호 종합 평가 및 '20년 경호업무 지침 하달
 - ▶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배포
 - ▶ 경호과장, 대통령 경호행사 시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한 환류 실시
-

- － 국내(대통령 내외분, 4부요인, 전직대통령, 반기문 前 총장, 미대사 등) 및 국외(국·외빈)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완벽한 경호 실시

- － 외교부, 기재부 등 부처별 국제행사 개최 시 초청 외빈에 대해 경찰청에서 경호제공으로 외교관계 지원

※ '20년 주요 국제행사 : △ 세계탁구대회(3월, 부산) △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5월, 인천) △ 제주포럼(5월, 제주) △ 세계지식포럼(9월, 서울)

- － '20년도 국가적 주요행사(제21대 총선 정당대표 신변보호·P4G 정상회의·한중일 정상회담 등)에 총력 경호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으로 든든한 국정운영 뒷받침

- (경호인력풀 관리) 외빈경호대와 경호인력풀 합동근무 실시로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외빈경호 강화

※ 경호인력풀 : 일선 경찰서·지구대 직원 중 경호 유경험자로 구성, 다양한 경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설 경호인력

- － 경호인력풀(①근접수행경호 ②MD·X-Ray 검색요원)을 재편성하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경호수요 발생 시 우선 선발 활용

- (교육·훈련) 경험이 부족한 경호인력풀·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호교육 프로그램과 선진 경호기관 교류 지속 추진

- 인재개발원 경호전문화 교육(3개 과정*) 및 사이버콘텐츠 교육(3개 과정**)을 통해 정예 경호요원 양성
 - * 경호실무과정(1주, 연3회), 근접경호심화과정(2주, 연4회), 기동경호심화과정(2주, 연2회)
 - ** 근접수행경호의 이해, 경호실무사례, MD 및 X-RAY 검색기 운용요령
- 美대사관과 협의하여, DSS(국무부 외교경호실) 연수 인원·횟수 확대 추진, 국내 환경에 맞는 우수 경호기법 도입
 - ※ 외빈경호대 총 22명 교육이수 : '15년 2명(1회), '16년 8명(4회), '19년 12명(6회)
- (우수 경호기법 전수로 치안한류 확산) 외사국과 협의, '19년 최초 진행된 UAE 파견 전수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정례화
 - ※ '19. 10월 외빈경호대 등 교관요원을 각 2명, 2주간 파견하여 전수 교육
- (신규장비 도입)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외 유관기관의 최신장비 도입·운용사례를 조사, 중기 사업계획에 반영
 - ※ 관세청에서 폭발물·마약 등 검색용 AI X-ray 검색기 개발 시 도입 추진
- (경호행사 평가·환류) 반기별 경호행사 문제점 분석·평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국 경호인력풀 및 MD·X-ray 검색요원 재편성	2월	
	주요인사 경호활동 개선지침 수립 및 화상 교육	3월	
	총선 신변보호팀 근무 매뉴얼 수첩 제작	3월	
2/4분기	'열린 경호' 정착을 위한 '20년 경호업무 지침 발간(책자용)	4월	
	21대 총선 정당대표 신변보호팀 운영	4월	
	P4G 정상회의 종합치안대책 수립 시행	6월	
	P4G 정상회의 경호경비 활동	6월	
3/4분기	상반기 대통령 경호행사 평가·환류	7월	
	경호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 예산 확보	9월	
	전국 경호장비 일제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9월	
4/4분기	경호전담부대 경호장비(총기·방탄복 등) 신규 구매 교체	10월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경호 매뉴얼 제작·배포(수첩용)	11월	
연중	경호행사 종료 후 평가·분석 및 개선지침 하달	연중	
	주요인사 경호 및 신변보호 활동	연중	
	대규모 경호행사 대국민 홍보활동(언론보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
 - ※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직결된 사항으로 모든 국민이 수혜자에 해당
- 이해관계집단 : 경호처·군·국제행사 주관부처 등 관계기관

□ 기대효과

- 경호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경호활동을 실시하여 든든한 국정운영 뒷받침
- 정부부처 등 초청 외빈에 대한 경호 제공과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으로 외교관계 개선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공적 경호행사 수행을 위한 경호활동(I-1-일반재정②)				
① 경비경찰활동(2131-311)			4.89	4.95
■ 일반수용비(210-01)			0.15	0.15
■ 임차료(210-07)			4.0	4.0
■ 유류비(210-08)			0.07	0.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0.32	0.32
■ 국내여비(220-01)			0.21	0.21
■ 국외여비(220-03)			0.14	0.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수행	-	-	-	65 각 지표별 과거 추세치를 고려, 성과 지표에 따른 목표치 설정	① 경호역량 강화 달성률(%) × 0.5 + ②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이행도 달성률(%) × 0.5	①시행공문과 문서등 근거자료, 과제추진 관련 자료, 지방청 보고서 등 ②경호행사 실적 통계, 경호출장 결재공문, 공문 등 근거자료, 발생·상황 보고서, 위해물품발견 보고서

【성과지표 선정이유】

- 경호인력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 인적인 부분과 경호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물적인 부분 등 경호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이행을 성과에 반영되도록 함
- 대통령 및 4부 요인과 국민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안전확보는 경호기능의 핵심업무로서 경호행사 1건을 하더라도 사전 경호환경 분석과 협의, 준비, 실시, 평가단계를 거쳐 행사를 수행하므로 경호행사의 실적과 성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호관계관 회의 및 경호현장 방문점검 등 경호업무수행을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도록 함

【목표치 산출근거】

1. 경호역량 강화(50%)

- 최근 3년간의 경호역량강화 노력을 신규 측정산식으로 산출하면 '17년도 56점, '18년 61점, '19년 62점이 됨
- 3년간 실적치 상승 ①'17→'18년 : 8.92% ↑ ②'18→'19년 : 1.63% ↑ 으로, 추세치 5.27%(65.2)보다 높은 66점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

【측정 방법】

- 일상적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기본점수 40점을 부여하고 경호역량강화 노력 3개분야 과제를 선정해서 달성된 과제에 따라 가점부여
- 20년도 추진과제 중 경호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3개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목표치를 설정 하였음
- 경호역량강화는 ①인적·물적역량강화 ②교육자료 제작·배포 ③ 경호평가·분석 후 개선지침 하달 등 3개 분야를 달성도에 따라 가점 부여

<경호역량강화 세부추진 과제>

연번	추진과제	역량강화 3개분야	세부일정
1	경호인력풀 및 MD·X-ray 검색요원 재편성 교육(화상교육)	①인적·물적	2월/연중
2	경호전담부대 경호장비 신규 도입	①인적·물적	연중
3	경호장비 교체 및 장비 예산 편성	①인적·물적	연중
4	경호 매뉴얼·근무수첩·근무지침 등 제작·배포	②교육자료	연중
5	경호대상자별(갑호,을호,병호 등) 근무지침(책자)제작 배포	②교육자료	2월~7월
6	경호행사 종료 후 평가·분석 및 개선지침 하달	③개선지침	연중

< 측정산식 >

40점(기본점수) + 경호역량강화(3개분야 달성 과제별 점수합산) = 20년도 목표치

○ 경호역량강화(3개분야)

구분	①인적·물적역량강화	②교육자료 제작·배포	③ 경호평가·분석 후 개선지침 하달
대상	인력풀관리,교육, 장비도입 장비점검, 장비예산편성	매뉴얼,근무지침,근무수첩	경호대상자 경호 (갑호·을호·외빈등)
배점	2점	2점	1점

ex) 전체 세부추진과제(6건), 달성된 과제 건수에 가점부여 경호역량 강화 노력
=40+경호역량강화(①5건×2 + ②2건×2 + ③3건×1) = 57점

○ 감점항목 : 경호역량강화 세부추진과제 미달성 시 과제별 -1점 부여

2.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이행도(50%)

- 최근 3년간의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이행 노력을 신규 측정산식으로 산출하면 '17년도 52점, '18년 56.2점, '19년 59.1점이 됨
- 3년간 실적치 상승 ①'17→'18년 : 8.07% ↑ ②'18→'19년 : 5.16% ↑으로, 추세치 6.61%(63)보다 높은 64점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

【측정 방법】

- 경호행사 건수의 변동에 의한 편차의 폭을 줄이고 일정 기준 이상의 결과가 되도록 기본점수 40점을 부여하고, 경호업무 수행 이행도 달성에 따라 점수 부여
-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경찰청 과·계장급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경호관계관 회의 및 현장방문 점검, 현장 근무 태도와 관련한 위해물품 발견 횟수 등을 이행 실적에 따라 4개 분야에 점수 배점
- 즉, ①경호관계관회의 ②경호현장 방문점검 ③경호행사 실적 ④위해물품발견 등 4개 분야의 실적을 이행도에 따라 가점

< 측정산식 >

40점(기본점수) + 경호업무 수행 이행도 - (위해발생도) = 20년도 목표치

○ 경호업무 수행 이행도

구 분	경호관계기관 회의	경호현장 방문 점검	경호행사 실적	위해물품 발견
대 상	경호대상자	경호과·계장이상	국내·국외경호대상	경호행사 대상
횟 수	1	1	연간 경호실적	1
배 점	0.1점	0.2점	2~10점	0.2점

- ▶ (경호관계관 회의) 경찰청·경호처·외교부·각국 대사관 및 경호팀 등 협의
- ▶ (경호현장 방문점검) 경찰청 과·계장급이 경호현장과 전담경호대 등 점검 및 의견수렴 횟수
- ▶ (내·외빈경호행사실적) 국내외 경호대상자 경호행사 실적에 점수 부여

횟 수	2,300 ↑	2,100~2,300	1,900~2,100	1,700~1,900	1700이하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최근 10년간 통계를 참조하여 작성(평균 2,300회) 경호실적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함.

- ▶ (위해물품발견) 경호현장에서 위해물품 소지자 인지 및 검색장비를 통한 위해물품 발견 건수

[가감점 항목]

- 위해발생도 = [(위해발생 건수 × 위해상황별 가중치) 총합] / 전체경호행사 건수 × 100

※ 위해상황별 가중치 : 사망(10점) / 중상해(5점) / 폭행·상해(3점) / 행사방해(1점)

ex) 중상해 1건, 폭행 2건 발생 시 위해발생도 = [(1건×5점)+(2건×3점)] / 전체경호행사건수 × 100

- 대규모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행사 가점

구 분	10개국 이상 참가	6~9개국 참가	3~5개국 참가
가 점	3점	2점	1점

- 경호행사 모범사례 가점(건당 0.2점)

기 본 방 향

- ◇ 경찰개혁이 일선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혁신
 - 인사·교육제도 개선, 일선의 사기를 높이고 경찰개혁의 수용성 강화
 -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 평등 문화 정착 △합리적인 감찰 활동 추진
- ◇ 처우개선·첨단장비 활용 등 근무여건 향상을 통해 일선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여, △직장 활력 제고 △현장대응력 강화 도모
 - R&D를 거친 검증된 치안정책·경찰장비를 적용해 스마트치안 활성화
 - △법률지원 △특수 건강검진 강화 등 전방위적인 복지기반 확충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0	4	4	17	4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없음
Ⅲ-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 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㉔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치안정책 완수를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		인력증원 / '20년 국정과제 수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장인력재배치
㉕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㉖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 활용도
㉗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활용도 / 정책 참고자료 작성 실적 /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 범죄정보 활성화 지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㉔ 공정한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감찰활동 만족도 / 감찰정보 제도개선 활용도
	㉕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 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 실적 / 징계양정 수용도
	㉖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Ⅲ-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㉗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㉘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경찰장비만족도 / 장비개발 등 규격 개선도
	㉙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연구개발 예산증가액 / R&D연구결과물 현장 만족도 / 치안장비·기술 수출상담 실적
	㉚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 치안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 경찰청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㉛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 무사고 안전비행
Ⅲ-4.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㉜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치안현장 활력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연가사용 실적 / 유연근무제 활용
	㉝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만족도 /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㉞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정비 달성도 /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 현장법률365센터 대응 노력도
	㉟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
	㊱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경찰역사 인식도 / 기록물 관련 교육 이수 지표

(1)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정책운영>** △합리적 인사제도 △내실 있는 교육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활력 증진
 - － 권력기관 개혁 등 경찰 조직의 주요과제를 현장에 접목, 일선에서도 경찰개혁 과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
 -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감사·감찰 활동에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공정·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등 구성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
 - － 아울러, 성 평등 문화가 경찰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내 수직적 갈등 해결 및 수평적 불평등 해소
 - **<스마트치안>** 치안 인프라를 최첨단 기술로 정비, 복잡·다양한 각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치안」 확대
 - － 치안 R&D를 활성화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경찰장비·치안정책을 개발하고, △시스템 정비 △전산망 보호 등 정보화 서비스 품질개선
 - **<직장 활력>** △의료 혜택 증진 △법률·소송지원 등 현장 경찰 활동에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확충하여 내부만족도 향상 견인
 - － 경찰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관리를 체계화하여 조직의 자긍심 제고
- ⇒ **현장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안전 △사회정의 △경찰개혁 등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동참' 확보**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없음

[2] 성과지표 : 없음 ※ 국조실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결과’ 개선안 반영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은 어려우나, 본 전략목표의 내용인 ‘사기 증진’을 통해 기타 전략목표(△주민안전 △사회정의) 및 성과지표(3개) 달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경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미완료 과제 이행 △완수 과제의 현장 안착 등을 계속 요구하는 분위기
 - － 특히 올해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조직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개혁과제가 전면으로 부각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하는 묶음” - 문재인 대통령(1.21, 국무회의 시)

- <갈등요인> 절차와 통제를 중시하는 ‘경찰개혁 과제’와 급박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치안현장 활동’은 많은 부분에서 상호 충돌
 - － 또한, 자치경찰 이관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분과 처우 변동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 필요
- <갈등관리 계획> 현장의 사기 양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개혁’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조 유지
 - － 올해부터 구성되는 ‘직장협의회’ 등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치안정책의 △적용 가능성 △일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여 경찰개혁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 유도

[4] 참고자료

- 경찰청(www.police.go.kr) - 경찰통계연보(직무만족도)

[1] 주요 내용

- <치안정책 방향성 확립 및 이행>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조직 차원의 목표와 실행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
 - － 현장 인력 증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민생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직 내 3C(연결·공유·협업) 활성화와 ‘절차적 정의’ 내재화 추진
-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 운영> △성별·입직별 균형인사 △여경 선발비율 확대 △우수사례 표창 활성화 등 공감받는 인사제도 운영
 - － 채용·보직·승진 등 인사제도 전반에 성별 대표성을 제고하고, 업무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현장의 자긍심과 역동성을 강화
-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공직가치와 인권가치 내재화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확대
 - －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확대 △직장훈련 내실화 △동료강사 활성화 △현장학습모임 지원 등 일선의 눈높이에 맞는 다각적인 교육 제공
- <정책정보 지원> 국민 안전과 위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참고자료 생산을 강화하여 치안정책·시책의 결정 및 집행을 지원
 - － 주요 이슈 상시 모니터링으로 맞춤형 치안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추진 미비점에 대한 여론 수집, 정부·치안정책 개선에 기여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치안정책 완수를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	인력증원 / '20년 국정과제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장 인력재배치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 사례 표창비율 /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 활용도 / 인재채용률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활용도 / 정책 참고자료 작성 실적 /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 범죄정보 활성화 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80.5	80.0	82.0	82.5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는 '18년 하락 후 반등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0.8)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2.3)을 고려, '20년 목표치는 예측값보다 높은 82.5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중 인사·성과관리·교육 부문 만족도의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그간 경찰개혁을 통해 축적한 조직의 역량을 바탕으로 치안 분야 전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필요
- ➡ 주요 정책과제 및 지시사항·국정과제·치안이슈 관련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미진과제를 점검·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별 대표성 제고 여론 강화
- ➡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성별 균형 인사를 추진하고,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달성 추진
- * 경감 이상 여성 관리자 '22년까지 7% 이상 확대 목표

[4] 참고자료

- 전자통합평가시스템(www.eipses.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34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치안정책 완수를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 (Ⅲ-1-①)

□ 추진배경

- 올해는 부단한 개혁으로 축적된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인권·민생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
 - － 특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차질 없는 수사구조개혁 후속조치 이행’ 등에 대한 외부의 구체적 방안제시 요구 증폭
- △ 계획 수립 △ 업무추진 및 내실있는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과 완성도 제고 필요

➤ 기획조정담당관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촘촘한 정책 관리를 통해 핵심 과제의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 경찰청 정책방향 설정 및 주요과제 관리 >

- △ 주요업무 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등 수립 → 정책목표와 실행과제 정비 등 정책 추진의 방향성 확립

- ▶ 주요업무 계획 : 「민주·인권·민생」을 정책목표로 설정, 세부 추진과제 발굴
- ▶ 성과관리 계획 :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추진계획 수립
- ▶ 성과평가 계획 :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쏠 관서·부서·개인 역량과 성과 평가
- ▶ 정부혁신·적극행정 계획 : 정부 추진전략과 방향을 분석, 자체 기본계획 수립

- 경찰청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청장 주재 △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 정책과제 성과보고회 등 개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 과제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 ※ 기획조정관실에서 정책과제 추진현황 분석, 미진과제를 안건으로 상정
 - 점검주기 : 대통령·총리 등 지시사항(분기) / 국정과제(매월) / 치안이슈(수시)
 - － 주요정책 논의, 혁신 포럼, 현안조정회의 등 추진 시 수평적·속의절차 정착을 위해 조직 내 3C(연결·공유·협업) 활성화

- 이해관계자 참여, 의견 경청·설명 등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 치안행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정의’ 내재화

※ 본청 내부 추진체계 정비 / 각종 치안데이터·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

- 자체평가 위원회를 통해 경찰청 정책과제의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평가까지 단계별 추진사항 점검·보완



- 주요정책 과제의 치안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 운영
- 성과 저조 관서·부서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책추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현장의 성과창출 지원

< 2. 인력·조직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생치안 역량 강화 지원 >

- (인력증원)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안전·지역경찰·수사 등 국민생활 접점부서 신규 정원 3,991명 증원 예정

※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23년 6월)와 관련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년 민생치안 인력 2만명 증원에 주력

5개년 인력증원 로드맵

구분	계	'17년(하)	'18년	'19년	'20년	'21년 ~ '22년
계	20,000	1,870명	2,120명	4,582명	3,991명	7,437명
민생치안	12,227	1,870명	2,120명	1,502명	2,525명	4,210명
의경대체	7,773	-	-	3,080명	1,466명	3,227명

- 아울러, 계급별 적정수준의 정원을 확보하여 하위직에 편중된 침탑형 직급구조*를 개선, 활력있는 현장경찰 활동 지원

* 인력 현황 : 총경 이상(0.5%) - 경정·경감(9.6%) - 경위 이하(89.9%)

- (조직관리) 전년도 대대적인 재배치(1,633명)로 인해 지역간·기능간 격차를 다소 해소한 가운데, 면밀한 조직진단으로 잔여 치안불균형 해소
 - －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안부 권고기준을 수용, 전체 정원의 1%인 1,2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실시 예정
 - ※ 민생안전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안전과(3개廳)·과학수사과(3개廳)·교통과(1개廳) 등 관련 부서 신설 완료('19년)
- (통계관리) 매월 주요 경찰활동 현황·성과 등에 대한 통계를 취합·분석, 정책자료로 제공하여 내실있는 정책 추진 뒷받침
- ➔ 민생치안의 안정적 추진은 인력·조직 등 가용자원 확보가 중요
→ 생안·수사·교통 등 민생치안 분야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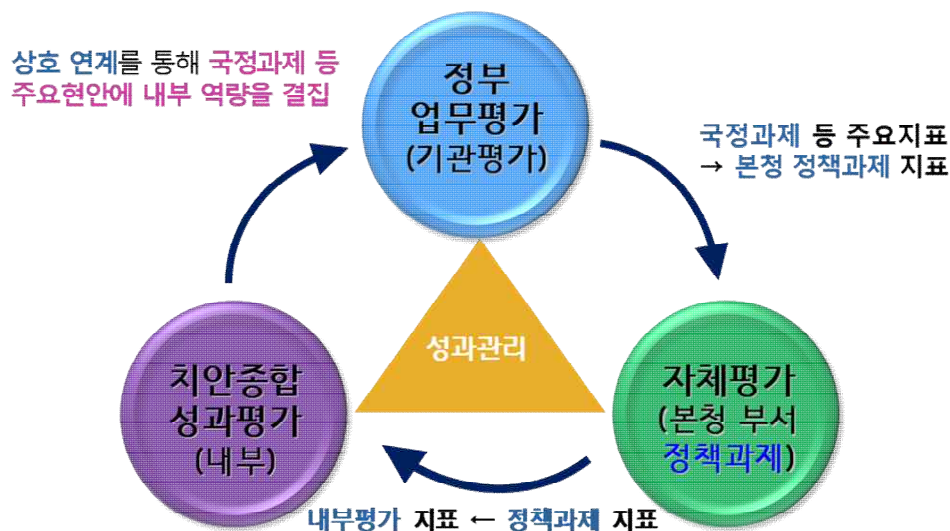
< 3.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안행정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보 >

- △ 국회 의원·보좌진 업무설명회 △ 당정협의회 時, 업무보고·정책 설명자료 등 제공하여 입법·예산 등 국회의 지원동력 확보
 - － 국정감사·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 시 현안질의 대응 총괄,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가교역할로 쟁점화 사전 차단
 - ※ 국회의 주요 지적사항은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
-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행안부 확대간부회의 등 정부 내 주요 협의체에 참여해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 협조사항 등 제시 → 치안 정책에 대한 유관부처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간 협력 도출
-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의견수렴·분석, 각 부서에 전파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독려
 - ※ 경찰접촉고객 대상 조사인 치안고객만족도 최고치 달성('19년 81.9점)
- 본청·현장간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매개체 역할 수행
 - － △ 주요이슈 유관기능 실무회의 △ 청장 메시지 기획·관리 등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현장과 지속 공유
 - － 내부망 소통창구(현장활력소) 관리, 일선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하여 각 기능에 통보, 개선토록 유도

< 4. 성과평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 전인 >

- 민생치안 중심의 치안종합성과 평가 운영으로 추진력 극대화
 - － 「정부업무평가」(부처 대상) ↔ 「자체평가」(본청 정책과제) ↔ 「치안종합성과평가(내부)」 각 평가제도의 지표간 통일성 유지

<경찰청 성과관리 체계>



- ➡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중점과제 추진에 현장의 역량을 총 결집, 전체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관리
- 성과평가 중간점검을 활용해 추진사항 관리 확행
 - － 자체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부진과제 개선방안 마련 및 저조관서·부서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 현장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발굴·보완, 성과평가의 수용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제고

주요 추진사항

- ▶ △ 권역별 현장 간담회(본청·지방청·경찰서 직원 참여, 성과평가 방향성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 사이버 강좌 개편 △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하달)	1월	성과
	◦ 2020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수립	2월	기획
	◦ 자체평가 정책과제 전문가 대면 컨설팅	3월	성과
	◦ 경찰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3월	성과
	◦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3월	성과
	◦ 국정과제 성과지표·세부이행계획 수립	3월	성과
2/4분기	◦ '21년 경찰청 소요정원안 확정(행안부 제출)	4월	조직
	◦ 경찰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4월	기획
	◦ 치안종합성과평가 사이버 강의 개편	5월	성과
	◦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간평가 실시	5월	성과
	◦ 지방청·경찰서 성과관리 설명회 개최	6월	성과
3/4분기	◦ 본청 부서 자체평가 중간점검 실시	7월	성과
	◦ 성과 우수관서·부서 선발	8월	성과
	◦ 경찰청 정부혁신 경진대회 개최	9월	기획
4/4분기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10월	국회
	◦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작성·발표 (국무조정실)	10월	성과
	◦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최종평가 실시	11월	성과
	◦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배포	11월	성과
연중	◦ 치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찰인력 재배치	연중	조직
	◦ 임시회 등 국회 일정 시 업무보고·현안질의 대응 등	연중	국회
	◦ 경찰청 성과보고회 개최	분기별	기획
	◦ VIP·총리·청장 지시사항 관리·조치결과 보고	분기별	기획
	◦ 국정과제 추진사항 점검	매월	기획
	◦ 치안통계 작성·분석	매월	성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생치안 확립과 직결되는 국민과, 인력증원·재배치 평가 등의 대상인 현장 경찰관
- (이해관계자) 추진과정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본청 각 기능·지방청·경찰서 및 他 부처·국회 등 유관기관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결집,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선도
- 또한, △ 수사구조개혁 △ 자치경찰 △ 인권경찰 등 개혁과제의 성공적 이행으로 「민주·민생·인권」 경찰로서의 도약을 완수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인력증원(40%)	1,870명	2,120명	4,582명	3,200명	연도별 증원인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전체 국가공무원 증원 등과 맞물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매우 난이도 높으며 △현장대응력 강화 △공공 일자리 확충 등 경찰 조직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금년도부터 단계별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 인력 충원(1,466명)까지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한 만큼 ⇒ 최근 3년 평균치의 10% 이상인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증원인원 ÷ 목표치 × 100(%)	
'20년 국정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30%)	69%	76%	89%	78%	기존('18년~'19년) 달성도 평가는 전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청 핵심과제 선별·관리'에서 국정과제 총괄부서로서의 외연을 넓혀 금년부터 전 성과지표 달성도를 관리 ⇒ 국조실 선정 전 성과지표 18개 중 14개 달성 시 가능한 78%로 최근 3년 평균치 상승도 이상의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개별 지표의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 대비 전부 상승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상승도 이상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등 관리지표(18개) × 100(%)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보고서 (작성 시 근거자료와 함께 국조실에 제출)
현장 인력재배치(30%)	-	878명	1,633명	1,200명	전년도 대대적인 재배치로 인해 지역간·기능간 치안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한 가운데, 행안부는 올해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 정원의 1%를 재배치할 것을 권고 ⇒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안부 권고기준을 수용, 전체 정원의 1%인 1,200명을 목표치로 설정	현장 재배치인원 ÷ 목표치 × 100(%)	

붙임 : '20년 국정과제 수 성과지표(案)

성과 목표	실천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7	'18	'19	'20	지표
							목표	정량화 (성격)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국정 13)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국회 통과)	-	-	법안 미통과	법안 통과	정량 (결과)
		제주자치경찰 112신고처리 만족도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한 112신고사건 민원인 전원 에 대한 실시간 모바일 설문	-	-	78.0 점	79.0 점	정성 (결과)
	경찰개혁(민주· 민생·인권 기능 강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율	인권영향평가건수 / 경찰위원회 법안(규칙)제 개정 상정건수 ×100	-	35.7%	86.95 %	90%	정량 (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국정 14)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률	(순찰이행한 요청지점 / 주민요청지점) × 100	52.6%	56.4%	61.2%	65%	정량 (결과)
		범죄안전도	전화 설문조사 (외부조사업체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79.5 점	79.25 점	80.15 점	80.25 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민생치안 확립	성폭력 미검률	[1-(성폭력 검거사건 수 / 발생사건 수)] × 100	3.7%	4.4%	4.6%	4.2%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가해자 검거·피해자 보호 등 조치건수 / 실제신고) × 100	33.2%	34.7%	39.6%	41.6%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소년범) × 100	27.6%	38.8%	39.2%	39.6%	
		중요범죄 피해자 보호 지수	(경제·심리 등 4개 분야 총 지원건수 × 0.25) / 중요범죄 피해자 수 × 100	-	10.9%	13.9%	14.5%	
		아동안전 지킴이 고용효과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1,176 억원	1,071 억원	2,086 억원	1,788 억원	
	과학기술 활용 치안 R&D 활성화	R&D 예산 증가액	'21년 치안 R&D 예산 - '20년 치안 R&D 예산	36.33%	52.88%	38.97%	42.7%	정성 (결과)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대국민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 × 0.6 + 전반적 만족도 × 0.4	71.2점	75.5점	77.1점	78.7점	
	의무경찰 단계적 축소 및 인력 증원	의무경찰 감축 연간 목표달성도	(의경 감축 누적인원 - 25,911명<'17년 정원>)×100	-	24.8%	48.9%	65.3%	정량 (결과)
		경찰 2만명 증원 연간 목표달성도	(경찰인력 증원인원 ÷ 20,000명<최종 목표인원>)×100	20%	42.9%	62.8%	80.7%	
	경찰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경찰관 직무만족도(복지분야)	전 직원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 중 △승진제도 합리성 △보수 적정성 △복지프로그램 제공 결과 활용	74.0점	74.2점	75.5점	75.6점	정성 (결과)
		퇴직경찰 취업 컨설팅 성공률	경찰전직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후 재취업 성공비율 (재취업/컨설팅인원) × 100	62.0%	65.0%	68.3%	70.3%	정량 (결과)
		어린이집 신축예산 목표 대비 확보율	어린이집 신축예산 누적 확보액 / 어린이집 신축예산 누적 목표액	44.0%	66.9%	87.4%	100%	
	공인탐정제도 도입 검토	공인탐정제도 도입 국민 찬성률	공인탐정제도 도입 찬성율 ※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	-	60%	

35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Ⅲ-1-②)

□ 추진배경

- 현장으로부터 공감 받는 인사·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고 인사 분야 직무만족도 제고
- 한편,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여경 역할 확대 등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여경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사제도 개선) △ 공정·투명한 승진제도 확립 △ 불합리한 인사기준 개선 △ 적극적 균형인사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

- ▶ (인사기준) △본청 전·출입 기준 개선 △계·팀장 자격제 △시보임용제 개선 등
- ▶ (승진제도) △근평제도 개선 △가점항목 재설계 △시험승진제도 개선 등
- ▶ (균형인사) △경감 근속승진 개선 △경사이하 입직자 승진기회 확대 등

- (현장 우수사례 포상) 치안 현장의 업무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하는 현장 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기조 유지

- － 특히, △ 칭찬플랫폼 운영 활성화 △ 현장 우수사례 표창 의무 수여기준 설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각 국·권에 배정된 표창 中 10% 이상은 반드시 현장 우수사례 포상으로 활용

- (여경 확대) '22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신입순경 채용 시 여성경찰관 선발 확대 中

* '19년 12.6%(달성) → '20년 **13.4%** → '21년 14.2% → '22년 15.0%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장정책자문단 구성원 및 소통계정 정비	3월	
	'20년 특별승진·승급 및 경찰청장 표창 배정계획 수립	3~4월	
	충원계획 수립 시 여경 채용인원 목표치 반영	1월	
	1차 채용공고 시 지방청별 인사여건에 맞는 여경인원 배정	2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2/4분기	상반기 현장정책자문단 워크숍을 통해 인사제도 개혁과제 발굴	4월	
	현장정책자문단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실시	6월	
	기능별·지역별 여경 비율 점검	6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3/4분기	하반기 현장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	9월	
	상반기 직무만족도 조사 중간 분석	8월	
	상반기 국·관 표창 수여현황 분석	8월	
	2차 채용공고 시 지방청별 인사여건에 맞는 여경인원 배정	7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4/4분기	'20년 인사제도 개혁 추진결과 평가·분석	11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인사제도는 쏠 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치안역량과도 직결되므로 모든 국민이 간접적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여성가족부 등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제도 개선에 영향을 받는 쏠 직원 및 경찰관 지망생 등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 전반의 치안역량 향상도 견인
- 성별 균형인사를 통해 조직 내 실질적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춰 여성경찰관의 역할 재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인사직무만족도 (40%)(공통)	80.7	80.5	81.5	81.5	인사 분야 직무만족도는 매년 80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지표상승에 애로가 있으므로 역대 최고치 점수인 81.5점을 목표치로 설정 ※ '16년도 80.8 / '15년도 80.5	인사관리 6개 항목 평균값	고객만족센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30%)	39.2%	37.3%	41.5%	43.8%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은 통상 30% 후반 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지난해 경찰청 역점시책으로서 칭찬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사실상 최대치로 확대 ※ 업무 분야별 행정발전 유공, 주요 행사 포상, 정기적 포상 등 고정적으로 발부되는 표창 비율 상당 작년 실적에 최근 3년 실적치의 증감폭(+2.3%)을 더한 43.8%로 목표 설정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경찰청장 표창장 발부 통계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30%)	10.8%	11.7%	12.6%	13.4%	여경 비율을 최종적으로 '22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단계적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둔만큼, 당초 계획대로 '20년에는 13.4%로 목표 설정	여성경찰관 비율	인사시스템 통계 및 '20년 충원계획

36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Ⅲ-1-③)

□ 추진배경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정신 △청렴의식 △시민지향적 법집행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직가치·인권가치 내재화
- △국민의 안전욕구 증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경찰권 남용 우려 등으로 전문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대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확대
 - － (교수요원 교육) 시뮬레이션 과정 도입 2년차를 맞아 교육기관별 전수 교수요원 지정, 소속 기관 내 시뮬레이션 교육 확대
 - － (시나리오 추가개발) '19년 개발한 시뮬레이션 교안을 교육기관간 교차 적용하고, 흉기소지자 검문 등 시나리오 지속 개발
- 교육기관·현장강사·국관 담당자 간 협의체 구성
 - － 치안수요 증대와 경찰소관 법령의 잦은 제·개정('16년 96→'19년 178건)으로 국관별 교육수요와 교육내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교육자료가 신속·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교수요원·현장강사·국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일과 학습 병행 가능한 현장순회교육을 통해 직무전문성 향상
 - －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현장강사가 경찰관서로 직접 찾아가서 실무 처리에 필요한 직무교육 실시, 업무능력 향상
 - － 주요 사회이슈 제기, 법령 제·개정 등 경찰 관련 현안 발생 시 현장순회교육을 통해 즉시 교육함으로써 현장대응력 강화

- 직장훈련 내실화로 교육효과 제고 및 경찰관 역량 강화
 - － (직장교육) △직무 △공직가치 △법정교육(통일, 장애인식 개선, 성평등 감수성 등)을 현장수요 및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월 2회 이상)
 - － (무도훈련) 경찰관의 체포술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포술 단증*」을 수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체포술 향상 유도
 - * 체포술 1~4단으로 구분, 무도훈련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사격훈련) △‘현장상황’에 적합한 사격훈련 방식으로 개선하여 현장 대응력 제고하고 △사격훈련용 방탄복 보급으로 안전 강화
- 동료강사 제도의 활성화로 ‘서로 배우고 익히는 조직문화’ 마련
 - － 다양한 직무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강사 양성과정 및 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노하우 공유 추진
 - － 지방청 교육센터가 동료강사들의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할 확대
 - － 동료강사 역량강화교육, 강의 경진대회, 시니어 동료강사 선발 등 강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강의 역량 향상 지속 추진
- 「경찰청장기 일반인 무도대회」 정례화 및 우수 선수 경찰 채용
 - － ’19년 검도 1개에서 5개 종목*으로 확대하였으나, 경찰청장기 대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통합 무도대회 추진(9월 초)
 - * 태권도 · 유도 · 검도 · 레슬링 · 복싱 등 5개 종목
 - － 우수 무도선수를 경찰관으로 지속 확대 채용하고, 경찰 관서별 전문 체포술 교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장대응력 제고
-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정착과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현장학습모임 지원
 - － 실질적인 학습모임 유형인 「문제 해결형 학습모임」의 육성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부터 ‘성과물 도출’까지 단계별로 관리
 - ※ 학습모임 개설 및 매 분기별 운영사항 취합·평가

- ‘일터학습’ 활성화 방안으로 △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 운영비 지원* △ 경찰청장 상장·상시학습 인정 등 인센티브 마련
* 3차에 걸쳐 3,630만원 지원(총 75개 우수 학습모임 지원)

○ **엄정하고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로, 채용목적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

- 상·하반기 공채, 경채를 통한 우수 인재 선발(경찰관 5,975명, 일반직 544명 예정)로 전문 치안인력 확보

2020년 채용 개요

- 경찰대학생 1회 100명, 간부후보생 1회 50명 <경위>
- 경찰관 공채 2회 5,159명 <순경 4,919(남: 3,549 여: 1,370), 101단 240>
- 경찰관 경채 2회 666명 <변호사 20, 피해자 40, 경찰행정 175, 전의경 128 등>
- 일반직 경채 2회 544명 <드론운영 12, 시민청문관 262, 의료기술143 등>

- 채용비리·사고 등 선발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실시

※ 시험문제 보안 철저, 엄격한 서류 검증, 이해관계자 시험위원 배제 등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채용제도 개선**

- 「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 병역미필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 경찰 채용시험 의무제출 서류였던 고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상반기 中)
- 문신·사시·내반슬(오다리) 등 신체검사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상반기 中)

○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 및 경쟁 경채 자격기준 개선**

- (과목개편)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과목 내 출제비율 확정 등
- (이수과목) 필수과목 6개, 선택과목 30개 등 경쟁 경채 이수 필요 과목 관련 임용령 개정 및 유사과목은 고시로 명시 예정
- (관련학과) 기존에는 학과명에 ‘경찰’이 포함되면 인정(형식)했으나, 명칭 외에 커리큘럼이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도록 개선(형식+실질)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홍보

- (채용박람회 참가) 채용박람회에 참가, 국민과 수험생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수 인재 유치

※ 치안산업박람회(경찰청, 10월 예정), 공직박람회(인사혁신처, 12월 예정)

- (채용제도 안내) 필기시험 과목변경 등 중요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 및 경찰 관련 학과에 공문 발송하여 수험생에게 채용제도 안내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경찰 채용 관련 커뮤니티 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경찰관 상시학습제도 운영 지침 수립	1월	
	2020년 직장훈련 계획 수립	2월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월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월	
	현장학습모임 활성화 계획 수립	3월	
2/4분기	교수요원 협의체 워크숍 계획 수립·시행	4월	
	2020년 베스트 현장강사 선발 계획 수립	4월	
	2020년 경찰청 체력검정 실시	5월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5월	
	경찰청 상반기 정례·특별 사격훈련 실시	6월	
3/4분기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7월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7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7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7월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8월	
	하반기 현장순회교육 직무연수 및 강의경진대회 개최	8월	
	현장학습모임 운영비 중간지원 심사	9월	
	경찰청 하반기 정례·특별 사격훈련 실시	9월	
	'19년도 국외장기훈련 일반과정 선발·추천 계획	9월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9월	
4/4분기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및 「경찰관 무도대회」 개최	10월	
	제2회 치안산업박람회 채용 홍보 부스 참가	10월	
	지방청 채용담당자 워크숍 실시	10월	
	2019년 베스트 현장강사 선발	11월	
	현장학습모임 운영비 지원 최종 평가	12월	
	「체포술 단증 인증제도」 시범운영	12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11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11월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공직박람회」 참가	12월	
	'21년 정기 승진시험 계획 수립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청 소속 전 공무원 및 국민

□ 기대효과

- ‘공직가치’와 ‘인권가치’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보호자’로서의 경찰상 확립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경찰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향상하고 對국민 치안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우수인재확보 및 능력개발(IV-1-일반재정⑤)				
① 우수인재확보 및 능력개발(4135)		일반재정	128	106
■ 실무역량과 공직관이 바로선 경찰관 선발·교육(311)			(128)	(1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교육 현장활용도 (80%)			신규	82.2	○ 경찰관의 직무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센터·현장순회교육·사이버교육의 현장활용도 평가 추진 ○ '19년 직무만족도 조사시 교육분야의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항목의 설문결과인 80.6점을 기준으로 2% 상향된 82.2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센터 설문결과 + 현장순회교육 설문결과 + 사이버교육 설문결과) / 3	교육센터, 현장순회교육,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교육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
인재채용률 (20%)			신규	92.0	○ 우수한 인재영입 및 선발, 필요인력의 적시 채용을 통해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중인 채용률의 추세를 반등시키고자 전년과 동일한 92.0%를 목표로 설정('17년 98.8 → '18년 94.5 → '19년 92.0)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 100	금년 채용예정인원과 실제 채용된 인원을 취합하여 채용률 산출

37 범죄정보 · 정책 참고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Ⅲ-1-④)

□ 추진배경

- ‘정책 참고자료’는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 · 집행 ·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 － 경찰 내부시책과 함께 ‘국민 안전’ · ‘국민생활 평온’에 관한 다양한 현장 정보들을 수집 · 분석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안전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예방
- 특히,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 증폭
 - －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사후대처 적절성’을 넘어 ‘충분한 사전대비’로 상향되면서, 예방적 정보활동의 중요성이 증대
 - ※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 예방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국민안전 위해요소 사전발굴을 위한 정부 부처들의 ‘안전정보’ · ‘예고정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침해형 갈취 ·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범죄를 근절해달라는 요구도 지속
- 한편, 각종 불공정 · 부조리 범죄 근절 등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이에 따라, 정보2과는 정보수집 대상을 ‘치안정보’에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명확화하고
 - －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비중 확대 △국민 안전 위협요소의 선제적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 ·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보활동에 역량을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안전 비리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범죄정보를 중점 수집대상으로 설정하여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안녕의 위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참고자료 생산을 강화

① 경찰청 3대 정책목표* 추진 지원 및 경찰청장 보좌

* ① 주민을 안전하게 ②사회를 정의롭게 ③현장을 활력 있게

○ 경찰청 주요과제 추진 · 업무 수행 적극 뒷받침

- － △ 치안정책 추진상황 분석 · 방향성 제시 △ 경찰 비난요인 사전 점검 등으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치안정책 수용도 제고
- － 경찰에 대한 언론과 시중의 주요 관심사항을 파악, 국민안전 · 조직운영 관련 시기별 · 상황별 맞춤형 치안전략 수립 지원

※ 과거 주요 사건사고 및 정부 · 경찰 주요일정 등을 반영한 '치안캘린더' 제작 · 배포

○ 온 · 오프라인 경찰 관련 이슈 파악, 소관기능 적기 조치 지원

- －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발생 시 내 · 외부 여론 등을 분석, 경찰 부담요인 및 조치 고려사항 제언을 통해 추진 방향성 제시

※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치안이슈 발생 시 해당 기능 전파, 他 기능과 정보 공유

○ 현안 관련 주요회의 등 참석,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등 제언

- － 수사구조개혁 · 자치경찰 · 경직법 개정 등 경찰 주요 현안 회의에 참석, 참고자료 작성 · 의견 제출 등 측면 지원

○ 他 부서와의 정보공유 · 협업체계 강화

- － '汎정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汎정보부서 간 상호 정보 공유 · 협업체계 강화, 치안정보 종합 · 분석 역량을 제고

※ 기능 間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시위', '외국인 불법 도박 실태', '日 수출 규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공공안녕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교류의 계기가 되고 있음

②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로 안전·공정사회 구현

- 공공안녕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공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강화
 - ※ (안전 관련 비리) △감염병 관련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철도 등 건설 안전 관련 비리 △다중이용시설 관련 각종 비리 △부실허가·건설자재 납품 비리 △화재안전·산업 안전 인·허가 관련 제반 불법행위 △식품안전·의약품 안전 등 불법행위
 - ※ (공공분야 부패) △공공분야 직권 이용 이익추구형 범죄 △정보유출·국고횡령 △공공분야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범죄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침해형 갈취·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국민 평온 확보
 - ※ (생활 주변 악성 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기기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보육시설 아동폭행·학대·성착취 등 범죄 △노인요양시설·장애인 보호시설 피보호자 대상 범죄 등
- － 아울러,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정착을 위해 각종 불공정·부조리 범죄에 대한 첩보도 적극 수집
 - ※ (불공정·부조리) △보조금 부정수급 △인사·채용 관련 금품수수 및 특혜 제공 △부정 입학 비리 △직위를 악용하거나 사칭한 범죄 △가맹점·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거래 등
- 정보관들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화 교육 과정 개설 및 본청의 현장 지원 역할 강화

- ▶ 경찰인재개발원 內 범죄정보 수집 전문화 과정 신설(2주 과정, 회당 20명)
- ▶ 본청 분석관들이 첩보 수집단계부터 수집 노하우·혐의 입증방안·법률 조언 등을 지원하는 1:1 코칭 시스템 도입·운영

③ 공공안녕 위협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강화

- ‘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안녕의 위협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참고자료 생산을 강화, 각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안녕 위협 요인들을 사전 예방

- 국민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의 안착을 지원
 - 시기·사안별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분야 및 시설물 관리 실태를 면밀 점검, 정책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 발굴·개선
 - ※ (시기별) 해빙기·하절기·동절기 등 (사안별) 재난재해 및 대형사고 등
 - 미세먼지·감염병·새로운 유형의 재난재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무동기 범죄·사회적 약자 등 치안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
- 테러 위협·안보 위해요소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 구축
 - 테러 등 안보 위해요소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BH·총리실·각 부처 등 정부 안보정책의 미비점 및 사각지대 등을 발굴, 빈틈없는 안보·대테러 대응태세 구축

④ 정보경찰 개혁 안착을 위한 현장 이해도·역량 제고

- 변화된 정보활동·정책 참고자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체득화
 - 정보관 대상 워크숍·교육 등을 통해,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그간 추진된 정보경찰 개혁이 안착되도록 반복 교육
- 정책 참고자료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 정책데스크 운영 △ 치안캘린더 배포 △ 정책 트렌드 분석 및 방향성 공유 등을 통해 적시성 있는 고가치 정보 수집 지원
- 상시적 성과 점검 및 포상 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 분기별 부서 성과보고회 개최 △ 인센티브(특별승진·표창 등) 부여를 통해 효율적·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캘린더 작성·배포	1월	
	범죄정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월	
	2020 정보경찰 범죄정보 수집 계획 수립	3월	
2/4분기	1분기 정보2과 성과보고회 개최(정책 참고자료 우수사례 분석 등)	4월	
3/4분기	2분기 정보2과 성과보고회 개최(정책 참고자료 우수사례 분석 등)	7월	
	정책 참고자료 담당 정보관 워크숍 개최	8월	
	경찰청·감사원 협의회 개최	9월	
	인재개발원 內 정보관 대상 범죄정보 수집 전문화 교육과정 신설	9월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청 순회 교육	9월	
4/4분기	3분기 정보2과 성과보고회 개최(정책 참고자료 우수사례 분석 등)	10월	
	우수 정보관 격려 간담회 개최	11월	
	연간 정책 참고자료 생산성과 및 실태 분석 ⇨ 내년도 계획에 반영	12월	
연중	汎정보부서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汎정보협의체 운영 내실화	연중	
	일선 정책 참고자료 수집 역량 강화(본청 체험교육, 상담데스크 운영 등)	연중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및 오늘의 온라인 사이버이슈 작성	연중	
	주간·월간 주요 치안현안 작성	연중	
	'우수 정보수집 정보관 선발' 제도 운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청) 국정과제 등 조직의 성과 달성 및 치안정책 고도화
- (일선 정보관)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 역량 강화 및 정보개혁 수용도 제고
- (정부부처) 정책 추진에 따른 미비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 (국민) △ 정부·치안정책 개선 △ 범죄정보 수집활동 강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생활 영위

□ 기대효과

- 치안행정과 국민의 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해소, 정부·경찰의 치안정책 효과를 높여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
- 조직의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경찰청장 지휘권 보좌로 원활한 조직운영 뒷받침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실 있는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으로, 공공안녕의 위협을 예방하는 등 안전 사회 구축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활용도 (30%)	신설	신설	1,528	1,890 점	19년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활용점수 1,528점의 123.2%(2년 간 상승세) 이상으로 설정	경찰지휘관 보좌 (건당 9, 7점) 소관부서 통보 (건당 5, 3점)	치안시책·현안 보고서 반영사례 분석
정책 참고자료 작성 실적 (20%)	신설	신설	2,095	2,430 점	①19년 대내 전파 치안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작성건수 1,054건과 ②19년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작성건수 1,041건을 합산한 값의 115.7%(2년간 상승세) 이상으로 설정	보고서 작성 건수 (건당1점)	보고서 작성 목록 및 주요 요지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20%)	신설			99.9%	전년도 실적이 없어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년도 전체 보 고서 작성건수 2,095건을 기준으 로, 未준수 보고서 年2건 수준에 해당하는 99.9%로 설정	(전체 보고서 작성 건수 -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 · 수사 의뢰 건수) ÷ 전체 보고서 작성 건수 X 100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수사의뢰 건수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30%)	신설			3,660 점	①'19년 기준 범죄정보 제출 건수 8,549건과 ②'19년 기준 범죄정보 활용 점수 2,010점을 합산한 3,317.8점의 110% 이상으로 설정	① 범죄정보 제출 건수 20%(건당 1점) + ② 범죄정보 활용 점수 80% (수사 기능 통보배당된 중요사건 건당 15점)	경찰견문 관리시스템 (PORMS) 통계 분석

【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

①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활용도(30%) ⇨ 기존 지표 유지

-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경찰청장의 지시사항, 타 기능 정책 반영 등 여부 등을 통해 측정하며, '19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반영도 측정산식'을 유지

<정책정보 반영도 측정산식>

사용처	평가기준	배점 (보고서 건당)	
경찰지휘관 보좌	경찰청장 행보 제언·현안대응 관련 자료	적극 반영	9점
		참고자료 활용	7점
소관부서 통보	소관부서에서 치안정책 개선·추진 참고 자료	적극 반영	5점
		참고자료 활용	3점

② 정책 참고자료 작성 실적(20%) ⇨ 기존 지표 유지(비율축소 40% → 20%)

- <대내 전파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작성 건수 50%> 경찰 조직의 정책추진·조직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양적 평가
-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작성 건수 50%> BH·총리실에 보고되는 국민 안전·안보 관련 정책 참고자료나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보고서 등을 양적 평가
- 보고서 작성 건당 1점의 점수 부여하되 1page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돼 서면으로 전파된 보고서만 평가 대상에 포함

③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20%) ⇨ 신설지표

- 정보2과에서 작성한 △대내 전파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등 보고서가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경찰청 정보1과 준법지원팀의 심사를 받고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시행, 이를 통해 보고서 작성 시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통제

*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정보활동의 범위): 1. 범죄정보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

④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30%) ⇨ 신설지표

- 연간 정보기능에서 수집한 범죄정보의 질적·양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 범죄정보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보경찰 개혁 취지에 따라 범죄정보의 직무 비중·활용도 확대 등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필요
- 기존 ‘범죄정보 입건율’ 지표는 범죄정보의 활용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나, ‘범죄정보 건수’에 대한 양적 가치*와 ‘정보의 중요도’에 대한 질적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
 - * ‘전체 범죄정보 제출 건수 100건 중 입건 10건’과 ‘전체 제출건수 10,000건 중 입건 1,000건’이 동일하게 입건율 10%로 평가
 - ** ‘100만원을 훔친 절도사건’과 ‘100억원을 횡령한 횡령사건’을 동일하게 1건으로 평가
- 한편, 기존에 사용되던 ‘입건’ 개념은 정보기능에서 수사기능으로 통보된 이후의 증거확보·참고인조사 등 수사부서의 활동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 ※ (업무 프로세스) 범죄정보 수집 → 정보기능 가치판단 → 수사기능 통보 → 수사기능 가치판단 → 배당 → 내사 → 입건
- 정보 기능의 평가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 기능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는 ‘他 부서의 역량과 관계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정보에 대해 정보·수사 기능에서 공통으로 유가치하다고 평가한 것을 의미하는 ‘배당’으로 지표를 변경

(1) 주요 내용

-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감찰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개선을 지속
 - － △ 데이터 기반 조직 진단 △ 테마별 감찰활동 △ 고비난성 비위 집중 척결 등으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지지·신뢰 확보
-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 △ 주요 치안정책 테마감사 △ 국민불편 유발 관행 개선 △ 소극행정·직무태만 척결 등 추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
 -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뒷받침하고, 외부전문가 등의 ‘감사참여제’ 도입으로 감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을 기반으로 경찰 조직 전반에 성평등 가치 제고
 - － ‘경찰 정책 성평등 사전점검제도’ 운영 확대로 정책 계획·홍보물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소관 법령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개정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공정한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감찰활동 만족도 / 감찰첩보 제도개선 활용도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실적 / 징계양정 수용도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장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	87.8	89.1	90.5	'18년부터 직무만족도 조사에 성인 지 부문 조사가 도입되었음. 조직 문화 직무만족도는 전 2년도 실적 평균값(88.5) 및 과거 추세선을 기 준으로 예측한 값(90.4)을 고려, '20 년 목표치는 평균값·예측값보다 높 은 90.5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조직분위기 부문 6개 문항과 성인지 부문 5개 문항의 점수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적 핵심 가치로서 성평등 및 ‘성주류화’*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 확산되면서, 치안정책도 성평등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 공공정책에 있어 입법, 추진 등 모든
수준에 있어서 양성 차별과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개념

- ➡ 주요 치안정책 수립·시행은 물론 경찰 조직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 내외 소통과 사례 공유 추진

[4]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감사원(www.bai.go.kr)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38] 공정한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Ⅲ-2-①)

□ 그간 성과('19년)

- '18년 감찰개혁 수립에 이어 '19년 '개혁 세부추진 방안'을 시행, 「경찰감찰규칙」 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데 집중하였으며,
 -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버닝썬 사건 등에 적극 대응, 청렴도 평가등급 상승* 으로 이어지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
- * 권익위 주관 평가로 '18년 '4등급'에서 '19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

□ 추진 배경

- (대내) 기존 “권위주의”를 지양, “구성원들의 자발적 권위”가 내재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 * (여건) △‘현장활력소’가 조직 내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 갑질 등 고충처리에 대한 내부적 요구는 증가세
 - (대외)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가지는 일말의 불안과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청렴성 요구
 - * (여건) 또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지휘부 교체 등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 기강해이 사례 방지 필요
- 감찰 활동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잔존하고,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체감될 수 있는 개혁의 결과가 긴요

□ 추진 방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확실한 변화> 감찰개혁의 추진동력을 지속하고, 개혁과제 현장안착 도모

- (개혁과제 안착) 「경찰감찰규칙」 개정으로 정비된 절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관서별 감찰업무 균질화 및 전문성 확보

※ 최근 2년간 적격심사로 다수 감찰관이 교체, 신임 감찰관을 대상으로 개정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인적공백 방지 및 감찰개혁의 내재화 추진

- (점검·환류)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를 지속, 감찰행정 실태 점검 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환류에 충실

※ 정비한 제도와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이를 가로막는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점 도출을 위한 점검 실시

[필요조치] △감찰개혁과제 이행실태 점검, △감찰정보 세부 시행지침 마련, △감찰사건 조사 및 보고 매뉴얼 작성·하달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실시 등

② <바로 선 공직기강> 고질적·고비난성 비위 척결에 집중

- (엄정 대응) 복무점검은 기능별 관리자 중심으로 수행, 감찰은 고질적·비난성 비위(금품수수·갑질 등) 적발에 집중

— 특히,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저차를 야기하는 경찰 유착비리에 대한 감찰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수사의뢰도 적극 검토

※ 본청 감찰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감찰정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및 첩보 출처 다변화 등 유착비리에 대한 감찰역량을 강화

— ‘비위’ 자체만을 염두에 둔 엄정한 대응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책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감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유착비리 근절대책) 유착 관련 비위자 수사·단속부서 배제, 원칙적 징계 등

▶(갑질 근절대책) 징계양정 엄격 적용, 성과급 지급 제외, 신고처리 결과 감사 등

- (테마 감찰)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는 비위(음주운전·성비위 등) 실태와 치안환경(총선·인사철)을 반영한 테마별 활동 전개

[필요조치] 감찰첩보 수집역량 강화, 고비난성 비위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 전개 등

③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 일회적 처방·자의적 방식의 활동 탈피

- (환경 진단·개선) 기계적인 징계일변도 행정을 탈피, 비위발생 시 관·부서장의 노력도 및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결과를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자료로 제공
 - * 공직기강 점검 시 경무 기능과 단순·형식적 합동점검을 지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단순·경미한 일탈과 △구조적·중대한 비위를 구분하여 처리, 내부 공감도 제고
- (데이터 기반 활동) 감찰정보시스템('20년 전산화 추진)을 통해 수집된 감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체적으로 활용
 - 또한, 인사행정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객관적으로 작성·제공하여 적재적소 인사 배치 등 순기능 제고

[필요조치] 감찰정보시스템 개발, 비위발생 분석자료 공유, 비위발생 시 관서·부서 진단 실시 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비 고
1/4분기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	1월	현안발생에 따른 감찰활동의 변화성을 감안, 세부 일정은 변동가능
	전국 청문기능 화상회의(코로나 19로 현장 워크숍을 대체)	3월	
	감찰정보관리 세부지침 마련·시행	3월	
2/4분기	감찰활동 추진실태 점검	상반기	
	(1분기~) 코로나19 특별단속팀·신속대응팀 운영실태 특별점검	한시 운영	
3/4분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7월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하반기 인사요인 발생 시)	7월	
4/4분기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위촉	10월	
	지방청 감찰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감찰정보 제출도 반영)	10월	
	△ 우수 감찰정보 제출자 특별승급 계획	12월	
연중	△ 감찰개혁과제 추진 실태점검	연중	
	△ 시기별·테마별 기획 감찰활동 실시	연중	
	△ 감찰정보 심의위원회 운영	연중(월별)	
	△ 시민감찰위원회 운영(정기·상시회의 개최)	연중	
	△ 감찰정보시스템(△ 계약·개발 △ 시범운영 △ 전국확대 등) 구축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경찰관

□ 기대효과

- 그간 추진한 감찰개혁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감찰업무를 전문화하여 감찰행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지지·신뢰를 확보
- △ 데이터 기반 조직 진단 △ 테마별 감찰 △ 고비난성 비위 관련 엄정 대응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란 편견을 불식하고,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부응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감찰활동 만족도 (50%)	미 실 시	33.6%	51.1%	56%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인 51.5%을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을 목표로 설정, '20년에 56%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 작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감찰정보 제도개선 활용도 (50%)	7.6%	14.9%	39.1%	43%	'19년의 이례적인 높은 실적(39.1%)과 지난 3년간 평균(20.5%)을 종합적으로 감안,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9년도 실적 대비 10%이상 설정하여 43%를 목표로 설정	감찰정보 내부보고 제출 전체 현황 대비 제도개선 자료(기타자료 포함) 현황	정보관리대장 및 통계

<지표 선정 배경 및 평가 시 당부 사항>

➤ (난이도) 상기 지표들은 '19년 신설되었고 당시 감찰개혁에 대한 내·외부적인 관심도가 높고 개혁 동력이 확보된 시기에 이례적인 실적을 거두어 전년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감찰개혁 이전 사용한 지표는 비위발생 현황으로, 해당 자료가 사용될 경우 개인비위에 대한 부서 책임 등 연좌제로 작용한다는 그간의 지적이 있어 지표로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

(평가 당부사항) △ 감찰개혁의 안착을 위해 그 수단인 성과지표가 달성 난이도 높음에도 수정없이 유지한 점 △ '20년에도 실적 추세 및 전년도 실적 대비 10%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점 등에 대해 향후 평가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감찰활동 만족도(50%)

▶ **(산출방식)**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에서 **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 중 '감찰활동 만족도' 관련 3개 항목의 긍정적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의 평균으로 산정

* **(설문 문항 예시)** ㉠감찰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감찰활동이 부정 부패 근절에 도움이 된다 ㉢감찰활동은 직원들이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선정이유)** △ 감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한 「감찰개혁」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및 내재화 여부는 고객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연중 감찰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그 평가는 자평이 아닌 엄정한 외부 평가를 통해 미비점 보완 등 환류에 충실할 예정

② 감찰정보 제도개선 활용도(50%)

▶ **(산출방식)** 감찰정보 중 제도개선 자료 및 기타자료로 분류된 정보 건수의 비율

* **(산식)** $\frac{\text{제도개선자료} + \text{기타자료}}{\text{총 제출 정보건수}} \times 100$

▶ **(선정이유)** 그간 감찰정보(비위정보/제도개선자료/기타자료) 중 감찰활동 자료를 위한 '비위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 향후 제도 개선 자료 및 기타 자료의 활용도를 성과지표화 하여 유의미한 정보 수집·처리를 통해, 경찰행정을 점검·지원하여 조직운영을 보좌하는 감찰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예정

<감찰정보 분류 : '경찰 감찰 규칙' 근거>

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
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39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Ⅲ-2-②)

□ 추진배경

- (감사행정)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목표로 국민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혁신·소통·적극행정이 필요함을 강조
 - 한편,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직 변혁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
 -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국민신뢰 제고 필요
- (적극행정 면책) 정부는 '19년부터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
 - ※ △'19년 정부혁신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관리 △적극행정 운영규정 마련(인사혁신처, '19.8월)
 - 경찰청 감사관실도 '19년부터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감경 중으로,
 -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면책 심사를 주요 성과과제로 반영하여 주요 국정과제인 적극행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 지원
- (징계 행정)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은 주요 경찰 개혁과제 중 하나로,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 행정 개선 노력이 지속 요구되는 실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안전·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주요 치안정책 선제적 점검
 -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관리 등 국민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테마감사 실시
 - 신종 질병 확산 및 지진·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각 기능별 대응시스템 및 지원체계 점검으로 국민 불안심리 해소

-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실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주요 성과 진단
- 경찰 개혁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책임감사 실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개혁과제의 취약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정책부서의 여론 수렴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점 도출
 - 특히,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으로 수시 정책진단 및 대안 제시
-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관행적·비정상적 행태 근절
 - 형식적 규정·행정편의적 관행 등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반복적 사안은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규정·지침·시스템 마련
 - 특히 조직 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 점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제시
- 적극행정 면책 완화 및 사전컨설팅 지원 활성화
 - 새로운 행정수요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발굴·추진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감경
 -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 마련 및 홍보물 작성 배포
 - 지난 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본격 활성화, 감사 기능에서 업무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제시하여 시행착오 예방 효과 도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일상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 비위요소 선제적 차단 및 예방감사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 ‘각자내기’, ‘건전한 회식문화’ 등 공직기강 정착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 및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전파
 - 감사결과 확인된 모범사례 및 우수직원은 표창·장려장 등 적극 상신

-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소극행정·직무태만 행태 척결
 - － ‘사전처리 지연’, ‘업무처리 소홀’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저하시키는 소극행정·직무태만 행태 등 집중점검 및 엄정 조치
- 『감사참여제』 도입으로 감사행정 투명성·공정성 확보
 - －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직원들로 인력풀을 구성, 감사 아이템 선정부터 감사결과 논의까지 감사 전반에 참여토록 하는 ‘감사참여제’ 도입
-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행정 구현
 - － △ 감찰조사와 징계행정의 분리 △ 징계위원회에 대심제·주심제 도입 △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변호인 선임권·보조인 참여권) 등 징계행정 개선을 통한 공정성·형평성 제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감사운영계획 수립	2월	
	감사관실 주관 전국 화상회의 실시	2월	
	경찰 개혁과제 관련 특정 테마감사	2월	
	감사참여제 실시계획 수립	2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홍보자료 배포	3월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3월	
	경찰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전국 청문감사 관계관 워크숍 개최	4월	
	경찰청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4월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4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계획 수립	4월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5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5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특정 테마감사	6월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7월	
3/4분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정 테마감사	8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실시 현황 분석	8월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9월	
4/4분기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10월	
	지방청 감사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11월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11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정 테마감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 경찰관 등 내부직원

□ 기대효과

-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국민편익 증진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국민 신뢰 제고
-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행정으로 경찰개혁 완수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총경 이상 청렴도 평가	일반예산	0.45억	0.45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출처															
	'17	'18	'19	'20																		
제도개선 실적 (50%)	68	94.5	150	165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업무중심 감사활동 노력으로 목표치 초과달성(58% 상승) 한 부분을 고려, 전년 대비 10% 상승한 165점을 목표치로 설정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d>법령 제·개정</td><td>자체규정·지침 제·개정</td><td>기타 행정</td><td>개선요구</td><td>권고·통보</td></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	개선 유형별			조치 수위별		법령 제·개정	자체규정·지침 제·개정	기타 행정	개선요구	권고·통보	50	30	1.0	30	1.5	감사결과 보고서
개선 유형별			조치 수위별																			
법령 제·개정	자체규정·지침 제·개정	기타 행정	개선요구	권고·통보																		
50	30	1.0	30	1.5																		
적극행정 면책실적 (30%)	17	12	57	63	'19년부터 적극행정 활성 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실적 상승 중이며,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전년 대비 10% 상승한 63건을 목표치로 설정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적 극 행 정 면책제도 운영 통계 자료															
징계양정 수용도 (20%)	69.4	81.3	84.8	88.4	'18년부터 실적치가 대폭 상승한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상승 수준(4.3%)을 고려, 전년 대비 4.5% 상승한 88.4%를 최종 목표치로 설정	소청미제기 + 소청 불인용 인원 / 전체 징계건수 *100	경찰공무원 징계 및 소청 통계 자료															

40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Ⅲ-2-③)

□ 추진배경

- 사회적 핵심가치로서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 확산되면서, 성평등한 경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급증
- 경찰이 성평등 의식을 갖추지 않을 경우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경찰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 반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기반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 수립
 - － △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를 실행할 5개 대과제 및 16개 세부과제 추진
- 경찰 법령, 주요 정책·콘텐츠 대상 성별영향평가 추진
 - － 제작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요소 발굴·개선하여 ‘경찰 정책·콘텐츠 성평등 사전점검제도*’ 확대, 경찰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
 - * ’19년 최초 도입, 홍보물 등 319건 점검(194건 개선의견) → 130건 개선(수용률 67%)
 - ※ 사전점검제도 시행 시 불수용 의견 사례 모니터링 실시, 수정·보완이 가능한 개선의견은 수정의견 재제시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개선의견 수용될 수 있도록 독려
 - － 「경찰청 행정규칙 성평등 관점 일제정비 개선안(’19.10월) 및 가이드라인」 활용, 지방청·부속기관 소관 행정규칙 일제 점검·개정
 - ※ 경찰청 소관 163개 훈령·예규 점검, 이중 66개 훈령·예규 개선 완료(’19.9월)
- 성평등정책의 자율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 － 성평등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책 수립·추진, 성주류화 사업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 「경찰 성평등정책에 관한 훈령(가칭)」 제정
 - － 기능별 자체 성평등 목표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단계적 시범운영

- 성평등한 경찰활동을 위한 경찰 성평등 직무역량 내재화
 - 성평등교육이 초 직원 법정 의무교육('19.6.1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됨에 따라, 경찰 성평등 직무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표준교육안 제작
 - 권역별 전문강사 인력풀 확충('19년 52명→'20년 69명) 및 사전 워크숍 실시(3월), 「전문강사 신규 양성과정」 개설(양평원 협의) 등 교육역량 강화
 - 지방청 중심 교육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단 (외부 전문가)을 활용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교육 품질 제고
- 경찰 조직 전반의 성평등 가치 내재화를 위한 유·무형 인프라 구축
 - 「관서 기본시설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작, 성평등한 직무공간 구축
 -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 점검 및 사례 공유, 젠더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조직 내 여성근무자 공식 소통창구로서 지역별 간담회 개최, 「여성인재 개발과정」 등을 통해 여성근무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 정책 성평등 사전점검제도 운영계획 수립	'20.1월	
	성평등 교육 표준교육안 제작 및 강사인력풀 재정비	'20.2월	
2/4분기	지방청 훈령·예규 일괄 점검	'20.4~12월	
	경찰 성평등정책에 관한 훈령(가제) 제정	'20.4~8월	
	성차별적 문화 점검·개선(설문설계→조사실시·분석→결과 공유)	'20.5~8월	
3/4분기	성평등 인식 고취를 위한 여성근무자 간담회 등 행사 개최	'20.7~8월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20.8월	
4/4분기	소속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자 평가 워크숍	'20.11월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평가 워크숍	'20.12월	
	성평등 교육 만족도조사·모니터링 결과 분석	'20.12월	
연중	△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분과회의 개최 △ 주요 경찰 정책 및 홍보물 등 성평등 관점 사전점검 실시 △ 지방청·부속기관 및 소속 관서별 여성근무자 간담회 추진(분기별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초 경찰관, 일반직 직원

□ 기대효과

- 경찰정책 성주류화 및 초 경찰관 성평등 감수성 내재화를 통한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대국민 경찰정책 신뢰·만족도 제고
- △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 계급별·직위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실시 등 경찰관 성인지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① 일반행정업무지원(7131) ■ 경무인사지원(313) - 성평등 인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1.5	3.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60%)	신	규	67	73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온나라 공문, 여가부 GIA시스템
성평등 교육 정착도(40%)	지	표	보	완	70	하단 참조	지방청별 교육 참석 인원 조사

□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주요 치안정책(법령·정책·홍보물·교육자료 등) 성평등 관점 적극 점검 및 개선

- (지표 설정 필요성) 대국민 접점이 높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 법령·정책·홍보물 등 치안 정책에 대한 성평등 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적 지지 및 성평등정책 추진동력 확보
- (점수 산출) 주요 치안정책 관련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수용도(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를 기준, 경찰청·18개 지방청 5개·부속기관 합산 수용도의 평균치를 평가(소수점 첫 번째 자리 버림)
- (측정방법) 측정 기간 종료 후 성평등 기획계 업무담당자 취합·산출('19.2.1.~10.31.)
- (목표치 산출 근거) '19년 경찰 콘텐츠 사전점검제도 첫 시행 결과, 개선의견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의견 수용 건수는 130건, 의견 수용률은 67.01%(67점)

총 요청건수	원안 유지	개선의견	수용건수	개선의견 수용률
319	128	194	130	67.01%

- 제도 활성화('19년 67%, 이후 매년 약 5씩 증가 목표)를 통해 시행 5년차('23년)에는 개선 의견 수용률 '85%'대 이상 달성을 목표로, '20년 목표치 설정

2019년(실적)	2020년(목표)	2021년(목표)	2022년(목표)	2023년(목표)
67%	73%	78%	83%	88%

□ **성평등 교육 정착도(지표 보완)**

※ 경찰 성인지 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한 교육 참여 현황 관리

- **(지표 설정 필요성)** 성평등 교육이 쏠 직원 법정 의무교육('19.6.1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됨에 따라, 경찰 필수 직무역량으로서 성인지적 관점 내재화 중요성 증가
 - 그러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교육의 의무화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내용·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시행령 등 법제화된 것이 없어 교육 참여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경찰 조직 내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한 쏠 직원 대상 참여율 관리가 필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질화를 위한 고위급 및 중간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내재화가 중요한 만큼,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율도 병행 관리 필요

- **(점수 산출)**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율 및 쏠 직원 참여율을 함께 고려하되,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쏠 직원 대상 참여율을 가중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첫 번째 자리 버림) → 각 참여도 점수 합산으로 평가

합계(100%)	경감 이상 참여도(40%)	전직원 이상 참여도(60%)
100점	(경감 이상 참여 인원수 / 경감 이상 전체 인원수) × 0.4	(교육 참여 인원수 / 전체 직원 인원수) × 0.6

- **(측정방법)** 측정 기간 종료 후 성평등 기획계 업무담당자 지방청별 결과 취합·산출('19.2.1.~10.31.)

- **(목표치 산출 근거)** '19년 중간관리자 이상(경감 이상) 성평등 교육 첫 시행 결과, 참여율 77% 달성

전국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대상자 총계	전국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이수자 총계	이수율
14,097	10,885	77%

- 쏠 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 법정 의무화가 됨에 따라, '19년 성과지표(중간관리자 교육 이수율)와 달리, 쏠 직원의 참여율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

(1) 주요 내용

-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개선으로 범죄 대응역량 강화
 - － 노후 무선망·장비를 교체하고, 단순·반복적 사무 처리에 RPA (업무 자동화) 기법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과 정확도 향상
-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 현장 경찰관의 신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신체보호장비를 확충하고 보급 장비의 품질 개선 추진
 - － 한국형 전자충격기·대체충기 개발로 인권 보호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조화시키고,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도입으로 스마트 치안 구현
-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 과학기술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 － ‘치안현장 맞춤형 사업(폴리스랩)*’ 과제별 ‘현장 실증판서’에서 실용성을 검증하고,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확대로 치안 한류 기여
 - * 현장경찰 지원 소형 드론, 접이식 방검방패, 신고위치 정밀측위, 성폭력 상담 챗봇, 블랙박스 영상수사,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 등 8개 과제
- **<경찰 전산망 보호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등 정보보안 내실화
 - － ‘데이터 품질 표준안’ 마련 및 품질점검 수행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맵’ 고도화로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도 제고
-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실종자 수색 △ 범인 추적 △ 교통 관리 등 민생치안 현장 지원에 경찰 헬기를 적극 활용
 - － 야간비행·지형숙지 비행 및 모의비행 훈련 강화와 정비 전문화 과정 등 교육훈련 시스템 확충으로 무사고 안전비행 지속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경찰장비만족도 / 장비개발 등 규격 개선도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연구개발 예산증가액 / R&D 연구결과물 현장 만족도 / 치안 장비·기술 수출상담 실적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 경찰청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 무사고 안전비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85.1	83.6	85.5	86.0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는 '18년 하락 후 반등하였음.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4.7)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5.1)을 고려, '20년 목표치는 평균값 및 예측값보다 높은 86.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점수 (장비·시스템 분야 응답항목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지능화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장비 개발 및 도입 필요
-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인한 현장경찰관 피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보호장비 개발 필요
- ➡ 첨단 ICT 기술을 경찰활동에 접목하고, 다양화·경량화한 신체 보호장비(방검외근조끼, 소형방패, 방검장갑, 안전헬멧) 보급

[4] 참고자료

- 스마트 국민제보(onetouch.police.go.kr / 모바일 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41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Ⅲ-3-①)

□ 추진배경

- 지능화·광역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 필요
- 지능정보사회에 맞추어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정보화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화 기반 마련 >

- 행정안전부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4세대)을 활용, 노후된 경찰 무선통신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
 - 경찰업무에 적합한 장비(단말기 등)를 보급하고 재난안전망 운영 관련 경찰에 필요한 자체 권한을 최대한 확보

주요 내용

- ▶ 기 간 : '19~'21년(장비확보) / '20~'23년(안정화 및 운영)
- ▶ 총사업비 : 2,657억원('19년 229억, '20년 934억, '21년 1,494억)
- ▶ 소요장비 : 151,402대 (시스템관리기, 녹음기, 지령대, 무전기)
- ▶ 역 할 : 시스템 구축은 행안부, 경찰(이용기관)은 단말기 확보

구 분	TRS운용 지방청	VHF운용 지방청	전 환
1단계('19)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21년 이후
2단계('20)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이후
3단계('21)	서울, 경기남.북부, 인천	-	'23년 이후

- 전국 경찰관서의 노후 사무용 PC 등을 적기에 교체 보급,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민생치안 대응역량 제고

※ △PC 17,000대 △프린터 3천대 △노트북 1천대 △망전환장치 10,000대

- 통신국사 화재 등 재해·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 예방을 위해 경찰청↔지방청↔경찰서 간 통신국사 이원화 추진

※ 단일 국사로 구성된 본청↔지방청(9개)은 계약사와 협의, 무상으로 이원화 구축 완료

- － 지방청 ↔ 경찰서 구간 경찰정보통신망 재구축 사업을 통해 '21년까지 단계적 국사 이원화 구성

구 분	개소	대 상 관 서
2020년	6	서울,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2021년	6	대구, 충북, 경북,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범죄 대응역량 강화 >

-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조,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전국 CCTV를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WASS)과 단계적 연계 추진

※ 전국 CCTV를 통합하고 있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추가 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

- － '20년에는 서울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완료된 지자체 대상으로 우선 연계 추진

- 경찰-국민의 대표적인 협력적 사회안전망으로 활용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 △사회 이슈화 테마제보 신설 △긴급신고에 대한 112 알람방식 개선 (단문 문자→장문) △신고보완 요청, 국민신문고 연계 등 그간 도입된 기능을 사용자 요구에 맞게 최적화 등 추진

- 치안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집행을 위해 폴리폰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효율적인 외근 현장업무 지원

- － 노후 모바일 장비(폴리폰, 업무용폰, 모바일 프린터)를 최신 장비로 구매, 교체 보급으로 일선 현장업무 효율성 제고

< 현장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로 업무효율성 제고 >

- 단순 반복적인 경찰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법을 적용,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자동화’ 추진
 -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 /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활용 중
- － RPA 협의회 및 현장자문단을 운영하여 일선에서 필요한 RPA 업무를 발굴·추진, 업무 효율 및 업무처리 정확도 제고
- 국관에서 개별 수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단계적으로 통합, 체계적 사업관리 및 시스템 간 중복성 제거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 정보시스템 44개, 본청 전산장비 8,962대에 대해 3차 통합유지관리 추진
- 경찰 내부 포털인 ‘통합포털 폴넷’ 서비스 개선 추진
 - － 다양한 경찰 업무시스템과 ‘통합포털 폴넷’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경찰 대표 포털로서의 역할 강화
 - － 기능별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각종 게시판 적시 개설·운영
 - － ‘폴메신저’ 및 ‘폴메일’의 고도화를 통해 이용 만족도 향상
- 웹 팩스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버 이중화 및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추진
 - ※ 금년도 4개 지방청 서버 이중화 사업으로 모든 경찰관서 서버 이중화 완료
-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계약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
 - * MS 라이선스(윈도우 10, 엑셀 등), 한컴오피스, Adobe 3사의 소프트웨어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WASS와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계획 수립	2월	
	제3차 경찰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2월	
	모바일프린터 구매 및 교체 계획 수립	3월	
	폴리폰 기능개선 계획 수립	3월	
	경찰 공공앱 운영현황 자체 점검계획 수립	3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급 기본계획 수립	3월	
	웹(Web) 팩스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3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수립	3월	
	스마트국민제보 기능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3월	
2/4분기	경찰 폴리폰 구매 계획 수립	4월	
	재난안전통신망 2단계 전환사업 계획 수립	4월	
	재난망 무전기 성능 검증	5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워크숍 개최	6월	
	RPA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6월	
3/4분기	경찰 업무용폰 구매 계획 수립	7월	
	재난망 단말기 구매 발주·사업 계약	8월	
	RPA 우수 안건 홍보	9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	9월	
	온나라 시스템 기능 개선	9월	
4/4분기	경찰 공공앱 성과측정 실시	10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급 완료	10월	
	웹(Web) 팩스시스템 고도화 완료	10월	
	WASS와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10월	
	제4차 경찰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계획 수립	10월	
	스마트국민제보 기능 개선	10월	
	통신국사 이원화 구축	10월	
	통합포털 폴넷 기능 개선	10월	
	제3차 경찰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완료	12월	
	재난망 단말기 등 장비 설치 및 배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및 순 경찰관, 일반직 직원

□ 기대효과

- 경찰 무선망을 전국 단일망으로 운영 및 난청지역 해소로 전국 치안현장에 원활한 소통권 제공 및 무선망 보안성 강화
- 첨단 ICT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 구축·개선으로 신속·정확한 신고 처리 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경찰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유지관리로 유지관리 품질향상 및 위험요소 사전 예방
- 현장 경찰관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선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부담 완화

< 예산절감 효과 >

- (스마트국민제보 고도화) '국민신문고(권익위)'와 시스템 연계로 동영상 편집 자동화가 가능하여 인건비 73억원 절감
-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연계)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된 CCTV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망연계 장비 등 397억원 절감
- (논리적 망분리시스템) 업무망 PC에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을 설치, '1인 1PC' 사용 정책 유도를 통해 신규 구매 PC 수량 감소분 82억원 절감
- (업무용폰 통합) 경찰정액요금제 적용으로 1억 8,600만원 예산 절감
- (캠코더 영상 편집시스템) 영상편집 자동화로 인건비 4억원 절감
- (경찰우편 자동화 시스템) '19년 3억원 절감 / '20년 절감액 확대 예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			
① 경찰유무선망개선(IV-2-일반재정(3))	일반회계	785	1,488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			
①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IV-2-정보화(1))	일반회계	570	6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60%)	92	87	100	103.5	아래참조	아래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40%)	84.6	86	87.6	87.6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내부 메일을 활용,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센터 의뢰)
목표치 산출근거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103.5점 - 경찰청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도 측정을 위해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를 신규지표로 설정 - ① 통합포털 폴넷(30%) ② 스마트국민제보(30%) ③ 폴리폰(30%) ④ 수배차량등 검색시스템(10%) 등 4개 시스템 활용도를 반영 - 금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치인 90점에 증가율 15%를 적용, 103.5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적극성 上)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87.6점 - 국민 및 전국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정보화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 내부직원 대상으로 현장에 새롭게 보급된 '재난안전통신망 만족도'와 국민 대상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를 신설·포함, 입체적으로 조사·반영 - 최근 2년간 평균만족도가 85점 내외로 등락하고 있으나(상승 국면), 금년 목표는 '19년 실적치(86.0점)에 2년간 평균추세치인 1.65%보다 무려 15% 증가한 1.9%를 적용, 87.6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적극성 上)						
측정산식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① 통합포털 폴넷(30%) + ② 스마트국민제보(30%) + ③ 폴리폰(30%) + ④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10%) ※ 세부 기준은 다음페이지 참고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내부 직원 만족도(80%) + 대국민 만족도(20%) ▶ 내부직원(80%)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비 만족도 조사(40%) + 재난안전통신망 만족도 조사(40%) <고객만족센터 의뢰 설문조사 실시> ▶ 대 국민(20%) :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20%) <시스템 內 신고자 만족도> - 만족도 평정부여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의 7개 척도(매우불만족 : 0, 불만족 : 16.7, 다소불만족 : 33.3, 보통 : 50, 다소만족 : 66.7, 만족 : 83.3, 매우만족 : 100)의 점수를 활용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평가 세부기준 >

① 통합포털 폴넷 일평균 이용건수 (30%)

▪ 이용건수 : 게시물 등록건수 + 조회건수						
건수	~ 289,255건 (90%미만)	289,256건 ~ (90%)	321,396건 ~ (100%)	353,535건 ~ (110%)	385,674건 ~ (120%)	417,814건 ~ (130%)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② 스마트국민제보 일평균 처리건수 (30%)

▪ 처리건수 : 국민신고·제보 건에 대한 업무담당자 일평균 처리건수						
건수	~ 3,057건 (90%미만)	3,058건 ~ (90%)	3,398건 ~ (100%)	3,737건 ~ (110%)	4,077건 ~ (120%)	4,417건 ~ (130%)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③ 폴리폰 기능 개선건수 (30%)

▪ 개선건수 : 현장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기능개선 건수(연간)						
건수	~ 10건	11~12건	13건	14 ~ 15건	16 ~ 17건	18건 ~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④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연간 이용건수 (10%)

▪ 이용건수 : (수배차량 등록 건수 + 검색 건수) × 1.2 < 10월 기준 실적 >						
건수	~ 20,873건 (90%미만)	20,873건 ~ (90%)	23,193건 ~ (100%)	25,512건 ~ (110%)	27,831건 ~ (120%)	30,150건 ~ (130%)
점수	8점	9점	10점	11점	12점	13점

42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Ⅲ-3-②)

□ 추진배경

- 기존 보호장비로는 법집행 상황별 경찰관 신체보호에 한계가 있어 치안현장에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확충 필요
※ 대통령께서도 제73회 경찰의 날 치사를 통해 “경찰관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 확충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18.10.)

< 그간 경과 >

- ▶ ’18. 7. ‘현장경찰관 신체보호장비 개발’ 계획 수립
- ▶ ’18. 8.~12월 신체보호장비 개발 토론평 운영 ※ 관련 게시글 댓글 201개, 조회수 25,362회
- ▶ ’18.~’19. 2. 현장의견 반영, 품목별 시제품 제작 및 수정 ※ 홍익지구대 등 착용 평가
- ▶ ’19. 3.~19. 9. 방검외근조끼, 방검장갑, 방검토시, 소형방패 시범운영 추진

-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해 최신 ICT 기술 등 기반으로 친환경 정부 시책 부응과 경찰업무 특성에 적합한 첨단장비 개선 및 개발
- 희망품목 적기보급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개발로 품질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장비 개발

- 현장 경찰관 안전을 강화하는 신체보호장비 확충
 - － 방검외근조끼, 방검토시·장갑 등 신체보호장비를 외근 경찰관 대상으로 개인 지급하고, 신소재 발굴 등 지속적 개선 추진
※ ’20년 보급 예산(33억원)으로 지역경찰부터 순차적 보급
 - － 재난사고 대비, 화재대피마스크 및 시인성을 강화한 안전모를 지역경찰 대상 확대 보급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습·교육 병행
※ ’20년 보급 예산(11억원)으로 순찰차당 화재대피마스크 4개, 안전모 2개 확충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장비 개발·보급
 - － 3연발 한국형 전자충격기 시범운용(~’20.9월) 및 확대 보급 추진
 - － 보통탄 1/10 위력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체총기(탄) 개발

- 신체조건과 현장업무에 최적화된 전자충격 등 경찰장구 추가 개발

▶ 사업기간: '20년 ~ '22년 / 정부출연금: 50.23억원('20년 예산 11.5억원)

▶ 개발목표: 전자충격 다단봉, 포박장치, 전자충격 장갑 등 개발

안전장비			현장대응 장비		
					
신체보호장비	화재마스크	안전모	전자충격기	저살상탄	전자충격 다단봉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찰장비 도입으로 스마트 치안 구현

- 최신기술을 적용한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운용

< 그간 경과 >

- ▶ 서울청(한강경찰대)·경남청 시범 운용 실시('19. 1~12월)
- ▶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훈령 제정('19. 9월)
- ▶ '무인비행장치 운용인력(공업 9급) 34명 직제 반영('19. 9월)
- ▶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38대 도입('19. 12월)

- 시범 운용 결과 및 현장 경찰관, 무인비행장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종자 수색 장비를 장착한 '경찰 무인비행장치'(38대) 도입

이 미 지		제 원	
		크기(mm)	720mm x 720mm x 500mm
		무게	8.1kg(임무장비 1.2kg)
		비행시간	45분, 30분(임무장비 장착 시)
		통제거리	3km 이상
		카메라	광학 30배 / 적외선 4배
		작동온도	-10℃ ~ 40℃
기체	지상제어장치		

※ 드론 기체 구매비 26억8,700만원(대당 7,071만원), 드론 보험료·수리비 1억8천만원(대당 470만원)

< 실종자 수색용 드론 배정안(案) >

합계	분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대	인개발원
38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 드론 운용 전담인력 34명(공업 9급, 지방청별 2명) 신규 채용 및 운용요원 대상 기체적응훈련 등 직무전문화 교육 실시('20. 6월)

○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도입 및 수소전기순찰차 개발로 친환경 정부시책 부응

< 그간 경과 >

- ▶ 수소전기버스 개발 및 구매 관련 경찰청·현대차 협의('19. 5월)
- ▶ 저상형 수소전기버스 2대 구매, 서울청 기동본부 24·36기동대(여경)에 배정, 거점장소인 광화문·여의도 상시 배치 운용('19. 10월)

- 경찰청 요구사항(화물함 공간 확보 등) 반영한 경력수송용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21년 본격 도입 추진

※ 차량제작사와 공동 운용 실증 테스트('20.6월 ~)

< '수소전기버스 제원 비교 >

외부이미지	주요제원 및 성능		수소전기버스	
			저 상 형	고속형
 【저상형】	제 원	길이(mm)	10,995	11,760
		넓이(m)	2,490	2,495
		높이(mm)	3,420	3,710
		인승	20+1	28+1
 【고속형】	성 능	연료용량	33.1kg	41kg
		최고속도(km/h)	84	141
		항속거리(km)	429	485
		대기시간	36시간	41시간

- 112순찰용 수소전기 순찰차 개발(4대) 및 시범운용 실시('20년 하반기)

- ▶ 미래형 친환경 순찰차 디자인과 업무 편의성 강조 내부 재설계
- ▶ 수배차량 번호인식 멀티 캠, 실내 컴퓨터, 디바이스 등 첨단장비 설치

③ 희망품목 적기보급과 품질향상을 통한 현장활력 제고

○ 희망품목 보급과 편의성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 MAS 구매(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를 통하여, 신청한 희망품목의 보급시점을 단축하고 조기집행 달성 추진

※ '20년 겨울점퍼 등 점퍼류 보급시점을 기존 9~11월에서 2~4월로 단축

- 인사 발령에 맞게 희망품목 수령하도록 신청기간을 연 3회 정기 운영하고 물품 보급 전 배송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 추가(폴메일)

○ 현장 소통을 통한 희망품목 품질 향상 추진

- 현장에 적합한 장비 개발을 위해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 매월 보급 상황과 함께 장비사용·관리법 등을 추가 공지
- 현장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하여 희망품목 지속 개선·개발

※ 수렴 창구: 장비포털 내 희망품목 연구소, 장비과에 바란다, 폴넷 현장활력소 등

< '20년 개선·개발 예정 희망품목 >

품목	간절기 근무복	고무코팅 장갑	외근 허리띠	방한화	메쉬형 외근화
형태 (예시)					
특징	여름원단 사용	간편하게 사용	내구성 강화	보온성 강화	통기성 강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희망품목시스템, 물품보급 시 보급일자 통보 기능 구축 (내부망 폴메일로 물품 보급일자를 통보하는 기능)	1월	
	'20년 1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1월	
	적정 물리력의 대체충기 개발시험평가	3월	
	'20년 2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3월	
	안전장비 보급계획 수립	3월	
2/4분기	범인안전검거를 위한 대체장비 개발 연구수행	4월	
	봄가을점퍼 등 점퍼류 보급	4월	
	여름근무복 등 여름지급 품목 보급	6월	
	실종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마련	6월	
	실종자 수색용 드론 운용 계획 수립	6월	
3/4분기	'20년 3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8월	
	한국형 전자충격기 14개 관서 시범운용 및 결과분석	9월	
	한국형 전자충격기 확대보급 추진 계획 수립	9월	
4/4분기	112순찰용 수소전기 순찰차 개발 및 시범운용	10월	
	방검외근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11월	
	적정 물리력 대체충기 개발 종료	12월	
연중	장비 개선·개발과정 현장과 공유 및 의견수렴	상시	
	희망품목 보급일정 등 장비 관련 소식 전달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장비(피복·장구·차량 등) 사용하는 경찰관·전의경

□ 기대효과

-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R&D 활성화를 통한 범죄 대응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및 친환경 정부시책 부응하는 첨단장비 개발·운용으로 국민들의 스마트 치안 서비스 제공
- 현장 경찰관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다양한 신체보호장비 개발·보급으로 현장 경찰관 신체안전 확보를 통한 당당한 법집행 지원
-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품목 지속 개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 및 적기보급으로 내부 만족도 향상서비스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²⁾				
① 경찰장비현대화(4231) ³⁾		일반회계	2,698	2,708
■ 경찰기동력강화(311)			848	766
■ 차량관리(312)			1,111	1,138
■ 피복관리(313)			580	574
■ 장비관리유지(314)			159	2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경찰장비 만족도 (70%)	84	76	82	82	경찰 장비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평균치(최근 3년 평균 80점) 보다 2점 상향하여 82점으로 선정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기획조정담당관실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전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장비개발 등 규격 개선도 (30%)	31	22	32	29	현장활동에 적합한 장비 개선·개발 지표로 '19년부터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서만 반영된 규격 개선 건수를 반영토록 개선·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평균치(최근 3년 평균 28건) 이상인 29점으로 선정	경찰규격서 제·개정 건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결과 제·개정하여 반영된 수치를 정량 적용

43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Ⅲ-3-③)

□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분야 연구개발(R&D) 중요성 증대
 - 범죄의 예측·대응, 범죄자의 안전한 검거, 구조요청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융합·지원이 필요
- 現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R&D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 내실 있게 관리 중

‘국정과제 14-③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R&D 활성화’

: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 활동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 치안역량 강화

- 또한,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청 주도의 직·간접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학계 및 치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과학치안 R&D 확대 >

- 치안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치안R&D 예산을 증액하고 주요 R&D 수행부처와 협업 확대
- 매년 ‘치안R&D’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현장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신규과제 발굴·추진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수

※ '18년(12개 과제) 133억 → '19년(17개 과제) 186억 → '20년(17개 과제) 225.33억(전년대비 21% 증액)

- ▶ ('21년 신규) △현장·수사경찰관 의사결정 지원기술 △DNA 기반 용의자 특성 추정 기법 △보이스피싱 검거를 위한 4G~5G 전파탐지·추적 기술 △불법드론에 대한 드론포렌식 등 안티드론 기술 개발(다부처) 등
- ▶ ('20년 신규) △전자충격 삼단봉 등 현장지원 장비 △실감형 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미래형 민원대응 AI 콜봇,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기술 등
- ▶ (기존과제)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 △실종아동 신원확인 △치안현장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등

< 치안 R&D 연구성과의 현장적용 실증 >

- '15년 치안R&D 시작 이후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현 시점에서 결과물의 실제 현장적용과 현장의견 반영 등 실증 필요
- 과제(8개)별 '현장 실증관서'에서 1년간 실증 추진, 실용성 강화
 - ※ '소형 드론을 활용한 현장경찰 지원(폴리스랩)', '접이식 방검방패', '블랙박스 영상수사' 등

【치안현장 맞춤형 사업(폴리스랩) 8개 추진 과제】

							
드론 현장경찰 지원	접이식 방검방패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고위치 정밀추위	블랙박스 제보	성폭력 상담 챗봇	보이는112신고	경찰서류 모바일현

- 실증현장 참관 및 사용자(경찰관)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로 현장의견 청취 및 반영하여 연구개발기술의 완성도 제고 및 현장적용 결과 환류를 통해 현장적합성 관리

<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치안산업 진흥 >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직접 연구개발과 함께 치안산업 진흥*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
 - * 치안 관련 신규 창업지원, 핵심기업 육성, 국외판로 지원
- 치안분야 기술·장비의 상용화·사업화 등 치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2회 국제치안박람회를 개최, 국내 우수한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대내외 홍보하여 실질적 치안 산업 진흥효과 창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추진성과」

- (참관객) 16,798(일반인 10,258명 · 경찰 6,431명 · 기자93명 · 해외바이어 16명)
- (전시규모) 총 434개 부스(기업 299, 경찰청 117)
- (수출실적) 해외바이어 총 7개국 16명, 980억원 규모 상당 /
방탄조끼·지문추출기 등 325억원 상당 계약 추진 중(KOTRA 잠정 집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9~'23년도 R&D 중기사업계획 작성 · 제출 및 심의	1월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주최 · 주관기관 회의	2월	
	폴리스랩 본기획 사업 기획회의	2월	
	'21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과제발굴	3월	
2/4분기	폴리스랩 연구팀별 1차 실증연구 추진	3~4월	
	'21년도 신규 요구사업 과제 기획	4월	
	'21년도 치안R&D 예산요구서 작성 · 제출	4~5월	
3/4분기	'21년도 예산안(정부안) 심의 대응 및 협의 · 조정	6~9월	
	치안R&D 예산 국회심의 대응	9~11월	
4/4분기	제2회 치안사업박람회 개최	10월	
	'22년 치안분야 R&D 투자 우선순위 제출(과기부)	10월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0월	
	치안R&D 사업 연차평가 실시	12월	
연중	치안R&D 신규과제 수요조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치안R&D’를 통해 현장치안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국민이 최종 정책 수혜자가 되며,
 - －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 인력투입 위주 방식에서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범죄예방·검거능력 향상으로 경찰관들도 수혜자가 됨
 - － 선진 치안기법·장비 개발은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경제발전 활성화 및 국내 우수한 치안장비·기술의 해외 전수로 ‘치안한류’로 표현되는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및 연구·전문기관(KIST, KISTEB, KEIT) 등과 치안R&D 확산을 위해 정책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과 현장 경찰관 대상 의견수렴 및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확보를 통해 R&D 계속과제의 내실 있는 진행과 신규과제 추가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 기존 치안정책에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과학치안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현장치안력 강화로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1-일반재정②) ²⁾			
① 정책연구개발(R&D) ³⁾		186.36	225.33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400)		9.75	12.50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폴리스랩)(401)		18.15	21.51
■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500)		11.50	27
■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501)		37	37
■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611)		90.18	55.23
■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612)		5.45	2.09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613)		14.33	14.50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 (620)			17.62
■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621)			12
■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기술 개발(623)			25.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연구개발 과제 예산 증가액(억원) (30%)	46	36	53	49.5 억원	성과지표 설정기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거듭한 과거 실적 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실적 평균 치인 45억보다 10% 상회하는 49.5억으로 목표설정	(‘21년 과제 예산 정부안 반영 액 - ‘20년 과제 예산 확보 액)	정부예산
R&D 연구결과물의 현장 만족도 (40%)	신규	신규	신규	80점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 대상자이 자 최종 사용자인 현장경찰관 의 견 반영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 표로, - 타기능 만족도 수치로 판단, 신규지표임을 감안하더라도 ‘양호’ 이상을 나타내는 80점을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0-20 매우미흡 / 20-40 미흡 / 40-60 보통 60-80 양호 / 80-100 매우양호)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전자우편 설문조사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 실적(억원) (30%)	신규	신규	325	357.5 억원	최초 개최인 ‘19년 기준 10% 상 회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도전적 이고 의욕적인 목표치임	계약서 명시된 (‘20년 수출상담액 - ‘19년 수출상담액)	국제치안박람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공식집계 (KOTRA)

44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Ⅲ-3-④)

□ 추진배경

- 최근 공공기관 대상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처 필요
※ 언론보도 ‘공공기관 사칭 해킹메일 기승’ (’19. 7. 연합뉴스)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치안현장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오류점검, 표준화 등 체계적 품질관리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체계적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 전산망 보호 >

-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력 강화 필요
 - －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경찰 전산망 보호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신 정보 보호시스템으로 교체 추진
※ ’19년부터 정보보호시스템 5종 100대 고도화 사업(약 19억) 진행 중
 - － 전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실전과 같은 사이버 훈련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경각심 제고
 -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 실제 사례를 기관과 공유하여 보안관제 능력 향상
※ 사이버위협 발생 시 전국 경찰관서에 사이버 예·경보 하달하여 즉시 대응
- 경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보안 활동 내실화
 - － 자료유출방지(DLP)시스템으로 내부 문서의 불법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일제 정비 추진

- 경찰 정보통신망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망보호 활동 및 관리실태 점검 추진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월별 테마를 선정하여 시인성 있는 홍보 자료 제작 및 정보 시스템·사용자 PC의 보안설정 강화

<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 치안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구축

- 스마트 치안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 활동에 대한 요구도 증대
- 치안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AI 융합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치안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 '20년부터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3단계 中 1단계 구축사업 착수(57억원)

○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제도(지침·규정) 정비 및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 ※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교육 확대 및 자체 점검을 지원하여 미비점 보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관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자체 품질점검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
 - ※ 자체 품질 평가기준 수립 및 진단도구 배포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 치안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경찰청 데이터 표준’ 마련

- 통일된 데이터 형식 및 규칙 적용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 데이터 표준 정의 필요
-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적용 등을 위해 기관메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등록 및 데이터 표준 현행화
 -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데이터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계획	1월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대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	1월	
	'20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월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3월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계획	3월	
2/4분기	'20년 해킹메일 실전 대응훈련 계획	3월	
	'20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	4월	
	'20년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계획(DB 선정)	4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4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정비 계획 수립	4월	
	경찰청 치안 데이터 표준관리 계획	5월	
	공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계획	5월	
	'20년 정보보호 직무전문화 교육 계획	5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대상 데이터셋 선정	6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6월	
3/4분기	경찰청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	7월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	7월	
	치안 데이터 품질진단 담당자 대상 기본·실무 교육	8월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비 현장지원 활동	8월	
	사이버 보안위협 정보공유 현황분석 보고	9월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방데이터 분석 보고	9월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계획	9월	
4/4분기	경찰청 공통 데이터 표준안 수립·확산 계획	10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10월	
	전국 경찰관서 보안감사 계획(하달)	10월	
	'20년 빅데이터 개발 분석모델(범죄예측, 교통시설물 최적화)	11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수검)	11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하반기 운영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또는 초 경찰관
- 이해관계 집단 : 경찰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보유 부서

□ 기대효과

- 경찰이 보유한 범죄경력,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을 사전 예방하여 경찰 전산망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지원
- 기존의 한정된 정보 및 개인의 경험칙에 의존했던 치안 활동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치안’으로 탈바꿈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경찰청 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① '20년 경찰청 치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1차 구축	일반회계	3.51	57.29
②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일반회계	13	10
③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계획	일반회계	5	5
경찰청 유무선망개선			
①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일반회계	24	19
②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5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30%)	8.4	11.1	15.9	17.5	- 본청, 교육기관, 지방청, 경찰서 등 273개 산하기관 과 14만 여대 개별 PC에 대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신속도는 경찰 전산망 보호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 - 금년은 정보 보호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신속도는 3년 평균 11.8점 대비 48%, '19년 대비 10% 향상된 17.5점 목표 설정	하단 참조	관련 시스템, 공문, 메모보고 및 증빙서류 등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30%)	-	미흡 (59.4)	보통 (73.2)	우수 (81)	- 행안부 주관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인 정보화진흥원에서 경찰청 보유 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하며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 - 데이터 품질 수준평가는 4개 영역·9개 지표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 - 평가결과는 '18년 미흡(59.4점), '19년 보통(73.2점)로 상승세이나 전년 대비 10% 상향한 목표로 적극 설정하여 81점 '우수' 기관 목표 설정 ※ '19년 품질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43개 중 우수 기관은 9개 기관뿐	하단 참조	데이터 전문 평가 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의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경찰청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0%)	-	-	73.8	81.1	-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318개)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연 1회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음 - 전년도 84개 취약점을 발견하여 62개에 대해 조치(조치율 73.8%)를 하였음 - 금년은 전년대비 10%가 향상된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81.1%를 목표로 적극 설정	하단 참조	관련 공문, 메모보고 및 증빙서류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0%)	136	160	219	273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여 민간에서 쉽게 활용토록 지원 ※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되며 정부국정과제 지정 - 정부시책에 따라 매년 목록'을 적극 개방하여 '18년 15%, 19년 34% 증가, 평균 24% 상승 * 주제별 유사한 데이터의 묶음(교통사고 정보 등) - 올해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3년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25%인 273개를 목표로 적극 설정	하단 참조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의 등록된 보고서

○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30%)

- 최근 사이버공격은 운영체제(OS)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차단 할 수 있는 패치가 공개되기 전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나 해킹 공격 기법이 주로 사용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은 경찰 정보통신망과 내부자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측정방법] 신속도 = $\frac{6시간내 조치 건수}{사이버위협 조치 필요 건수} \times 100$

구분	신속도	6시간 이내 조치 건수	6시간 이후 처리 건수	총건수
17년도	8.4	99	1,085	1,184
18년도	11.1	61	489	550
19년도	15.9	157	832	989
20년도	17.5	'19년도 대비 10% 상향 목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30%)

- 행정안전부 주관,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결과는 경찰청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수준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중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 최종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는, 데이터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품질평가 전문 위원이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10월중에 최종 품질평가보고서를 각 기관에 배포
- * 행안부 평가척도 : 우수(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경찰청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20%)

- 매년 새로운 해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웹사이트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활동이 긴요함(10월 기준)
- [측정방법] 개선 조치율 = $\frac{조치된 보안 취약점 수}{사전 점검시 발견된 취약점 수} \times 100$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

- 모든 공공기관은 민간 창업, 범죄치안, 사회적 가치 등 활용을 위해 국민 수요 중심의 개방목록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하여 관리
- 교통사고정보, 분실물정보, 실종아동정보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개방목록(데이터 묶음)을 적극 개방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함(정부혁신평가 반영)
- [측정방법] 목표치(273개) = 219('19년 실적) × 1.25
- ※ 그간 적극적인 개방으로 3년 평균 증가율 24%이며, 전년도 대비 25%로 공격적인 목표 설정

< 행안부 주관,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

▶ **개 요**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관의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반, 역량, 표준화, 오류 등 기관의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253기관)

▶ **평가항목** : 데이터 품질관리 4개 영역, 9개 평가지표

구분	지표	배점	주요 평가 내용
계획	품질관리 기반	5	기관 차원의 품질계획 수립하고 추진과제 이행 여부 점검
	품질관리 역량	5	데이터 품질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교육 실적
	표준관리 체계	10	기관의 데이터 표준 정의와 적용 확산 노력 등 점검
구축	표준화 확산	15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실제 각 DB반영 여부(표준적용률)
	DB 구조 안정화	15	각 DB의 구조, 산출물 등 현행화 여부
	연계체계 정비	5	연계 데이터의 관리정보, 품질점검, 담당자간 의사소통 등
운영	품질진단·개선	10	품질진단 대상과 진단기준 정의, 품질진단 수행
	오류데이터 관리	25	진단대상 DB 및 데이터파일 오류율 점검
활용	활용성 제고	10	치안 데이터 이용자 오류 처리절차 정의 및 접수·처리

▶ **평가일정** : 기관별 실적 제출('20년 8월) → 중간평가 결과(9월) → 최종 평가결과(10월)

<붙임> 행안부 주관,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4개 영역, 9개 평가지표)

영역	지표(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획 (20)	1.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5)	1-1.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 점검 및 조치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90%이상) ② 중장기(3~5개년)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이행	2-1.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점검 및 조치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80%이상) ② 조치결과 보고 및 공유	3-1.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점검 및 조치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70%이상)	4-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규정 수립 ①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규정 수립	5-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부분적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5)	1-1.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진단대상 DB 90% 이상) 1-2. 데이터 품질관리 노하우 경험의 축적 및 확산 ①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관계자간 소통 정례화 (연간 2회 이상)	2-1.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진단대상 DB 80% 이상) 2-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실시 ①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연간 2회 이상)	3-1.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진단대상 DB 70% 이상) 3-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실시 ①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연간 1회)	4-1.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계획 수립 ① 기관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수립 4-2.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 ① 기관 품질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5-1.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계획 수립 ①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부분적 수립																																																			
	3.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10)	1-1.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이행점검 및 조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 (90%이상)	2-1.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이행점검 및 조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 (80%이상)	3-1.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이행점검 및 조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대비 점검 및 조치 (70%이상)	4-1.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및 표준정의 ① 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② 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 * 표준용어는 도메인을 포함	5-1.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①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부분적 수립																																																			
구 축 (35)	4. 데이터 표준화 (15)	1-1.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① 기관표준 DB 반영 ②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적용(80%이상) ③ 범정부 데이터 표준 반영	2-1.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① 데이터 표준 매핑 ②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적용(70%이상)	3-1.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① 데이터 표준 현황 분석 ②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적용(60%이상) * 표준적용률을 걸림 기준으로 산식 변경 ③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관리	4-1. 데이터 표준관리 계획 수립 및 표준정의 ① 데이터 표준 적용확산 계획 수립 ②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정의	5-1. 데이터 표준 정의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미정의																																																			
	5. 데이터 구조 안정화 (15)	1-1. 데이터 구조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90%이상)	2-1. 데이터 구조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80%이상)	3-1. 데이터 구조 점검 및 개선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현행화(70%이상)	4-1. 데이터 구조 정의 ① 진단대상 DB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산출물 관리	5-1. 데이터 구조 정의 ① 데이터 구조 미정의																																																			
	6. 데이터 연계체계 정비 (5)	1-1.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최적화 ① 중장기(3~5개년) 계획에 따른 연계데이터 품질개선	2-1. 연계데이터 품질 개선 ① 조치가가능한 연계데이터 품질개선 활동 수행 ② 연계데이터 내외부 기관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 활동 수행(1회/반기 이상)	3-1. 연계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① 연계데이터 품질점검 (1회/반기 이상) ②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4-1. 연계데이터 정의 ① 연계데이터 관리정보 정의	5-1. 연계데이터 정의 ① 연계데이터 관리정보 일부 정의																																																			
영 역 (35)	7.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 (10)	1-1.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품질진단 실시(90% 이상) ② 개선과제 이행률 (90% 이상)	2-1.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품질진단 실시(80% 이상) ② 개선과제 이행률 (80% 이상)	3-1.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품질진단 실시(70% 이상) ② 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이행률 (70% 이상)	4-1.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요건 정비 ① 품질진단 사전 준비	5-1.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요건 정비 ① 품질진단 사전 준비																																																			
	8. 오류 데이터 관리 (25)	1-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파일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 (0.01% 미만)	2-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파일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 (0.1% 미만)	3-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파일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 (0.5%미만)	4-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파일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 (1%미만) (파일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table><tr><th>순번</th><th>진단기준</th></tr><tr><td>1</td><td>날짜 도메인</td></tr><tr><td>2</td><td>번호 도메인</td></tr><tr><td>3</td><td>여부 도메인</td></tr><tr><td>4</td><td>코드 도메인</td></tr><tr><td>5</td><td>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td></tr><tr><td>6</td><td>시간순서 일관성</td></tr><tr><td>7</td><td>참조값</td></tr><tr><td>8</td><td>금액 도메인</td></tr><tr><td>9</td><td>수량 도메인</td></tr><tr><td>10</td><td>율 도메인</td></tr><tr><td>11</td><td>선후관계 정확성</td></tr><tr><td>12</td><td>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td></tr></table>	순번	진단기준	1	날짜 도메인	2	번호 도메인	3	여부 도메인	4	코드 도메인	5	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	6	시간순서 일관성	7	참조값	8	금액 도메인	9	수량 도메인	10	율 도메인	11	선후관계 정확성	12	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	5-1.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① (DB, 파일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오류율 (1%이상) (DB 품질진단 기준) <table><tr><th>순번</th><th>진단기준</th></tr><tr><td>1</td><td>날짜 도메인</td></tr><tr><td>2</td><td>번호 도메인</td></tr><tr><td>3</td><td>여부 도메인</td></tr><tr><td>4</td><td>코드 도메인</td></tr><tr><td>5</td><td>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td></tr><tr><td>6</td><td>시간순서 일관성</td></tr><tr><td>7</td><td>참조값</td></tr><tr><td>8</td><td>금액 도메인</td></tr><tr><td>9</td><td>수량 도메인</td></tr><tr><td>10</td><td>율 도메인</td></tr><tr><td>11</td><td>선후관계 정확성</td></tr><tr><td>12</td><td>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td></tr></table> ※ 컬럼간 논리관계 일관성은 표준보급시스템 DB만 적용	순번	진단기준	1	날짜 도메인	2	번호 도메인	3	여부 도메인	4	코드 도메인	5	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	6	시간순서 일관성	7	참조값	8	금액 도메인	9	수량 도메인	10	율 도메인	11	선후관계 정확성	12
순번	진단기준																																																								
1	날짜 도메인																																																								
2	번호 도메인																																																								
3	여부 도메인																																																								
4	코드 도메인																																																								
5	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																																																								
6	시간순서 일관성																																																								
7	참조값																																																								
8	금액 도메인																																																								
9	수량 도메인																																																								
10	율 도메인																																																								
11	선후관계 정확성																																																								
12	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																																																								
순번	진단기준																																																								
1	날짜 도메인																																																								
2	번호 도메인																																																								
3	여부 도메인																																																								
4	코드 도메인																																																								
5	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																																																								
6	시간순서 일관성																																																								
7	참조값																																																								
8	금액 도메인																																																								
9	수량 도메인																																																								
10	율 도메인																																																								
11	선후관계 정확성																																																								
12	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																																																								
활 용 (10)	9. 데이터 활용성 제고 (10)	1-1. 수요기반의 데이터 활용성 제고 ① 수요자 요구사항 정책 반영	2-1.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① 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문제점 개선 ② 데이터 품질 만족도 및 요구사항 조사 분석	3-1. 수요자 요구사항 파악 ① 품질오류 신고내역 기록 관리 및 처리기준 준수	4-1. 수요자 요구사항 수집 ① 품질오류 신고 접수 및 처리기준 정의	5-1. 수요자 요구사항 수집 ① 품질오류 신고 접수																																																			

※ 컬럼간 논리관계 일관성은 표준보급시스템 DB만 적용

45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Ⅲ-3-⑤)

□ 추진배경

- 운용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헬기운용을 치안현장 지원에 적극 활용
 - ▶ 헬기 1대 가격 : 국산 참수리헬기(KUH-1P) 기준 240억원
 - ▶ 경찰헬기(19대) 유지 비용 : 정비비·유류비·보험료 등 年 105억원
- 최근 대형 헬기사고 발생, 안전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 부각
 - ▶ '18. 7. 17. 해병대 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 발생(사망 6명)
 - ▶ '19. 10. 31. 소방청 헬기 독도 환자이송 중 사고 발생(사망 7명, 헬기침수)
 - ▶ '20년 대만 軍 헬기추락(참모총장 등 사망 8명), 미국 농구선수 헬기사고(사망 5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보호’ 임무에 경찰헬기 적극 지원
- 범인 추적·교통관리·수사업무 등 다양한 치안현장에 헬기 활용
- 항공카메라·무선영상전송장비를 활용한 업무영역 확대 추진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항공요원 직무능력 향상 및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지적 협조체제 구축
- 항공요원 대상 비행, 정비, 기상 등 다양한 안전 전문교육 시행
 - － (조종사) 기종별 모의비행 훈련, 각종 돌발위기 상황에 대처
 - － (정비사)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정비 전문화과정 교육
- 비행, 정비, 기상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수료

< 항공 무사고 안전비행 >

- 경찰헬기 사고예방을 위한 항공대 안전활동 강화
- 감항성 검사 등 헬기 안전성 점검, 결함분석 등 정비관리 강화

⇒ 1993년 이후 이어온 경찰항공 무사고(27년간) 전통 계승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경찰헬기 항공보험 가입계획 수립(보고, 일상감사)	1월	(추진계획 등)
	2020년 상반기 항공요원 보직관리위원회(심의) 개최	1월	(협업, 의견 등)
	20년 경찰헬기 항공보험 가입계획 및 계약체결	2월	(추진계획 등)
	2020년 경찰항공 종합대책 수립	2월	(추진계획 등)
	신규헬기 3대 최종검사 및 잔금 예산집행	2월	(추진계획, 협업)
	항공과장 각지방청항공대 현장점검 및 간담회	2~3월	(홍보, 협업)
	'20년 항공경찰 워크숍 계획수립 및 개최	3월	(협업, 의견 등)
	항공기 감항업무 매뉴얼 책자발간 및 지방청 배포	3월	(추진계획 등)
2/4분기	신규헬기 2대 도입계획 수립 및 외부요원 등 심의회 개최	4월	(협업, 의견 등)
	노후헬기 용도폐지 소요조사 및 관리전환 등 계획수립	4월	(협업, 노력도)
	KAI, 육군 항공학교 등과 협의 모의비행 훈련	5월	(협업, 노력도)
	P4G 정상회의 경찰헬기 지원계획수립	5월	(협업, 추진계획)
	국가기관 통합 항공안전 현장점검 계획수립	6월	(협업, 의견 등)
	전반기 치안현장 헬기지원 등 중간평가	6월	(추진계획 등)
3/4분기	신규헬기 2대 계약 추진 및 예산집행	7월	(추진계획 등)
	상반기 경찰헬기운용결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수립	7월	(추진계획 등)
	조종사, 정비사 항공안전교육 등 위탁교육	8월	(협업, 노력도)
	제작사 및 외주정비업체 항공기 정비현장 점검	8월	(의견, 노력도)
	추석 연휴 헬기지원 및 운용계획 수립	9월	(추진계획 등)
	전국 13개 항공대 항공안전 현장점검	9월	(추진계획, 의견 등)
4/4분기	기종별 헬기 감항성 검사 및 최종 감항 인증	10월	(추진계획 등)
	경찰헬기 운용 실태분석 및 하반기 운용계획 수립	10월	(협업, 노력도)
	항공영상 무선전송장비 시스템 구축(2차)	11월	(협업, 노력도 등)
	항공신체검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체검사 완료	11월	(추진계획, 정책 등)
	'20년 경찰항공 교육훈련분석 및 '21년 교육 계획수립	12월	(의견, 정책 등)
	'20년 헬기 결함분석 및 개선대책 계획수립	12월	(정책, 노력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헬기 운용 기관, 외주업체(헬기제작, 정비업체)

□ 기대효과

- 민생치안 현장 헬기 적극 지원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항공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로 항공사고 예방
- 무사고 안전비행으로 국민으로부터의 경찰 신뢰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헬기운용 및 현대화(IV-2-재정②)				
① 헬기운용 및 현대화(4232)			283 (283)	321 (321)
■ 헬기운용 및 현대화(311)			283	3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40%)	456			505	하단 참조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	폴넷 게시판, 지방청 보고문서, 본청 심의결과 공문(매월)		
	【 산출근거 】								
	□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40%)								
	○ 폴넷 게시판(칭찬플랫폼)에 게재되거나 문서 보고된 치안현장 헬기활동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가중치를 두어 환산한 점수의 총계('19년 1월이후 매월 심의 및 집계, 항공대 평가자료로 활용 중)								
	< 점수부여 기준 >								
	항 목		내 용				평가점수		
	주요범인검거		헬기수색으로 범인을 발견(추적), 지상경력과 공조하여 검거				5~10점		
	인명구조		헬기로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한 경우				5~10점		
	실종자 발견		헬기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				3~7점		
	주요상황관리		재난·재해 및 주요 경비상황 현장 출동, 상황관리에 기여				3~7점		
	교통관리		헬기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거나 주요 교통사범 단속				1~5점		
	단순이송		수사관, 피의자, 경미한 환자, 변사체 등을 이송한 경우				1~5점		
	기 타		기타 헬기를 활용한 주요 활동 사항				1~10점		
	※ 평가점수는 항목별 최저점을 기준으로 사안의 중요도, 난이도(야간임무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매월 1회 본청 항공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주 항공대에 결과 하달								
	○ 전년도 1~12월 점수 총계는 456점으로, 전년도보다 실적(456점)보다 10%이상 높은 도전적 목표치 (505점)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목표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점)					-	-	456	505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30%)	107	80	61	100	하단 참조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본청 결과보고(공문)
	【 산출근거 】						
	□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 항공요원(조종사, 정비사)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교육 실적 으로 조종사 비행교육, 정비사 정비교육, 기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연간 교육훈련 실시인원 통계 - 전문기관 : 군·산림청 등 국가기관, 항공대학 및 헬기·엔진 제작사 등 민간전문기관 ○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는 공문으로 보고되며, 항공요원 출장기록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 '20년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공요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근 평균 교육훈련 인원 (83명)보다 대폭 증가한 도전적 목표치 설정(평균대비 17명, 전년대비 39명 증가) 설정 						

[1] 주요 내용

- **<선제적 행정 지원>** 연가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장려 등으로 ‘휴식 있는 삶’과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
- **<복지기반 확충>** 긴급심리지원·야간특수건강검진 등 경찰관 맞춤형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순직·공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 **<법률지원 체계화>** △‘현장법률365’ △경찰책임보험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
- **<현장 재정지원 강화>** 치안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점검체계를 통한 재정사업의 관리·집행 효율화
-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 경찰역사 발굴·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경찰정신 함양으로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책임감 거양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치안 역량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행정 지원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연가사용 실적 / 유연근무제 활용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만족도 /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 과제 정비 달성도 /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 현장법률365센터 대응 노력도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경찰역사 인식도 / 기록물 관련 교육 이수 지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76.3	76.1	77.8	79.0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는 '18년 하락 이후 반등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3.7)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8.2)를 고려, '20년 목표치는 평균값 및 예측값보다 높은 79.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중 복지 부문 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제는 소요예산 확보 및 법률 제·개정 등을 수반하므로 기재부·국회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지 분야 과제 발굴, 기재부·국회 대상 적극적인 협의로 공감대 조성하여 과제 이행을 완수

[4]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www.mosf.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46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치안현장 활력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 (Ⅲ-4-①)

□ 추진배경

-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는 일·가정의 양립*,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우수직원 격려 등 현장 활력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으로부터 시작
 - *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과 연계
- 또한, 변화하는 치안환경 속 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공유, 회계업무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행정지원이 중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모두와 소통·화합하는 행사를 추진,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
 - － 치안현장·노고부서 적시 방문, 칭찬플랫폼을 통한 우수직원 격려* 등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를 추진, 일선 현장의 활력 제고
 - * 칭찬플랫폼, 베스트 경무인, 베스트 팀장, 숨은 일꾼 등 포상제도 운영
 - － '경찰문화대전', '휴가체험기 공모전' 등 업무 외적으로 직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
 - －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등 각종 경찰 행사*를 주관 및 지원, 경찰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과도 소통·화합하는 문화 정착
 - * 시무식, 위촉식, 시상식, MOU 체결, 정부행사, 종교행사, 복지시설 방문 등
- 휴식 있는 삶과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 年 연가사용 목표일수 설정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
 - ※ △계절휴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적극 활용
 - ※ 명절·공휴일 전후로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본청부터 솔선수범하며 관리자는 일정 일수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 또한, 유연근무제도도 적극 권장, 육아 등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 경찰청 집단 유연근무제(월2회) 유지,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이용 장려
- ※ 부서장 이상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 활용토록 강제성 부여

○ 각종 사업을 뒷받침하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

- 경찰청 전 국·관별 주요 추진 사업에 맞춰 신속·공정한 계약 절차를 진행(통상 年 1,500건), 원활한 치안정책 추진을 지원
- 본청 사업담당, 관서별 회계담당 등 대상 △ 회계교육 △ 실무편람 제작 △ 현장컨설팅 등 추진,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기반 조성
- ※ 본청 예산·사업담당자 대상 계약절차 교육 / 국가계약 및 회계 전문화 교육 과정 진행 / 사례 중심 회계실무편람 제작 / 상·하반기 현장컨설팅 실시 등

○ 쾌적하고 편안한 업무여건 조성으로 조직 내부만족도 제고

- 국·관별 사무공간 최적화, 사무실 조도, 내부 위생 개선* 등 다양한 청사환경 개선을 추진, 쾌적하고 편안한 업무여건 조성

* 정기청사 소독, 공기조화기 및 비데필터 교체 주기 단축 추진

구분	주기
청사소독	年 8회(법정 年 5회)
공기조화기 필터교체	年 1회 → 年 2회
비데 정수필터 교치 및 스팀세척	年 2회 → 年 4회

○ 노·사 협력,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 등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 노사 합동워크숍(연2회)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임금 교섭을 추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행복한 근로환경 정착
-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창구로 작용할 ‘경찰 직장협의회’의 안정적 설립(6.11. 시행)을 지원,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에 기여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9년 경찰청 시무식	1월	
	직장협의회T/F 설치	1월	
	직장협의회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3월	
2/4분기	직장협의회 관련, 기관장·현장직원 대상 교육(사이버 강좌 개설)	4월	
	'20년 근무혁신 기본계획 수립	4월	
	회계실무편람 발간·배포	4~5월	
	노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4~5월	
	'20년 전국 회계담당 워크숍 실시	4~6월	
	경찰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4월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4~5월	
	상반기 전국 찾아가는 회계부서 현장컨설팅 실시	5월	
	'19년 상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7월	
	휴가체험기 공모전 개최	7~10월	
3/4분기	경찰청주무관노조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7월	
	제21회 경찰문화대전 개최	9~10월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10월	
4/4분기	경무 행정지원업무 내부만족도 평가	10월	
	'19년 하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11~12월	
	하반기 전국 찾아가는 회계부서 현장컨설팅 실시	11~12월	
	근무혁신 우수 관서 포상계획 수립	12월	
	주요 치안현장 방문	수시	
연중	경리 회계과정, 지방청 회계과정, 회계담당 조달청 위탁 교육 실시	수시	
	관서별 연가사용 현황, 유연근무실태 및 불필요한 대기 점검	분기별	
	경찰청 '숨은일꾼' 선발·포상	분기별	
	사랑나눔 운동(봉사활동, 헌혈, 바자회 등) 추진	연중	
	청사 시설점검, 방역 및 노후설비 보수 등 지원	연중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베스트팀장 선정	연중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보장 및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행정지원, 근무혁신(유연근무, 연가 등), 내부소통(조직원 간 갈등 치유, 스트레스 해소) 등은 전 기능 대상 추진과제로 경찰청 소 직원이 수혜자
- 또한,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경찰의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은 국민들에게 영향, 최종적 수혜자는 치안서비스 당사자인 전 국민

□ 기대효과

- 행정지원이 뒷받침된 치안정책 추진은 치안성과 창출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경찰 전체의 치안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내부만족도, 업무효율성 증대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만족·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50%>	87.7	82.8	82.4	85	하단 참조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의뢰, 내부망 메일 이용 설문조사

- (지표 개요) 경무담당관실의 행정지원업무에 대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 경찰청 소속 직원 중 10,000명을 임의 선정하여 10월 중 내부망 메일로 설문조사 실시
- ('20년 목표치) '16년 신설 후 지속 하락세인 것을 감안하여,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실적 평균치인 84.3점을 상회하여 도전적으로 85점을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연가사용 실적 <30%>	경정·5급 이상<15%>	33.85	47.84	47.37	49.7	하단 참조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찰청 e-사람 시스템상 산출
	경감·6급 이하<8%>	38.79	47.38	48.8	50.7			

- (지표 개요)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통하여 직원들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연가사용일수/연가부여일수)을 평가
- ('20년 목표치)
 - － <경정·5급 이상> '19년 하락한 지표로, 3년 평균치는 43.02%이나, 관리자의 연가사용을 통한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전적으로 49.7%를 목표로 설정('19년 대비 5% 증가)
 - － <경감·6급 이하> '18년 근무혁신 추진으로 연가 사용 비율이 급증한 후 임계치 도달했다고 판단되나, 2년 실적을 토대로 도전적으로 50.7% 목표 설정('19년 대비 4% 증가)
- ※ (참고) '18년→'19년의 경우, 경정·5급 이상 1% 하락 / 경감·6급 이하 3% 상승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20%>	56.9	64.2	66.8	70.0	하단 참조	일반대상자 중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한 인원 비율	경찰청 e-사람 시스템상 산출

- (지표 개요)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업무효율 향상 노력'에 대한 지표로, 인사처 평가지표 기준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 일반대상자 중 월 1회 이상 유연근무 활용한 인원 비율로 평가
- ('20년 목표치) '18년 근무혁신 추진으로 유연근무 사용인원이 급증한 후 제도정착 등 최근 2년간 안정화 및 임계치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나(인사처 기준은 50% 이상 만점), 2년 실적 기준으로 도전적으로 70%를 목표로 설정('19년 대비 5%증가, '18년→'19년의 경우 4% 증가)

47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Ⅲ-4-②)

□ 추진배경

- 경찰관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폭넓은 복지제도 기반 확충 추진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제2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19~2023)’
-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보수·수당 개선과 퇴직(예정) 경찰관 지원 확대,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현장 활력 제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에 헌신한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체적·정신적 맞춤형 건강증진체제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

- 경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 충격 사건 경험 직원 대상 긴급심리지원, 심리상담, 전문병원 검사·치료 후 사후 힐링캠프까지 단계별 맞춤형 마음 건강관리
 - － 경찰관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연 1회 필수)
- 건강관리체계 지속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 야간특수건강검진 검진 항목 고도화를 위한 연구 진행 및 예산 증액 추진
 - － 마음동행센터(전국 18개소)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인원 확대를 위해 상담사 증원 추진
 - － 마음동행센터에서 진행한 각종 검사·상담 결과 등 기초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기능별 특화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고도화 추진

< 순직·공상경찰관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 공상경찰관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 인사처 등과 협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최대 3→5년), 휴직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 전사·순직경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예우·보훈 사업 추진
 - － 전사·순직경찰관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각종 추모 행사 개최

△ 현충일 추념식 및 전사·순직경찰관 추념식(6월) △ 경찰추모주간 유가족 오찬 행사(10월), △ 전쟁기념관 올해의 호국 인물 현양 행사(11월) 등

- － 국방부 유해발굴사업단과 협업,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 경찰관의 유가족 확인을 위한 홍보 강화(DNA 시료 채취 등)
- 순직 유가족 및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운영
 - － 경찰청 원스톱지원팀*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부상에 대하여 순직·공상 신청 등 종합케어시스템 운영
 - * 주요 순직·공상자 발생시 현장 진출하여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 － 순직자 기일 유가족 위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 공상자의 빠른 복귀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 종합관리체계 운영

【 순직자 유가족 지원 】

△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 장기투병 및 공상퇴직자 설·추석 명절 위로
△ 순직자 기일 위로 △ 순직·공상퇴직자 자녀 장학 지원(공상자 포함)

【 공상자 지원 】

- ▶(특별위로금) 위험직무공상경찰관 중 병가·휴직으로 미출근 관련 급여 감소분 보존
- ▶(특수요양비)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에 대하여 50% 지원
- ▶(소송비지원) 순직·중한공상 불승인 관련 재심 및 행정소송시 변호사 선임료 등 지원

< 퇴직경찰관 전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 퇴직 5년 前부터 퇴직 후 재취업까지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 퇴직 5년 前 : 기초교육(경력 진단·설계), 전직역량개발 교육비 지원
△ 퇴직 1년 前 : 심화교육(창업, 재취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
△ 퇴직 後 : 경찰전직지원센터 등록, 취업 컨설팅(상담, 일자리 알선)

- 재직 중 전문역량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
 - － 경찰전직지원센터 중심(전국 6개소) 일자리 알선, 탐색 및 개발
 - ※ 경찰경력-민간직업 연계데이터 DB 활용, 보안직 외 일자리 확대
 - － 안전에 대한 국민수요를 반영하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사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등 경찰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보
- 경찰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전직지원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예산확보 추진

< 시설·여가 복지 확대하여 경찰 가족의 행복 증진 >

-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100개소 확충을 목표('23년)로 BTL사업 2·3·4차 어린이집 단계별 추진 및 5차 어린이집 신축예산 확보

(‘19) 27개소(재정 5개소, 1차 22개소) ⇨ **(‘20) 49개소(2차 22개소)** ⇨ (‘21) 69개소(3차 20개소) ⇨ (‘22) 85개소(4차 16개소) ⇨ (‘23) 100개소(5차 15개소)

- 도서·산간지역 등 특수지는 관사를 신축하고, 도심지는 임차 관사를 확보하는 등, 노후관사 환경개선 지속 추진
- 경찰수련원 신축예산이 확보된 강릉·신안수련원 사업관리, 노후시설(영덕) 환경개선 및 수련원 지속 확충
- 복지카드기금을 활용한 장기재직자 사기진작 사업 지속 추진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여행·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와 복지제휴 활성화

- 대학별 경찰관 자녀 특별전형 홍보 및 적용대상 대학 확대 추진
- 경찰관서 전국 동호인대회를 활성화하여 직원 간 소통·화합
창구 마련 (경찰청 주최, 연합회 주관으로 개선)

< 경찰 업무특성을 반영한 보수·수당 현실화 >

-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 위한 합리적인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
- 노고 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경찰 수당체계 개선
 - － 치안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근무여건 악화, 유사
업무 대비 불합리, 10년 이상 장기간 동결 등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기준을 고려하여 수당 신설·인상 필요사항 발굴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1월	
	'20년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계획 수립	1월	
	'19년도 경찰병원 고유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	1월	
	'20년 순직·중한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 소송비 지원계획 수립	2월	
	'20년 공상자 특수요양비 지원계획 수립	2월	
	'20년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계획 수립·하달	2월	
	'20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하달	2월	
	'20년 임차관사 예산 배정계획 수립	2월	
	신안수련원 신축 기본계획 수립	2월	
	'20년 경찰청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 수립	2월	
	제2차 경찰복지기본계획 '20년 시행계획 수립	3월	
	'20년 전직지원계획 수립·하달	3월	
	'20년 치안전문지식 멘토링 사업 시행	3월	
	'20년 경찰전직지원교육 운영 용역업체 선정	3월	
	'20년 복지카드기금 사용계획 수립·시행	3월	
	'20년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3월	
	'20년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계획 수립	3월	
	경찰수련원예약시스템 운영 기능개선 추진	3월	
	전국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담당자 워크숍	3월	
	어린이집 BTL사업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제천 치유의 숲 이용 협약 후속조치 완료	3월	
	전국 경찰관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정) 시행	4월	
	'20년 복지시설 보수예산 배정계획 수립	4월	
	신안수련원 신축 설계 관련 설문조사	5월	
	5차 어린이집·여수수련원 BTL사업 한도액 요구서 기재부 제출	5월	
	3차 어린이집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	5월	
	'21년 경찰청 수당조정요구안 마련·제출	5월	
	전국 경찰수련원 성수기 대비 점검계획	6월	
	전직지원 사업 운영 실무 매뉴얼 제작	6월	
	호국보훈의 달 전사 경찰관 추모행사 개최	6월	
	'20년 순직경찰관 영결식 용역사업자 선정	6월	
3/4분기	'21년 마음동행센터 인력증원 및 생명지킴이 교육(신규) 관련 예산 증액 추진	6월	
	4차 어린이집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7월	
	4차 어린이집 BTL사업 사업자 평가 및 협상용역계획 수립	8월	
	2차 BTL 어린이집 22개소 일제 개원	9월	
	3차 어린이집 BTL사업 공사 착공	9월	
4/4분기	전국 경찰관서 동호인대회 개최	9월	
	경찰 추모주간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 행사 개최	10월	
	직장보육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10월	
	4차 어린이집 BTL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계획 수립	10월	
	관사 운영 개선방안 수립	11월	
	전국 경찰수련원 담당자 워크숍	11월	
	퇴직예정경찰관 가이드북 제작	11월	
	퇴직예정경찰관 「인재양성과정」(전직지원강사 등) 개설	11월	
	4차 어린이집 BTL사업 사업자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월	
	'20년 경찰전직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12월	
	'21년 경찰전직지원 컨설팅 운영업체 선정	12월	
	'20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결과 분석 및 추가 개선사항 검토	12월	
	제2차 경찰복지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수립	12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재단 발굴	연중	
	사이버경찰청 순직경찰추모관 內 행사갤러리 업데이트, 순직자 추가등록	연중	
	순직자 기일 위로, 공상경찰관 위문 방문	연중	
	위험직무공상자 특별위로금, 공상자 특수요양비, 순직공상 불승인 소송비 지원	연중	
	퇴직(예정)자 대상 교육·재취업 컨설팅 실시	연중	
	전직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 제작·게재	연중	
	각종 할인 제휴 협의	연중	
	전국 경찰관서 동호인대회 개최 (6개 종목)	연중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	연중	
	소직원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자살예방 교육 실시	연중	
	전국 경찰교육센터 '경찰 마음돌봄과정' 실시	연중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 양성 및 심화교육 실시(연 3회)	연중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 및 상시 상담·치료(일반, 긴급) 지원	연중	
	전국 공상경찰관 대상 힐링캠프·템플스테이 실시	연중	
	전국 경찰복지시설 점검 계획 수립·시행	연중	
	강릉수련원 증축 및 신안수련원 신축 설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재직·퇴직경찰관을 포함한 경찰 조직원들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 － 경찰복지로 인한 자긍심·사명감 제고가 경찰관의 적극적·헌신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져 국민도 간접적인 수혜대상임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정부 부처, 경찰병원·경찰공제회 등 관계 기관·단체

□ 기대효과

- 현장 치안 활동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을 통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찰관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함양
- 경찰관의 직무특성에 맞게 심리·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국가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순직·공상자를 예우하여 사명감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경찰복지증진(V-4-일반재정④)				
① 경찰복지증진(7135)			387.12	552.35
■ 경찰복지증진(311)		일반회계	334.85	474.1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312)			19.13	19.85
■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자)(751)			33.14	58.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복지정책만족도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복지정책만족도 (35%)			68.4	72.5	하단 참조	추진과제별 평균만족도를 합산한 값 / 추진과제의 수	전직원대상 이메일 조사

- **(지표개요)** 복지정책만족도 조사는 정책목표별 추진과제의 내용 및 실적 등에 대한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과제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임
- **(’20년 목표치)** ’19년 실적은 보통에 근접하여 ’20년에는 도전적인 목표치로 6% 상향하여 72.5점으로 설정하고, 향후 만족 수준의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 매우 만족(90점 이상), 만족(80~90점), 보통(70~80점), 불만족(60~70점), 매우 불만족(60점 미만)

< 현장경찰관 마음건강관리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35%)	2,511	2,895	6,183	8,820	하단 참조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제공 인원수	상담 위탁업체 비용정산 근거자료

- **(지표개요)** 마음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나, 경찰의 불규칙적인 근무여건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정신적 공상 예방을 위해 조직적 차원의 적극적인 ‘긴급심리지원·지정상담’ 필요
 - △ 긴급심리지원 : 충격사건 담당 경찰관 대상 사건 직후 한 달 간 최대 4회 상담
 - △ 지정상담 : 형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부서 대상 1:1 검사·면담

- ('20년 목표치) '19년 하반기 마음동행센터 9개소 신설(9→18개소),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637명(42%) 증가한 8,820명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산출근거 : 420명* × 21명 = 8,820 / * '18년 기준, 상담사 1인당 연간 상담 평균치

<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30%)	62.0	65.0	68.3	70.3	하단 참조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 인원	전직지원센터 제출 자료

- (지표개요) 국정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와 관련한 지표로서,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년 목표치) '20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2% 상승한 70.3%로 설정

— '19년 상승폭 3.3%와 비교 시 낮은 수치로 판단할 수 있으나 취업제한기관이 '17년 이후 '20년에 5.9% 증가(975개)하는 등 퇴직경찰관의 재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찰전직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이 지연되고 기업 운영도 위축되는 등 취업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취업 인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20년의 목표치를 '19년 실적치보다 2% 상향하여 70.3% 도전적으로 설정

* 신종코로나로 채용계획 변경 등 취업시장도 영향(중소기업신문, '20.2.13.)

※ 현 목표치 70.3%는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률 38.6%(통계청, '20년 1월 고용동향)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67.7%(한국교육개발원 조사, '19.12.26. 발표)을 감안하면,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 취업 인원은 질 높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로 산정(시·일급 일자리·사회공헌형 일자리0.5명, 감시·단속직 0.7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취업성과	1,140명	1,170명	1,209명
컨설팅 인원	1,838명	1,800명	1,770명
취업률	62.0%	65.0%	68.3%

48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Ⅲ-4-③)

□ 추진배경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여 적법·타당한 공무집행의 확립을 위해 경찰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령, 제도의 완비 및 재·개정 필요
- '20년 '혁신'과 '민생'이라는 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규제혁신 체감만족도의 동시 충족 필요
- 엄정하고 단호한 경찰권 발동을 위해 △현장법률 365 △손실보상 △법률보험 등 종합 법률지원체계 구축 및 내실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경찰개혁은 입법과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 － 경찰개혁 관련 입법과제의 법적 검토 및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소과정을 체계적·전문적 관리
- 경찰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에 대해 입법형식별 대응 절차를 확립하는 등 법제심사부터 국회까지 입법 대응을 총괄
- '20년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100% 달성을 목표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규제개혁을 추진
 - ※ △미래 신산업(수소차, 드론, 빅데이터) △기존산업(양성평등 채용) △민생불편·부담 해소(운전면허, 경찰공무원 채용 등) 관련
- AI시대에 걸맞게 現법령포털을 '스마트치안 법무지식검색시스템'으로 개편, 법령·규칙부터 매뉴얼, 업무자료까지 원스톱 검색 제공
 - ※ 폴리폰 동일 내용 연동, 치안빅데이터 통합플랫폼에 연계(10월 예정)
- KICS(형사사법전자화시스템)상 「현장법률365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상담DB 주요 사례 공유 등 고품질의 DB생산자로서 역할 강화

- 손실보상 범위 확대(재산상 손실→생명·신체의 피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실시
- 「공무원 책임보험」('20. 1. 1.시행)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 전개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 법제업무 매뉴얼' 간행 및 배포	2월	
	스마트치안 법무지식시스템 구축	2월	
	경찰청 타법대응 담당자 워크숍 실시	2월	
	연간 경찰위원회 의결안 심사 수요 조사	2월	
	경찰청 공무원 책임보험 운영계획 수립	2월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2월	
	경찰청 법제담당자 워크숍 실시	3월	
	경찰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3월	
2/4분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 검토	4월	
	지방청 송무교육 계획수립	5월	
	경찰법률보험 재계약 추진	5월	
3/4분기	경직법 전부 개정 추진	7월	
	상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7월	
	상반기 손실보상 운영현황 분석	7월	
	기한도래 일몰규제 일제정비 계획 수립	8월	
	기한도래 일몰 법령 경찰위원회 일괄 상정	9월	
4/4분기	경찰 소관 법령집 및 훈령·예규집 발간	10월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12월	
	하반기 손실보상 운영현황 분석	12월	
연중	법제 관련 법제처 위탁 교육 실시	연중	
	경찰위원회 상정 법령·규칙 재·개정 심사	연중	
	경찰청 소관 중요 지침 심사	연중	
	국가·행정소송 지도·관리	연중	
	국가 송무 관련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실시	연중	
	경찰청 공무원 책임보험 관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과 경찰관 개인, 정책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회 및 관계부처, 국회법안심사 관련 이해 당사자 등

□ 기대효과

- 총괄적·체계적 입법대응으로 경찰 법집행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 이에 따른 치안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법무지식시스템, 법률365·경찰책임보험·소송지원 등 통합 법률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현장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당한 법집행의 기초를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입법대응 노력도 <30%>	신규			100%	"하단 참조"	경찰 법제심사 건 / 심사수요 x 100	온나라 공문
규제혁신과제 정비 달성도 <30%>	신규	84%	92%	100%	"하단 참조"	(달성과제 / 규제혁신 선정과제) x 10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평가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20%>	신규	77.13	84.26		'19년도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77.13) 보다 높은 78.5을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하단 참조"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설문조사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20%>	신규			98.9%	"하단 참조"	질의사안 중 답변 건수 / 질의건수 x 100	KICS 시스템 통계
	① 입법대응 노력도 【목표치 90% / 가중치 : 3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경찰위원회 활성화와 법치행정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상승으로, 상위법령과의 상충·정책위배·인권침해 여부까지 세밀하고 종합적인 법제심사가 요구되며,						

• **목표치 산출 근거**

- '19년 입법대응 노력도 결과가 목표치 보다 대폭 상회(126→159건, 26.2%↑) 하여 목표치를 건수 대비에서 회신율로 변경
- 법제심사 : 경찰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재·개정 심사 수요 건수 대비 심사 회신율 100%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여부

- ▶ 경찰개혁과제가 대부분 완수(81%)되고, 금년도 국회 교체시기('20.6월, 21대 국회 발족) 등으로 인해 입법 활동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목표치를 변경. 다만, 적극적인 법제심사를 위해 연초 수요조사 건수(60건)대비 심사 회신율 100% 목표치 적용

② **규제혁신과제 정비 달성도 【목표치 100% / 가중치 : 3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 추진

• **목표치 산출 근거**

-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경찰청 소관 규제혁신 과제 12건 중 12건 달성(100%)을 목표치로 설정

⇒ '19년도 규제혁신 선정과제 12건 중 11건 달성(92%)

※ 참고 : 임계치 100% 산정(선정과제 특성상 100% 초과달성이 불가능)

③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 만족도 【목표치 84.26점 / 가중치 : 2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법률365', '공무원책임보험', '경찰법률보험' 등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실질적 지원활동 필요

• **측정산식**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점수	0	25	50	75	100

※ 조사 대상 : (통합 법률 지원) 현장법률365 이용자, 법률검토 의뢰자·상담자, 협약 법률서비스 이용자 중 개선·불만 건의자

(통합 소송 지원) 소송수행자, 직·간접 소송 지원 혜택자(공무원 책임보험, 경찰법률보험 이용자 포함), 송무담당자, 행정심판 담당자, 송무교육 이수자

• **목표치 산출 근거**

- 임계치에 도달한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만족도(17년 93.3, 18년 92.4)를 '19년부터 현 실태에 맞는 세부사항 조정을 실시, 결과는 하락(93.3→77.13) 하였으나 전년 결과(77.13) 보다 10% 높은 84.26을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19년 법률 및 소송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평 균	분 야				
	현장법률 365서비스	로앤비 서비스	소송수행지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	소송지원 제도	송무교육
77.13	72.3	79.4	81.2	74.2	78.5

※ 참고 : 임계치 산정

他 업무 지원기능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최대치인 정보화 업무 서비스의 만족도 점수인 86점을 임계치로 봄

평균 (직무만족도 전체평균 포함)	경무행정 지원업무 만족도	경찰장비 만족도	정보화 업무 서비스 만족도	직무만족도			
				전체 평균	인사· 성과관리	복지	교육
81.97	82.8	81.35	86	82.8	81.35	77.75	81.75

④ 현장법률365센터 대응 노력도 【목표치 98.9% / 가중치 : 2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경찰 법집행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 이에 따른 일선 현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법률365센터의 신속한 대응 노력 필요

• 측정산식및 목표치 산출 근거

- KICS 內 현장법률365 질의응답 게시판 질의 대비 신속 답변율 (산식 : 성과기간 질의 사안 중 성과기간 답변건수/ 성과기간 질의건수 × 100)

※ 18년(98.8%), 19년(96.7%) 2년간의 질의 대비 답변율을 토대로 최대치보다 높은 98.9% 목표치 산정

49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Ⅲ-4-④)

□ 추진배경

- 경찰 인력증원, 시설·장비·시스템 등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치안만족도 제고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적기 집행으로 치안 시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요인 해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뒷받침하고 치안인프라를 확충, 선진 일류 수준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치안역량 강화 기반 조성
 - － 치안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속·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 추진
-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 추진
 - － 예산집행점검 체계 구성·운영, 중점관리대상사업 관리 및 집행효율화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낭비요인 최소화
- 신도시 등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안정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서 신축 및 노후시설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도 중기사업계획 작성·제출(기재부)	1월	
	'20년도 재정사업 조기집행 계획 수립	1월	
	국유재산 결산('19회계연도, 관리운용보고서)	1~2월	
	시설사업 현장점검 및 예산 재배정 검토	1~3월	

2/4분기	'20~'24년도 중기사업계획 심의(기금 포함, 기재부)	2~4월	
	예산(기금 포함)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5월	
	'19년도 1분기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	4월	
	'20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수립 및 하달	4~5월	
	'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협의·조정	4~5월	
	재정사업 조기집행 현장 점검	4~6월	
	'21년도 우리청 예산안 편성(설명회·심의회)	4~5월	
	'21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제출(기재부)	5~6월	
3/4분기	'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안(정부안) 협의·심의	6~8월	
	'21년도 예산안(정부안) 협의·조정(기재부)	6~8월	
	'20년도 재정사업 조기집행 평가	7월	
4/4분기	예산국회 심사 대응(기금포함, 행안위·예결위·기재위)	9~12월	
	예산(기금포함) 이월·불용 실태 점검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청 소속 초 직원
- 이해관계집단 :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 기관

□ 기대효과

- 선진 치안인프라 구축 및 현장치안역량 강화로 치안강국으로 도약
- 환경변화와 내·외부 고객 요구에 부응한 「예산편성-확보-집행-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재정성과 평가체계 확립 등 책임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재정지원도(공통)	69.54	61.40	79.54	70.13	○ 각 지표별 평균추세보다 높은 목표 설정 ○ 예산확보액 지표를 정부 증가율 대비 경찰청 예산 증가율로 반영하여 정부기조에 따른 변동성 감소	① 예산확보수준×50% + ② 예산집행률×30% + ③ 국유재산 확보율×2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관련 공문 등																				
① 예산확보수준 (50%)	56.8	41.9	81.7	60.25	○ 최근 일자리 및 복지 지출소요 확대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상황이 지속되고 ○ 매년 완료사업 발생 및 의경감축 등의 재정여건으로 사실상 증액은 어려움 ○ 사업바기분경비 등 재정담당관실의 예산확보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 '경찰청 증가율/정부 증가율(정부안 총지출 기준)'으로 지표수정 및 - 최근 3년 평균(60.12)보다 높은 목표 설정 <table><tr><td>총지출 증가율</td><td>'17</td><td>'18</td><td>'19</td><td>'20 (목표)</td></tr><tr><td>정 부</td><td>7.4</td><td>10.5</td><td>7.1</td><td></td></tr><tr><td>경찰청</td><td>4.2</td><td>4.4</td><td>5.8</td><td></td></tr><tr><td>확보수준</td><td>56.76</td><td>41.90</td><td>81.69</td><td>60.25</td></tr></table> * 기존 성과지표(전년대비 증감액)는 확장재정 등 정부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 성과지표 수정	총지출 증가율		'17	'18	'19	'20 (목표)	정 부	7.4	10.5	7.1		경찰청	4.2	4.4	5.8		확보수준	56.76	41.90	81.69	60.25	(경찰청 증가율 /정부 증가율) ※ 정부안 총지출 기준
총지출 증가율	'17	'18	'19	'20 (목표)																							
정 부	7.4	10.5	7.1																								
경찰청	4.2	4.4	5.8																								
확보수준	56.76	41.90	81.69	60.25																							
② 예산집행률 (30%)	78.8	79.3	78.9	80.0	○ 집행률 지표는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비 성격 및 외부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표로 최근 3년 실적은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 재정당국에서 지속적인 조기집행 정책을 도입하여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실적이 등락하는 등 상승폭이 크지 않음을 고려, 최근 3년 평균 실적(79.0%) 및 추세치(78.9%)보다 증가된 80.0%를 목표 설정 ·전년도 실적치 대비 1.1%p ↑ *	(10월*03말 집행액 /연간집행계획) ×100 ※ 사업비 기준 (조기집행)																					
③ 국유재산확보율 (20%)	87.5	83.3	75.1	80.0	○ 실적치가 하락하는 지표로 경찰청 국유재산 점유율이 사실상 임계치에 도달하여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실적(81.9%) 및 추세치(69.56%) 대비 10.43% 증가된 80%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비축부동산 확보 + 사용승인 확보) / (비축부동산 요구 + 사용승인 요구) ×100 ※ 건수 기준																					

50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Ⅲ-4-⑤)

□ 추진 배경 (목적)

- 경찰은 직무 특성상 소명의식 등 특별한 경찰정신이 요구, 경찰역사 발굴·연구·선양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경찰정신 함양 필요
 - ※ 경찰관 설문조사('19년), 경찰역사가 자긍심·책임감에 중요하다고 인식(75%)
- － 경찰정신은 치안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무형 자원으로 참된 경찰정신 함양을 통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공공기록물법’상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지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역사를 통한 경찰정신 함양 및 자긍심·책임감 제고 >

□ 경찰정신 표상 발굴·연구·선양

- 임시정부·독립운동가 출신·구국·민주화 유공 경찰 등 참된 경찰정신의 표상이 되는 경찰역사 인물 발굴 및 서훈 추진
- 경찰역사·경찰정신에 귀감이 되는 경찰관 1~2명을 경찰영웅으로 선정, 흉상 건립 등 업적 선양 및 대내외 홍보 활동 전개
 - ▶ (선정절차 개선) △ 쏘 직원 공모 및 경우회·경찰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 병행 △ 최종심의 전 예비심의 및 선호도 조사 단계 신설
 - ▶ (영예성 제고) △ 온-오프라인 상 경찰영웅 코너 개편 △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 △ ‘정책고객 홍보 메시지’ 발송 등 선양·홍보 강화
- 미군정기 주한미군 G-2(정보참모부) 보고서에 기반한 건국·구국·호국 경찰 활동 연구용역 추진, 국립경찰 태동기 역사 재조명
- △ 경찰사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 ‘경찰사료 관리 지침’ 제정 등 경찰사료의 항구적 보존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 추진

□ 경찰역사 교육 강화

- ‘내고장 경찰역사’(장소 290개소·인물 84명) 및 전국 ‘경찰역사 순례길’(41개소) 답사 활성화 등 현장 체험형 교육 내실화
 - － 4·19민주묘지, 4·3공원,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등 경찰의 부정적 역사에 대한 장소도 망라, 반성적 성찰 도모
- 경찰역사에 대한 내부 관심도 제고 및 전문 교수요원 확충을 위해 ‘경찰역사 아카데미’ 과정(인재개발원) 개설·운영(6월중)
- 내년 승진시험 실무과목 통합(실무종합) 예정, ‘한국경찰사’ 편에 임정경찰 등 주요 내용 반영*을 통해 관심도 및 교육효과 제고
 - * △일제강점기 경찰 내용 축소 △임정경찰 관련 내용 신규 반영 △경찰 정신 표상에 문형순 등 추가 △구국경찰 관련 주요 전투 등 반영 검토
- △신임교육생 경찰역사 교양서 제작·배포 △‘임정경찰 자료집’ 발간·배부 △사이버강의 개설 등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경찰역사 홍보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및 6·25전쟁 70주년 등 시기별·계기별 홍보물 제작 △경찰영웅 홍보영상 제작 등 대내외 홍보
-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연계·지원 △역사학자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전담체계’ 구축 등 저변 확대 및 소통·협력 강화
- 김구재단·백범김구기념관 등 공익재단과 △장학사업 △신임교육생 백범일지 독후감대회 △학술세미나 등 공동사업 지속 실시
 - － 임정·독립·구국·민주화 유공 경찰 후손 및 관련 기념사업회 방문·초청 등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연대감 제고

< 기록물 관리 효율화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 구현 >

- 기록물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실효성 강화
 - － △처리과 기록관리 실태 및 자체 서고 점검 △비전자기록물 보유 목록 비치 여부 점검 △기록물 편철 상태 확인 등 실시
- 비공개사유 소멸 시 재분류 실질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 － △기록물 이관 시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5년 마다 주기적 재분류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등
- 핵심업무 등을 검토, 기록물 보존기간 적절성 여부 정비
 - － 1차적 가치(행정적·법적·재정적 가치) 뿐만 아니라 2차적 가치(증거적·정보적·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재산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역사를 통한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 사이버교육콘텐츠 제작·개설	1월	
	신임교육생 교양서 제작·배포	3월	
2/4분기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5월	기록 관리
	경찰역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6월	
3/4분기	기록 관리 지도·점검	9월	기록 관리
	경찰역사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9월	
4/4분기	전국 경찰역사 유적지 관리실태 일제점검 및 정비	10월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11월	
	신임교육생 대상, 백범일지 경찰 독후감대회 개최	11월	
	건국·구국·호국 경찰 활동에 관한 연구용역	12월	
	경찰영웅 흉상 제작 및 제막식 개최	12월	
	기록물 평가·폐기	12월	기록 관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역사 발굴·연구·선양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경찰정신 함양은 1차적으로 경찰관들의 자긍심·책임감을 높이고,
 - － 이는 최종적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경찰관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혜택으로 귀결
- 아울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되고, 이는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림

□ 기대효과

- 그간 친일경찰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경찰역사에서 탈피,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인물 발굴 등을 통해 경찰 이미지 제고
- 보유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정보공개 요청 및 열람 신청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 공공행정의 성공·실패에 대한 올바른 평가 기반 확립 가능

⇒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나, 결국 그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9	'20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신규과제)			
경찰역사 관리 시스템 구축(7131-313)		1	6.4
■ 경찰역사 발굴·조사 및 사료 관리		0	5.5
■ 경찰역사 교육·기념을 통한 경찰정신 함양		1	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경찰역사 인식도 < 70% >			56	62	아래 참조	1. 경찰관 대상 경찰역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9월중 실시)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의뢰, 폴넷 메일을 이용하여 설문 진행

- (지표 개요) 1. 경찰관 대상 임시정부·독립운동가 출신·구국·민주화 유공 경찰 등 경찰역사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0년 목표치) '19년 설문조사 결과 경찰역사 인식도는 56점을 기록, 전년대비 10.7% 향상된 수치인 62점을 목표치로 설정

조사 개요

- ❖ 목 적 : 1. 경찰관 대상 경찰역사 인식도 설문조사, 인식도 변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경찰역사 관련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 방 법 : 폴넷 메일을 이용한 전자우편 설문조사(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 ❖ 문 항 : ①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경찰 활동과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지?
 ②광복 이후 경찰에 투신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③6·25전쟁 당시 전 경찰관이 참전했고 그 중 1만명 이상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④안병하 국장, 문형순 서장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불의에 맞서 시민을 보호한 경찰 의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
 ⑤제주4·3사건, 3·15부정선거 및 4·19혁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경찰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기록 관리 교육 이수 지표 < 30% >			3.02	3.33	아래 참조	수강인원 / 수강가능인원	교육포털 관리자 모드 에서 통계 산출, 공문으로 증빙

- (지표 개요) 기록관리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물 관리 입문 1·2(교육포털에서 수강 가능)' 강의 수강 인원을 경찰청 전체 수강 가능 인원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강 의 명	강 좌 구 성
기록물 관리 입문 1	기록물관리의 이해 / 법령 내용 / 조직체계 / 기록물 분류 / 기록 관리기준표 / 생산 / 등록 / 편철과 정리 / 이관 / 평가 폐기 / 보존
기록물 관리 입문 2	비밀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간행물 / 행정박물 / 전자기록물의 이해 / 기록관리시스템의 이해 /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

- ('20년 목표치) '19년 이수 지표 대비 10.3% 상승한 3.33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 강의가 '18년 중반에 개설되어 '18년 지표 無

구 분	'19년	'20년
수강인원	3,724명 ※ 중위값 = 4,112명(기록물관리 1) + 3,335명(기록물 관리 2)	3,872명
수강가능인원	123,430명 (1.1. 정원 기준)	128,205명 (1.1. 정원 기준)
기록 관리 교육 이수 지표 (백분율)	3.02	3.33 (목표치 : 전년대비 10.3% 상승)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 기본방침

- '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주기적 점검 및 정책 반영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반기 1회 과제별 추진 실적 등 점검 및 성과 미흡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 자체평가위원회를 활용, 이행상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 －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경찰청 성과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 점검 실시

[2]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7명(교수·연구원·언론인 등)과 내부위원 3명(차장·기획조정관·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체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 － 전체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신규 위원 위촉 등 진행
 - － 분과위원회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주요과제 이행상황 점검·제언
 - ※ 자체평가위원에게 매월 과제 추진경과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방문 실시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평가지원팀을 구성, 자체평가위원회 업무 지원 및 평가제도 교육, 평가지침 수립·제공

[3] 이행상황 점검 세부 계획

- 국조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을 바탕으로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엄격한 점검 실시
- － 수시점검 : △ 차장 주재 정책과제 TF △ 청장 주재 성과점검 회의(분기 1회) 등 지휘부 주관 아래 계획이행 사항 수시 점검
- － 사전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에 앞서 국·관 및 각 분과별 해당 부서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지원팀 주관 자체점검 실시
- － 최종점검 : 평가지원팀에서 점검 자료를 작성하여 자체평가 위원회에 제출,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맞추어 대상과제 점검

<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전문가 대면컨설팅	3월	▪ '20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지표 수립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위원 컨설팅 ※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면 컨설팅으로 대체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3~4월	▪ '19년 결과 및 '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면 의결로 대체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시	7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자체평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8~9월	▪ 평가위원의 치안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방문 실시
본 평가	11월	▪ 각 과제에 대해 추진과정,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활용 여부 등을 종합 평가
추가 평가	'21. 1월	▪ '20년 실적 최종치 및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 ※ 행정관리역량평가 병행 실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급	'21. 3월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4] 미흡과제 관리 강화 방안

- 외부전문가 중심 성과관리지원팀 구성, 미흡과제의 체계적 관리
 - － 중간점검 및 본평가에서 분과별 최하위과제를 미흡과제로 선정
 - － 미흡과제 담당부서에서 보완계획을 작성,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위원이 조직·인력·외부요인 등을 심층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조직·인력 개편 등에 반영

< 성과관리지원팀 구성 및 역할 >

- ▶ 구성 - 총괄팀: 혁신기획과장(팀장) · 성과관리계장
 - 분과별 지원팀: 성과담당자(3명) / 외부전문가(2~4명)*
 - * 외부전문가는 자체평가위원 중 미흡과제 담당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 ▶ 역할 : 자체평가 운영 지원 및 미흡과제 심층분석 등 환류 관리

- 자체평가 시 ‘정책 환류 적정성(15점)’ 평가, 능동적 참여유도
 - －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보완 및 대내외 의견 수렴 등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과제관리 여부를 평가에 반영

프로세스	내용
미흡과제 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1월경)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 담당부서는 내실 있는 원인 분석 및 개선안 작성, 기획조정담당관실 제출 → 미제출·불성실 제출부서는 자체평가(본평가) 시 감점 부여
관리과제 수립 및 대면컨설팅 (2~3월)	▶ 자체평가위원회 대면컨설팅 시, 전년도 미흡과제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진행 ※ 타 과제보다 2배의 컨설팅 시간을 활용하여 원인·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간점검 (7월)	▶ 전년도 미흡과제에 대해 ‘개선사항 추진경과’ 확인 및 보완사항 마련
본평가 (11월)	▶ 전년도 미흡과제의 ‘개선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최종 평가

※ 당해 연도의 개선사항을 이듬해 과제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 구축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

- 자체평가를 경찰청 내부 평가제도인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 본청의 조직(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 － (조직) 자체평가 결과는 본청 부서평가에 50% 비중으로 반영

< 경찰청 조직 평가 요소 및 가중치 >

평가요소	가 중 치		
	국 · 관	과	계
① 본청 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50	50	50
② 부서 기본업무	40	40	40
③ 차장 평가	10	10	10
④ 지휘관 가점	+2	+2	－

- － (개인) 부서장의 책임 강화를 위해 조직평가 결과를 국장은 100%, 과장은 90%, 계장은 60%, 일반직원은 50% 반영

< 경찰청 개인 평가 요소 및 가중치 >

구 분	국 · 관(심의관)	과 장	계 장	일반 직원
조직평가	100% (소관 국·관 점수)	90% (소관 과 점수)	60% (소관 계 점수)	50% (소속 계 점수)
기여도평가	－	10%	40%	50%

[2] 평가결과의 활용

- 조직 부문
 - － 중간 점검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실패 사례 공유 및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

- 직제 개정, 소요정원 요구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향상 방안 마련, 예산 수립에도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

○ 개인 부문

- 성과중심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환류 범위를 지속 확대하되, 성과관리 정착 및 수용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
- 개인별 성과평가 이력관리제를 통해 개인·부서의 성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누적 관리, 승진·보직 인사 등에 활용
- 성과 우수 관서·부서·개인에게 표창 및 포상금 수여,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교육 기회 부여 등 ‘Positive 환류 방식’으로 운용

< 평가결과 활용 범위 >

구 분	활 용 범 위	주 요 내 용
혁 신 기 획 조 정	치안종합성과평가	본청 부서평가에 정책과제 반영(50%)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80%)
	우수관서 포상	우수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우수부서 포상	우수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인 사	심사승진	개인평가 등급을 심사승진 참고자료로 활용
	가점평정	일반직 가점평정에 반영
교 육	국비 국내대학원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30%)
	국비 유학생 선발	최근 3년간 2회 이상 C등급 시 선발 배제
외 사	주재관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30%)

[1] 성과지표 개발노력

- (전문가 성과지표 컨설팅) 시행계획 지표 설계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지표 점검 등 평가체계 전반 컨설팅 실시(매년 1/4분기)
- (성과지표 Pool 및 이력관리) 치안성과관리시스템 상 2006년부터 각 부서별 성과지표 Pool 운영 및 이력관리 실시 중
- (성과지표 수준평가 실시) 평가단이 성과지표의 대표성·중요성·적정성 등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 다음연도 지표개발에 반영

【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현황<'20년> 】

분과	담당 분야	과제수	분과위원회 명단	
			분과위원장	위원
1	기획 / 홍보 / 정보화	8개	정용기(전체·분과위원장)	허금탁, 이은정, 이승은, 최여경
2	경무 / 감사	10개	박동균(분과위원장)	강영석, 최경희, 조진형, 윤지섭
3	생안 / 교통	8개	김근세(분과위원장)	강원석, 김상옥, 김경희
4	수사 / 사이버 / 과수	9개	김익재(분과위원장)	이찬희, 장다혜, 신승근, 김수진
5	경비 / 상황 / 정보	8개	이상훈(분과위원장)	서찬동, 이은영, 금현섭
6	보안 / 외사	7개	차용진(분과위원장)	송건섭, 박미랑, 김지윤

['20년 정책과제 서면 컨설팅]

- ▶ 일 시 : 1차 - 3. 12限 / 2차 - 3. 20限
- ▶ 컨설팅대상 : 본청 부서 정책과제(50개)
- ▶ 결 과 : 성과지표에 대하여 대표성·적극성 있는 지표로 개선을 유도하고, 업무절차 개선 권고 등 총 50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실시

※ 기존 대면컨설팅으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 성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차에 걸쳐 서면컨설팅 시행

- 성과지표 일몰제 운영

- － 매년 초 성과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 최근 3년간 목표치 및 실적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후 지표 개선 방안 마련

-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20.11.)

- － 본 평가 시 자체평가위원과 내부평가단이 대표성, 적정성, 타당성 등 지표의 전반적인 수준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

[2] 성과를 뒷받침하는 조직 운영

- 성과 기반 인사정의 실현

- －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성과 결과를 승진·보직인사·교육 선발 등 인사 전반의 참고자료로 활용
- － 주요 비위자에게 성과평가 최하등급을 적용하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 여성안전·수사·지역경찰 등 민생부서 중심의 인력 증원과 정원 재배치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창출을 견인
- － 계급별 적정수준의 정원을 확보하고 하위직에 편중된 침탐형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활력있는 현장경찰 활동을 지원

[3] 주요지표의 성과를 통계로 관리

-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경찰통계연보」 발간

- － 매년 신규통계지표를 반영한 「경찰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여 주요지표의 증감률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 분석·관리

- 적극적인 통계 공개로 성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

- － 온라인 사이버경찰청에 △연간 통계연보 게재 △기능별 통계 공개 등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

[1] 기본 방침

- 주요 정책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선정
- 정책·사업의 「기획→집행→환류」 쉼 단계에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의 수렴 및 환류 실시
- 현장의견 수렴 이행여부 정기 점검

[2] 관리 대상과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
 - － 국정과제·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된 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환류의 필요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단, 공개적 의견수렴으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과제는 제외
 - － 안보 등 특수정책 분야, 법령상 비공개대상 사업 등

< '20년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

연번	부서	정책과제
1	범죄예방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2	위기관리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3	피해자보호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4	여성안전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5	여성수사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6	아동청소년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7	교통안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8	사이버안전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9	외사기획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10	수사구조개혁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11	과학수사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12	대테러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 필요 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추가 가능

[3] 현장의견 수렴 방법

- (주체)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담당부서 및 과제담당자
 - －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가능
- (시기) 정책의 수립 전, 집행과정, 사후평가 전 단계
- (방식) 정책효과 발생 예상 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 고려하여 사안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 선정
 - ※ 현장점검, 간담회, 설문조사, 자문위원회 운영 등 방식 활용
- (대상자)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일반국민·유관기관·관련단체) 및 현장집행자(경찰관) 등
 - － 정책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대상자 선정

[4] 의견수렴 관리체계

- (의견수렴 관리) 현장 제언·건의에 대한 심층검토 후 ‘현장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작성한 보고서를 내부망 통합포털 등에 게재
- (운영상황 점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성과관리계)에서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여부 및 운영상황 점검
 - － 매 분기(정기)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여부 점검
- (결과 관리)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성과관리계)에서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결과 파악,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노력도를 자체평가에 반영

1. 총괄현황

(단위 : 개)

구 분		성 과 지 표					
		소 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3	3	0 (0%)	0 (0%)	0 (0%)	3 (100%)	2 (67%)
성과목표	12	12	0 (%)	0 (%)	1 (8%)	11 (92%)	3 (25%)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국무조정실 개선안('19.6.) 반영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5대 범죄 검거율	5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사범	80.0	정량	결과	
II.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기관별 신뢰 정도-경찰'	2.5	정성	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 건수 ÷ 전체 권고 건수 × 100	95	정량	결과	
III.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	-	-	-	-	

< (참고) 성과지표의 유형 >

분 류		내 용	예 시
정량적 측정 여부	정량지표(계량지표)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불가)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율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	체감안전도
정보의 성격	투입지표(Input)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	투입 예산액
	과정지표(Process)	사업 진행 과정의 산출물	사업 진도율
	산출지표(Output)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	교육 수료자 수
	결과지표(Outcome)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단속·검거율 / 대상자 만족도

※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지표를 활용하여야 하나, 결과지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산출지표 사용을 권장(「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5.4	정성	결과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체감 안전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및 전문 조사기관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연 2회 / 51,000명)	75.0	정성	결과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성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80.0	정성	결과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20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77.0	정량	결과	
전략목표Ⅱ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지능범죄 검거율	'20년 지능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72.0	정량	결과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권고건수 / 전체 권고건수*100	9.7	정량	산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주관, 알림톡(카톡) 이용 수사·형사 분야 접촉고객 실시간 전수조사	68.0	정성	결과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2.72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 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인사·성과·교육 분야 조사결과 평균	82.5	정성	결과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분위기·성인지 분야 조사결과 평균	90.5	정성	결과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장비·시스템 분야 조사결과 평균	86.0	정성	결과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복지 분야 조사결과 평균	79.0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도 <50%>	순찰희망장소-순찰계적 間 일치율	66.5%	정량	산출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50%>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 100%	66.4%	정량	산출		
	살인,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25%>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61.4%	정량	결과		
		조폭 검거성과 <20%>	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	3,037명	정량	결과		
		상습·주취폭력배 구속률 <20%>	검거 및 구속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15.3%	정량	결과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15%>	범죄통계시스템	7,858명	정량	결과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20%>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57,600 건	정량	결과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112신고접수 만족도 <30%>	①신속성 + ② 친절성 + ③전문성 등 각 설문항목 평균치 추출 (경찰청고객만족모니터 센터)	84.9	정량	결과		
		국민 긴급신고 신속현장대응달성 도 <40%>	지령 후 현장도착시간 측정 (112시스템 자동 추출)	5분 10초	정량	결과		
		위기대응 역량지수 <30%>	지방청·경찰서별 훈련 횟수 + 경찰서별 교육 횟수	1161점	정량	산출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피해자 보호지원율	(신변보호건수+피해자지원건수) ÷ 중요범죄발생건수 × 100	61.2	정량	결과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건수 (관서별 시행 건수 취합)	180건	정량	산출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공통)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 건수] × 100	29.5	정량	결과		
		가정폭력 사건 대응률(공통)	[(가정폭력 검거건수 + 피해자 보호조치건수) / 가정폭력 실 신고건수] × 100	55.7	정량	결과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성수사 역량 제고		성폭력 미검률	{1- (성폭력범죄 검거건수 / 발생건수)} × 100	4.2%	정량	결과	국정 과제 성과 지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공통)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35.7	정량	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19.7	정량	결과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	-8.0%	정량	결과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	-0.0%	정량	결과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 구현	교통사고 심각도 <60%>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12)	0.146	정량	결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만 명당) <40%>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0,000	2.10	정량	결과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60%>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273×사망자수)+(32×중상자수)+(2×경상)+(1×부상)] / 차량등록대수	0.146	정량	결과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 <40%>	30+[과제별 등급×등급별 점수]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table><tr><td>등급</td><td>A</td><td>B</td><td>C</td></tr><tr><td>수준</td><td>도로교통 법령 개정, 지침이나 규격 신설·개정</td><td>시스템 변경, 연구용역 반영, 즉시성이 요구되는 사실개선</td><td>주기적· 반복적 시설개선</td></tr><tr><td>점수</td><td>2</td><td>1.5</td><td>1</td></tr></table>	등급	A	B	C	수준	도로교통 법령 개정, 지침이나 규격 신설·개정	시스템 변경, 연구용역 반영, 즉시성이 요구되는 사실개선	주기적· 반복적 시설개선	점수	2	1.5	1	50	정량	결과
	등급	A	B	C														
	수준	도로교통 법령 개정, 지침이나 규격 신설·개정	시스템 변경, 연구용역 반영, 즉시성이 요구되는 사실개선	주기적· 반복적 시설개선														
점수	2	1.5	1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20%>	기업체·노인층 교육인원에 가중치 2배를 적용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577,33 2점	정량	결과												
		사이버정보 활용지수 <30%>	B등급 이상 정보 건수/ 전체 정보건수	23.3%	정량	결과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25%>	(국제공조요청건수) / (사이버수사관 인원)	100%	정량	결과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 회신율 <25%>	(해외기업대상 회신건수) / (해외기업대상 요청건수)	70%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사이버범죄 적극 검거 및 피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80%>	$\{('20\text{년 검거건수} \div \text{최근 5년 간 검거건수 실적값 중 최고·최저 실적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값으로 산출한 '20년 예상 검거건수}) \times 100\} - 1$	3%	정량	결과	
		피해보호조치율 <20%>	$\{('20\text{년 삭제·차단 요청건수} \div \text{최근 2년 간 피해보호조치 요청건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20년 예상 삭제·차단 요청건수}) \times 100\} - 1$	15%	정량	산출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보안사이버 단속 활동 지수 <30%>	$(\text{방심위 차단 건수} \times 0.7) + (\text{방심위 삭제 건수} \times 0.3)$	1117.4	정량	산출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 <40%>	$(\text{현장지원횟수} / \text{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 \times 100) \times 0.5 + (\text{선별압수 건수} / \text{현장지원횟수} \times 100) \times 0.3 + (\text{포렌식 전문 교육 인원}) \times 0.2$	95.0	정량	산출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 <30%>	$(\text{침해사고 내사 착수 건수} / \text{수사인원} \times 100) \times 0.8 + (\text{침해사고 첩보 중 '중보' 평가 건수} / \text{수사인원} \times 100) \times 0.2$	133.8	정량	산출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60%>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월수×100 *Σ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체류외국인수	0.32	정량	산출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 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40%>	- 해외파견 인력 증원(50%) + 교육·업무노하우 공유(권역별 화상회의, 굿모닝 뉴스) 등 활동(50%)	64.4	정량	산출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40%>	$(\text{치안협력약정 신규체결·개정 국가수} \times 0.3) + (\text{청·차장급 교류협력 횟수} \times 0.2) + (\text{국·과장급 교류협력 횟수} \times 0.15) + (\text{기타 실무급 교류협력 횟수} \times 0.05)$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해당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23.49	정량	산출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40%>	$\sum (\text{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times \text{교육인원})$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해당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46.2	정량	산출	
		홍보지수 <20%>	① 국외언론 홍보건수 *0.5 + ② 국내언론 홍보 건수*0.3 + ③ 내부 홍보 건수*0.2	5.9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 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I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지능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지능 수사요원 1인당 민생침해 기획수사 검거인원 <35%>	'20. 1월~10월 민생침해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지능수사요원 인원	6.7	정량	결과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35%>	'20. 1월~10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464	정량	결과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대비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건수 비율 <15%>	('20. 1월~10월 전화번호 정지건수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 100	11.5	정량	산출		
		범죄수익 추적수사 현장지원 건수 <15%>	'20. 1월~10월 현장지원 건수	895	정량	산출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외사사범 검거실적 <40%>	외사사범 검거실적 D/B 활용 / 국제범죄 유형에 따른 검거 점수 차등 부여, 총점을 외사사범 검거실적으로 반영	100,828	정량	결과	법무부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실적 <30%>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실적 D/B 활용 / 산업기술유출범죄 유형에 따른 검거 점수 차등 부여, 총점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실적으로 반영	280	정량	결과	법무부· 특허청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30%>	국외도피사범 송환 D/B 활용 / 국외도피사범 연간 송환 인원을 산출하여 반영	466	정량	결과	INTER POL (인터폴)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점수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31.5	정성	결과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인권영향평가 실시율 <50%>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 법안 상정 건수 × 100	92%	정량	결과	
인권분야 경찰청 교안 활용 교육 실시율 <50%>			교안활용 교육 실시 관서수 /전국 관서수 × 100	90%	정량	결과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40%>	(교육이수율 × 40%) + (법률지원증가율 × 25%) +	0.9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40%>	대화경찰 역량강화 <20%>	(현장점검증가율 × 35%) - (사실조사 후 '징계요구· 수사의뢰' 건수 × 0.009)				
			대화경찰 운영실적 <20%>	(대화경찰 교육 인원수 × 70%) + (대화경찰 교육 수료대상 업무 적용도<설문조사> 결과 평균 × 30%)	339.1	정량	산출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20%>	신원조사 오류율 <10%>	대화경찰 운영 건수 / 전체 집회시위 건수 * 100	12.0%	정량	산출	
			신원조사 교육건수 <10%>	오류 건수 / 전체 신원조사 건수 * 100	0.12%	정량	산출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률 <65%>		전체 집회·시위 중 집회·시위 사범 비율(10%) +국민 평가(40%) +경찰 활동 실적(50%) <세부산식 참조>	53.50	정량	결과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율 <35%>		(지방청 보고서 총 획득점수/각 지방청 정보관 현원)을 통한 등급별 달성 점수×50% +(년 교육인원 / 목표인원)×50%	88	정량	결과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현장 법치경비 실현	인권보장·안전확보 노력도 <50%>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65	정량	산출	
		경비경찰 법치경비 체화수준 <30%>		훈령·지침 개정 건당 15점 매뉴얼 제작 및 전국단위 배포 건당 10점	30	정량	산출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0%>		각 지방청별 경찰관기동대 창설 세부시행계획	8개 부대 창설	정량	산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35%>		각 계정 통계 활용	1) 1,655,847 2) 194,286,400 3) 1,274 4) 3,334,418	정량	결과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30%>		언론보도 실적 취합	91건 (월)	정량	결과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35%>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실적 취합	200건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경찰수사개혁 과제 이행 <25%>	과제 시행 1건당 1점 부여	23	정량	산출	
		영장심사관 심사 구속영장 발부율(%) <25%>	영장 발부건수 / 영장 신청건수 × 100	80.0%	정량	산출	
		수사경과 선발, 해제 인원(명) <25%>	(수사경과 선발인원) + (상반기 수사경과 해제인원* × 2)	4,386명	정량	산출	
		전문 수사 인력 양성(명) <25%>	수사연수원 전문·심화교육과정 수료 인원	1,910	정량	산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정비 노력 <40%>	{{법령 개정 검토보고서 작성×5}+(국회·학회·언론 등 배포·대응×3)}×0.1	16	정량	결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소통 <30%>	(현장간담회 등 참여, 언론 등 홍보 활동, 전문가 면담·학술세미나 등 횟수×0.1 ※ 학술세미나 개최 및 유관기관 예방, 대외강연은 0.2점	7.25	정량	결과	
		책임수사 인식 제고 및 개선 수사절차 정착을 위한 현장 교육·지도 <30%>	{{(①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이버강좌 이수율)+(②개선 수사절차 교육 이수율) × 1/2	55	정량	산출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범죄분석 지원지수 <25%>	Σ(출동건수)× (건별활동점수) +(가점)	125	정량	산출	
		법과학 분석율 <25%>	(지문·영상·3D얼굴인식 분석건수) / (지문·영상·3D 얼굴인식 접수건수) × 100	64.3	정량	산출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25%>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1,857,273	정량	산출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25%>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현장임장건수	150.7	정량	산출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30%>	(전문분석관 인증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소지자/디지털 증거 분석관 총원) × 100(%)	67.6	정량	결과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30%>	(신규 도구개발·장비도입 건수×1) + (시스템 고도화 건수×1) + (도구 고도화 건수×0.8) + (주요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활용도×1) + (포렌식 도구 및 장비 홍보 실적×1)	22.5	정량	결과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실적 <40%>	(연구보고서·논문 게재 등 분석기법 연구건수 × 1) + (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건수 × 0.5) + (디지털포렌식 지식 관리·공유 건수 × 0.1)	21.1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교류 지수 <30%>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0.5 + 진술청취이행률 × 0.5	85.1	정성	결과	
		과학수사 활동 지수 <40%>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1.41	정량	산출	
		현장지원 지수 <30%>	현장지원활동을 정량화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28	정량	산출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현장중심 활동 평가 및 대테러 역량강화+가점	현장중심 활동평가 및 대테러 역량강화 평가점수+가점	85	정량	산출 결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중요 보안사범 검거 지수 <50%>	(중요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 / (전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 × 100	13.2	정량	결과	
		보안수사정보 활용도 <30%>	(양적평가)정보 분석 보고서 생산(50점) + (질적평가)정보 분석 보고서 현장 활용도(100점)	150	정량	산출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20%>	분석 판단 보고서 및 공문 등을 통해 개선 추진한 사항 20건	20	정량	산출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50%>	조직 재설계 노력도(20%) +제도·관행 개선 노력도(20%) +정책 홍보 노력도(10%)	49	정량	산출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50%>	탈북민 범죄예방교육(20%)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탈북민 범죄피해자 보호활동(20%)	46	정량	산출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외사정보 활용도 <50%>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활용 주체별 1~10점)	1,694점	정량	산출	
		테러·방첩사범 검거활동 <25%>	검거점수(건당 1~2점) + 개척점수(건당 10~40점)	694점	정량	산출	
		대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교육 <25%>	교육점수(건당 3~1점)	291점	정량	산출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경호역량 강화 달성도(50%) +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이행도(50%)	65	정량	산출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Ⅲ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치안정책 완수를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	인력증원 <40%>	증원인원 ÷ 목표치 × 100(%)	3,200명	정량	산출															
		'20년 국정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30%>	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등 관리지표(18개) × 100(%)	78%	정량	산출															
		현장인력재배치 <30%>	현장 재배치인원 ÷ 목표치 × 100(%)	1,200명	정량	산출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중 인사 분야 6개 항목 평균값	81.5	정성	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43.8%	정량	산출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여성경찰관 비율	13.4%	정량	결과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활용도 <80%>	(교육센터 설문결과 + 현장순회교육 설문결과) / 2	82.2	정성	결과															
		인재채용률 <20%>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 100	92.0	정량	결과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활용도 <30%>	경찰지휘관 보좌 (건당 9, 7점) 소관부서 통보 (건당 5, 3점)	1,890점	정량	산출															
		정책 참고자료 작성 실적 <20%>	보고서 작성 건수 (건당 1점)	2,430점	정량	산출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20%>		(전체 보고서 작성 건수 -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수사 의뢰 건수) ÷ 전체 보고서 작성 건수 × 100	99.9%	정량	산출																
범죄정보 활성화 지수 <30%>		① 범죄정보 제출 건수 20% (건당 1점) + ② 범죄정보 활용 점수 80% (수사 기능 통보·배당된 중요사건 건당 15점)	3,660점	정량	산출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공정한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감찰활동 만족도 <50%>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56%	정성	결과															
		감찰정보 제도개선 활용도 <50%>	감찰정보 내부보고 제출 전체 현황 대비 제도개선 자료(기타자료 포함) 현황	43%	정량	산출															
	국민 중심 감찰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50%>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h>법령 제·개정</th><th>지체규정·지침 제·개정</th><th>기타 행정</th><th>개선요구</th><th>권고·통보</th></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	개선 유형별			조치 수위별		법령 제·개정	지체규정·지침 제·개정	기타 행정	개선요구	권고·통보	50	30	10	30	15	165	정량	산출
개선 유형별			조치 수위별																		
법령 제·개정	지체규정·지침 제·개정	기타 행정	개선요구	권고·통보																	
50	30	10	30	15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행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적극행정 면책실적 <30%>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63	정량	산출	
		징계양정 수용도 <20%>	(소청 미제기 + 소청 불인용 인원) / 전체 징계 건수 * 100	88.4	정량	산출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60%>	주요 치안정책 관련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수용도(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를 기준, 경찰청·18개 지방청 5개· 부속기관 합산 수용도의 평균치를 평가	73점	정량	산출	
		성평등 교육 정착도 <40%>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율 및 초 직원 참여율을 함께 고려하되,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 직원 대상 참여율을 가중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첫 번째 자리 버림) → 각 참여도 점수 합산으로 평가	70점	정량	산출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60%>	① 통합포털 폴넷(30%) + ② 스마트국민제보(20%) + ③ 폴리폰(20%) + ④ 온나라시스템(20%) + ⑤ 수배차량검색시스템(10%)	103.5	정량	결과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40%>	만족도 조사 결과	87.6	정성	결과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경찰장비만족도 <70%>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82	정성	결과	
		장비개발 등 규격 개선도 <30%>	경찰규격서 제·개정 건수	29	정량	결과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연구개발 예산증가액 <30%>	(‘21년 과제 예산 정부안 반영액 - ‘20년 과제 예산 확보액)	49.5억 원	정량	산출	
		R&D연구결과물 현장 만족도 <40%>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80점	정량	결과	
		치안 장비·기술 수출상담 실적 <30%>	국제치안박람회 계약서 상 (‘20년 수출액 - ‘19년 수출액)	357.5억 원	정량	산출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30%.	$\frac{\text{6시간내 조치 건수}}{\text{사이버위협 조치 필요건수}} \times 100$	17.5점	정량	결과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30%>	행안부 주관,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4개 영역, 9개 평가지표) 점수 결과 반영	우수 (81점)	정량	결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
		경찰청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20%>	$\frac{\text{조치된 보안 취약점 수}}{\text{사전 점검시 발견된 취약점 수}} \times 100$	81.1%	정량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0%>	전년 대비 25% 개방 확대	273개	정량	결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 방법 (또는 측정 산식)	'20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치안현장 헬기활동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40%>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	505점	정량+ 정성	산출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30%>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100명	정량	산출	
		무사고 안전비행 <30%>	경찰헬기 무사고 비행시간 (무사고 비행시간)	85,790 시간	정량	산출	
성과목표 4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치안현장 활력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85	정성	결과	
		연가사용 실적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정·5급 이상 : 49.7% 경감·6급 이하 : 50.7%	정량	산출	
		유연근무제 활용	일반대상자 중 월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한 인원 비율	70%	정량	산출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만족도	추진과제별 평균만족도를 합산한 값 / 추진과제의 수	72.5	정성	결과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긴급심리지원·지정상담 제공 인원수	8,820	정량	산출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인원	70.3	정량	산출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입법대응 노력도 <30%>	경찰 법제심사 회신건/ 심사 수요 X 100	100%	정량	산출	
		규제혁신과제 정비 달성도 <30%>	(달성과제 / 규제혁신 선정과제) × 100	100%	정량	산출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20%>	'20년도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84.26	정성	결과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20%>	질의사안 중 답변건수 / 질의건수 × 100	98.9%	정량	산출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	예산확보수준(경찰청 증가율 /정부 증가율; 50%) + 예산집행률(10월*03말 집행액 /연간집행계획; 30%) + 국유재산확보율((비축부동산 확보 + 사용승인 확보) / (비축부동산 요구 + 사용승인 요구) ×100; 20%)	70.13	정량	결과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경찰역사 인식도 <70%>	全 경찰관 대상 경찰역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9월중 실시)	62	정량	결과	
		기록물 관련 교육 이수 지표 <30%>	수강인원 / 수강가능인원	3.33	정량	결과	

붙임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목표	관 리 과 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범죄예방	국정 14 업무 II-①-1
	㉡ 살인, 강·절도, 생활폭력, 마약류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형사	국정 14 업무 II-①-5
	㉢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위기관리	국정 55 국정 56 업무 I-②-3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 회복적 경찰활동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피해자보호	업무 II-①-4
	㉤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공고화 및 사건 대응 강화	여성안전	국정 14 업무 II-①-2
	㉥ 성폭력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여성수사	국정 14, 66 업무 II-①-2
	㉦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14 업무 II-①-3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한다			
	㉧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국정 55 업무 II-①-7
	㉨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 구현	교통기획	국정 55 업무 II-①-8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운영	국정 34, 55 업무 II-①-7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안전	국정 14 업무 II-①-6
	㉫ 사이버범죄 적극 검거 및 피해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수사	국정 14 업무 II-①-6
	㉬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보안4	
	㉭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외사기획	국정 10 14 65 업무 II-①-9
	㉮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II-①-9

성과 목표	관 리 과 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I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6 지능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	업무 II-②-1 총리 지시사항 -5009662	
	17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외사수사	업무 II-②-1	
	18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생활질서	업무 II-②-2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19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인권보호	국정 13 업무 I-②-2	
	20 '인권존중'과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1	국정 13	
	21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정보3	국정 13 국정 14	
	22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시위 현장 법치경비 실현	경비	국정 14 업무 II-②-2	
	2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II-③-8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4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수사기획	국정 13 업무 I-①-3	
	25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 개혁	국정 13 업무 I-①-1	
	26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운영 고도화	범죄분석	국정 14	
	27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포 렌식센터	국정 14 업무 II-①-6	
	28 스마트 치안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국정 14 업무 II-③-7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29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테러대응 역량강화	대테러	국정 55 업무 II-②-4	
	30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보안2		
	31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보안1	국정 13	
	32 외사정보 수집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외사정보	국정14 업무 II-②-2	
	33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호업무 수행	경호		

성과 목표	관 리 과 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II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 대응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34 경찰개혁·민생치안 등 치안정책 완수를 위한 방향타 역할 수행	혁신기획 조정	국정 13 국정 14
	35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II-③-3
	36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업무 I-②-4
	37 범죄첩보·정책 참고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정보2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38 공정한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구현	감찰	업무 II-③-3
	39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감사	업무 I-②-2
	40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 정책	국정 66 업무 II-③-4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치안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1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정보통신	국정 56
	42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국정 14 업무 II-③-2
	43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연구발전	국정 14 업무 II-③-6
	44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정보화 장비기획	
	45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항공	
성과목표 4.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46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치안현장 활력 제고와 업무효율성 향상	경무	업무 II-③-4
	47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	국정 14 업무 II-③-9
	48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규제개혁 법무	업무 I-②-3
	49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업무 II-③-1
	50 경찰역사 및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자긍심·책임감 제고	경찰역사 기록TF	업무 I-③-2